

동아시아의 역사Ⅲ
(개항-화해)



동아시아의 역사Ⅲ

개항 - 화해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간사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이른바 ‘역사수정주의’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우익계열이 편찬한 역사교과서가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제로 대두하자, 한 중 일의 역사갈등은 국민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06년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중 일 역사가와 역사교육자들은 역사 갈등을 평화롭게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여는 역사』 『마주보는 한일사』 『한일 교류의 역사』 등 여러 종류의 공동 역사부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사와 이웃나라의 역사를 좀 더 깊게 공부하도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역사과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인간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한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 개설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사 과목을 매개로, 학생들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따로 따로 이해하는 인식을 극복하고, 통합적 역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역사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하여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아시아사’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관련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연구자들이 2010년부터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26개 내용 요소별로 역사 교사를 위한 수업 참고자료인 『동아시아의 역사』를 개발하고,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 전국의 고등학교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아시아사’ 교과목을 어떻게 적용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유익한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동아시아의 역사』 집필자 여러분과 출간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Contents

발간사...4

제5장 국민국가의 모색

–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

1. 동아시아 제국의 개항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 좌절

– 허동현

I. 머리말 ... 11

II. 개항을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 조공체제에서 조약체제로 ... 13

III.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민국가 수립과 좌절 ... 34

IV. 맺음말: 서구문물수용 태도 차이가 국민국가 수립과 좌절에 미친 영향 ... 58

2. 제국주의 침략 – 김권정

I. 머리말 ... 67

II. 19세기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 69

III.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동아시아 ... 84

IV.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동아시아 ... 99

V. 맺음말 ... 111

3.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 김기승

I. 머리말 ... 115

II.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 ... 116

III. 중국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 139

IV. 베트남 민족주의와 반제투쟁 ... 147

V. 타이완 민족운동 ... 155

VI. 필리핀 민족운동 ... 161

VII.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독립운동 ... 167

VIII. 동아시아 각국 민족주의의 특징 ... 172

4. 평화를 향한 노력과 국제연대 – 김정현

I. 머리말 ... 179

II. 동아시아 반전 평화 사상과 연대 ... 180

III. 동아시아 아나키즘 연대와 반전운동 ... 194

IV. 1930년대 이후 한 중의 항일을 위한 국제연대 ... 210

V. 맺음말 ... 214

5. 서구 문물수용과 변화 – 조명철

I. 에도 막부 말기의 문화 ... 223

II. 메이지 유신과 문명개화 ... 225

III. 근대문화의 변용 ... 234

IV. 국민생활의 근대화 ... 250

제6장 오늘날의 동아시아

– 1945년 이후

1. 전후처리와 국교회복 – 최영호

I.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2차 대전 종결 양상 ... 257

II.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동아시아 지역 ... 269

III.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전후처리 ... 279

IV.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국교 수립과 외교 관계 ... 290

Contents

2. 동아시아에서 분단과 전쟁 _ 오일환

- I. 국공내전 ... 308
- II. 한국전쟁 ... 326
- III. 베트남전쟁 ... 347

3.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_ 최우영

- I. 시장경제 중심의 일본, 한국, 타이완 ... 372
- II. 사회주의 경로를 따른 중국, 북한, 베트남 ... 414

4.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 발전 _ 정미애

- I. 서구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 ... 450
- II. 사회주의 체제 성립 지속 변화 ... 476

5. 동아시아 갈등과 화해 _ 김지훈

- I.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 ... 499
- II.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 510
- III. 화해를 위한 노력 ... 534

찾아보기 ... 547



제5장

국민국가의 모색

-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

동북아시아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동아시아 제국의 개항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 좌절

허동현 | 경희대학교

I. 머리말

II. 개항을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 조공체제에서 조약체제로

III.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민국가 수립과 좌절

IV. 맺음말: 서구문물수용 태도 차이가 국민국가 수립과 좌절에 미친 영향

I. 머리말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국가는 프랑스 혁명기의 프랑스인에게는 인간해방의 장치였고,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에게는 탐구하여 구현해야만 할 목표였다. 그리고 서세동점기(西勢東漸期: 1840~1910)의 중국과 조선, 및 베트남 사람에게는 이루려다가 실패한 목표이자, 현대의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달성해야 할 미완의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서세동점이 시작된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각국(일본 중국 조선 베트남)에서 개항이 갖는 의미와, 이에 따른 근대국민국가 수립과 좌절의 양상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1910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국민국가 수립과 좌절이 갖는 역사적 특징을 구명(究明)해 보려한다.

종래 일본학계에서는 구미의 이론 모델을 빌려 일본 일국사적(一國史的) 관점에서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된 19세기에 들어 와 일본이 외압에 대응하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제국 보다 ‘내재적(內在的) 발전’에서 앞서 있었고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역량의 민족 집중적 발전’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보거나, 일본 근대화의 원인을 지도자나 지식인층의 대응 능력의 탁월성에서 찾고 있는 견해가 통념화·통설화 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그러나 이러한 역사 해석은 동아시아 제국이 외압에 대응하면서 각기 특수 상황에서 내린 정치적 결단과 역사적 선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제국주의와 식민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자율전공학부 교수.

1 최상용(1992), 「일본의 근대화를 생각한다」, 고병익 외, 『일본의 현대화와 한일관계』, 문학과 지성사, pp. 102~103.

지 종속국가로 양극화된 결과에서 소급·유추함으로써 다분히 일국(一國)주의적 발상이자 승자의 결과론적 해석이 되어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근대에 동아시아 각국은 모두 외압(外壓)에 의해 개국(開國)을 강요당한 점은 공통되나, 결과적으로 일본만이 식민지화 되지 않고 자주적 근대화를 성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압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교사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는 학설이 종래 일본 학계의 통설 보다는 설득력이 크다. 양심적인 일본인 학자 토오야마 시게키[遠山茂樹]와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일본이 식민지화를 면한 이유가 결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보다 내재적 발전 단계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에 의한 외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느슨했고, 또 개국의 시기가 중국보다 늦었지만 한국보다는 앞섰던 점 등에 있다고 본다.² 특히 강동진에 의하면 일본이 식민지화를 면하고 자율적인 근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국 이전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차이, 외압의 강도의 차이, 그리고 개국 시기의 차이 등의 이유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일본이 일찍부터 구미 열강, 특히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아시아에 대해 침략주의를 채택했으며, 그 침략의 제1차적 대상이 조선이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19세기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도덕률(moral politics)인 조공체제에서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인 조약체제로 재편될 때, 각국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이 개항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 양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 구명하

2 遠山茂樹(1963), 「近代史から見た東アジア」, 『歴史學研究』 276; 梶村秀樹(1981),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帝國主義體制への移行」, 富岡 梶村 編, 「發展途上經濟の研究」, 世界書院.

3 강동진(1985), 「일본근대사」, 한길사. 허동현(2006), 「19세기 한 일 양국의 근대 문물 수용양태의 비교 연구」 『東洋古典研究』 24, pp. 276~277.

려 한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된 국민국가 수립을 향한 노력을 살펴 그 성공과 좌절의 요인을 분석하되, 국민국가 수립에 성공한 일본과 실패한 나머지 국가로 인식하는 단순 서술을 지양해, 그 개국 시기의 빠름과 외압의 차이 등 외래적 요소나 국제적 계기에서 찾는 비교사적 시야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개항을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 : 조공체제에서 조약체제로

1. 서세동점과 중국중심 국제질서였던 동아시아 3국

1) 중국 중심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3국의 위치와 차이 :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

조선,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한문문화권에 속한 동문(同文)의 나라였다. 세 나라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중국의 영도 하에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있었다.⁴ 당(唐)

4 김기혁(2007),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환경」 『근대 한 중 일 관계사』, 연세대 출판부, p. 122.

제국이 등장한 7세기 초 동아시아세계에 형성된 중국 중심의 독특한 국제 질서는 16세기 초두에 시작한 서구제국의 동방진출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까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 세계질서는 중국을 중화(中華)라 하여 문명으로 높이고 주변의 다른 나라를 이적(夷狄)이라 하여 야만으로 천시하는 화이(華夷)사상, 그리고 자연계와 인간계에는 서열상 상하의 구분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교사상에 기초해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고 주변국을 속방(屬邦)으로 하는 종속(宗屬)체제로 구현되어 있었다. 또한 이 종속체제는 중국의 절대적인 권위와 우위를 바탕으로 모든 속방이 그 권위에 숭복하는 전통적 대외관리체제인 조공(朝貢)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다.⁵

조공제도 하에서 중국은 조공과 책봉(冊封)을 통해 속방을 관리했다. 근대 이전 조선과 일본, 베트남은 모두 중국의 영도 하에 형성된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중국과 국경을 접한 조선과 베트남 두 나라와 바다로 격리된 일본은 중국문화의 수용 양상이나 중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이나 태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일본은 중국문화 수용이나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리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조선과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순망치한(唇亡齒寒)이란 성어가 잘 말해주듯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 이해가 걸린 한국은 중국의 변방인 남부와 접한 베트남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중국대륙에 강력한 통일제국인 수와 당이 차례로 흥기한 3국시대부터 그 직접적인 압력과 위협을 면하기 위해 책봉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형태로 정비된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한 화이질서가 동아시아 지

5 김기혁, 「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 조공체제에서 조약체제로」, 위의 책, pp. 1~2.

역에 확립된 것은 명이 들어 선 이후였다. 1401년 조선 태종이 명에 의해 국왕으로 책봉됨에 따라 전형적인 종속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듬해에는 당에 견당사를 파견했지만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맺지 않았고 9세기 중엽 관계를 단절한 이후 명이 들어서기까지 공식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던,⁶ 일본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일본국왕으로 명에 의해 책봉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종속체제에 편입되었다.⁷ 나아가 정화(鄭和)에게 함대를 끌고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의 정벌을 명했던 영락제(永樂帝)는 1406년 당 나라 때까지 명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병합을 추진했다. 명의 지배는 베트남인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20년 만에 끝났지만, 반명투쟁의 지도자로 360년 동안 존속한 레[黎]왕조를 세운 레 리는 중국에 비해 현저히 약한 국력을 고려해, 신왕조의 안정을 위해 1431년 명에 책봉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내 중국과 종속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명의 등장이후 조선, 일본, 베트남 세 나라가 명과 종속관계를 맺은 것은 화이사상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전동아시아 세계에 걸친 보편적 완성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⁸

그러나 중국 중심 동아시아 세계질서 아래에서 특히 조선과 일본은 각자의 위치나 위상에 관한 견해나 입장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조선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란 외교원칙이 잘 말해주듯이, 명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중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해 정치적 문화적으로 거의 완전한 일체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 대내적으로는 천황이, 대외적으로는 쇼군[將軍]이 각각 국가의 수장으로 행세한 이원적 원수제 국가였던 일본은 내심 조선국

6 李則芬(1982), 『中日關係史』, 臺灣: 中華書局, p. 108.

7 김기혁, 「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pp. 65~66.

8 유인선(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pp. 166~184.

왕을 일본천황과 동격일 수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동아시아 세계 내에서 예외적 존재라는 자화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명과 무로마치 막부와 의 책봉관계는 단속적으로 유지되다가 16세기 후반 막부의 붕괴로 소멸되었으며, 이후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의 권위에 도전한 임진왜란이 끝난 뒤 들어선 도쿠가와 막부는 무로마치 쇼군들이 명의 책봉을 받은 데 대한 일본국내의 비판을 고려해 이후 중국과 공식적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일본은 중국의 책봉을 받는 조공국인 조선의 국왕과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 동격으로 교류하는 교린관계를 다시 맺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7세기 중엽이후 중국을 통치한 청조와 종속관계를 맺은 조선과 베트남과 달리 책봉을 받거나 조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⁹

그러나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은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에서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동아시아 화이질서 내에서 예외적 존재를 자처하였으며, 이는 대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은 일본이 중국 중심 화이질서를 수용하면서도 종속적 책봉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다. 이는 주관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나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점한 것 같은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다.¹⁰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의 천황과 중국의 천자가 동격이라는 일본 별격(別格)론 같은 근대 일본 국수주의의 기원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그때 이미 조선이 고대에 일본에 입공하였다는 한3국(韓三國) 일본입공설이 제기되는 등 천황이 재집권할 경우 조선에 대한 서열상 우위를 주장하며 교린관계를 부정할 소지가 있었으며,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양

9 김기혁, 「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pp. 66~72.

10 일본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전중건부(1975), 『중세대외관계사』, 동경대학출판회, pp. 16~17 참조.

국의 국교조정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현실화 되었다.¹¹

2) 서세동점의 격랑 속 동아시아 3국의 대응 양태

1405년부터 총 7차례 걸린 정화가 이끄는 대 함대를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부 연안까지 보내, 이들 지역을 중국의 조공체제에 편입시킨 바 있었던 명조(明朝)는 1433년 돌연 해외원정을 중단했다. 왜냐하면 중화사상에 입각해 세계최고의 문명을 자부하고 자급자족의 농업대국으로 교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데다가,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만 받았을 뿐 해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던 명은 해양을 통한 대외진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¹² 이후 명은 연안에 출몰하는 왜구 소탕을 위한 해군력만 유지했으며, 중국만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도 왜구를 막기 위해 바닷길을 통해 왕래를 금했다. 이러한 해금(海禁)정책은 서구제국의 동아시아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¹³

이처럼 중국 등 동아시아 제국이 바닷길을 막고 외부세계로 향한 나라의 문호를 걸어 잠근 닫힌 세계였지만, 서양은 이와 달리 열린 세계였다. 15세기 중엽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비단길(the Silk Road)로 불리던 동방 무역로가 막히자 서구 제국들은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열망을 품었다. 때마침 일어난 과학혁명에 따른 천문학과 항해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힘입어 이러한 욕망은 현실로 다가왔다. 149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미주대륙 발견과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의 인도 항로 발견이후 서구 제국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 개척에 나섰다. 동방무역에

11 김기혁, 위의 논문, pp. 122~123.

12 미야자키 마사카쓰 저·이규조 역(1999), 『정화의 남해 대원정』, 일빛, pp. 155~220.

13 김기혁, 「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pp. 13~14.

대한 열망에 더불어 서구 제국의 동방진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식민지 획득 경쟁과 종교개혁에 대응해 펼쳐진 가톨릭교회의 포교운동이었다. 동방진출의 선두에 선 포르투갈은 1510년 인도의 고아(Goa), 이듬해 말래(馬來)반도의 말라카(Malacca), 1557년 중국 남부의 마카오(Macao)에 무역기지를 세웠으며, 스페인도 1519년 필리핀을 발견한 후 이를 식민지로 삼아 동남아시아와 중국, 일본 무역의 기지로 삼았다. 이 두 나라는 17세기초까지 동아시아 전해역의 재해권과 무역을 거의 독점하였다.¹⁴

1644년 명을 멸하고 대륙의 새 주인이 된 청조(淸朝)의 강희제(康熙帝)는 1685년 해금을 해제해 중국 상인의 해외도항과 외국선박의 중국기항을 허용하였으며, 1757년 광주(廣州)에 한해 무역을 허용하는 일항(一口)무역을 결정하였다. 청조(淸朝)도 이전의 중국 왕조와 마찬가지로 중화제국이자 세계 모든 나라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었으며, 세세동점에 따라 동아시아에 진출해 온 서방제국도 조공국으로 취급하였다. 서방에 허용한 광둥(廣東)무역도 청조 당국의 일방적 절대적 통제 하에 조공제도 하의 중외(中外)무역에 적용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조공국으로 대우하며 허용한 나가사키(長崎)무역도 항구 하나에 국한된 관허 독점무역이라는 점에서 광둥무역과 그 성격이 같았다.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 국가로 진화한 서구열강은 중국과 일본의 종속 내지 종번(宗藩) 무역에 승복할 수 없었다.¹⁵

지리적으로 인도항로에 가까웠던 베트남의 경우 쯔씨와 응우옌씨 두 가문이 남북으로 대립하던 1540년경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이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1670년대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차례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¹⁴ 김기혁, 위의 논문, pp. 11~13.

¹⁵ 김기혁(1990), 위의 논문, pp. 17~18; ---,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한국사시민강좌』7, 일조각, pp. 1~2.

1690년대말 구매력이 부족하고 시장의 협소한 베트남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영국은 철수하였으며, 그 자리를 무역보다 선교활동에 치중한 프랑스가 차지하였다.¹⁶

반면 지리적으로 서구제국의 동방무역 항로의 종착지인 중국 남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자급자족적 농업사회로 폐관자수(閉關自守)하고 있던 조선은 서세동점의 높은 파고에서 빗겨나 있었다. 특히 문화적 열등자로 취급해 오던 청조가 대륙의 지배자로 들어 선 이후, 조선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진정한 중화문명의 계승자인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하면서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가로막는 사상적 제방을 쌓음으로서 외부세계의 변화에 대해 무지하였다. 이와 같이 극히 제한된 소규모의 관허 독점무역을 허용하거나 폐쇄적 자급자족 세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제국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무력에 의해 서구의 조약체제를 받아들이는 개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의례외교를 중시한 전통적인 중국 중심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무역과 실리를 중시하는 국제조약에 입각한 서구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조약체제가 확립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¹⁶ 유인선, 앞의 책, pp. 266~268.

2. 서구적 조약체제의 도입과 이원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

1) 영국이 주도한 중국의 개항

(1) 아편전쟁과 남경조약 체결

19세기 들어와 중국의 청조는 서구 열강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중화주의에 젖어 있던 중국은 서구 열강을 그들의 문물을 흠모해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 찾아온 서양 오랑캐쯤으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동양과 서양 양대 문명의 대결이었던 1840년 아편전쟁(阿片戰爭)은 문명 간의 승패를 가른 분수령이 되었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경쟁국을 압도하며 동방무역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특히 18세기 중엽 인도 지배를 둘러싼 경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한 영국은 이를 동방무역의 기지로 삼아 광동무역에서 절대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청조 당국의 굴욕적 대우와 일방적인 통제 하에서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무역 불균형으로 중국으로의 은의 유출이 심화되었다. 이에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해 무역적자를 보전하려 함에 따라 중영간의 대립과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사실 이 대결은 화이사상에 기초해 문화의 중국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의 서열이 정해지는 의례(儀禮)외교 위주의 중국 중심 세계질서인 조공체제와, 만국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인 조약체제의 충돌이었다. 또한 이 전쟁은 무역을 세계 만민의 통치자인 천자가 중국의 선진 문물에 굽주린 이민족에게 베푸는 은전으로 생각한 청조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과 각국의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 수단이며 국제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모든 문명국의 권리라고 주장한 영국의 대결이

었다. 또한 이것은 중국 관료의 전통적인 관존민비 사상과 상업 천시 풍습 대 영국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주의 사상의 대결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아편전쟁은 실로 동양과 서양 문명 사이에서 벌어진 문화적 사상적 대결이었다.¹⁷

중국은 이 전쟁에서 완패했으며, 그 결과 근대 국제법에 입각한 조약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842년 중국은 영국과 불평등한 남경조약을 맺었고, 1844년에는 미국과 프랑스와 각각 망하(望廈)조약과 황포(黃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서구국가들은 편무적 협정관세로 관세(關稅)자주권을 박탈했고,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으로 사법권을 침해했으며, 최혜국 대우를 강요해 각국이 획득한 모든 특권을 전 체약국(締約國)이 함께 향유하였다. 남경조약으로 중국의 쇄국주의가 무너지고 5개항을 영국에 개항했으며 홍콩도 할양하였다. 이처럼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영국에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것을 우연한 패전으로 여겨 서구 문물의 선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서구를 따라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2) 애로우호 전쟁과 북경조약 체결

5개항 무역으로 만족치 않았던 영국은 1856년 애로우(Arrow)호 사건을 구실로, 주경권(駐京權)과 통상권의 확대를 목표로 다시 중국과 애로우 전쟁(1856-1860)을 개시하였다. 이 때 프랑스도 선교권과 통상권의 확대를 목표로 영국과 연합해 참전하였으며, 러시아는 영불연합군 철수를 증재하겠다는 핑계로 연해주를 요구했다. 이 전쟁은 1860년 10월 북경 함락으로 천자는 몽진하고 공친왕(恭親王)이 영 프 러의 요구 들어주는 것으로 그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 맺어진 북경조약으로 중국은 공사의 주경(駐京)권과 양자

17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 5.

강을 통한 내륙 항행권, 그리고 기독교 선교권도 허용하였다. 중국은 1860년 북경이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게 함락되는 수모를 겪은 뒤에 비로소 서양의 근대 무기와 기술의 우월성만은 인정하였다. 서양세력의 우세를 뺏속 깊이 새긴 중국 지배층은 그들의 앞선 기술과 무기를 배우고자 양무(洋務) 운동을 시발하였다. 양무운동을 계기로 청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서구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수 천년에 걸쳐 천하의 중심이요, 만방의 종주국을 자처해 온 중국이 서세동점의 거센 물결 앞에서 서구 국민국가들이 이끄는 근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데는 20년의 세월과 아편 애로우 양대 전쟁에서의 굴욕적인 군사적 패배가 필요했다.¹⁸

청조는 1858년에서 1860년 사이에 서방 4개국(영 미 프 리)와 체결한 조약들을 이행하는 방침을 세우고 그 실행기관으로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을 세워 체약국과의 외교 통상은 물론 양무운동을 이끌게 했다. 이처럼 조공체제의 종주국 중국은 서구 열강의 무력에 굴복해 남경조약과 북경조약을 맺어 서구의 조약체제로 편입되고 말았다. 그러나 청조는 청불전쟁(1884~1885)과 청일전쟁(1894~1895)에서 패하기 전까지 전통적 속국인 베트남과 조선에 대한 조공에 입각한 종속체제를 견지함으로써 종래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 했고, 그 와중에 두 나라는 조공체제와 조약체제가 병존하는 이원적 국제질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지리적 단절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일본은 서구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를 꿈을 꾸기 시작했다.

18 김기혁, 「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pp. 11~50; ---,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p. 1~10. Key-Hiuk Kim(1980), *The Last Phase of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28~351.

2) 미국이 주도한 일본 개항과 메이지 유신 후 복고외교

(1) 가나가와조약과 미·일 수호통상조약 체결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의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 : 1663~1712]가 1639년 쇄국령을 내린 이후, 네덜란드와 중국 두 나라와의 소규모 무역을 제외하고는 외부 세계를 향한 문을 닫아걸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서세동점의 파고가 거세게 밀어닥치면서 서구 열강들은 굳게 닫힌 일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개방을 주도한 나라가 영국이었다면, 일본을 개방한 주역은 미국이었다. 영국이 일본을 보잘 것 없는 섬나라로 간주하고 주로 중국시장 개척에 주력하였다면, 18세기 후반 대서양 연안국가로 출발해 1848년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가로채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미국은 태평양 진출을 ‘명백한 운명(the Manifest Destiny)’으로 확신하였다. 특히 아편전쟁에 패배한 청조가 영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입각해, 1844년 미국과 망하조약을 체결하여 5개항의 무역을 허용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은 날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자 종래 동부에서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거쳐 중국 광둥무역에 임했던 미국은 서부에서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직행하는 항로 개척에 나섰다. 미국은 직항로 개설의 관건인 태평양 해역에서 식품과 연료를 공급해 주고 태풍 등 해난 시 피난할 수 있는 기항지를 제공해 줄 대상으로 일본을 주목했다.¹⁹⁾

미국에게 있어 일본의 지리적 위치는 당시 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가기 위해 반드시 개항시켜야 할 디딤돌과 같았다. 1852년 미국 정부는 페리(Perry)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파견하였으며, ‘흑선(黑線)’ 4척

¹⁹⁾ 김기혁, 「1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pp. 50~58.

으로 구성된 이 함대는 이듬해 7월 포함외교를 전개해 무력시위로 막부를 압박했다.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이후 서구 열강의 무력을 두려워하고 있던 막부는 중국처럼 비참하게 패배할 것을 우려해 1854년 3월 미국과 가나가와[神奈川]조약이라 불리는 화친(和親)조약을 맺었다. 미국이 일본 개항에 나선 주된 이유는 일본과의 통상보다 중국 시장으로 가는 접근로 확보에 있었다. 이는 미국이 벽지에 위치한 시모다[下田]와 하코다테[函館] 두 개 항구를 개항해 미국선박에 식품과 연료를 공급하고 난파선의 구호를 약속받았을 뿐 무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 데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후 1854년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듬해 네덜란드와 화친조약을 맺음으로써, 200년 동안 견지해온 일본의 쇄국정책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²⁰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일본인들은 서양 사람을 야만인들이라고 경멸했다. 하지만 막부가 서양의 무력 위협에 굴복하여 서양과 통상조약을 맺자, 적에게 굴복하는 것을 가장 큰 치욕으로 여기는 무사들은 이를 견디기 어려운 굴욕으로 받아들였다. 무사들은 일본은 신이 세운 신성한 국가라는 건국신화에 기초해 신의 직계후손인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존경하고 숭배해야 한다는 이른바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거세지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던 천황의 조정은 힘이 실리는 데 비해 막부의 권위는 점점 추락했다.²¹

양이론이 비등해 막부의 개방정책이 난관에 봉착해 있던 당시 초대 주일 미국 총영사 해리스(Townsend Harris)가 부임해 통상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자 막부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애로우전쟁이 일어나 영 프연합군이 천진을 점령했으며, 전쟁이 끝나는대로 일본원

20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p. 12~13.

21 石井 孝(1972), 『日本開國史』, 東京: 吉川弘文館, pp. 14~99; 田中 彰(1922), 『開國と倒幕: 日本の歴史 15』, 東京: 集英社, pp. 31~86.

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에 휩싸인 막부는 양이론자들을 무마할 목적으로 200여 년래의 전통을 깨트리고 교토에 있는 천황에게 조약 체결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받으려 했다. 그러나 황실의 거절을 당해 권위가 실추된 막부는 1858년 6월 독단적으로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했다. 그 결과 미국과 통상을 허용 해 기존의 2개항 외에 추가로 나가사키(長崎) 등 4개항 개방, 치외법권 부여,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신앙의 자유 등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막부는 8월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그리고 10월에는 프랑스와 차례로 미국과 맺은 조약과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220년간 이어져 온 쇄국의 빗장은 완전히 열리고 도쿠가와 막부도 청조와 마찬가지로 서구제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무릎을 꿇고 근대적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²²

(2) 메이지 유신과 복고외교 : 조·일 국교조정과 청일수교

막부가 서구 국가들에 굴복해 나라의 문호를 개방한 것을 계기로 존왕양이 운동은 반(反)막부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존왕의 이름으로 권위가 실추된 막부를 무너뜨리고 조정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867년에는 사쓰마(薩摩) 번과 조슈(長州) 번의 하급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막부타도 동맹을 결성하였다. 그러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당시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熙 : 1837~1913)는 이들이 막부타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천황의 조정에 정치권력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했고, 이 제의가 받아들여짐으로써 마침내 대정봉환(大政奉還)과 왕정복고(王政復古)가 단행되었다.²³ 역설적으로 천황친정

22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p. 13~14.

23 松尾正人(1994), 「倒幕と統一國家の形成」, 田中 彰 編, 『明治維新 : 近代日本の軌跡 1』 東京 : 吉川弘文館, pp. 114~139.

을 이끈 메이지유신의 주동세력들은 모두 양이론자로 출발했으나, 만만부 투쟁의 과정에서 양이론의 비현실성을 자각하고 집권 이후 종래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신정권 발족 후 최초의 외교상 조치가 막부가 체결한 외국과의 조약과 협정에 대한 존중을 통보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식 조약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그러나 청조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일본도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서열과 위계를 따지는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잣대를 폐기하지 않았다.²⁴

왕정복고를 내세운 메이지 유신은 서구 근대의 도입이자 일본 고대로의 복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신 초 일본 정부는 고대 천황제 하의 국제질서의 회귀, 즉 중국의 천자와 일본의 천황이 동격이 되는 ‘복고’외교를 펼쳐, 천황의 신하였던 도쿠가와 쇼군과 항례로 교류하던 조선 국왕과 천황이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1868년말 메이지 정부는 조 일 양국 사이에서 외교통상 사무를 담당하여 온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천황의 서열 상 우위를 분명히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에 보내 온 대마도주의 서한에는 조공체제 하에서는 중국의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황상(皇上)’과 ‘황조(皇祖)’와 같은 일본 천황을 칭하는 용어가 들어 있었다.²⁵

이러한 ‘복고(復古)외교’의 배후에는 백제와 신라가 천황 친정 하 일본조정 에 입공하였다는 역설에 입각해 고대의 천황제가 복고되었으니, 조선 국왕이 입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불성설의 논리가 깔려 있었다. 조선 측의 서한 접수 거부로 일본 천황의 조선 국왕에 대한 서열상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일본 외무성은 청조와 상호평등의 원칙에 입각

24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 15.

25 이광린(1981), 『한국사강좌 : 근대편』 일조각, pp. 55~56.

한 조약을 맺어 천황과 천자가 동격임을 확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청조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천자의 책봉을 받는 조선 국왕은 천황의 하위에 서게 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응징해도 명분이 선다는 계산이었다. 중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수중에 넣으려는 복선이 깔린 일본의 입약 요구에 접한 청조 당국자들은 일본이 서구와 결탁해 적대세력화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서구기술을 수용해 무비를 키우고 있던 일본을 서구침략에 대응하는 우군으로 만들려는 심산으로 협상에 응했다.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천황과 천자를 조약 서문에 나란히 병기해 두 원수가 동격임을 분명히 할 것과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지만 청조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조는 양국 간 호혜와 평등의 원칙은 수락하였으며, 그 결과 1871년 9월 청일 수호조약이 조인되었다. 청조의 협상 대표자 이홍장(李鴻章)은 이 조약의 제1조에 상호 ‘방토(邦土)불가침’조항을, 그리고 제2조에 타국과의 분쟁 시 양국의 상호 원조 조정을 규정한 조항을 넣었다. 방토의 방(邦)은 속방을 의미한 것으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한 것이며, 제2조는 일본이 중국에 적대적인 서방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²⁶

청조는 서구와 조약관계를 맺었지만 여전히 동아시아 제국과의 종속 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청조가 입공하지는 않았지만 종래 속방으로 간주하던 일본과 서구식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상호관계도 조공체제에서 벗어나 조약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일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조약 체결 과정에서 보여준 청조나 일본 당국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아직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이념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²⁷

26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p. 16~19.

27 김기혁, 「강화도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환경」, 앞의 책, p. 71.

3) 일본이 주도한 조선 개항

(1) 일본의 대조선 외교 방침 전환 : ‘탈아’ 외교의 전개

청일 간에 조약 체결 교섭이 한창이던 1871년 일본 국내에서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이 단행되어 중앙집권의 근대식 국가로 탈바꿈하자, 메이지 정부는 대외관계에서도 종래의 국가 간 서열을 따지는 복고외교에서 벗어나 서구식 국제질서에 맞춘 ‘탈아’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구세계의 일원이 되자는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지향하는 탈아 외교는 서구를 향해서는 도쿠가와 막부 시절 체결한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아시아 제국을 향해서는 서구열강이 이들 나라에 강요했던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²⁸ 특히 이 탈아 외교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서양의 진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해외웅비론(海外雄飛論), 다시 말해 아시아 침략론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메이지정부는 탈아외교의 일환으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팽창주의 정책을 펼쳤으며,²⁹ 그 결과 정한론(征韓論), 류큐[琉球] 병합, 대만 출병이 이어졌고 조선과의 강화도조약 체결도 이 연장선상에 있었다.

(2) 대원군 실각과 강화도 조약 체결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 손에 들어가 조선과 국경을 맞대었을 때, 열강은 조선이 러시아에게 장악될 경우 일어날 사태를 우려해 공포증(恐露症)에 몸을 떨었다. 중국은 울타리를 잃은 뒤 겪게 될 순망치한(唇

28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 20.

29 박충석(1996), 「근대일본에 있어서 국가주의의 형성」, 박영재 외. 『19세기 일본의 근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07~110; 旗田巍 저·이기동 역(1983),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pp. 17~21.

亡齒寒)의 두려움에, 일본은 조선이 열도를 겨누는 서늘한 칼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으며, 영국은 부동항을 확보한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태평양으로 뻗어 나올까 우려했다. 북경 조약이 맺어진 1860년 10월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이 근대 국민국가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던 그때 흥선 대원군 이하응(李昰應) 집정하의 조선왕조는 여전히 중화 문명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쇄국의 담을 높이 쌓고 있었다. 특히 그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북경점령사건 이후 ‘양이(洋夷)’들에게 굴복해 양무운동을 펴고 있던 청조당국을 멸시하고 이들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서구 열강과 일본 등에 대해 극단적인 쇄국양이 정책을 펼쳤다. 깊은 잠에 빠진 대원군 치하 쇄국 조선은 청일 사이의 조약 체결 소식에도 깨어날 줄 몰랐다. 일본이 청조에 대해 칭신(稱臣)하지 않으며, 양국 사이에 교역이 진행될 것이라는 연행사의 보고에도 흥선 대원군 치하의 조선은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1866년에는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 그리고 1871년에는 신미양요(辛未洋擾)라는 프랑스와 미국과의 무력충돌을 빚었고, 메이지 일본과는 비타협적인 고자세 외교로 일관했다.³⁰

1873년 말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일본에 대한 유화책이 모색되고, 1874년 8월 청조는 일본군 5천명이 조선 침공을 준비 중이며, 미국과 프랑스도 공동 출병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왔다. 충격을 받은 조선정부는 일본에 선린관계 회복을 청했지만, 일본은 “힘과 압력”에 의한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1875년 일본은 미국이 자국의 문호를 개방시킬 때 사용했던 포함외교를 그대로 조선에 구사해 쇄국의 기치를 내리게 하였다.

30 류영익(1993), 「흥선대원군」 『한국사시민강좌』13, 일조각, pp. 105~107; 김기혁,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환경」, 앞의 책, pp. 86~93; 이광린, 앞의 책, p. 58.

1876년 2월 6척의 군함과 800명의 군대가 에워싼 가운데 체결된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왕조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 중 가장 늦게 서구중심의 국제질서인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이 조약에는 조선이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주권을 보유한다는 조항이 일본 측의 주장으로 제1조로 들어갔다.³¹ 이는 서구적 원칙에 입각해 조일관계를 재규정해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조선 침략의 길을 트는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의 개항은 서구열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래 중국 중심 세계질서에서 교린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보인다.

4) 베트남 개항과 식민지 전략

(1) 프랑스 침략과 제1, 2차 사이공 조약 체결

베트남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 일본 보다 서구열강과 접촉이 가장 빨랐다. 그러나 1802년 베트남의 통일을 완성한 응우옌[阮] 왕조는 유교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그 위정자들은 유학에 소양이 깊고 중국 문화를 이상시 했기 때문에 ‘유럽의 만이(蠻夷)’ 특히 가톨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베트남에 대한 침략을 주도한 프랑스의 파리외방전교회의 활약으로 가톨릭 개종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만 갔다. 이들이 베트남 사회의 지도이념인 유교의 가르침과 의식을 거부하자, 개종자는 물론 프랑스인 선교사까지 처형하는 박해의 피바람이 몰아쳤다.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위정자들은 무역과 포교를 거부하는 쇄국정책의 기초를 놓치지 않았다.³² 서구에 대한 쇄국정책을 더 강화한

31 김기혁,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환경」, pp. 93~119.

32 유인선, 앞의 책, pp. 266~275.

뜨득제[嗣德帝]가 1853년 궁중쿠데타 사건 이후 2만 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를 처형하는 박해를 가하자, 해외팽창정책을 추구하던 나폴레옹 3세는 이를 빌미로 베트남 침략에 나섰다. 왜냐하면 그는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청국과 중주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까지 그 세력을 확장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인도를 중심으로 미얀마, 말레이 반도, 중국,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영국에게 인도차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프랑스는 베트남의 식민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³³

친진조약의 체결로 에로우호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1858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침략은 전쟁이 끝난 1860년 9월 본격화되었다. 프랑스군이 1862년 남부의 자딘성(嘉定省)을 비롯한 동부의 대부분을 점령한 상황에서, 북부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베트남 정부는 하는 수 없이 1862년 6월 이른바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 내용은 포교자유 인정, 코친차이나의 동부 3성 할양, 그리고 다낭 등 세 항구의 개항이었다. 1867년 프랑스는 저항세력의 근거지인 코친차이나 서부 3성마저 점령하였다. 국제정세의 동향에 무감각했던 베트남의 위정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변혁을 도모하지 못했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프랑스는 중국 시장으로 연결되는 무역로 확보를 위해 침략의 방향을 중국 윈난성과 맞닿 북부지역으로 돌렸다. 왜냐하면 남부의 메콩강은 항행에 부적절하고 오히려 톤킨에서 홍강을 통해 윈난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프랑스는 윈난으로 진출하려는 영국에 맞서 인도차이나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으려 했다.³⁴

³³ 송정남(2010), 『베트남 역사 읽기』,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pp. 320~321.

³⁴ 유인선, 앞의 책, pp. 275~285.

1873년 프랑스 무기상이 무기와 소금을 싣고 홍 강을 통해 윈난으로 가려다 베트남 관리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구실로 코친차이나 총독 가르니에(Francis Garnier)는 무력으로 하노이와 톤킨 델타 지역을 점령했지만, 복병을 만나 전사하고 말았다. 보불전쟁 패배, 파리 코뮌 성립, 내전의 발생 등 연이은 악재로 베트남에 쏟을 여력이 없던 프랑스는 베트남과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1874년 제2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프랑스는 남부 6성에 대한 주권 확보, 프랑스의 국익에 반하는 제3국과의 조약 체결 금지, 홍 강의 개방, 영사의 하노이 주재, 그리고 가톨릭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왕래 보장 등을 얻어냈다. 또한 프랑스는 이 조약에서 군함과 무기의 제공 등을 약속하며 베트남의 독립을 보장했지만, 국내사정으로 잠시 유보했을 뿐 프랑스가 베트남의 식민지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³⁵

(2) 아르망 조약 체결과 프랑스 식민지 전략

제2차 사이공조약에 담긴 ‘베트남은 독립국가’라는 조항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시 일본이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주권을 보유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청조의 종주권을 부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초읽기에 들어간 식민지화의 위협 아래에서 베트남 정부는 마지막 희망을 종주국 청조에 걸 수밖에 없었다. 1876년과 1880년 두 번에 걸쳐 조공사절을 중국에 보냈지만, 아편전쟁과 애로우호 전쟁 두 차례의 전쟁에서 서방에 패한 청조는 베트남의 기대에 부응할 힘이 없었다. 이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천여 년 이상 유지되었던 종주 종속의 오랜 관념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으며, 힘의 논리에 따라 프랑스가 베트남의 새로운 종주국으로 부상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남부 코친차이나 6성을 빼앗

³⁵ 유인선, 위의 책, pp. 285~287.

기고도 베트남의 위정자들은 1876년과 1880년 두 번에 걸쳐 중주국 청조에 조공사절을 파견해 도움을 청했을 뿐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은 근대로의 개혁을 추동하지 못했다. 온건 공화파의 집권으로 국내사정이 호전되자 프랑스는 영국 등이 베트남과 통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접해 베트남의 식민화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1881년 두 명의 프랑스인이 제2차 사이공조약으로 통항권을 얻은 홍 강을 거슬러 중국의 운남으로 항행하던 중 흑기군에 의해 저지된 사건을 빌미로, 프랑스는 무력을 동원해 하노이를 점령하고 톤킨 델타 지역을 손에 넣었다. 1883년 2월 식민지 팽창주의자인 줄 페리(Jules Ferry)가 집권한 이후 대규모 병력을 증원한 프랑스의 공세에 밀린 응우옌 왕조는 그해 8월 휴전을 청해 이른바 아르망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국제법상 남부 코친차이나는 프랑스 식민지이고 중부와 북부는 보호령이 되었다. 응우옌 왕조를 폐지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왕조가 명목상 존속했지만, 이는 명목일 뿐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모든 영토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³⁶

³⁶ 유인선, 위의 책, pp. 287~292; 송정남, 앞의 책, pp. 336~339.

III.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민국가 수립과 좌절

1.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등장

1) 메이지 유신과 일본형 국민국가 수립

(1) 국민국가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국경선으로 구획 지어지는 일정 영역을 소유하는 주권국가로서 영역 내의 국민들이 국민적 일체성을 공유하는 국가’를 뜻한다. 사실 국민국가는 보편종교 기독교의 지배 아래에 있던 중세의 쇠퇴 이후, 종교에 대체해 개인의 영원성을 국가와 민족에게서 찾으려 한데서 발생한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국민 내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정의한 사람은 베네딕트 앤더슨이다. 그는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유행』에서 “민족(nation)은 이미지로서 마음속에서 묘사되는 상상의 정치공동체(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이다”고 정의했다.³⁷ 서구가 아닌 남미와 동남아시아 신생국에서의 국민형성의 측면에서 민족주의를 분석하여, “민족”의 허구성을 명확하게 지적한 앤더슨의 지적이 나온 이후 국민국가에 대한 학계의 논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었다. 최

37 Benedict Anderson(1983),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New York : Verso, Rev. ed. 1991. 국내에서는 다음 서명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앤더슨 저·윤형숙 역(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B. Anderson 저·崔錫榮 역(1995), 『민족의식의 역사인류학』, 서경문화사.

근 학설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비서구 지역에서의 국민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³⁸

첫째, 국민국가는 그 정치체제가 군주제든 공화제든, 민주(民主)적이든 전제(專制)적이든 간에 국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하며, 또 그 국가가 국민국가인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판정기준인데, 서구의 가치기준에 따른 문명화 정도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 국민국가는 국가통합을 위해 의회 정부 군대 경찰 등 지배 억압기구로부터 가족 학교 언론매체 종교 등 이념적 장치까지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국민국가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세계적인 국민국가 체제에서 그 위치가 설정되며, 각각의 독자성을 표방하면서도 서로 모방하면서 유사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상상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는 민족 즉 국민을 통합하는 전제로서 경제통합(교통망, 토지제도,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국가통합(헌법, 의회, 징병에 의한 국민군), 국민통합(호적, 박물관, 정당, 학교, 신문), 문화통합(국어, 국가, 서약, 문학, 역사서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 서구 지역에서의 국민국가란 그 정체의 민주성 여하에 상관없이 소위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민을 단위로 한 국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2) 일본형 국민국가 수립

‘문명개화’로 상징되는 일본의 근대는 단순한 서구문물과 제도의 도입만

38 西川長夫(1995), 『日本型國民國家の形成—比較史的觀點から』, 西川長夫 松宮秀治 編, 『幕末 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東京: 新曜社, pp. 3~42. 이 밖에도 국민 국가에 대한 학설에 대해서는 牧原憲夫 編(2003), 『「私」にとっての國民國家論』, (日本經濟評論社, 참조.

이 아니라, 천황제를 부활시킨 메이지유신의 불가피한 산물로서 일본 고대의 복고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서구 근대와 일본 고대의 유착'이라는 일본 근대의 특수성이 나온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서구의 역상(逆像)'으로서의 일본 근대는 서구 근대가 '오해 오역'되거나 '날조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 근대 국민국가들이 만들어낸 근대화 기제들을 이입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예컨대 육군은 프랑스, 해군은 영국, 교육은 미국, 황실은 영국, 헌법은 독일의 제도를 도입해 일본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정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 1880년대 초반에 이미 일본형 국민국가의 토대를 닦았다.³⁹

첫째, 서구와 대등한 위치 확보를 위해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일본이 삼권분립 체제 등 국민국가 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서구 문명국 대열에 끼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⁴⁰ 또한 국민국가는 다른 국민국가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국민국가 체제에서 그 위치가 설정되므로, 이 같은 세계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서구의 기준에 맞는 통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⁴¹

둘째, 일본식으로 변형된 국가 통합장치를 만들어 나갔다.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를 도모한 1868년의 왕정복고는 단순히 고대 천황제로의 복귀가 아니었다. 사실상 정치권력을 장악한 번벌(藩閥)세력이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 천황을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따라서 메이지유신 이후 집권정부의 통치체제도 중국의 율령(律令)체제에 입각한 고대의 천황제

39 허동현(2002), 「조사시찰단(1881)의 일본 경험에 보이는 근대의 특성」 『한국사상사학』19, pp. 509~510.

40 山室信一, 「明治國家の制度と理念」 『(岩波講座)日本通史 : 近代2』17, pp. 117~121.

41 西川長夫, 앞의 논문, pp. 5~6; 佐佐木 克(1992), 『日本近代の出發 : 日本の歴史 17』, 集英社, pp. 229~236.

를 복구한 것이라기보다, 서구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통합을 위한 통치와 지배의 장치들을 일본식으로 변형 날조해 도입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1880년대 초반 일본은 집권적 정부가 사실상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겉모습으로는 서구의 삼권분립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재야에서는 집권적 정부의 권력독점에 반발해 입헌정체를 수립하고, 민선에 의한 국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민권(自由民權)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은 사법권의 독립과 근대 형법도 채택했으며, 징병제에 의한 국민군도 확보하고 있었다.⁴²

셋째, 자본주의를 향한 경제통합 장치도 갖춰 나갔다.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회사제도 도입과 화폐제도 통합 등 경제제도의 개혁과 조세제도 개정 및 질료처분(秩祿處分)으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산흥업(殖産興業) 정책을 추진하여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해운업을 진흥해 육로는 물론 해상 교통망을 뚫었으며, 우편과 전신 등 근대 통신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정비된 가로망을 갖춘 도시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켜지고, 인력거와 마차가 오가는 등 문명의 이기(利器)들도 속속 등장했다. 이처럼 상품의 유통과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보와 지식을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근대의 표상으로서 공간의 문명화도 진행되고 있었다.⁴³

42 西川長夫, 앞의 논문, pp. 30~38; 安丸良夫(1994), 「1850-70年代の日本—維新變革」 『(岩波講座)日本通史: 近代 1』16, 岩波書店, pp. 40~43; 오카 요시타케 저·장인성 역 (1996), 『근대일본정치사』, 소화, pp. 18, 31; 김용덕(1996), 「개항과 자강의 모색」, 박영재 외, 『19세기 일본의 근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22~128.

43 西川長夫, 위의 논문, pp. 31~33; 神山恒雄(1994), 「官業から民業へ」高村直助 編, 『産業革命: 近代日本の軌跡 8』, 吉川弘文館, pp. 47~49; 差波亞紀子(1994), 「汽船と道路」, 高村直助 編, 『産業革命: 近代日本の軌跡 8』, 吉川弘文館, pp. 68~87.

넷째, 일본은 국민 창출을 위한 문화통합에 매진했다. ‘문명개화’ 정책은 서구 근대를 이식하여 전 국민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만들어 내고 서양의 기준에 맞춰 국민을 ‘문명화’하려는 것이었다. 먼저 균일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신분제를 철폐하고 사민평등을 선언하였으며, 속지주의에 입각해 모든 국민을 동일한 호적제도 하에 파악하였다. 1872년에는 학제를 반포해 균일한 국민을 양성하는 장치로서의 학교설립을 규정하였으며, 인신매매의 금지 및 직업과 이주의 자유도 보장하였다. 1873년에는 태양력을 채택하여 서구 열강과 동일한 시간체계를 수립하였고, 1871년에는 ‘신문지조례’를 만들어 정치비판을 엄격히 금지시킴으로써 신문을 정부 정책의 홍보 내지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 기독교 침투에 맞서 신도(神道)를 국교로 정해 종교를 통한 문화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서구 기준에서 볼 때 야만적인 남녀혼욕을 엄금하는 등 풍속을 서구식으로 개조해 나갔다.⁴⁴

사실 비민주적 집권정부로 특징지어지는 일본형 국민국가의 국가통합을 위한 장치들은 시민계층의 성장이 미미함으로 해서 다원화된 근대 시민사회를 창출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자본주의가 채 성숙하기도 전인 1870년대에 류큐 왕국을 병합하고 대만을 침략하며, 조선에 개항을 강요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팽창주의 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1880년에 들어서면 서 이미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 침략의 길을 닦고 있었다. 1885년 3월 16일자 「지시신보[時事新報]」에 실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탈아론」이 웅변하듯이, 그때 일본의 위정자들은 서양은 문명이고 동양은 야만이라는 비서양에 대한 서양의 차별논리인 오리엔탈리즘이 뇌리 속 깊

44 大久保利謙(1967), 「文明開化」『(岩波講座)日本歴史：近代 2』15, 岩波書店, pp. 255~258; ひろたまさき(1975), 「啓蒙思想と文明開化」『(岩波講座)日本歴史：近代 1』14 (岩波書店, pp. 338~339쪽.

속이 파고들어 각인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중국과 조선은 연대하고 협력할 상대가 아니라 일본이 ‘문명화’시켜야 할 침략의 대상으로 비춰졌다. 이처럼 메이지 일본은 그 태내에 군국주의 일본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치 지배 기구는 일본처럼 시민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조선이나 중국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였다.

2)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부상

(1) 청일전쟁(1894~1895)의 승리

1894년 조선에서 터진 동학농민봉기가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청일전쟁은 1871년 청일수호조규 체결 이래 4반세기 동안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쟁패전 최후의 군사적 대결이었다. 이 전쟁으로 신흥 제국 일본은 이 지역의 패자로 등장하였으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 국제질서는 중지부를 찍었다.⁴⁵ 1894년 7월 22일 밤 용산에 주둔한 일본군은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작전 목표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국왕을 포로로 삼는 것이었다. 청일전쟁의 도화선을 당긴 경복궁 점령은 일본이 파병을 결정한 5월 31일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에 의해 전주가 함락되던 그 날, 일본 내각은 의회에 의해 탄핵당하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은 내부의 위기를 밖에서 전쟁을 일으켜 해소하려 했다. 1885년 갑신정변(甲申政變) 사후 처리를 위해 청일 양국이 맺은 천진조약에는 조선에 출병 시 “통고”해준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일본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45 류영익(1990),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p. 22; 김기혁, 「이홍장과 청일전쟁」, 앞의 책, p. 158.

해 병력을 파견해 6월말 제물포에 주둔한 일본군은 6천명에 달하였다. 경북
 공을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 조선군의 무장이 완전히 해제된 7월 23일 일본
 은 친일 괴뢰 내각을 구성하고 대원군을 다시 섭정으로 내세웠다. 친청 민씨
 척족은 정권에서 밀려났으며, 국왕은 일본의 지배하에 놓였다. 25일 일본군
 은 성환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26일 청의 수송선을 아산 앞바다에 수장시켰
 다. 일본군은 9월에 벌어진 평양전투에서 2천에 달하는 청의 북양육군을 사
 살했고 황해해전에서 북양해군을 궤멸시켜 재해권을 장악했으며, 10월에는
 전장을 만주와 요동으로 확대해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점령하는 등 대
 승을 거두었다.⁴⁶

이에 중화제국 청조는 신흥세력 일본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1895년 4월 체결된 시모노세키[下關]조약으로 일본은 서구열강과 어깨를 겨
 루게 되었으며, 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이권을 챙겼다. 우선 조선의 ‘독
 립’을 승인시킴으로써 청조의 간섭을 배제하게 되었고, 요동반도와 대만 등
 의 할양으로 중국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청조의 영사재
 판권을 철회시키고, 일본이 중국에서 서구열강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
 었다. 또한 당시 청조 재정규모의 3배이자 일본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약
 2억 3천만냥(3억 4,500만 엔)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았다. 일본은 이를 기반
 으로 1897년 서구와 마찬가지로 금본위제를 채택함으로써 서구와 안정적으
 로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또한 일본은 1896년 7,300만 엔이었던 군
 사비를 1903년에는 1억 5천만 엔으로 증액해 총예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군비 증강에 매진했으며, 중공업 투자 확충을 통해 새로운 패권 경
 쟁국인 러시아와의 일전을 겨룰 수 있는 군비생산력을 갖추어 나갔다. 또한

46 中塚 明(1973),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pp. 110~126; 이광린, 앞의 책, pp. 297~307, 355.

그 과정에서 천황제 절대주의 체제가 공고해지고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등 재벌의 성장을 바탕으로, 1900년대 초에는 초기 독점자본주의체제를 형성하면서 일본은 제국주의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⁴⁷

(2)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의 쟁패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3국간섭에 굴복함으로써 조선 지배의 야망이 꺾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1895년 10월 야만적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날로 증대되는 일본의 간섭과 횡포를 피해 국왕 고종이 아관파천(俄館播遷)한 이후 러시아 세력의 한반도 침투가 본격화되었다. 아관파천 기간(1895. 2. 11~1897. 2. 20)동안 러시아 세력의 침투를 막고 지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일본의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 1896년 5월과 6월에 각각 맺어진 ‘웨베르(Waeber)-고무라(小村)각서’와 ‘로바노프(Lobanov)-야마가타[山縣] 의정서’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아관파천 이후 우세해진 러시아와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의도와는 달리 일본은 이렇다 할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러시아의 조선침투를 승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후자는 그 주 내용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가 분할 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치해 충돌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제안, 즉 한반도 분할통치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할통치안은 러시아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일본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러시아는 일본에게 일정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47 강동진(1985), 『日本近代史』, 한길사, pp. 134, 148; 앤드루 고든 저·김우영 역(2005), 『현대일본의 역사』, 이산, p. 229; 藤村道生(1973), 『日清戦争：東アジア近代史の轉換點』, 岩波書店, pp. 170~171; 藤井松一(1972), 『日露戦争』, 『岩波講座 日本歴史』18, 岩波書店, pp. 123~136.

일본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일본보다 군사적 재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후 1897년 12월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게 되자 러시아는 한반도보다 만주로 진출 방향을 전환하는 만주중시 정책을 택하고, 1898년부터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여순 지향형 정책(Port Arthur-orientation)’을 펼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사실상 포기한 바 있었다. 이후 1898년 4월 러시아는 일본과 ‘니시[西德二郎] 로젠(Rosen) 협정’을 맺어 일본이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눈감는 대신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에서의 상업적 공업적 우위를 인정하는 타협을 하게 된다. 이 때 두 나라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말하였지만, 이는 진정한 독립이 아닌 러시아와 일본 어느 한쪽의 조선에 대한 완전한 패권이 실현되지 않은 힘의 균형 상태임을 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⁴⁸

(3) 러일전쟁 승리와 동아시아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

청일전쟁과 3국간섭 이후 약체가 드러난 청조를 상대로 영토 분할과 이권 쟁탈을 위한 서구열강 사이에 각축전이 전개되었다. 중국에서 이미 지배적 위치를 다진 영국에 대해 러시아의 도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부청멸양(扶清滅洋)’을 내걸고 외세를 배척한 의화단사건을 틈타 러시아가 만주에서의 자국 이권 보호를 명분으로 18만의 대병력을 동원해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초조해진 영국은 일본과 손잡고 러시아의 침투를 견제하려 했다. 1902년 1월 제1차 영일동맹이 맺어지고, 철병 압력에 직면한 러시아는 1903년 10월까지 전병력을 철군할 것을 명기한 만주 환부(還附)조약을 청조와 맺었다. 그러나

48 A. 말로제모프 저·석화정 역(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pp. 141~166; 최문형(2011),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pp. 208~216, 223~263; 송금영(2004),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1860~1905)』, 국학자료원, pp. 279~288.

러시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러일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졌다.⁴⁹

1904년 5월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일본육군 13만은 만주주둔 러시아군 22만과 대격전을 벌여 요양과 봉천을 점령하고, 1905년 1월에는 7개월간의 악전고투 끝에 전략적 요충인 여순을 함락시켰다. 수세에 밀린 러시아는 발틱함대를 동원했지만,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일본 연합함대의 공격을 받아 궤멸되어 버림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했다. 9월 5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맺어졌다. 러일전쟁 중에 맺어진 카스라 태프트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러일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 지배를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모두에게서 인정받았다. 영국과 미국은 자기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해양세력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⁵⁰ 1905년 11월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1910년 8월에는 한반도를 식민지로 병탄해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이미 움트기 시작한 정한론(征韓論)이 웅변하듯,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로 거듭나기 이전 부터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사실 1894년과 1905년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기 보다 제국주의를 흉내낸 “부차적 제국주의(secondly Imperialism)”의 침략전쟁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경제 성숙도는 “자본주의의 최종단계”와는 거리가 먼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을 “비제국주의의 제국주의적 실천”으로, 그리고 러일전쟁을 “영국을 위한 대리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⁵¹

49 최문형(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pp. 99~158.

50 최문형, 위의 책, pp. 235~320.

51 박영재(1987), 「일본근대사의 성격」 『오늘의 일본을 해부한다』, 한길사, p. 26.

2. 중국의 반식민지 전략

1) 중화제국 붕괴

(1) 청불전쟁과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전략

1879년에 들어서 일본이 류큐[琉球 : 현재의 오키나와]왕국을 병합하고 러시아와 이리(伊犁 : 지금의 중국 신장성 서북부 텐산산맥 중부에 있는 분지)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자, 청조는 전략적으로 베트남과 조선이 자국의 안보에 접하는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1880년대 초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식민지화를 추진하면서, 베트남과 접경지역인 운남 지방의 안위를 걱정한 청조는 홍 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1882년 9월 출병을 단행했다. 1883년 8월 베트남이 아르망 조약으로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지만, 종래의 종주권을 철회하려하지 않았던 청조는 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프랑스군에 맞섰다.⁵²

그러나 1883년 12월 프랑스군이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지역 청군의 점령지를 하나하나 함락시켜나가자, 1884년 5월 청조의 이홍장은 조정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천진에서 강화조약을 맺었다. 제1차 천진조약, 또는 푸르니에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으로 청조는 남쪽 국경을 프랑스가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맺은 기왕의 조약을 인정하고 청군의 철군을 약속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친 청조는 프랑스에 대해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했다. 1884년 6월 청군 점령지역을 접수하러 온 프랑스군이 청군의 기습으로 4백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터지고, 청조에 요구한 2억 5천만 프랑의 배상금이 거부당하자, 프랑스는 선전포고와 함

⁵² 유인선, 앞의 책, pp. 287~292; 송정남, 앞의 책, pp. 336~339.

계 전쟁에 돌입했다. 청불전쟁 개전 초 프랑스함대는 푸저우[福州]에 정박 중이던 청국 남양 함대를 급습해 전멸시키고, 타이완과 팽호도를 점령하는 등 기세를 올렸지만, 1885년 3월 베트남에서 청군의 반격으로 4천여 명의 병사를 잃는 패전을 당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간 그해 6월 청조는 제2차 천진조약을 맺어 프랑스가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타이완 등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함으로써 종주권을 잃고 말았다.⁵³

(2) 청일전쟁과 조선에 대한 지배권 상실

중화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성어가 웅변하듯이, 남부와 접경한 베트남에 비해 수도 북경에 인접한 조선은 청조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요충이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베트남은 하나를 잃어도 연명할 수 있는 수족이었지만, 조선은 줄리기만 해도 목숨을 잃는 생명 줄인 인후(咽喉)였다.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함으로써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접하고,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이후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자, 이들의 한반도 장악을 막기 위해 조선왕조에 대해 서구열강과 입약을 권유하는 열국입약 권도책을 펼쳐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군비 확충 등 부국강병정책의 채택도 권유했다. 그러나 1882년 7월 조선정부의 대외개방과 근대화정책 추진에 반발해 임오군란(壬午軍亂)이 터지자, 이를 빌미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할 것을 우려한 청조는 3천명의 병력을 파견해 직접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중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서는 국면이 전개되면서 청조가 바라던, 열강들 사이의 힘의 균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청조는 속방의 내치와 외교에 간섭하지 않는, 더 이상 종래

⁵³ 유인선, 위의 책, pp. 292~294; 송정남, 앞의 책, pp. 339~341.

의 종주국이 아니라 서구를 흉내 내 도덕률이 아닌 힘으로 조선을 지배하려한 ‘부차적 제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였다.⁵⁴ 일본도 이 군란을 빌미로 30일 수호조규 속약과 제물포조약을 강요해 강화도조약에서 얻지 못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공사관 호위병력의 주둔권을 얻어내는 등 실리를 챙겼지만, 최대 수혜자는 청조였다. 1882년 10월에 맺어진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서문에는 조선은 청조의 속국임이 명시되었고, 중국 상인은 무역에 있어 일본 상인 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청조가 종래의 소극적 간섭정책에서 일본의 팽창주의에 전면 대응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조선은 양국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⁵⁵

1884년 청불전쟁이 일어나 조선 주둔 청병의 절반이 베트남으로 급파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기회로 일본을 등에 업고 청조를 몰아내려고 했던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조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후 청조는 1885년 11월 원세개(袁世凱, 1859~1916)를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임명해 조선의 내외정치를 감시함으로써 조선을 보호국과 다름없게 만들어 버렸다.⁵⁶ 그러나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조는 자국의 안위에 관심이 되는 전략적 요충이자 가장 중요한 조공국인 조선뿐 아니라 영토인 대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54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p. 37; Young Ick Lew, “Dynamics of the Korean Enlightenment Movement, 1879~1889 : A Survey with Emphasis on the Korean Leaders,”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1987), 『淸季自強運動研討會論文集』上, 臺北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pp. 599~603.

55 김기혁, 「이홍장과 청일전쟁」, 『근대 한 중 일 관계사』, pp. 173~174.

56 Young Ick Lew(1984), “Yuan Shih-kai's Residency and the Korean Enlightenment Movement (1885~1894),” *The Journal of Korean Studie* v, pp. 65~86.

2) 국민국가 수립운동의 좌절

(1) 무술변법운동의 실패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서구열강의 이권침탈이 노골화되면서 중국이 수박 쪼개지듯 ‘과분(瓜分)’될 것이라는 망국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서양의 기술과 무기만을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넘어 메이지 일본을 모델로 입헌군주제 수립을 도모하는 강유위(康有爲, 1858~1927)와 양계초(梁啓超 1873~1929) 같은 개량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1890년대에 유행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중국이 모델로 삼을 성공사례로 러시아 피터대제의 개혁과 메이지 유신을 꼽았다. 특히 강유위는 청일전쟁 패전 직후 과거를 보기 위해 북경에 모인 이들을 선동하여 6백여명 연명으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공거상서(公車上書)’를 올렸다. 특히 청조의 실력자 공친왕(恭親王)이 서거한 1898년 서태후(西太后)가 광서제(光緒帝)에게 친정을 허락하자, 그는 황제의 부탁을 받아 이른바 ‘무술변법(戊戌變法)’이라 불리는 103일간의 개혁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행정 교육 법률 군대 경찰체제의 근대화 등 40개에 달하는 개혁조치는 모두 문서로만 그치고 만 종이 위의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만주족의 위치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 서태후와 수구파의 반동을 불러와 광서제는 유폐당하고 변법파 인사들은 처형되었으며, 강유위와 양계초는 가까스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은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국가 수립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통치자란 표상으로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일본의 천황과 달리, 이민족 만주족 황제는 한족(漢族)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될 수 없었다.⁵⁷⁾

⁵⁷⁾ 강진아(2009),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pp. 176~186; 패트리샤 버클리 에

(2) 의화단 사건과 반식민지화 굴욕

변법운동이 좌절된 2년 뒤 배외사상의 대두와 함께 일어난 의화단(義和團) 사건은 청조에게 더 심한 굴욕을 안겨주었다. 전통 권법만 익히면 총탄도 막을 수 있다고 믿던 신흥 종교집단은 배외주의라는 폭발적 요소를 가미해 중국이 안고 있던 고질적 병폐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렸다. 부청멸양(扶清滅洋)을 외치며 산둥지방에서 봉기한 의화단은 1900년 6월에는 북경과 천진으로 진격해 서구 열강의 공사관과 선교시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청조는 이들을 진압하기는커녕 북경에서 공사관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외국인 격멸의 포고문을 발해 외국인을 박해하도록 부추겼다. 이에 청군과 서구 연합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서구 연합군은 수적 열세에 밀렸지만, 사단병력의 일본군이 가세하면서 북경이 점령되자, 청조는 굴욕적인 조건의 강화조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1901년 9월 청조는 영국과 일본 등 11개국에 4억 5만량의 배상금 지불을 약속하는 등 가혹한 조약에 조인하였으며, 중국은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⁵⁸

3. 조선의 국민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와 좌절

1) 청일의 쟁패와 일본 지향 국민국가 수립 노력 실패

(1) 임오군란과 청국의 간섭 심화

브리 저·이동진 등 역(2011),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p. 276.

58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저, 위의 책, pp. 276~277; 古屋哲夫(1966), 『日露戦争』, 中央公論社, pp. 16~21.

1879년 이후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한 청조의 실력자 이홍장은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장악을 막기 위해 조선왕조에 대해 서구열강과 입약을 권유하는 열국입약 권도책을 펼쳐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군비 확충 등 부국강병정책의 채택도 권유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조선왕조 위정자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1880년에 들어서면서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펼쳐 나갔으며, 1882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3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⁵⁹ 나아가 조선정부는 1882년 2월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을 문의관(問議官)으로 임명하여 서구식 국제 관례에 따라 청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조공의 폐지와 사절의 북경 주재 및 통상관계의 수립 등을 협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를 호혜평등에 입각하여 재정립하려는 조선의 시도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의 거부로 무산되었다.⁶⁰

따라서 조선 근대화의 앞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개방과 자강을 통한 국가 생존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가 극복되어야 했다. 그 하나는, 개방과 자강이 필요함을 설득해 나감으로써 이에 반발하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를 저지하고, 심정적으로 위정척사파에 동조하는 일반 백성들의 보수적 정서를 무마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서양 세력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 대응해 나가야 했던 점이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백성들에게 개방과 자강의 필요성을 설득해 내기보다는 청조의 권위에 의존하여 보수세력의 반발을 제어하는 쪽을 택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는 데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침략위험을 간과하고 청조와의

59 송병기(1985), 『근대한중관계사연구』, 단대출판부, pp. 23~32; 권석봉(1986), 『청말대조선정책사연구』, 일조각, pp.157~158, 185.

60 구선희(1999),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 청관계의 변질」 『한국사』38, 국사편찬위원회, pp. 322~330.

전통적인 종속관계를 방파제 삼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나라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우를 범하였다.⁶¹

당시 위정척사 운동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권력탈환의 호기로 보고, 1881년 8월에 대원군의 서자 이재선(李載先)을 국왕으로 옹립하는 쿠데타를 모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사전에 발각되어 불발에 그쳤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정은 일본을 통해 근대 문물을 도입하는 데 점점 더 적극적이었고, 그만큼 일본 세력의 입김은 강해졌다. 마침내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갈등은 1882년 7월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폭발하였으며, 대원군이 9년 만에 다시 권좌에 올랐다.⁶² 수구(守舊)의 물결이 온 나라에 넘실대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8월 1일 청군 3,000명이 조선에 들어오고 8일 300여명의 일본군도 진주하자, 임오군란은 국제문제로 비화하였다. 26일 대원군은 납치되어 중국 보정부에 유폐되었다. 33일만에 정권은 다시 고종과 민씨척족의 손으로 돌아갔지만, 청조의 내정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⁶³

(2) 3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임오군란 이후 위정척사파 같은 시대착오적인 보수세력은 더 이상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근대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청조를 등에 업고 다시 정권을 잡은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필두로 한 척족세력은 점점 더

61 허동현(2000),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p. 263.

62 조성윤,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한국사 : 개화와 수구의 갈등』38, pp. 278~298.

63 이광린, 『한국사강좌 : 근대편』V, pp. 147~158.

중국과 결탁해 정권 유지와 자신들의 이익 보호에 골몰하는 보수세력으로 전락한 반면, 중국의 간섭은 바로 주권국가의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 급진개화파는 한시바빠 보수의 척족세력을 축출하고 국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1884년 청불전쟁이 일어나 중국군의 절반이 월남으로 급파되기에 이르자, 이를 청조의 압제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 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그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켜 중국을 내몰려 했다. 그때 그들은 베트남에서 청불전쟁을 벌이느라 여력이 없는 청조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이나 일본의 힘에 기대 청조를 몰아내려 했다.⁶⁴

김옥균(金玉均, 1851~1894) 등 개화파는 먼저 미국의 도움을 청했지만, 조선에 대해 불간섭 내지 중립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청불전쟁을 기회로 조선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일본은 이들의 거사를 도왔다. 그러나 일본을 등에 업고 청조를 몰아내려고 한 개화파와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일본의 동상이몽은 원세개의 무력 앞에 '3일천하'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⁶⁵ 정변이 실패하면서 급진 개화파의 지향과는 정반대로 조선에서 근대 국민국가 수립 가능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 무모한 정변으로 근대화에 대한 고종의 의욕이 좌절되어 버렸는가 하면, 갓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개화사상(開化思想)은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조의 내정간섭을 막고 조선을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청조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⁶⁶ 갑신정변을 계기로 청조는 조선에서 일체의 반청 움직임을 근절시키기 위해 조선의 근대화 노

64 이광린(1975), 「갑신정변에 대한 일고찰」 『개화당연구』, 일조각, pp. 140~149.

65 이광린, 위의 논문, pp. 150~152, 171~181.

66 최영호(1990), 「갑신정변론」 『한국사시민강좌』7, pp. 61~75.

력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특히 원세개는 조선 국왕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면서 철저한 우민화 정책과 개화파 탄압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을 실질적으로 중국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렸다⁶⁷

(3) 일본에 기댄 상층부 개혁, 갑오경장 좌절

갑신정변 실패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이 세력 균형을 이뤄 이렇다 할 충돌이 없었던 이른바 ‘태평십년(1885~1894)’은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원세개의 압제와 민씨 척족정권의 전횡 하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불만은 1894년 동학농민봉기로 터져 나왔다. 1885년 천진조약 체결이후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청조의 지배를 묵과하던 일본은 농민봉기를 기회로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다. 이에 편승해 1894년 6월 원세개와 민씨척족 정권의 압제 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친일 개화파 관료들은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개혁의 청사진을 펼쳐들고, 일본식 근대를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여오려 한 갑오경장(甲午改革)을 시동하였다.

갑오경장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각축하는 동안 친일내각이 1896년까지 3차에 걸쳐 시행한 한국사상 가장 과격한 일본 지향적 개혁이다. 갑오경장은 청일전쟁과 3국간섭,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배경으로 주도세력이 교체되며 3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개혁은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의 무력을 뒤에 업은 김홍집(金弘集, 1842~1896) 어윤중(魚允中, 1848~1896) 유길준(兪吉濬, 1856~1914) 등이 대원군을 형식상의 집권자로 내세워 추진하였다. 이들 ‘갑오파’는 청조와 민씨 척족 정권에 반감을 품고 있던 그룹이었다. 청일전쟁 승패의 분수령이었던 1894년 9월 평양전투 이전까지 일본은 조선인의 반항을 우려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개

⁶⁷ Young Ick Lew, 앞의 논문, pp. 65~86.

혁운동에 적극 간섭하기보다 각종 이권을 얻어내는 쪽을 택했다. 그에 따라 1차 개혁은 중국에 대한 조공 중단, 과거 폐지, 노비제도 타파,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연좌제 철폐, 관제와 관료제의 일본화 등 혁신적인 개혁과 함께 일본인 고문관과 군사교관 초빙, 일본 화폐의 국내 통용, 일본식 화폐 제도의 도입, 방곡령 발포 금지 등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눈감아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연출되었다.⁶⁸

평양 전투에서 이긴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와 미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그해 10월 26일 조선공사로 파견된 원로급 정치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5~1915)는 10년 전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朴泳孝, 1861~1939)와 서광범(徐光範, 1859~1897) 같은 ‘갑신파’를 불러들였다. 그러나 박영효는 이노우에의 기대와 달리 꼭두각시에 머물지 않았다. 독자적 권력 기반을 만들려 한 그는 친미 성향의 정동파와 힘을 합쳐 일본화를 넘어서 서구 지향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권 요구를 거부하는 반일 노선을 걸었다. 박영효가 주도한 제2차 개혁의 지향점은 ‘홍범(洪範)14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홍범14조는 조선의 대내외적 독립, 왕실과 정부의 분리 재정 및 조세 제도의 근대화, 능력 본위 관료 임용 등을 천명했다. 2차 개혁은 또 근대적 상비군의 조직, 경찰 제도 확립, 내각 중심 입헌군주제 정부 수립을 꾀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1895년 4월 3국간섭 이후 일본의 위세가 위축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자, 러시아 공사의 후원을 받아 다시 권력을 잡은 민비는 친일파 세력을 몰아내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 하였다. 반일 노선을 걸던 박영효는 친일세력으로 몰려 다시 망명의 길을 떠나는 역설의 정치

68 류영익, 『갑오경장연구』, pp. 179~181, 220~222.

를 연출하였다.⁶⁹

이후 진행된 제3차 개혁의 전반을 주도한 것은 정동파로, 근왕 세력인 궁정파가 이들에 합세했다. 이들이 친러 친미 노선을 취하면서 배일 정책을 떠나가자, 일본 세력은 퇴조하고 유길준과 같은 친일 성향의 갑오파도 거세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라는 만행이 저질러졌고, 갑오파와 일본이 다시 득세해 이듬해 2월에 일어난 아관파천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동파가 개국기원절을 만들고 한글신문 발행을 추진하는 등 조선의 자주성을 회복하려 한 반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재집권한 갑오파는 단발령을 내리고 일본에서 500만원의 차관을 들여오려 하는 등 다시 한 번 일본 지향의 개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은 독자적인 군사적 경제적 기반이 없고, 동학농민군 같은 민중의 지지도 받지 못했기에 일본이란 외세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삼국간섭과 아관파천으로 일본세력이 퇴조하자 거세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이 꿈꾼 일본 지향의 근대화 운동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⁷⁰

2) 러일의 쟁패와 대한제국 몰락

(1) 실패로 끝난 독립협회 입헌군주제 수립 노력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했지만, 러시아는 삼국간섭(1895. 4)과 아관파천(1896. 2)으로 판세를 뒤엎어버렸다. 친일개화파는 몰락하고, 친러 친미의 정동파 내각이 들어서고 일본인 고문관은 러시아인들로 교체되었으며, 러시아어 학교와 한로은행이 세워졌다. 나봇의 포

69 류영익(1998), 위의 책, pp. 81~84; ———,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pp. 97~107.

70 이광린, 『한국사강좌 : 근대편』V, pp. 366~378; 류영익, 『갑오경장연구』, p. 220.

도원이 되어버린 이 땅은 열강의 '즐거운 이권 사냥터(happy hunting ground for concessionaries)'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때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외세의 침략을 막고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역사적 소명을 자임하고 나선 이들이 1896년 7월에 창립된 독립협회세력이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신분과 남녀 구별 없이 동등하다는 민권사상, 황제까지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는 주권 수호사상을 품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으로 1897년 2월 고종도 러시아공사관 생활을 접고 경운궁으로 돌아왔으며, 그 해 8월에는 조선이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닌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이 황제의 신민(臣民)으로 살려 하지 않았음은 이듬해 3월부터 11월까지 종로 네거리 등 서울 도심에서 간헐적으로 펼쳐진 만민공동회가 웅변한다. 외세에 기대 명맥을 이으려는 왕조의 유약함은 역사 무대 전면에 새로이 등장한 독립협회 세력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들의 투쟁으로 러시아 고문관들이 물러나고 한로은행도 문을 닫았다. 그때 이들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길 바랐다. 1898년 7월 7일 황태자가 희사한 천원을 자금으로 발족한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皇國協會)는 그해 12월 이들을 동원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입헌군주제 수립을 소망했던 이들의 꿈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⁷¹

(2) 러시아 차르체제를 따라 배우려 한 대한제국의 몰락

민권을 외치던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 1897년 10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약 13년간 존속한 대한제국 시기는 국민국가 수립을 꿈꿀 수 있던 마지막 기회

71 신용하(1976),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pp. 440~462.

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제정 러시아에 기대어 등장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에 따르면 황제는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관리임명권, 조약 체결권, 사신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때 고종은 러시아의 차르체제를 따라 배우려 했던 인권의 시대 근대를 역행한 전제군주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러시아에 기대어 등장한 황제국 대한제국의 모델은 제정 러시아였다. 왜냐하면 고종 집권 시의 러시아의 차르였던 알렉산드르(Alexander) 2세(1855~1881) 알렉산드르 3세(1881~1894) 니콜라이(Nicholas)2세(1894~1917)의 치세를 보면 일본의 천황제보다는 러시아의 차르체제가 대한제국의 황제체제와 유사하다. 즉, 알렉산드르 2세의 경우 집권초인 1860년대에 농노제 폐지령의 발포, 지방의회인 zemstvo(Zemstvo)의 창설, 배심원제도 등 유럽식 사법제도의 도입과 같은 개혁 정책을 펴나갔지만, 1866년 암살음모사건 이후 비밀경찰이 사회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보수적 반동체제로 돌아가면서 과거의 개혁을 수포화하였다. 이후 즉위한 알렉산드르 3세와 니콜라이 2세도 개혁보다는 정교교회와 경찰을 동원하는 반동적 전제정치를 강화 하였다.⁷² 제정 러시아의 사회 정치적 성격을 규정할 때, 서구 중심적 시야에서는 피터대제 이후 러시아에 도입된 서구적 요소를 가식으로 보아 제정 러시아를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의 가산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⁷³ 제정 러시아의 정치 체제의 경직성—1905년 이전까지의 정당 활동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와

72 M. 카르포비치 저·이인호 역(1992), 『제정러시아(1801~1917) : 탐구신서 118』, 탐구당, pp. 7~82; 니콜라이 V. 라자노프스키, 김현택 역(1982), 『러시아의 역사(1801~1976)』, 까치, pp. 9~128; 차하순(2000), 『새로 쓴 서양사 총론』2, 탐구당 2000, pp. 825~827, 938~939.

73 Richard Pipes(1974), *Russia under the Old Regime*, N.Y.

같은 지식인과 노동 계급 중심의 초기 형태의 시민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1905년의 입헌 군주제 도입 이후에 서구형 국민 국가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⁴

독립협회 세력이 실현 가능한 모델로 본 것은 일본의 입헌정체였으며, 고종과 그 측근세력의 ‘잠재모델’은 러시아의 차르체제였다. 그렇다면 이 둘의 지향은 국민국가의 필요충분조건에 부합할까? 국민국가 만들기란 이상적인 잣대로 독립협회 운동과 ‘광무개혁’의 공과를 저울로 재어보자. 국민국가란 그 정치체제가 군주제든 공화제든, 민주적이든 전제적이든 간에 국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기보다 신민(臣民)으로 잠자게 하려한 대한제국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국가로 보기 어렵다. 대한제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연명하던 허울만 남은 왕국이었다. 한 나라가 국민국가인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러일전쟁 중에 맺어진 카스라 태프트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러일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지배를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모두에게서 인정받았다. 영국과 미국은 자기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해양세력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1905년 11월 외교권을 강제로 약탈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의 정수리를 겨누는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cles)”을 붙잡아댔던 한 올의 실은 끊어지고 말았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연명하던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오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으로,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으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⁷⁵

74 Anthony Molho and Gordon Wood Rev. ed.(1998), *Imagined Histories : American Historians Interpret the Past*, Princeton, pp. 415~434.

75 허동현(2005), 「대한제국의 모델로서의 러시아」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IV. 맺음말 : 서구문물수용 태도 차이가 국민 국가 수립과 좌절에 미친 영향

이상과 같이 서세동점기(1840~1910)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개항이 갖는 의미와 이에 따른 근대국민국가 수립과 좌절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 시기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 세 나라의 건외(遣外)사절과 유학생들이 보인 서구 문물수용 태도의 차이점이 국민국가 수립과 좌절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각국의 서구 근대 수용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이들 나라들이 걸어 나간 판연히 다른 진로 제국(일본) 식민지(조선) 반식민지(중국)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이 서구문물의 우월성을 자각하고 그 수용에 나선 기점은 1860년 중화제국의 수도 북경이 영불연합군의 군함발에 유린당한 다음이었다.⁷⁶ 일본과 중국이 서양 문물 수용에 열중하던 1860년부터 20여 년 동안 조선은 외부로 향한 창을 굳게 닫고 미몽에 사로잡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시간을 허송했다. 조선은 1880년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세운 이후 서구문물 수용의 길로 나섰지만, 중국은 이보다 19년 전인

pp. 157~160.

⁷⁶ 동아시아 네 나라 중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구를 가장 먼저 접했던 베트남의 경우 아편전쟁이 터진 1840년에 서구문물을 수용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였다. 아편전쟁이 터지자 서구열강의 침략이 베트남에도 곧 미치리라 생각한 민 망 황제는 몇몇 사절단을 폐낭 바타비아 캅커타 파리 런던 등지로 보내 서구의 침략 가능성을 탐지하는 한편 총포와 화약 등의 국방용 물자를 사들이고 서양 증기선을 구입해 개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교 전통을 고수하면서 서구기술의 단면만을 모방하려한 그의 시도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1883년에 이미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인선, 앞의 책, p. 273.

1861년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수용하려는 양무(洋務)운동을 시작하였고,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 문물과 제도, 정신 모두를 배우려 하였다. 서구 문물 수용에 나선 시기의 앞섬과 늦음의 차이와 함께 그 수용 태도의 다름도 삼국의 향후 진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삼국이 이 시기에 근대문물 수용을 위해 보낸 견외사절과 유학생의 파견시기, 회수, 인적구성, 인원수, 견문 또는 수학내용, 그리고 귀국 후 진로에 보이는 차이는 삼국의 운명이 엇갈리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구문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시기도 빨랐던 일본은 이미 도쿠가와 막부 말에 서구열강에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었다. 1860년 60명의 사절이 미국에 파견되었으며, 1862년에 유럽국가들을 순방한 사절단의 규모는 38명이었다, 그리고 1862년 네덜란드, 1865년 러시아에 유학생을 보냈으며,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죠슈(長州)와 사쓰마(薩摩)도 이 시기에 영국에 유학생을 밀파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1862년 유럽 시찰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근대문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면서 새로운 국가구상의 비전을 제시한 『서양사정(西洋事情)』(1866)을 저술하였으며, 이 책은 그 무렵 15만에서 2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다. 이 책은 일본인들에게 서구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 수립의 꿈을 효과적으로 전파한 최고의 매체였다. 일본에 서구 근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은 비단 후쿠자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막부 말기에 외국의 공기를 켜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열망이었다. 1864년 양이론자의 주장에 밀려 요코하마 쇄항을 담판하기 위해 유럽에 간 제3차 사절단의 이케다 죠하츠(池田長發, 1837~1879)는 소기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급거 귀국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막부에 헌책했다. 유럽 각국에 상주공사 파견, 모든 독립국과 화친조약 체결, 신문명 섭취를 위한 프랑스 유학생 파견, 서구 각지 신문과의 정보 교환, 일본 국민의 상업·학술을

위한 해외 도항 허가 등, 유럽을 직접 보면서 얻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1865년 사쓰마 번의 유학생을 인솔하고 유럽에 갔던 고다이 도모아쓰[五代友厚, 1835~1885]는 교토~오사카간의 철도 및 전신 시설 가설, 조선과 충포 제조시설 설치를 계약하였으며, 1867년 프랑스에 파견된 구리모토 조운[栗本鋤雲, 1822~1897]은 나폴레옹 대법전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서구 신문명의 입문서라 할 수 있는 『효창추록(曉窓追錄)』(1869)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나폴레옹 법전의 내용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철도, 의회, 공채, 군대, 집약농업, 교육제도 등 구리모토가 경탄과 선망을 금치 못했던 서양 문물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비록 이런 사절과 유학생들이 섭취해온 서구 문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막부 말기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국민국가 수립기에 여러모로 활용되었다. 막부 시기 사절단 출신들은 몇 년 후 이와쿠라 사절단의 서기관으로서 지난 시절 자신들의 경험을 발휘했다. 명치유신 이후인 1871년 일본정부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1825~1883]를 특명전권대사로 한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미제국에 파견하기에 이른다. 이 사절단은 명치유신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등 4명의 참의를 포함 정부 각 부서의 중견 실무관리 41명 등 공식 사절 46명을 비롯하여 18명의 수행원과 유학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한지 겨우 4개월, 근대국가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신생 정부는 정부 수뇌의 절반을 사절단 대표로 삼고, 그 밑에 막부시절 사절 참가자들을 서기관으로 배속한데다가 정부 각 부처에서 선발한 전문 이사관까지 참여시킨 100명여명 규모의 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한 것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뒤에 서구에 보낸 유학생 수는 1869년 50명, 1870년 150명,

그리고 1873년에는 천명을 넘어섰다.⁷⁷

그러나 일본보다 먼저인 1861년 정부차원에서 중체서용(中體西用)을 모토로 서구의 기술 수용에 나섰던 중국은 정부 고위관료들이 주축이 된 해외 시찰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최초로 서구에 파견된 중국외교관은 미국인 앤슨 버링에임(Anson Buringame)이었다. 중국명 푸안첸[蒲安臣]인 그가 이끈 중국인 사절단 즉 푸안첸 사절단(Buringame Mission, 1820~1870)이 1865년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1873년 승후(崇厚, 1826~1893)사죄사절단이 프랑스에 파견되었지만, 시찰의 성과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1872년부터 1875년까지 4차에 걸쳐 120명의 유미유동(留美幼童) 즉 아동부미유학생(兒童赴美留學生)이 미국에 파견되었지만, 1881년 유미유동 대다수는 10여년 만에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1886년까지 94명의 유학생이 유럽에 보내져 육군학과 해군학을 배웠지만, 1889년에서 1896년까지 단 한명의 유학생도 해외에 파견되지 않았다.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19세기말까지 정치에 참여할 수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었다. 막말 영국 유학생 이토 히로부미나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1844~1897]처럼 제도를 연구하거나 개혁하는 일도 국정을 담당하는 일도 할 수 없었다. 1900년 이후에야 이들은 역사의 주역으로 재등장할 수 있었다. 1905년에야 중국 대신(大臣) 5명이 6개월에 걸쳐 구미 14개국을 순방하고 정치제도를 시찰하는 ‘헌법 여행’을 떠났으며, 그 즈음에야 만주족 청년과 고관의 자제들이 해외 유학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일본유학생은 1902년 600명, 1904년 1,300명, 1905년 8,000명, 1906년 13,000명, 그리고 1907년에는 17,860에 달하였다. 구미로의 유학생도 1903년 미국에

77 일본의 해외문물 수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田中彰(1992), 『開國と倒幕：日本の歴史 15』, 集英社; ---(1994), 『岩倉使節團『米歐回覽實記』：同時代ライブラリ174』(岩波書店; 田中彰 高田誠二 編(1994), 『《米歐回覽實記》の學制的研究』, 北海島大學圖書刊行會; 하가 토오루 저·손순옥 역(1989), 『명치유신과 일본인』, 예하.

10명, 1904년 벨기에 25명이 보내졌고, 1909년부터 1918년까지 미국에 409명의 유학생이 보내졌다.⁷⁸

일본과 중국이 차이가 컸지만 각각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서구 문물 수용에 나섰던 것에 반해 조선의 경우 18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서구 근대문물 수용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881년 조사시찰단(朝土視察團) 62명이 일본에 파견되어 약 4개월간 근대화된 문물과 제도를 조사해 돌아 왔으며, 유길준과 윤치호 등을 유학하도록 하였다. 이후 1884년 갑신정변 때까지 일본 유학생은 100명에 이르렀으며, 1883년 미국과 유럽을 돌아 본 보빙사(報聘使)를 따라간 유길준은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 일본 유학생들은 소환되어 처형되는 비극을 빚었으며, 유길준도 미국유학을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1885년에서 1894년까지 10년간 원세개의 탄압과 민씨척족정권의 반개화정책으로 인해 유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갑오경장 때 일본 유학이 재개되어 1895~1896년간에 160여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보내졌으며, 보호국으로 전락한 1905년경 일본 유학생은 449명에 달했다. 그러나 1882년에서 1905년간 미국 유학생은 통틀어 64명에 지나지 않았다. 19세기말까지 해외유학생 중 정규대학 교육을 받은 이는 윤치호와 서재필 정도이며, 이들의 유학도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갑신정변의 실패가 빚은 도피성 유학에 불과하였다.⁷⁹

78 중국의 해외문물 수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권희철 역(1974), 룡흥 저, 『서학동점기』, 을유문화사; 李圭(1985), 『環遊地球新錄』 『走向世界叢書』, 嶽麓書社; 신승하, 『근대중국의 서양인식』, 고려원; 傳記文學出版社 編(1986), 『留美幼童書信集』, 傳記文學出版社; 林子勛(1995), 『中國留學教育史』, 華岡出版社; 한혜영 역(2005), 嚴安生 저,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일조각; 陳韋 후진초 저·이정선 김승률 역(2006), 『청나라 정부의 조기유학 프로젝트 유미유동』, 사북스.

79 개화기 유학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송병기(1998), 「개화기 일본유학생 파견과 실태(1881~1903)」, 『동양학』18; 박찬승(2001),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도일유학」,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1, 고려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허동현(2004), 「개화기

국민국가 수립에 조선이 실패한 이유는 권외사절단과 유학생이 서구 근대 문물 수용에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례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근대가 이룩한 정신적 물질적 성과의 요체를 파악하여 이를 일본에 적용함으로써 서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진취적인 성향의 인물이자 메이지 정부의 실세들로 구성되었다. 그에 비해 조사시찰단의 경우, 물론 능력이 출중한 이른바 정예 관료 출신의 조사들이었지만, 어윤중과 홍영식을 제외한 대부분은 국왕의 하명에 따라 파동적으로 참여한 봉건군주의 가신(家臣)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또 그 수행원들은 조사들과의 사사로온 관계로 선발되었으며, 윤치호(尹致昊, 1865~1945)나 유길준(兪吉濬, 1856~1914)처럼 일본 유학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을 빼면 대개가 관직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들이었다. 그밖에 역관 출신의 통역과 하인 등 20여 명도 조사들이 근대 문물제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큼 각성되지는 못했다. 특히 이와쿠라 사절단이 거둔 성과는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의 1876년 5권의 『미구회람실기(米歐回覽實記)』에 고스란히 담겨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되었다. 구메는 이 책에 “이 사절이 거둔 모든 성과를 국민의 일반적 이익과 개발을 위해 편집 간행”한다고 썼듯이, 이와쿠라 사절단원들은 천황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같은 사고를 실천에 옮겨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명치시대 일본인들은 한자를 도구로 서구 문물을 번역해 들이고 언문일치 문체를 개발해냄으로써 일본식 근대를 만들어 내었다. 근대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말과 글이 일치하는 구어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민통합의 기본 전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군

(1883~1905) 미국 유학생과 민족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일하고 균질한 생각을 공유하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근대국가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었고 그 관건은 언문일치의 문체를 만들어 내는 데 달려 있었다. 따라서 이와쿠라 사절단은 자신들의 경험을 활자화하여 국민들과 공유하는 데 힘을 썼지만, 근대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조사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조사들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왕의 밀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보고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서사(書寫)에 능한 아전들을 동원해 ‘문견사건(聞見事件)’과 ‘시찰기’라는 제하의 보고서들을 한문으로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비단으로 장정한 수서본(手書本)을 고종에게 바쳤다. 이들의 보고서에 담긴 근대 일본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는, 당시 조선의 개화와 자강을 열망하던 개화파를 비롯하여 식자층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위정척사론에 입각한 부정적인 일본관과 서구 문물에 대한 시각을 허무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사들의 보고서는 국왕이나 일부 위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들이 거둔 성과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의 유학생들도 중국의 유학생들처럼 그들이 거둔 바 성과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거나 국민들에게 돌리는 데 실패했다. 예컨대 최초의 일본과 미국 유학생 유길준은 언문일치의 문체 개발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선각자라 할 수 있다. 그는 1883년 「세계대세론」이란 논설에서 국한문혼용을 처음으로 시도해 그가 유학을 통해 얻은 지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려 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해 저술한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의 발간으로 결실을 맺었지만, 1천부를 찍은 이 책은 다음해 아관파천이 일어나며 유길준이 역적으로 몰려 망명객이 되어 버렸기에 금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기에 이 책은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본인들의 지견(智見) 향상에 공헌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西洋事情)』과 달리 역사적으로 거의 아무런 영향

도 끼치지 못하고 말았다. 중국인 최초의 예일대 졸업생이자 유미유동 감독이었으며,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에도 참여했던 룡흥[容闳, 1828~1912]이 쓴 『서학동점기(西學東漸記)』(1900)도 『서유견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⁸⁰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세 나라가 걸은 서로 다른 길, 제국과 식민지, 그리고 반식민지(중국)로의 분화는 서세동점의 시기에 벌어진 서구문물 수용 태도나 시기의 늦고 빠름도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⁸⁰ 허동현(2002), 「조사시찰단(1881)의 일본 경험에 보이는 근대의 특성」 『한국사상사학』19, pp. 524~534.

제국주의 침략

김권정 | 경희대학교

I. 머리말

II. 19세기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III.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동아시아

IV.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동아시아

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중엽~20세기 전반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서구제국주의에 이어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전개되었다. 제국주의 침략은 ‘전쟁’이란 물리적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이권침탈을 목적으로 하였고,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화 추진과 국제변동이 맞물리며 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 침략전쟁으로는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전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한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친 제국주의 억압과 침탈이 가해졌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민중 피해와 그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또 이것은 동아시아인들이 일찍이 어떤 역사 시기에도 경험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진행되었다. 이같은 폭압적 침략이 오랜 기간 동아시아 구성원으로 인식되어 온 일본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인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을 하나의 ‘유기적’ 관련을 지닌 지역세계의 역사로 파악하려고 한다. 또 대부분의 연구들이 침략전쟁에 희생당한 동아시아 민중들의 양상을 간과해버리는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동아시아인들의 피해 실상을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연계해서 접근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려고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아편전쟁의 발발과 이후 확대된 서구제국주의 침략과정, 제국주의 국가 단계로 올라선 일본이 주도한 전쟁과 그 결과를 살펴본다. 서구제국주의는 아편전쟁의 승리 이후 쇄국정책을 취하던 동아시아 각

국을 강제 개항시켰다. 이런 외부의 충격 속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를 드러내며 한반도에 대한 중주권을 놓고 일으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검토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속에서 동아시아 민중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탄압과 진압 양상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동아시아지역에서 확대된 일본제국주의와 서구제국주의국가들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1차세계대전 전후 동아시아의 상대적 안정 속에서 확대되는 일본제국주의 영향력, 타이완과 조선에서 실시된 식민통치의 성격, 그리고 동아시아 민중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동대지진과 그 참상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국주의 침탈정책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대공황 이후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서 일본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수립,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 그 과정에서 지을 수 없는 아픈 흔적을 남긴 동아시아 민중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이래 진행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던 서구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희생당한 동아시아인들의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같은 제국주의 경험은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함께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차원에서 19세기 이후 진행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동아시아 사회와 동아시아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19세기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1.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아편전쟁

19세기 제국주의국가들은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해 활발한 대외팽창과 해외식민지 확대를 전개하였다. 식민지에 대한 경쟁을 통해 이들 국가들은 독점자본주의 형태를 띠며 발전하였다. 이들은 국내에 축적된 잉여자본을 유리하게 투자하고 잉여생산물을 소비할 지역을 해외에서 찾아 나섰다. 자국의 이익과 세력팽창을 목적으로 획득한 식민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였다.¹ 이를 가리켜 흔히 제국주의(Imperialism)라 부른다. 식민지 사회경제구조를 영구적(永久的)으로 서구열강의 종속물로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에 대한 ‘약탈’에 수준에 그쳤던 이전 시대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²

19세기 당시 서구제국주의 국가들 가운데 주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개척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18세기말 이후 서양열강들 국가들 가운데 청국과 대외무역을 주도하였다. 무역확대를 원하는 영국은 광둥성 일대에 대한 개항을 청 정부에 요구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이 채택한 방법은 군사적 조치였다. 당시 서구제국들이 패쇄적 정책을 펼치는 해당국을 강제 개항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해당국과 개항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이 좌절되면 ‘충돌’ 사건을 유발시켜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행사하여, 결국에는 군사

1 박지향(2000), 『제국주의의 신화와 현실』,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3~22쪽.

2 김권정(2005), 『세계문화사의 이해』, 서울 : 선학사, 178~179쪽.

수단을 통한 해당국과의 전쟁승리에 기초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중국에 대한 아편 밀무역을 통해 무역역조현상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은이 외국으로 대량 유출되었고, 중국인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 정부는 린쩌쉬(林則徐)를 광저우(廣州)에 파견하였다. 1839년 린쩌쉬는 압수한 아편을 불태우고 영국인 뱃사람이 중국인 뱃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카오를 봉쇄해 버렸다. 이를 구실로 영국은 무력대응을 하고 나섰다. 대규모 원정군을 청국에 파견한 영국은 전쟁을 개시하였고, 압도적 군사적 우세 속에 광저우를 침략하였다. 이에 청 정부가 굴복함으로써 1842년 난징(南京)조약이 체결되었다.³

난징조약은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조약의 핵심내용은 5개 항구 개항, 개항장의 영사주재, 전쟁비용 배상, 공행의 무역독점 폐지, 그리고 홍콩의 할양 등이었다.⁴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지 않자, 영국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좋은 기회를 찾았다. 1856년 광둥성 광저우에서 일어난 애로우(Arrow)호 사건을 구실로 영국은 프랑스를 끌어 들여 광저우를 점령하였다. 북상하여 텐진에 이르러 조약개정을 요구하였고, 미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합세함에 따라 1858년 결국 텐진조약(天津條約)이 체결되었다. 1860년에는 텐진조약의 비준을 거부한 청 정부에 대해 영국과 불란서 연합군이 베이징 부근까지 진격하여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고, 베이징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은 다른 조약에 없던, 개항장을 북방과 창강유역, 타이완 등으로 늘리는 것과 아편무역을 공인하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서구

3 권선홍(2006),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95~100쪽.

4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저 한철호 이규수 역(2000),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울 : 옛 오늘, 24~25쪽.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상당히 충족시켜 주는 내용들이었다.

이른바 ‘아편전쟁’은 청국과의 무역확대와 이윤획득을 원하는 서구 열강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해결한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청국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한 조약을 맺도록 강요된, 정치 군사적으로 확대된 침략전쟁이었다. 이는 이후 거대한 중국대륙이 서구제국주의국가들의 이권쟁탈지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청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무역확대와 이윤획득을 목표로 하는 서구제국주의 힘 앞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청국을 제압한 서구제국주의 힘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 일본은 나가사키[長崎]만을 개항하는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일본에게 청국의 패배는 큰 충격이었고, 이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853년 통상을 요구하는 미국 함대의 무력시위에 놀란 일본의 에도막부[江戸幕府]는 대세를 받아들이고 이듬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을 체결하였다.⁵ 이후 영국(1854), 러시아(1855), 네덜란드(1856) 등과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1858년에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말 그대로 불평등한 조약 그 자체였다. 그해 6월 체결된 헨진조약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이 해에 일본은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아편전쟁의 충격은 베트남도 비껴가지 않았다. 아편전쟁이 이후 서구 제국주의가 베트남에도 닥쳐올 것으로 예상한 베트남 왕조는 서구의 통상요구를 거부하였다.⁶ 이 무렵 베트남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찾고 있던 프랑스는 이를

5 피터 두오스 저 김용덕 역(1983), 『일본근대사』, 서울 : 지식산업사, 69~73쪽.

6 송정남(2010), 『베트남 역사 읽기』,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330~340쪽.

구실로 1860년부터 1862년 걸쳐 남부의 자딘성(嘉定省)을 비롯한 베트남 동부의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마침 북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1862년 6월 12개 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프랑스는 서부 3성의 근거지마저 점령하여 남부를 손에 넣었다. 프랑스는 1870~80년대에 걸쳐 또 침략하였다. 이번에는 북부지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여 베트남 전체를 식민지화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873년 제2차 사이공조약, 1883년 이른바 아르망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베트남은 청국과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프랑스 보호국임을 인정하며, 대외관계는 프랑스를 통해서만 하기로 약속하는 등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아편전쟁이후 서구 제국주의세력의 힘은 중국대륙과 함께 일본 및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은 제국주의 국가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하고, 유린당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적 무역확대와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동아시아 사회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

2. 일본 제국주의 등장과 청일전쟁

아편전쟁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청국중심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서구제국주의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이것은 동아시아인들에게 큰 충격과 동요를 가져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국가들 역시 근대화 정책을 통해 근대국민국가 수립에 나서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낸 것이 일본이었다. 일본은 청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강력한 제국주의국가로 그 위치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청국의 영

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점차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지역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이후 서양제국주의국가들과 잇따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자본주의체제에 편입하였다. 군사적 위협에 따른 개항은 쇄국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던 일본의 막부정권에게 몰락의 결정타가 되었다. 일본의 봉건사회가 급격히 붕괴되어 갔고, 일본은 서구제국주의국가들의 반식민지 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국가적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서구열강들처럼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유일한 것임을 확신하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때 근대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막부정권을 반대하는 도막파(倒幕派)가 형성되었다. 도막파는 천황을 내세우는 ‘왕정복고’를 주장하며 1868년 메이지[明治]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를 수립하였다.⁷

메이지 신정부는 1871년에는 정권기반을 확고하게 수립할 목적과 동시에 근대문물의 수용을 목적으로 대규모 외교사절단을 유럽에 파견하였다. 신분제도의 폐지, 거주이전과 직업의 자유, 화폐제도의 통일, 학제 반포, 징병령 실시, 식산흥업(殖産興業)정책 등 근대화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⁸

이와 함께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제’(天皇制)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국가로 발전하며 국가의 구성원들을 국가 및 국민, 종교의 이름으로 통합시키는데 나름대로 성공하였으나, 일본에는 국민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통합시킬만한 보편적인 종교나 이념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즉 근대화 과정에

7 조병한(2006), 「19세기 서구적 세계체제와 동북아질서」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 일조각, 292~293쪽.

8 김용덕(1991),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서울 : 지식산업사, 36~43쪽.

서 동요하는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고 제국주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합의 상징이 필요했던 것이다.⁹ 이를 위해 이들이 찾아낸 것이 전통적으로 익숙한 ‘천황’이란 존재였고,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을 절대적 권위가 부여된 현인신(賢人神)으로 설정하고 제국헌법에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것은 국민(國民)을 제국주의적 활동에 동원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사용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핵심 논리로 자리 잡았다.

근대 국가체계의 기반을 세운 일본은 다른 서구제국주의국가들처럼 자본주의 상품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지의 획득을 모색하게 되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갈 수 없었고, 미국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필리핀을 침략할 수 없었던 일본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타이완, 서쪽으로 조선과 중국대륙 지역에 대한 침략을 지향하게 되었다.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대외팽창을 시도하며 단기적으로 조선을, 장기적으로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의 대외침략은 1876년 강화도조약의 강제 체결이후 가시화되었다. 일본은 쇄국정책의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수립하게 되자, 조선정부를 압박하며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1876년 9월에는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강화도 포대 근처에 불법 침입시켜 조선측이 발포하도록 유도하고, 곧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였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개국과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¹⁰ 이 방식은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상대국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침략수법이었

9 박태준(1999), 「일본제국주의 성격과 그 교육적 특징」 『교육사연구』 제9집, 124~125쪽.

10 강재언(1990), 『한국근대사』, 서울 : 한울, 32~36쪽.

다. 일본이 이를 습득하여 조선에 적용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개국요구를 실현하는 서구 열강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대외침략은 1889년 제국헌법 공포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근대적 국민국가건설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한 일본은 새로운 대외적 방향을 수립하였다. 당시 내각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가의 독립과 방위는 일본의 주권선에만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긴요한 주변지역까지 지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¹¹ 이는 조선을 비롯한 중국대륙까지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익선(利益線)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한편,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894년 청일전쟁이다. 오랫동안 조선의 중주국을 자처하던 청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강한 불신과 경계를 하고 있었다.

1882년 7월 조선의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국군이 조선내에 계속 주둔하며 내정간섭을 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의 젊은 개화파들은 청불전쟁으로 청국군이 약화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군의 원조아래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¹² 그러나 즉각적인 청국군 개입과 기대했던 일본이 청과의 전면적 무력 충돌이 불리하다며 그 태도를 바꾸자,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장차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청국과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계획적인 군제개혁과 군비확장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것이 청일전쟁의

11 가토 요코 저 박영준 역(2003), 『근대일본의 전쟁논리』, 서울 : 태학사, 68~70쪽.

12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이광린(1981), 『개화당연구』, 서울 : 일조각을 참조할 것.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군사적 대외침략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1894년 2월, 조선에서는 부패한 관리 척결과 무거운 세금에 반발한 농민군이 봉기하여, 그 세력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¹³ 이에 당황한 조선 정부는 4월 30일 청국에 원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조선정부가 청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자, 이에 따른 일본군의 조선 파병을 우려한 농민군은 조선정부에 휴전을 제의하였다. 5월 7일 조선정부군과 농민군은 전주화약을 체결, 휴전하였다. 농민군은 그 이튿날 전주성에 철수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의 우려대로 조선정부의 청군개입 요청은 조선에 대한 일본군 파병의 계기가 되었다. 조선정부의 청국군 파병이 통고되자, 조선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은 텐진조약(天津條約)에 의거해 조선에 대한 일본군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 정부가 청국에 원병을 공식 요청하기 하루 전 내각의 결정과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이미 일본군의 조선파병에 대한 재가를 받은 상태였다. 일본군이 청국군과 거의 동시에 조선에 들어왔다. 일본군 파병에 놀란 조선정부는 동학군의 기세가 진정되었음을 이유로 청일 양군의 동시철병을 요구했다. 일본은 동학군의 진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조선의 내정개혁(內政改革)을 구실로 철수를 거부했다. 조선정부는 일본군이 철수한 후 비로소 내정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일본군은 7월 23일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쿠데타를 통해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군은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해 조선의 '자주독립'을 선포케 하고, 과거에 조선과 청국이 맺은 모든 조약을 폐기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어 7월 25일 선

¹³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엮음, 『한국근대사 강의』, 서울 : 한울, 158~160쪽.

전포고 없이 서해의 청국 함대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 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淸日戰爭)을 도발했다. 육지에서는 일본 육군이 평양에 주둔한 청국군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이 승리를 계기로 일본은 조선 내정에 적극 개입했다. 식량 부식물 군수물자 수송의 노동력을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했으므로 전쟁터가 된 조선의 민중은 큰 피해를 입었고 조선의 국가적 자주권은 유린되었다. 이에 다시 봉기한 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은 9월 서해에서 청나라 북양함대(北洋艦隊)의 주력을 격파하였다. 승리감에 한껏 고취된 일본군은 열강들의 강화 알선 제안까지도 무시하며, 10월 랴오둥 반도로 진격하였다. 부패한 청군 지도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켜, 11월 뤼순(旅順)이 점령되었다.¹⁴

일본군은 뤼순 시내에서 시민과 포로 약 6만 명을 학살하고 시가지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잔혹한 행위는 국제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1895년 1월 일본군은 산둥 성으로 진격하여 웨이하이웨이(威海衛)의 군항(軍港)을 함락시키고 청의 북양함대를 궤멸시켰다. 청 정부는 이홍장을 대표로 일본에 파견해 강화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¹⁵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국은 일본이 요구한 타이완 지역(타이완과 펑후제도)의 할양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1895년 6월 1일 일본과 청국은 타이완을 접수하는 교섭과 공문의 조인식을 해상에서 거행했는데, 이는 청국 관리가 타이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두려워 상륙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¹⁶ 6월 6일에 타이페이에 입성한 일본군은 압도적 무력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인의 저항을 힘겹게 진압해 나갔다. 타이완에 살고 있던 청나라 관리와 중국계 이민의 일부가 청국에 반발하면서 타이완 민주국을 건국하고 저항하였다.

14 최재희(1989), 「중화민국질서의 동요」 『강좌 중국사V』, 서울: 지식산업사, 244~245쪽.

15 오기평(2008), 『세계외교사』, 서울: 법문사, 227~230쪽.

16 조 훈(1999), 『강좌 중국근현대사』, 서울: 역사교양사, 78~79쪽.

그러나 일본군의 강력한 진압으로 타이완 민주국은 결국 멸망하였다. 이후에도 타이완인은 게릴라전을 계속하며 일제에 저항하였다. 1897년부터 1901년 사이에 타이완인 가운데 체포된 자 8,030명, 사살당한 자 3,473명이었다. 1902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이른바 ‘대토벌’에서는 포로를 재판에서 사형시킨 자가 539명, 즉결처분으로 사살당한 자가 4,303명 등 많은 타이완인이 일본의 지배에 맞서 저항하다 희생당하였다.¹⁷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청일전쟁에서 식민지를 확보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식민지 보유국이 되었다. 획득한 배상금과 이윤으로 일본자본주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 하였고,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 패권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 조선은 표출되었던 변혁의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 제압당하며 좌절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서구 열강의 중국 분할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본격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3. 러일전쟁과 한국 강제병합

청일전쟁 승리이후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하려는 일본 계획은 러시아가 주도한 3국간섭(三國干渉)에 의해 저지되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활동을 경계하였다. 그것은 한반도와 남만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경우 청과 일본이 연합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

¹⁷ 코지마 신지 마루야마 마츠유키 저·박원호 역(1998), 중국근현대사, 서울 : 지식산업사, 49쪽.

아는 프랑스와 독일에 공동 행동을 이끌어 냈다. 반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南進)을 막는 데 일본이 유용할 것이란 점과 청일 전쟁 결과로 청국이 개방한 시장에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3국간섭을 반대하였다.¹⁸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는 3국간섭으로 인해 자신들의 전리품을 빼앗겼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였다. 랴오둥 반도의 반환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났고, 장차 러시아와의 일전(一戰)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랴오둥 반도의 반환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났고, 장차 러시아와의 일전(一戰)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국간섭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¹⁹ 이는 자연스럽게 제국주의 전쟁의 군비 확장으로 이어졌다. 청국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배상금 중 상당액이 군비확장에 사용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말이 국민적 슬로건으로 유행하였다.²⁰

3국간섭의 대가로 러시아는 만주 철도 부설권을 따냈고, 1898년 여순 대련의 조차권을 얻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던 지위를 위협받게 되었고, 그만큼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일시적이지만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틈타 조선의 고종은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고 러시아 힘을 통해 일본을 떨쳐내고자 하였다.²¹

그러나 조선 내에서 일어난 독립협회의 이권반대운동과 영일 양국의 방해로, 러시아는 조선으로부터 일보 후퇴하여 만주에 침략의 발판을 굳혔다. 1900년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과 출병한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 조선을 일본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이에 일본군은 러시아와의 군

18 김현철(2006), 148쪽.

19 김용구(1997), 『전정판 세계외교사』, 서울 : 서울대출판부, 387~393쪽.

20 다나카 아키라 저 강진아 역(2002), 『소일본주의-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 서울 : 도서출판 소화, 104~106쪽.

21 이민원(1996), 「노 일의 대리하고 고종의 아관파천」 『한국정치외교사논총』14,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참조.

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군사작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²²

일본은 1902년 1월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영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할 때 영국이 중립을 지키게 되지만, 만약 러시아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면 영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영일동맹의 큰 이점은 러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제3국이 참전하면 영국이 일본에 가세하게 되므로, 3국간섭 경우처럼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에 가담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후 적극적 만주정책으로 선회한 일본은 1904년 2월 뤼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러시아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파괴하였다. 9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키고, 10일 선전포고를 하였다.²³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조선 정부는 1904년 1월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열강에 통고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에 대해 응답할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를 무시하고 서울에 진주한 일본군은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병력과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 경부 경의 철도 건설을 서둘렀다. 5월 18일에는 조선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게 부여했던 모든 이권의 폐기 취소를 공포하게 하였다. 1905년 1월초 일본군이 뤼순항을 함락시키자, 러시아군은 대세를 만회하고자 발틱 함대를 전쟁에 파견하였다.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일본해군은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격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전세(戰勢)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자, 서구 열강은 이들 사이에 개

²² 조명철(2006),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일조각, 354쪽.

²³ 최문형(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서울: 지식산업사, 283~286쪽.

입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청국에서 세력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던 미국은 일본의 강화 요청을 받고, 중재협상에 나섰다. 당시 러시아는 전력상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였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 강화회의에 응하였다. 서구 열강들 역시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화에 적극 개입하였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권고를 수락한 러시아는 일본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²⁴

일본은 러일전쟁과 동시에 1904년 2월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에 기초해서 조선 정부를 위협해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강제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내에서의 ‘군사행동’과 ‘시설개선’이란 구실을 내세워 내정간섭의 권리를 확보하고 조선에 대한 이른바 ‘보호국화’를 착수 하였다.

그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강제 체결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식민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데 주력하였다.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영국과는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9월에는 러일전쟁 직후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맺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조선 강제병합을 위한 국제적 승인까지 얻은 일본은 1905년 11월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하였다.²⁵ 직접 당사자인 고종은 이에 맞서 끝까지 조약의 비준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동반한 강요 끝에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임명하였다.²⁶

24 석화정(2006), 『러일전쟁』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연세대 출판부, 180~185쪽.

25 강만길(1994), 『고쳐 쓴 한국근대사』, 서울: 창비, 254~256쪽.

26 현광호(2010), 「국권상실 전후시기(1905~1918)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한민족의 국권회복운동」 『한국문화』 52,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87~290쪽.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얻지 못한 만주 이권을 청국으로부터 보상받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고무라 우찌다[内田康哉]와 경친왕, 위안스카이[袁世凱] 사이에 「만주에 관한 청일 조약」(1905.12.22)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만주에 관한 한, 일본에 대한 미영의 태도는 조선에 대한 입장과 완전히 달랐다. 러일전쟁 중 미영이 일본을 지원한 것은 어디까지나 만주의 문호개방과 러일의 세력균형 유지가 가장 큰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대로 영미가 러시아 대신 일본의 만주 독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차후 일본과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감정은 크고 작은 충돌위기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미일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경우, 영국이 영일동맹에 의지, 일본에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일본 때문에 영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 없는 노릇이었고, 영일관계에 애매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후 각 제국주의국가들이 만주 이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경쟁과 반목, 대립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의 타이완, 조선 강점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막대한 경제적 이권이 걸린 중국 대륙 및 만주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⁷⁾ 이후 만주이권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복잡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한편, 일본제국주의 강점에 대응해 조선의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 중에 하나가 고종은 국제무대에서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주권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²⁸⁾ 그러나

27 구대열(1995), 『한국국제관계사 연구1』, 서울 : 역사비평사, 95~96쪽.

28 윤병석 외(2007), 『헤이그특사와 한국독립운동』, 천안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연구소를 참조할 것.

일본은 이를 빌미로 오히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국가방위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렸다.

또 일본은 조선침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던 의병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이란 방식을 통해 의병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 작전을 감행했다.²⁹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의병투쟁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키는 일본의 군사작전은 의병투쟁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국 반일투쟁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조선의 무력 저항이 완전히 진압되었다고 판단한 일제는 강제병합의 수순을 밟기 시작하였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사이에 강제병합이 조인되었고, 29일에 선언됨으로써 조선은 이후 일본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³⁰

이처럼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세력간의 세력 각축의 결과였다. 조선 및 만주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무력 충돌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영국 미국의 자본이, 러시아는 프랑스의 자본이 각각 지원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조선은 국권회복운동이 일본제국주의 힘에 좌절되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 내지 묵인 아래 일본에 강점당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29 홍순권(1998), 「의병학살의 참상과 남한대토벌」 『역사비평』 45, 서울 : 역사문제연구소, 30~38쪽.

30 강만길(1994), 258~261쪽.

III.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동아시아

1. 제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정세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공동지배’라는 형태로 그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각국은 특별히 중국에 대한 각국의 영향권을 나누면서도 기회균등과 문호개방, 그리고 최혜국 조항에 의해 각국이 각자 조계를 설치하고, 동등하게 경제적인 이익획득행위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세력균형의 판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변동이 나타났다.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은 약속과 달리 한반도의 문을 폐쇄하여 한반도에서 서구열강의 경제적 이권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가속화했다.³¹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긴장이 계속됨에 따라 영일동맹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영국에서도 러일전쟁이후 친일분위기가 침체되고 오히려 냉담한 여론이 형성되어 갔다. 또 영국이 영러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러시아 저지를 목적으로 체결한 영일동맹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영일동맹폐기론’이 대두하기도 했으나,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국제외교의 축으로 삼고 동맹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11년 제3차 영일동맹이 개정,

³¹ 구대열(1995), 207~210쪽.

체결되었다.³² 이 개정에서는 미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것은 영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덜었고, 일본은 제3차 영일동맹이후 영국과 거리를 두면서 그동안의 견제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노선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중국대륙에서는 신해혁명(1911. 10)이 일어나 청조가 타도되고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국은 혁명 뒤에 반혁명의 반발이 거세지고 만주에 대한 장악력이 대폭 약화되는 등 그 정치상황이 불안정하였다. 그 사이 러시아는 제2차 러일협정때 일본으로부터 승인받았던 외몽고를 점령하였다. 이어 러시아와 일본은 협상을 벌여 제3차 러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는 만주의 서부 분계선을 획정하는 한편 내몽고를 동서로 나누는 협정에 체결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는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하였다. 이와 함께 서구 열강의 중국대륙에 대한 침탈 방식도 변화가 나타났다. 무력을 동원한 강압 수단이 아니라 서구 열강이 중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지속된 세력균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혁명을 통해 임시총통에 오른 위안스카이[袁世凱]는 미국 지원으로 일본을 견제하며, 열강의 세력균형을 활용하여 중국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다.³³

1914년 8월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변동을 가져왔다. 일본이 열강의 제지를 받지 않고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탈과 정치지배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914년 8월 일본은 독일에게 일본 및 중국 해역에서 독일합정을 즉시 퇴거시키고 자오저우만[膠州灣]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한다는 이유에서 일본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독일로부터 답변이 없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에서 군사행

32 정상수(2006), 「1차세계대전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 일조각, 378쪽.

33 권용립(1997), 『미국대외정책사』, 서울 : 민음사, 355쪽.

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³⁴

반면, 중국 위안스카이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고 자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그들의 목적대로 남양방면과 자오저우만으로 이동하였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교전구역> 지정을 무시한 채 일본군은 먼저 자오제[膠濟] 철도를 제압하였다. 독일의 군사 기지가 있는 칭다오[靑島]를 점령하고, 독일이 지키던 산둥 반도에 관한 권리를 빼앗았다. 이어 독일이 지배하던 남양군도도 점령하였다.³⁵

이같은 일본의 군사적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독일 중심의 3국 동맹에 대항하는 3국협상 측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1902년 영국과 제1차 영일동맹, 1907년 프랑스와 일불협약, 같은 해 러시아와 제1차 러일협약을 체결하며 국제무대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15년 1월 교전구역의 폐지를 선언하고 중국 산둥반도로부터 물러날 것을 일본에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역으로 일본은 1915년 정식 외교수속을 거치지 않은 채 중국 위안스카이 정부에 ‘제5호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북으로 만주에서부터 남으로는 푸젠성[福建省]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각종 권익 보장이 담겨 있었다.³⁶ 이 요구는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유럽지역에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대해 제5호 이외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요구가 전해지자 도쿄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반대운동에 나섰고 중국 각지에서도 일본에 대한 대대적인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세계대전에

34 W.G. 비즐리 저 장인성 역(2004), 『일본근현대사』, 서울 : 을유문화사, 255~256쪽.

35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2000), 98쪽.

36 코지마 신지 마루야마 마츠유키(1998), 75~77쪽.

거리를 두고 있던 미국도 일본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으며, 서구 열강도 특히 제5호에 대해서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병력을 증강하여 위안스카이 정부를 더욱 압박하였다. 결국 제5호만을 삭제한 채 1915년 5월 위안스카이 정부가 이를 수락, 굴복함으로써 2개의 조약과 13개의 교환공문이 조인되었다.

이어 일본은 1915년 적국에 대한 공동강화를 약속한 영 프 러의 런던 선언에도 참가하였고, 1917년에 제4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1917년 11월에는 미국과 랜싱(Robert Lansing)-이시이[石井菊次郎] 협정을 통해 중국에서의 특수권익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³⁷ 일본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고, 교전국들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려는 동시에 그동안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네 차례 협약의 비밀조항을 공개하는 등 비밀외교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1907년 제1차 러일협약 이래 미국이 만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고 조선과 중국의 민족을 제압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고, 부총통이었던 리위안홍[黎元洪]이 대총통, 국문원 총리에 된치루이[段祺瑞]가 취임한 ‘베이징정부’가 수립되었다.³⁸ 1917년 4월 민주주의를 수호를 내걸고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이를 전후에서 중국 국회에서도 참전을 통해 강화회의의 발언권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된치루이가 중국의 참전을 주도하였고, 중국 국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의 강화를 목적으로 그 해 8월에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그러자 이를 반대

³⁷ 정상수(2006), 385쪽.

³⁸ 김세호(1989), 「軍閥統治와 聯省自治」『강좌 중국사Ⅶ』, 서울: 지식산업사, 17~18쪽.

했던 의원들은 광둥에서 광둥정부를 수립하고 쑨원(孫文)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세계대전의 참전문제가 중국 정치권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중국의 남북이 대립하자, 일본은 이 틈을 이용해 된치루이 정권의 친일화를 도모하였다. 1918년 5월 일본과 중국 양국군은 독일 오스트리아군과 소비에트혁명군이 동쪽 진출을 대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평화와 안정을 공동 방위한다는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³⁹ 이 협정에 근거한 일본군 작전구역은 북만주 동부내몽골 시베리아 동부 극동 러시아령이었고, 이 구역에서 중국군의 지휘가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시베리아 혁명에 대한 군사 간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19년 말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원조를 받던 러시아 반(反)혁명군이 붕괴하자, 연합국들도 군사적 간섭을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볼셰비키 진출이 조선과 만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군의 철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군은 시베리아 거류민을 보호하고 조선과 만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실로 동시베리아 각지에서 혁명군에 대한 무력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일본군을 시베리아 주둔지에서 철수시키지 않자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영국은 소비에트 정부와 통상협정을 맺게 되었다. 결국 1921년 7월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일본은 군병력을 시베리아지역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9 신승하(1992), 『중국현대사』, 서울 : 대명출판사, 139쪽.

2. 워싱턴체제와 상대적 안정

동아시아 지역은 러일전쟁이후 큰 전쟁이 없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무대 또한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비롯된 민중의 피해는 서구 유럽에서 일어난 대전(大戰)과 비교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큰 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이권 쟁탈은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18년 10월 독일이 항복하고, 11월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1919년 1월 파리에서 개최된 강화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소비에트 정부를 배제한 가운데 독일과 패전국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들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재분할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가리켜 '베르사이유 체제'라고 부른다.⁴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위가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다음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일본은 1919년 1월 파리에서 열린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승전국으로 참여하였다. 독일과 패전국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들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재분할하여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회의 자리에서 일본은 모든 회의에 참여할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자신의 이권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 5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중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은 강화회의에 참석할 근거 및 상실당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 베이징 정부의 전권단은

40 정상수(2006), 394~398쪽.

산둥성에 대한 독일 권익의 직접 반환과 중국에 대한 21개조의 조약 폐지, 그리고 각국과의 불평등조약 폐지를 요구하였다. 전권단은 중국의 대독참전으로 독일의 조차권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권리 회복을 외치는 국내 여론과 미국 측의 지지를 받으면서 회의에서도 점차 지지기반을 넓혀 갔다.

그러나 일본이 쉽게 물러날 리 없었다. 일본 역시 전권단을 통해 산둥성에 대한 독일권익의 무조건적 양도와 적도 이북 태평양의 독일권익을 양도받기 위해 활동하였다. 이미 일본은 산둥성의 독일권익에 대해 위안스카이정부가 승인한 21개조 요구를 통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의 요구를 강화회의에서 승인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은 산둥성에 대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국제연맹 규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에게 한발 물러나 양보하였다. 일본 전권단은 독일로 하여금 산둥성의 산둥반도를 중국에 반환케 하고, 일본의 경제적 특권과 거류지 설정권의 유지를 승인하게 만들었다.⁴¹

그러자 1919년 6월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산둥성 문제의 처리를 반대하며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 중국에 관한 열강들의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진출하였으나 여전히 서구열강들 간에 치열하게 분할 대립이 전개되던 광대한 지역이었다. 베이징정부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이 지지하는皖치루이파와 미영이 지원하는즈리파가 대결했는데, 결국즈리파가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진출도 잠시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개최된 것이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 사이에 미국 워싱턴에서

⁴¹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2006), 108~109쪽.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일명 ‘워싱턴회의’였다. 이 회의 큰 주제는 ‘군비제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토의한 미 영 일 불 이 5개국 회의와 이 5개국에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이 추가된 9개국 회의가 미국의 주도아래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과 협의에 따라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해군군비 제한에 관한 5개국 해군군축협정이 성립되었고,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을 통해 열강들의 이해조정이 이뤄졌으며, 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토 불가침을 담은 미 영 일 불 4개국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독일의 패배로 유명무실해진 영일동맹은 사실상 파기되었다.⁴²

그 가운데에서 중국에 관해 체결된 9개국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에서 획득했던 국제적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아래 미영의 알선이란 조건을 붙여 차지하고 있던 독일의 산둥 권익을 포기하고 1922년 중일 양국 간의 산둥현안에 관한 조약에 의거해 청도 등에 주둔한 일본군도 철수하여 산둥반도를 중국에 반환하였다. 물론 중국 베이징정부가 주장한 치외법권 철폐와 관세자주권 회복은 실현되지 않았고, 세력범위의 철폐와 조차지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 회의 주된 목적이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조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워싱턴회의에서 체결된 3개 조약은 상호 관련된 것으로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열강들 사이에 일시적 타협과 그 세력관계의 설정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가리켜 ‘워싱턴체제’라고 부른다.⁴³ 베르사이유체제와 워싱턴체제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들은 1920년대 후반까지 상대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⁴² 신승하(1992), 150~152쪽.

⁴³ 워싱턴체제의 성립과 요인에 대해서는 김민수(2002), 「워싱턴체제의 성립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할 것.

그러나 워싱턴체제는 중국에서 반제 반군벌 투쟁을 목표로 통일전선의 형태를 띤 국민혁명이 전개됨에 따라 본질적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거듭되는 군벌전쟁 와중에서 쑨원(孫文)은 1917년 성공한 러시아혁명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19년 5 4운동이후 그해 10월 중화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하여 민중적 토대를 가진 국민혁명을 지향하였다.⁴⁴

당시 국제질서에서 배제된 소련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며 이를 벗어나고 있었다. 독일과 라팔로 조약(1922), 영국 이탈리아 국교 정상화(1924), 일소조약(1925) 등에 성공한 소련은 중국에 대해 '카라한선언'과 베이징 정부와의 중소협정을 통해 중국의 주권 및 이권에 손상이 되는 제정러시아와의 조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였다. 이어 1919년 3월 개최된 공산주의 인터네셔널 코민테른에서는 세계 약소민족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쑨원은 소련 및 코민테른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문제를 논의하였다. 공산당도 공산당원이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한다는 연합전선의 결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쑨원은 1924년 중국국민당 전국대회를 개최하다. 이 자리에서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립되었다.⁴⁵ 물론 쑨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위기도 있었으나 국공합작을 기반으로 1925년 국민당은 광저우에 '국민정부'를 수립하였다. 배경에는 활성화된 노동운동도 큰 몫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중국에서 후퇴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침략이 본격화되었고, 부흥되었던 경제가 다시 불황으로 돌아서며 노동자 삶이 어려워졌다. 이 무렵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노동자들의 반제의식이 성장하자, 이에 대한 베이징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반제투쟁의 고양과 반제혁명정부인 국민정부의 수립은 워싱턴체제를 위

44 코지마 신지 마루야마 마츠유키(1998), 97~98쪽.

45 羅弦洙(1989), 「제1차국공합과 북벌」 『강좌 중국사Ⅶ』, 서울 : 지식산업사, 57~67쪽.

협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총사령관이 된 장제스는 1926년 7월 북부의 군벌들을 타도하는 북벌(北伐)을 개시하였고, 민중의 대대적 지지를 받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가장 많은 경제적 이권을 지닌 장강유역에까지 나아갔다. 국민 정부는 광저우에서 우한(武漢)으로 옮기고, 1927년 1월 한코우 주장의 영국 조계를 회수했으며, 3월에는 드디어 상하이와 난징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미 영 일 불 이 5개국은 난징사건에 관해 간섭하고 나섰다. 여기에 제국주의 열강과 상하이 재벌들의 지원을 받던 장제스는 공산당의 정부 전복을 우려한 나머지, 국공합작을 포기하고 난징정부와 합병한 뒤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당의 장제스는 장쑤린을 계승한 장쉐량(張學良)과 협력하여 1928년 12월 베이징을 장악함으로써 중국 통일을 실현하였다.⁴⁶

중국 민중의 반제투쟁이 계속되자 제국주의 열강들의 개입이 시작되었는데, 일본도 군사력을 앞세워 중국침략을 시도하였다. 일본은 워싱턴체제 아래 이른바 '시데하라 협조외교'를 펼치고 있었다.⁴⁷ 워싱턴회의에 외상으로 참여한 시데하라 키쥬로(幣原喜重郎)가 주장했던 것으로, 평화주의, 중국내정 불간섭주의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군사력을 신속하게 동원함으로써 그 한계를 노출시켰다. 1927년 4월 일본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하자 중국 국민당의 북벌에 맞선 군사력을 출병시켰고, 북벌군이 베이징으로 진격해오자 제2차 출병하여 사상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5·3사건을 일으켰다. 베이징 정부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일본군에 비협조적인 장쑤린을 열차와 함께 폭살해버리기도 하였다.

워싱턴체제아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상대적 안정은 식민지나 종속지역

⁴⁶ 조 훈(1999), 122~124쪽.

⁴⁷ 비즐리(2004), 268~269쪽.

을 억압하는 동시에 소련을 배제함으로써 성립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지배질서는 워싱턴체제로 재편 성되었으나, 그것은 이전의 체제와는 차이가 났고,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왜냐하면 분쟁 발생시 상호 협의를 한다든가 각국 노력과 협조에 따라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집단의 협조 체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3. 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책과 탄압

워싱턴 회의 이후에도 일본이 만주를 비롯한 중국문제에 깊이 개입하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식민지 타이완 및 조선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철저한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식민통치 방식을 택했던 일본제국주의는 타이완 및 조선인들의 저항을 진압하였다. 1919년 3 1운동과 같은 크고 작은 저항에 부딪치고 그 직후에 만주일대 독립군의 무장활동도 활발해졌으나,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 불안요소를 을 하나씩 제압해 나감으로써 식민지의 정치적 불안상황을 안정시켜 갔다.

또 식민지 내부는 초기 일방적인 억압통치에서 벗어나 '문화통치'(文化統治)를 통하여 식민통치의 안정화가 도모되었다. 타이완과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식민지를 일본제국에 통합시키는 동화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민법을 제외하고는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는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들 식민지에 적용하였다. 특별히 15년 먼저 타이완에서 쫓던 식민지배정책들이 거의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실시되었다.

타이완의 경우, 1895년 5월 8일 이후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타이완총독부가 수립되었다. 식민지를 처음으로 획득한 일본은 예상치 못한

타이완인들의 저항과 열강의 견제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식민지통치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 갔다. 타이완 할양 직후 일본은 해군대장 카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를 초대 타이완총독 겸 타이완접수 전권위원에 임명하고 본국 정부의 지시 없이 현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896년 3월에는 타이완 총독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 제63호(약칭 六三法)」를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총독이 타이완의 최고행정장관 겸 육해군 통수권자로서 행정입법사법 및 군사대권을 장악한 식민통치체제를 성립시켰다.⁴⁸

일본은 점진적인 동화를 전제로 타이완의 실정을 감안하여 복수입법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타이완인 고유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는 일종의 방임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격리주의 원칙에서 일제 초기부터 타이완인, 원주민, 일본인 세 계통으로 구별된 차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총독부는 교육을 타이완인의 동화와 개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타이완에 확실한 교육제도를 도입한 것은 1919년 「대만교육령」을 발표하면서였다.⁴⁹ 이때 와서 일본 국내의 제도를 모방,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타이완인과 일본인의 공학제를 실시했으나, 실제 교육 여건과 환경에서 그 차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타이완 강점이후 일본은 토지제도 화폐제도 도량형 등을 개혁하고, 교통건설과 인구조사 등을 통해 자본주의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일본자본가와 기업이 진출할 여건을 조성하는 등 타이완을 일본자본주의 재생산구조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1920년대 전반까지 일본은 근대적 제당업의 정착

48 김영신(2001), 『대만의 역사』, 서울 : 지영사, 189~190쪽.

49 손준식(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시아문화』 제1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6쪽.

과 이식에 주력하였고, 일본이 독점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쌀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타이완을 미작 중심의 농업으로 재편시켰다.⁵⁰

한편 식민지 조선의 경우, 조선총독부의 총독은 최고의 친임관으로 천황에게 직례(直隸)하였고, 육해군 대장들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었다. 그는 거의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하여 전근대의 어떤 군주보다 더 강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의 무단성은 이른바 헌병경찰제로 대표된다.⁵¹ 헌병은 군인을 대상으로 질서유지를 하고 수사하는 군대 경찰로, 이 시기에는 일반 민간인 치안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상, 민중생활상 전반에 걸쳐 역할을 담당하였다. 모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 식민지 조선인들은 철저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침묵과 복종만 강요받았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타이완처럼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⁵² 국토측량으로 확보된 기본 자료를 통해 식민지배 차원에서 토지의 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농민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힘든 농지는 그대로 국유지로 편입되었고,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어 토지의 상품화와 지주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토지의 화폐화는 일본자본의 활동 및 축적이 보장됨으로써 조선 농민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은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령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륙침략, 치안유지는 일본 자본의 침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한국인을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어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한 동화정책이 시도되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사립학교 및

50 김영신(2001), 216~221쪽 참조.

51 박경식(1986), 『일본제국주의 조선지배』, 서울 : 청아, 23~56쪽.

52 강만길(1994), 『고쳐쓴 한국현대사』,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22~135쪽.

야학 등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다.

1919년 3 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월등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조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보복을 자행하였다. 그 상징적 사건이 4월 15일 수원 제암리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23명을 교회에 가두어 놓고 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제암리사건’이다.⁵³

일본은 3 1운동이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폭력과 강제에 기초한 지배 방식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일본은 문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배 방식을 실시하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조선인의 저항에 직면하여 강압적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이기도 하였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조선어로 된 신문과 잡지가 출판되었고,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다양한 출판물들이 간행되었다. 제한적이거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다.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의사를 소통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은 일본 내 조선인들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도쿄 일원에서 발생한 관동 지역은 큰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민심과 사회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 경찰서는 치안유지에 나섰다.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되었고, 보도 내용에 의해 더욱 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

⁵³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덕주(1997),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참조할 것.

⁵⁴ 강재언(1990), 159~163쪽.

들이 여러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써 “조선인(또한 중국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거짓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다.⁵⁵ 당시 물 공급이 끊기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인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에게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곳곳에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심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 확인되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기도 하였다. 조선식이나 중국식 복장을 한 이는 바로 살해당하였고, 학살 사실을 알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이나 중국인, 타지역 출신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인 ‘10엔 50전’을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등 많은 외국인들이 살해당하였다.

일본 당국은 이미 유언비어로 알고 있었으나, 혼란과 질서 회복이란 명분 하에 자경단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일부는 가담하거나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자경단의 만행이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그때서야 정부가 개입하였다. 이미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이후였다.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상당수는 암매장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특파원이 조사 보고한 바에 따르면, 6,661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⁵⁶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비어를 공식 확인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

55 姜徳相(1962),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現代史資料』6, 東京 : みすず書房, 99~118쪽.

56 강덕상 저 김동수 박수철 역(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서울 : 역사비평사, 325쪽.

행 조사하였으나, 기소된 사람들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방면시키고 말았다. 당시 학살사건으로 사법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 조사나 사죄 및 보상은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V.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동아시아

1. 만주침략과 국제 이해관계

1929년 10월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독점자본주의단계의 본격적인 과잉생산에 따라 일어난 공황은, 이후 4년여에 걸쳐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각국은 무역을 통제하고 해외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을 찾기 시작하였다. 세계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군축회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제국주의 열강들은 경제적 정책 측면에서 군사화에 의한 경제위기 탈출을 모색하였다. 또 여기에 민족 배외주의 및 자민족 중심주의적 경향이 노골화되면서 열강들은 밖으로 군축을 논의하면서도 안으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었다.

세계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상대적 안정을 취하는 배경이 되었던 워싱턴체제가 와해되는데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워싱턴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미국과 일본이 세계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세계대공황에 큰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1930년 초부터 견잡을 수 없는 불황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해외무역 의존도가 30%가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상품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거리에는 300만의 실업자가 넘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물가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생활이 비참해지고, 소작쟁의가 확산되었다. 수출도 당연히 정체되었다. 이를 기회로 일본 국내 우익운동이 활발해졌다. 만성적 농촌파괴와 국민혁명에 따라 일본의 대륙지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나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 되었다.⁵⁷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부 내에서는 만주와 내몽고 전역을 식민지화하여 국내 모순을 밖으로 돌리고 대 소련전의 무력적 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중들의 힘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만주 관동군 작전주임 참모였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는 「만몽문제사건(滿蒙問題私見, 1931. 5)」이란 글을 통해 만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⁵⁸ 국내에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일본정신 일본주의라는 경직된 민족배외주의로 흐르는 우익운동이 일어났다.

만주와 내몽고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는 것은 러일전쟁이후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포츠머스 조약, 21개조 조약, 니시하라 차관 등으로 많은 권익을 획득하여 왔으며, 만주 봉천을 중심으로 한 군벌을 양성하여 그 울타리로 삼았다.

1931년 9월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은 만주 평탄 북방에 있는 류타오호[柳條湖]에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철도 선로를 계획적으로 폭파시켰다.⁵⁹

⁵⁷ 피터 두오스, 220쪽.

⁵⁸ 『太平洋戦争への道』別巻 資料編, 朝日新聞社, 1963, 99~101쪽.

⁵⁹ 코지마 신지 마루야마 마츠유키(1998), 124~125쪽.

이를 중국 측의 파괴공작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일본군은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만주 남부 일대로 군사적 침략행동을 확대한 일본군은 약 4개월 만에 주요 도시, 철도 연선지대 등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11월에는 소 만 국경을 이루는 동북3성 전역을 장악했고, 1932년 1월 초에는 만주남부 최후의 도시인 진저우를 함락시킴으로써 러허성을 제외한 만주 전역을 일본의 군사지배 하에 넣게 되었다.

일본 군사침략에 격분한 중국 민중이 전국 각지에서 거센 항의를 계속하자, 1932년 1월 일본군은 중국 내외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동시에 반일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반일운동의 거점이었던 상하이로 무력전쟁을 확대하였다. 상하이에서 제19로군이 노동자와 농민의 지원을 받아 반격에 나서자 일본군은 예상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민중의 참전을 금지하고, 민중이 조직한 의용군을 해산시키자 제19로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일본은 3월 1일에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를 집정(執政)으로 하는 만주국(滿洲國)을 세웠다. 만주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수행하기 위한 괴뢰국가였다.⁶⁰ 행정기관 장관에는 중국인을 취임시켰으나, 관동군의 지휘 하에 있는 일본인 관리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군사 경찰도 일본이 지배하였다. 법률 예산을 집행하는 입법원이 정부조직법상 있었으나, 만주국 최후까지 실제 설치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도 중국인의 정치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에서는 전쟁 준비를 위한 광공업, 중공업에 중점을 두고 침략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았다.

이같은 만주에 대한 일본의 본격적인 무력침략에 대해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오히려 서구 열강의 국제적 압력과 직간접적인 개입을 기대하며 현지 중국군에 무저항을 지시할 정도였다. 1931년 9월 중순은 국제연맹 제12

60 이에 대해 윤휘탁(1996), 『滿洲國 研究』, 서울 : 일조각을 참조할 것.

회 총회가 열리고 있던 때였다. 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중국은 국제연맹에 이를 제소하였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맹비난하였다. 국제연맹은 1932년 1월 리튼[Lyttton]을 대표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보고서를 10월에 공개하도록 하였다.⁶¹

그러나 장제스의 기대와 달리 서구제국주의 열강은 이 문제를 ‘국지적’ 분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권익에 ‘유불리(有不利)’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국은 무력침략행동을 자행하는 일본을 오히려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미국 역시 일본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방어벽이란 관점에서 이를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소련도 일본의 대소공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서구열강들은 일본의 만주침략을 강대국간의 권력정치를 틀 안에서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

이와 반면에 국제연맹 내에 약소국의 위치에 있던 국가들은 일본의 만주침략을 규탄하며 강대국들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이들 국가들에게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큰 선례가 되어 자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튼 조사보고서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기 때문에 만주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만주국의 대안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열강도 참여하여 공동으로 만주를 지배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하였다.⁶²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 힘으로 작동하는 결정이 될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제된 힘이 동반되지 못한 국제사회의 결의는 한낱 선언에 그칠 공산이 컸다. 이 결정을 비롯기나 하듯이 일본군은 1933년 1월 산하이관[山海關]을

⁶¹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145~146쪽.

⁶² 비즐리(2004), 284쪽.

점령하는 등 만주에서 화북까지 침략의 대상지역을 확대시켰다. 리튼 보고서가 1933년 3월 국제연맹에 채택됨에 따라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일본은 화북지역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만주지역 항일운동에 대한 중국 본토로부터의 지원을 끊기 위한 무력침략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서구제국주의 열강과의 국제관계가 더욱 멀어지면서 동시에 만주지배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대륙에 대한 전면적 침략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2.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1930년대 중반 일본은 만주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항일운동에 대한 중국 본토로부터의 지원을 끊기 위해 화북 분리공작에 착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만주의 관동군은 화북분리 공작을 더욱 강화시켜 중일 전면전쟁을 전개하고자 그 계획을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았다.

1937년 7월 7일 밤, 일본은 베이징 근교 루고우차오(蘆溝橋)에서 누군가 쏜 몇 발의 총성을 구실로 삼아 군사행동을 일으켰다. 일본 측에게 전쟁 확대의 의도가 없었다면, 국지적 충돌로 머물러 전면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일본 내부에 전쟁의 확대 및 불확대를 놓고 대립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결론적으로 일본은 7월 11일 화북에 대한 문제해결의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대규모의 군부대 파견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중국에 대한 군사침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⁶³ 일본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북경방면, 상해방면, 그리고 남방 쪽에서 중국 내륙으로 침략해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의 항전체제는 급속히 통일되어 갔으며, 1937년 9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2차 국공합작이 이뤄졌다.⁶⁴ 이는 항일을 나선 군대와 민중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상 밖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일본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을 압박하였다. 드디어 1937년 12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수도 난징을 점령하였다. 난징 국민당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개입하기를 바라며 이미 수도를 우한으로 옮긴 상태였으며, 중경으로 이전하여 항일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중국이 일본의 침략확대를 국제연맹에 제소한 것이 1937년 8월에 일어났다. 그러나 서구 열강은 좀처럼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은 화북과 화중에서 자국의 권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대일유화정책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D. Roosevelt)는 ‘전쟁은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되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일본에 대한 도덕적 수준에 머물고 말았으며, 중립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다. 이 때 소련만이 일본의 힘을 약화시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서둘러 중소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을 지원하였다.⁶⁵

한편, 중일전쟁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대치단계에 들어갈 무렵, 유

63 김명섭(2006), 「아시아 태평양전쟁」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연세대 출판부, 201~203쪽.

64 백영서(1989), 「제2차 국공합작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 『강좌 중국사Ⅶ』, 서울 : 지식산업사 참조.

65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163쪽.

럽에서는 독일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되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함으로써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독일군은 두 달 만에 유럽 대륙을 제패하였다. 이에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갖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 신경 쓸 처지가 못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즉 일본은 서구열강의 동남아시아 식민지 및 그 자원을 식민지 본국의 패배로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1940년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침략을 위한 ‘남진정책’(南進政策)을 결정하였다.⁶⁶ 이어 독일, 이탈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게 아시아로부터 손을 떼게 만들고, 중일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를 제압하여 일본을 맹주로 하는 ‘동아신질서’의 수립을 주장하였다.⁶⁷

일본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침략은 곧 미국과 영국의 대일 경제제재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영 제국주의의 경제권에 대한 재분할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영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 내 일본 자산 동결, 대일 석유수출금지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동남아시아 침략을 서구제국주의 침탈로부터 여러 민족을 해방하는 ‘성전’(聖戰)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또 동남아 침략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 미군이나 영국군 기지 등을 목표로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침략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어 웨이크 괌 미드웨이 필리핀 홍콩 등에 대한 공습도 동시에

66 박진우 외 공저(1999), 『일본 근현대사』, 서울 : 좋은 날, 275쪽.

67 성황용(1993), 『근대 동양외교사』, 서울 : 명지사, 469쪽.

이루어졌고, 11일에는 독일 이탈리아도 역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문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이 되고 말았다.⁶⁸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지 반년 만에 일본은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하고, 1942년 11월에는 점령지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동아성’을 신설하였다. 일본은 서구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여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인다고 주장하였다.⁶⁹

그러나 전쟁의 현실은 달랐다. 일본이 점령지에서 석유 고무 등 중요한 군수자원을 대량 수탈함에 따라 현지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현지 주민에게 토목공사장에 대한 강제동원 착취로, 민족 역사를 무시한 신사참배, 일본어 강제 학습 등이 강요되면서 점차 각 지역에서는 반일기운이 고조되었고 항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을 받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참전을 결정하였다. 초기에 일본의 기습공격을 받고 태평양에서 후퇴를 반복함에 따라 미국의 전세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전쟁을 거듭할수록 전술적 교리와 무기체제가 급속도로 발전된 미국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전쟁 국면은 1942년 5월 미드웨이 해전과 8월 과달카날 전역 등의 승리를 계기로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초반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하며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였다.

1944년 사이판 상륙, 1945년 2월 이오지마 점령 등으로 태평양에 항공 기

68 피터 두으스(1983), 247~248쪽.

69 임성모(2006), 「동아협동체제에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 일조각을 참조할 것.

지를 확보한 미국은 B-29 등의 폭격기를 동원한 일본 내 대도시에 대한 전략 폭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7월 일본의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던 사이판섬을 점령함으로써 미국은 전쟁의 정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⁷⁰ 1945년 3월 일본은 수도 도쿄에 대한 대공습을 당하여 군과 민간인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전시긴급조치법, 국민의용병역법 등을 제정하여 본토결전에 대비한 체제정비에 매진하였다. 한편으로는 소련의 중재를 통한 화평공작을 기대했으나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1945년 7월 연합군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은 포츠담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의 항복을 권유하게 되었고,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급기야 1945년 8월 6일 및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⁷¹ 8월 8일에는 소련까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일본의 '천황'은 더 이상 전쟁 지속이 전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자신의 입지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다. 1945년 8월 14일에는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의사가 전달되었다. 드디어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었다.

3. 동아시아인이 받은 피해와 고통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전쟁은 국가자본주의 및 국가체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국가체제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일본은 군사적 파쇼체

⁷⁰ 김명섭(2006), 215~228쪽.

⁷¹ 김영흠(1988), 『미국의 아시아 외교 100년사』, 서울 : 신구문화사, 184쪽.

제를 수립하고 침략전쟁을 재개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1945년 8월 패전하기까지 15년에 걸친 침략전쟁을 감행 하였다. 이런 침략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국내뿐만 아니라 침략을 당한 동아시아인들을 철저하게 탄압 지배하는 동시에 인력 및 자원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탈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인들을 일상생활과 함께 의식세계까지도 통제하고자 하였다.⁷²

이런 배경에서 대외 침략전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일본 국내 뿐 아니라 점령지의 민중의 저항을 철저히 탄압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 행위 과정에서 피침략자에 대한 탄압과 잔학 및 학살 행위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일반 속성으로 돌리거나 우발적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인에게 준 상처와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성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1937년 12월부터 거의 2개월에 걸쳐 일어난 ‘난징대학살사건’이었다.⁷³ 중일전쟁이 일어난 지 반년 만에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인 난징이 함락되었다. 난징을 점령하면 국민당정부가 항복할 줄로 일본은 판단했으나 예상외로 이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군이 선택한 대응이 집단적 학살이었다. 일본군은 전쟁 중 시내로 피난 온 사람과 도시 주변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무참하게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학살의 방법은 기충에 의한 무차별 사격, 생매장,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등 온갖 잔인한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72 김승태(2009), 『중일전쟁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참조.

73 아이리스 장 저 김은령 역(1999), 『난징대학살』, 서울 : 플리오 참조.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이 사실이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외국인 생존자들에 의해 세계에 보도되고 몇 가지 르포나 보고서에 의해 점차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후 동경재판에 따르면, 당시 비전투원 1만 2,000명,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시내에서 살해되었고, 근교에 피난 간 시민 5만 7,000명 등 총 12만 9,000명이 살해되었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타이완과 조선의 식민통치 초기부터 민족적 특성을 말살하려는 동화정책(同化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경찰과 군사력에 의한 물리적 억압만으로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식민지인들의 의식세계까지 일본인화(日本人化)시키려 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통치의 영구적 안정을 도모하여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⁷⁴ 이같은 강력한 동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1930년대에 들어서 침략전쟁을 전개하고, 이를 더 한층 강화시킨 ‘황국신민화정책’(皇國臣民化政策)을 실시하였다.⁷⁵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1937년 8월 중국과의 전면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국민정신 결집을 목표로 하는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을 발표하였다. 이어 9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이 결성되었다.⁷⁶ 이 법은 1938년 5월부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에서 전면 실시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전쟁협력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관제운동으로,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신국(神國) 일본, 그리고 국가주의 및 보국, 일본정신 등이 강조되었다. 이 운동은 뒤에 금품헌납, 국채응모, 저축장려, 물자절약, 근로봉사 등의 국민의 일상생

74 中塚明(1981),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일본근대화론』, 지식산업사, 299쪽.

75 吉野誠(1983),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지배」 『새로운 한국사입문』, 돌베개, 299쪽.

76 박경식(1986), 376~377쪽.

활 전반을 제한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군인과 우익의 주도로 전개된 이 운동은 동아시아인들을 침략전쟁으로 내몰았다.

조선과 타이완 식민지에서는 애국일 설정과 신사참배 강요, 황국신민서사의 제창, 그리고 창씨개명 등을 통해 식민지인들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려고 하였다. 교육에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차원에서 일본어만 배우고 일본어로만 말하게 했다.⁷⁷

일본의 침략 확대로 본토와 동남아시아 각지, 태평양 상의 도서 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강제 징용과 강제 연행이 실시되었다.⁷⁸ 일본은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전세의 악화에 따라 부족한 인력과 전쟁물자의 조달을 위한 식민지 동원 수탈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런 전시체제하에서 경제적 자원수탈과 함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인력수탈이었다. 그들은 전선의 확대에 따라 병력과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육군특별지원병령, 국민징용령,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 해군특별지원병령, 유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 등을 공포하였다. 급기야는 ‘여자정신근무령’을 공포하여 여성인력까지 전쟁에 동원하였다.⁷⁹ 동원된 여성들은 전시물자 제조 공장의 노동자나 전선의 군위안부로 투입됨으로써 엄청난 비인도적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했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위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든 산업을 군수품 생산에 집중하도록 하고 식량은 물론 생활필수품까지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미곡공출을 강요하거나 각종 지하자원과 광물자원도 수탈의 대상이 되어 전

77 일제하 식민지 언어정책과 관련되어 손준식 외(2008), 『식민주의와 언어』, 서울 : 아름나무를 참조.

78 이상익(2002),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79 안자코 유카(2003), 「총동원체제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의 전개」 『한국사학보』 제14호 참조.

쟁물자 생산에 투입되었으며, 모든 금속류를 공출하도록 하여 생활금속, 집기 등을 강제 공출하였다. 심지어는 사찰의 범종이나 교회의 종 철탑 올타리까지 수탈하여 전쟁물자로 동원하였다.⁸⁰

V. 맺음말

이제까지 이 글에서는 19세기 중엽~20세기 전반까지 전개된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아시아의 침략과정을 살펴보았다.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압박과 강점을 통한 정치 경제 군사적 이권침탈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후발자본주의국가로 재빠르게 성장한 일본은 다른 제국주의국가처럼 동아시아지역에서 식민지 획득에 나서게 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타이완과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대리하며 자신들의 이권장악을 추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5대 강국의 자리에 올라선 일본은 세계대공황이후 국내외적인 위기를 대외침략전쟁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만주침략과 만주국의 수립, 그리고 중영전쟁으로 나타났으며,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태평양 전쟁이었다.

80 김인호(2010),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 금속회수운동의 전개와 실적」 『한국민족운동사연구』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참조.

서구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 침략은 동아시아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편전쟁 이후 자국의 이권을 놓고 개입했던 제국주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동아시아인들의 국가적 개인적 권리들이 침탈되었고, 인력과 자원이 수탈되었다. 특별히 그 침탈의 주체가 오랫동안 동아시아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라는 사실이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로부터 당했던 만행과 침탈은 현재까지 어떤 논리나 위로로 치유하기 어려운 아픔으로 남아 있다.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따른 상처와 고통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오늘 과거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직시하는 용기이다. 이것은 망각이 아닌 기억의 힘을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 W.G. 비즐리 저 장인성 역(2004), 『일본근현대사』, 서울 : 을유문화사.
- 가토 요코 저 박영준 역(2003), 『근대일본의 전쟁논리』, 서울 : 태학사.
- 강덕상 저 김동수 박수철 역(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서울 : 역사비평사.
- 강만길(1994), 『고쳐 쓴 한국근대사』, 서울 : 창비.
- 강재언(1990), 『한국근대사』, 서울 : 한울.
- 구대열(1995), 『한국국제관계사 연구1』, 서울 : 역사비평사.
- 권선홍(2006),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권용립(1997), 『미국대외정책사』, 서울 : 민음사.
- 김민수(2002), 『위싱턴체제의 성립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학위논문.
- 김승태(2009), 『중일전쟁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영신(2001), 『대만의 역사』, 서울 : 지영사.
- 다나카아키라 저 강진아 역(2002), 『소일본주의-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 서울 : 도서출판 소화.
- 문정인 김명섭 외,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연세대 출판부.
- 박경식(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서울 : 청아.
- 박지향(2000), 『제국주의의 신화와 현실』,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성황용(1993), 『근대 동양외교사』, 서울 : 명지사.
- 손준식 외(2008), 『식민주의와 언어』, 서울 : 아름나무.
- 송정남(2010), 『베트남 역사 읽기』,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승하(1992), 『중국현대사』, 서울 : 대명출판사.
- 아이리스 장 저 김은령 역(1999), 『난징대학살』, 서울 : 끌리오.
-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 일조각.
-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저 한철호 이규수 역(2000),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울 : 옛오늘.
- 윤병석 외(2007), 『헤이그특사와 한국독립운동』, 천안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윤희탁(1996), 『滿洲國 研究』, 서울 : 일조각.
- 이광린(1981), 『개화당연구』, 서울 : 일조각.
- 이상의(2002),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최문형(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서울 : 지식산업사.
- 코지마 신지 마루야마 마츠유키 저·박원호 역(1998), 『중국근현대사』, 서울 : 지식산업사.
- 피터 두오스 저 김용덕 역(1983), 『일본근대사』, 서울 : 지식산업사.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김기승 | 순천향대학교

I. 머리말

II.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

III. 중국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IV. 베트남 민족주의와 반제투쟁

V. 타이완 민족운동

VI. 필리핀 민족운동

VII.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독립운동

VIII. 동아시아 각국 민족주의의 특징

I. 머리말

근대적 의미의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은 19세기 이후 서양 세력과의 접촉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서양 세력과의 접촉 이전에 이미 원초적 의미의 민족을 형성한 나라도 있었던 반면, 서양 세력에 의해 비로소 근대 민족으로 결집되기 시작한 나라도 있었다. 또 민족과 국가에 따라 서양 세력과 접촉하는 시기도 달랐고, 접촉의 성격과 양상도 달랐다.

이미 원초적 형태로나마 민족적 결집이 이루어졌던 지역에서는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1차적 대응은 저항이었다. 서양 세력이 군사적 승리 이후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는 지역, 종족, 종교, 이념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원초적 민족의 통합을 도모하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대적 민족주의가 발전하였다.

반면 여러 종족이 여러 섬으로 나뉘어 있어서 통합된 민족을 형성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19세기 이전부터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의 침략과 지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대 민족으로의 결집이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자생적 발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권력적 강제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이러한 지역에서는 외래 세력의 변화가 나타났다. 19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 미국, 일본 세력이 아시아를 침략하여 기존의 식민지 권력을 타도하면서 자신들의 식민 지배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제국주의자

들은 아시아인들에게 한편으로는 기존의 식민지배 권력을 해체하는 해방자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식민 지배 권력을 구축하는 제국주의자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토착주민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면서 민족주의가 발전되었다.

동아시아의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의 발전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 각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6개 나라를 선정하여, 각국의 민족운동과 민족주의가 전개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

1. 19세기 후반 근대 민족의식 태동

19세기 이전까지 한국은 동일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통일 왕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유교 중심의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주변 민족을 야만시하였다. 조공 관계를 맺고 있는 청나라에 대해서는 이중적이었다. 청의 종주권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것에 머물렀고, 내치와 외교는 자주적이었다. 명나라 이후 중화 문명은 오직

조선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어와 역사 등 문화적인 면에서는 독자적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자존 의식으로 청의 문화를 야만시하였다.

중화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 자존 의식은 19세기 후반 서양 세력의 침투에 대해 거부와 저항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흥선대원군(李昰應, 1820~1898)은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를 통해 서양 세력의 침략을 무력으로 물리쳤고, 그들의 통상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의 쇄국양이책(鎖國攘夷策)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새롭게 수립된 정권은 일본의 포함외교(砲艦外交)에 굴복하여 개항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중국 중심의 계서적인 세계질서에서 서구 중심의 힘에 의한 세계질서로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1880년대까지 한국인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첫째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대응이다. 이는 주로 보수적인 유림이 주도했으며, 농민층이 지지하였다. 전통적인 중화주의에 의거하여 유학을 정학으로 서양 기독교 및 근대 문명을 사학으로 간주하여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다. 경제적으로는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고 자급자족적인 농촌경제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개화파의 대응이다. 개화파 관료들 중심으로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부강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 전통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 기술 문명의 수용을 주장하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점진주의적 개화파에 대해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델로 삼고 정치적 변혁을 통한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이들 개화파는 종래의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국제법에 의거한 독립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1894년은 한국 민족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의미를 지니는 시기였다. 우선 동학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농촌 지식인과 농민층이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으로 결집하여 기존의 지배질서를 비판하는 정치사회적 개혁운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은 청일전쟁을 도발한 일본 제국주의에 무장하여 저항했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항쟁은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 민족운동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개화정권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 때 제기된 개혁안은 개화파 정권에서 추진한 갑오개혁에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갑오 을미개혁은 일본의 통제 아래에서 추진된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의 개화파와 농민층의 개혁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다. 보수적인 유학자들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은 중화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서양화된 일본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동시에 자본주의 침입에 저항하여 전통적인 농촌 경제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였다. 개화파 정권에 반대하고 농촌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점에서는 동학농민항쟁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항쟁은 양반 지배 체제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병전쟁과 차이가 있었다.

1896년에는 관료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조직되었다. 독립협회는 시민들이 참여한 만민공동회 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대중 시위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그 결과 입헌군주제로의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이러한 개혁 요구를 탄압하고,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1896년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대한제국은 외국의 간섭에 대해 근대 국가로서의 대외적 주권 확립을 표방하였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군주주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 1900년대 근대 민족주의 형성¹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또 하나의 변화를 겪었다.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후, 전국적으로 국권회복운동이 전개되었다. 1905~10년간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은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하나는 보수 유림과 농민층이 연합하여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한 의병전쟁이다. 또 하나는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신지식인과 도시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구국계몽운동이다. 두 운동은 실추된 국권을 회복한다는 즉 대외적 주권을 직접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하겠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참여자 개개인들이 국민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정당한 주권 행사로서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이 두 운동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에 대한 실천적 인식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운동은 주체, 현실인식, 이념적 지향성의 차이로 인해 통합되지 못했다. 한민족이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지 못했던 것은,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의병전쟁의 사상적 기반은 유교의 위정척사론이었다. 의병전쟁을 지도했던 보수 유림층은 당시의 현실을 과거 임진왜란의 상황에 비유하여 야만족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유교문화와 도덕을 최고의 유일한 가치로 인식하여 서구 문화의 수용을 배척하였으며, 서구 문명을 수용한 일본을 반인륜적인 야만 민족으로 파악하였다. 국권을 침탈한 일본에 대한 저항은 유교의 충군애국이라는 의리를 실천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야만족의 침입으로부터 유교적인 인륜질서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을

1 이하 한국민족주의 발전과정은 김기승(2003년 11월 11일), 「한국민족주의의 어제와 오늘」 『각국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주의』, 제11차 국제역사교과서 학술회의, 국제교과서연구소, 19~35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전재한 것임.

갖고 있었다. 의병전쟁은 일본군에 대한 무장투쟁, 친일 개화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과 징벌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이 추진한 국권회복운동은 존왕주의(尊王主義)의 충군애국 의리에 토대를 두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권 회복이란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는바, 의병전쟁은 실추된 왕권의 회복을 통해 전통적 전제군주제 국가를 재건하려는 복벽주의(復辟主義)라고 할 수 있다.

구국계몽운동은 서구적인 문명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자강력(自強力) 양성이 국권회복의 방법이라는 인식 하에서 전개되었다. 당시의 현실을 민족과 국가 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약육강식하는 천연(天演)의 공례(公例)로 보았다. 따라서 국권을 강탈한 일본은 타도해야 할 적(敵)이라기보다는 민족과 국가의 실력을 겨루는 경쟁자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국권 실추의 원인을 민족 내부에서 찾게 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전략은 민족의 내부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게 된다. 여기에서 서구적 문명대국 건설을 지향하여 신지식 교육을 통한 지력 향상과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구국계몽운동을 추진한 개화자강 사상가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자민족 중심의 다중심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민족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고 중화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였다. 국제사회는 민족 단위로 생존경쟁을 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의 생존과 독립은 민족의 자강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민족의 자강력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의 총합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자유 민권 사상의 수용과 함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다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구국계몽운동에서 추구한 미래의 국가상은 대한 제국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과 황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군주권을 부정하는 공화주의 이념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못하였다.

3. 1910년대 독립전쟁론과 3·1운동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이전의 국권회복운동은 독립운동으로 형태를 전환하게 되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적 폭압통치로 인해 국내 활동의 제약을 받은 의병이나 계몽운동가들은 국외에서 활로를 모색하였다.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국외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장래에 일어날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910년대에는 국내외의 각지에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 방략에 있어서는 이른바 ‘독립전쟁론’ 혹은 독립전쟁 준비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10년 이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두 갈래의 국권회복운동이 독립운동으로 형태 전환을 하면서 독립전쟁론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나타냈던 것은 양 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즉 구국계몽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일제에 대한 적 설정의 한계성과 그로 인한 군사적 무장투쟁을 무시한 실력양성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와 실질적 군사력을 경시하고 유교적 대의만을 중시했던 의병투쟁의 한계를 지양한 전략이었다고 하겠다.

독립운동 방략 상의 수렴적 경향은 독립운동 이념의 측면에서도 발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1910년대에는 독립운동의 기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운동 참여 계층도 확대되었다. 즉 양반 유생, 근대적 신지식인, 종교인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였으며, 미약하지만 농민 노동자 등 민중의 참여도 시작되고 있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학생의 참여는 독립운동에 잔존하고 있던 보수주의적 경향을 탈피하는 경향을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1910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붕괴와 황제의 권위 추락은 복벽주의의 현실적 기반을 약화시킨 반면, 대한제국 시기에 잠복했던 공화주의 이념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의 이념에서는 복벽주의가 퇴조하고 공화주의가 주류를 형성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의병전쟁 계열에서 볼 수 있었던 중화주의적인 유교적 예교국가 건설 지향성을 벗어나 근대적인 민족국가 건설 지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1910년대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군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민족의식 고양이었고, 여기에서 핵심적 내용은 민족사 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혈연적 공동체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자리잡았고, 역사적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 개념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국가 건설의 지향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민족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적 일본은 역사적 운명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의 자주적 삶을 위협하는 민족의 적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 논리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도 하였다.

1919년의 3·1운동은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각종 독립운동이 결집되어 나타난 것으로 전 민족의 계층이 연합하여 전개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3·1운동은 한민족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역사적 운명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근대적 민족으로 결집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3·1운동이 세계의 정의와 인도에 의거한 세계 평화 실현 운동임을 내세운 것은 한민족이 독립국가 건설을 통해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3·1운동 이후 국내외 각지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제한적이거나 한국인일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각종 신사조가 급속하게 유입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조직이 발생했고, 다양한 부문운동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에도 다양한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3·1운동이 1920년대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에 미친 영향은 크게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하여 전 민족의 제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3·1운동에서는 청년 학생층 및 농민층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3·1운동에서의 민중의 등장은 공화주의 이념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고, 1920년대 이후 ‘민중’의 존재와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둘째, 3·1운동은 국제사조의 변화에 영향 받은 바 크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의 증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하에서의 제한된 자유 등은 서구의 신사상의 폭발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급진적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이 급속하게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국가 건설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어 갔다. 이로써 한국의 독립운동은 1910년대 ‘종교의 시대’에서 1920년대 ‘주의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4. 민족주의 운동

1920년대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은 ‘문화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1910년대 이전에 형성된 신지식인층이 국권회복운동기 자강론적 민족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문화운동론은 낡은 문화의 청산과 진보적 신문화 건설을 주장하는 신문화건설론과 교육과 실업의 발전을 통해 독립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자는 실력양성론이 중심적인 논리였다. 민족의 실력은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의 총합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 구성원 각자가 신사회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논리도 나타나 청신개조론, 민족개조론 등과 같은 인격수양론도 문화운동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문화운동가들의 국가건설 지향은 사회주의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전망하였다. 따라서 구래의 전통적 관습과 관행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민중은 계몽되고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1920년대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은 근대사회 형성에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교육하고 계몽할 ‘중추세력’ 형성에 역점을 두는 엘리트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다. 사회변혁론의 관점에서는 점진주의적이며 온건한 방법론을 선호했다. 따라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투쟁과 혁명보다는 조화와 합의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계급 갈등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민족의식 고취를 통해 민족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20년대 국내의 민족주의운동에서의 실력양성론은 논리적으로 정치적 실력양성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1924년 이후 이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났다. 식민지 자치의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의 정치적 훈련을 쌓아 장래 독립운동의 단계로 나아가자

는 자치론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치운동론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독립을 먼 장래의 일로 넘겼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독립투쟁을 포기한 것이었다. 이는 민족주의자의 일부가 일제와 타협함으로써 일제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일부 타협파에 의한 자치론의 등장에 대해 민중들은 강력하게 저항했고,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 세력을 배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운동은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 세력을 배격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하였다. 1930년대 이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비록 단일한 조직을 결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독립을 위한 이념 정립과 방략 수립에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억압적인 파쇼통치에 의한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면서 한글 보급과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족문화 수호 운동을 통해 민족주의 이념의 토착화를 위한 토대를 닦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한편 민족해방이라는 공통 목적을 위해서는 전민족적 단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사회주의 운동세력과 협동전선 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론의 일부를 수용하여 민족주의 이론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즉 사회과학적 역사발전단계설을 원용하여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사회주의에서 평등주의와 민중중심주의 요소가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8·15 이후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1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된 것은 임시정부의 수립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 형태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있게 되었다. 그동안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국가건설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구체적 국가 건설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임정은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이라 하여 주권재민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 국체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재산 보유와 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다.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견지했으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적절히 조화시킨 정부형태를 구상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비록 구황실 우대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종래의 복벽주의 청산을 분명하게 하면서 공화주의에 의거한 국가구상을 구체화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1875~1965)과 국무총리 이동휘(李東暉, 1872~1935)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각지의 주요 독립운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한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군주주권주의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한 공화국 건설 노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족주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후 공화주의 이념은 독립운동 세력의 조직과 사상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독립운동의 기본적 이념으로 정착되었다. 1920년대 임정 산하의 각종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만주 지방 교포사회에 기반을 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등의 자치정부도 공화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조직되었다. 심지어 1920년대 중반 국내에서 조직된 조선공산당조차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성을 살필 때 주목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못지않게 평등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한국 독립의 근거를 ‘인류 평등의 대의’에서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때의 평등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이라는 규정을 볼 때 신분상의 평등은 물론 '빈부 계급의 차별'을 부정하는 경제적 평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는 안창호(安昌浩, 1878~1938) 김규식(金奎植, 1881~1950) 등의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동휘 등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계열의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민족의 통일적 대표기관으로서 출범한 임정은 애초부터 좌우연합 혹은 민족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20년 국제사회당대회에서 임정은 조소앙(趙素昂, 1887~1958)에 의해 사회민주주의 정부로 소개되기도 했다.

1920년대 초반 국외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는 독립운동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체로 3개의 이론이 등장했다. 첫째 1910년대 독립전쟁론을 계승한 노선으로 무장 독립군 조직과 그에 의한 일제에 대한 즉각 투쟁을 주장하는 무장투쟁노선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거나 주요 국가에 대한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인정받는데 주력하자는 외교독립노선이다. 셋째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독립할만한 실력과 자격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준비론이다.

1920년대 초반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서 나타났던 3가지 독립운동 방법론은 당시 운동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과 관련되었기에 대립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가지의 운동방법론은 상호보완적 관련성을 갖는 것이었다. 즉 외교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군 조직을 국제사회에서의 정식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아 원조를 받거나 우호적인 국가와 대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야만 하였다. 또 독립군의 역량 강화나 독립의 실력과 자격이란 일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을 전제로 할 때에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전제될 때 운동이 정당한 목표를 상실하여 타협적 경향으로 흐르지 않고 올바른 의미의 독립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1920년대 초반 전개되었던 독립운동 방법론을 둘러싼 대립은 독립전쟁을 궁극적 목표로 모든 운동방법을 통합적으로 배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역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 국내의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이 나타났다.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은 독립운동 방법의 측면에서 독립운동 조직을 정부 형태보다는 정당 형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 궤를 같이했다. 민족유일당 결성 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운동 진영은 경쟁적 관계에 있던 공산당 조직에 필적하며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정당 형태의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정당조직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족주의 운동 세력은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통합 한국독립당 등 파벌에 따라 독립운동 정당을 결성하면서 활동하였다.

1930년대 이후 결성된 독립운동 정당들은 어떤 정당이든 정강, 정책, 조직 체계, 운동 방략 등 정당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정당 간의 주도권 경쟁은 정강 정책의 구체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지역의 민족주의운동 진영은 파벌에 따라 조직과 활동에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건설 이념과 방략에 있어서는 수렴적 경향이 존재하였다. 즉 민족주의의 우익적 경향을 대표한 한국국민당은 물론 민족주의의 좌익적 경향을 띠고 있던 민족혁명당도 모두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기본적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40년대 초 중국 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전선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건국강령'에서 삼균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 점에서 삼균주의는 중국 지역 민족주의운동 진영의 이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대한민국 건국강령

삼균주의는 민족주의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조소앙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것은 독립운동 상에서의 좌우의 노선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에 필적할 민족주의 진영의 이념적 체계화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유물론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적이며 민중중심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균주의 이념의 체계화를 통해 일제는 이민족이라는 민족의 적일뿐만 아니라 이념상의 적, 인류의 적으로도 설정됨으로써 일제에 대한 적 인식이 보다 선명해졌다.

삼균주의는 삼균 즉, 3부문에서의 균등이 실현된 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 여기서 균등주의는 동양의 전통적인 균산주의(均產主義) 이념과 서구의 근대사상 특히 사회주의에서의 평등사상을 절충하고 조화시킨 새로운 이념이었다. 삼균은 수직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수평적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상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건설의 견지에서 볼 때, 삼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공화국 건설을,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정책의 실시를 통해

균등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삼균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5. 무정부주의 사상과 독립운동

3·1운동 이후 전개된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무정부주의 운동은 양대 운동만큼 조직화된 세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면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다만 3·1운동 직후인 1920년대 초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는 존재는 있었으나 영향이 미미하였다. 또 무정부주의는 모든 형태의 독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반공산주의라는 특징을 지녔다. 그리고 무정부의적 정의감은 유교적 의리 정신이나 민족주의적 의분과 친연성을 띠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유입된 바쿠닌(Bakunin, Mikhail Aleksandrovich, 1814~1876), 크로포트킨(Kropotkin, Pyotr Alekseevich, 1842~1921) 등의 무정부주의 사상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무정부주의는 일체의 권력적 강제와 지배를 거부하며 사유재산제도도 부정한다. 기존의 모든 정부, 제도, 경제, 종교, 철학 등은 지배와 착취를 위한 도구이므로 파괴 대상으로 간주된다. 어떤 형태의 지배와 강권이 없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연합한 무정부 공산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 실행방법으로 암살, 파괴, 폭동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무정부주의 사상과 실천 이론은 식민지 지식인과 청년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총체적 부정과 희생적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

무정부주의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1923년 의열단 명의로 발표된 「조선혁명선언」이다. 신채호(申采浩, 1880~1936)는 이 선언문에서 의열단의 민족주의적 의열투쟁 노선을 무정부주의 논리로 체계화하면서 기존의 모든 운동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운동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치론과 참정권론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내 문화운동가들의 실력양성론의 타협화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외 독립운동 진영의 외교독립론과 독립전쟁 준비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족혁명은 민중의 폭력적 수단에 의한 민중직접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독립운동이 단순한 항일운동이 아니라 사회구조도 변혁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타도 대상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 외에, 특권계급 경제적 약탈제도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사상 등도 거론함으로써 독립운동이 신사회 건설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국가 건설의 이념과 독립운동의 방략이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가능해졌다.

무정부주의가 1920년대 이후 한국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상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민중직접혁명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주체가 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독립운동사의 발전과정에서 3·1운동이 민중의 역량을 확인한 사건이라면, 민중직접혁명론은 민중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정부주의에서는 사회발전의 원리로서 경쟁보다는 상호부조를 중시하였다. 여기서 강자의 논리인 사회진화론이 배격되고, 약자 즉, 민중의 단결이 강조되었다. 무정부주의의 상호부조론은 노동자 농민의 단결을 고무했던 주요한 이론이었다. 이 점에서

무정부주의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독립운동이 민중 중심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둘째, 암살 파괴 폭동 등에 의한 폭력혁명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폭력이 지배와 강권이 없는 무정부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임을 역설하였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없는 식민지 민중이 동원할 수 있는 투쟁 방법으로 새롭게 제시된 폭력혁명론은 무정부주의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교의 전통적 의리관이나 민족적 열정과 울분에 기초한 의사와 열사들의 의열투쟁을 무정부주의 논리로 정당화시키고 고무시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무정부주의는 과거 독립운동의 방략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하겠다.

셋째, 무정부주의는 인류사회에 있어서의 일체의 차별과 경계를 거부한 완전 평등사회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러한 평등사회의 이상은 동양의 전통적인 유토피아 사상인 대동사상(大同思想)과 결부되어 독립운동 진영에서의 평등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강화시켰다. 역사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지도이념을 체계화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사회주의운동의 반민족성과 반민주성을 비판하는 논거로 원용되었다.

6. 사회주의 운동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러시아혁명의 영향과 급진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 독립운동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운동은 러시아혁명 직후인 1918년경부터 국외 특히 노령의 한인 교포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1920년대 전반 중국의 독립운동계와 국내 민족운동계

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전반 국내외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운동 단체는 한결같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하였다. 한인사회당은 약법에서 '사회주의적 국가를 조직한다'고 했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모든 계급을 타파한 소비에트정부 수립'을 지향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도 역시 소비에트정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국내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도 무산계급 해방과 계급타파를 제일의적 목표로 제시했다.

1920년대 전반 사회주의운동은 이념적 지향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민족주의운동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건설 지향의 차이가 강조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당 조직 건설을 위한 준비 공작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화에 노력하는 한편, 사상운동을 통한 이념의 전파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서 그들은 아직 미약한 세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운동 단체 내부에서 그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시기 사회주의운동의 특징은 비록 민족주의와의 이념적 차별화를 꾀했지만, 운동 방법론에 있어서의 본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는 사회주의는 물론 자유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등 각종의 신사조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1925년 국내에 비밀결사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면서 사회주의운동세력은 조직적 기반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이념과 투쟁방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코민테른(Comintern ; Communist International)의 반제통일전선 전략과 전술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전반 전개한 사상운동과 대중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조직화하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결과 사회주의운동의 국가건설 지향과 독립운동 방법론이 구체화되었다. 이때 사회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정치적 독립과 사회 해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민족해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제 1,2차 조선공산당에서는 ‘직접, 비밀, 보통 선거로 성립된 입법부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전민족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민족혁명유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통일전선에서는 노농계급을 기초로 하고 도시의 소자본가, 지식인뿐만 아니라 부르주아까지 동맹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권이 화요파에서 엠엘파로 넘어가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1926년 중반 이후 화요파를 대신한 엠엘파가 제3,4차 조공을 이끌어가면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때 채택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논강」에 나타난 국가건설론을 살펴 보면, 소비에트건설론은 좌익소아병적 견해이며, 시민적 공화국 건설론은 우경적 견해라고 비판하면서 ‘노농대중에 기초한 혁명적 인민공화국’ 건설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노선은 신간회라는 민족협동전선 조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민공화국 건설론은 제2차 조공의 민주공화국 건설론을 폐기한 것으로 토지문제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민주공화국 건설론에서는 지주제의 잠정적 존속을 인정했지만, 혁명적 인민공화국 건설론에서는 노농계급의 주도권을 강조하면서 토지혁명의 즉각적 실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즉 현 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단계로 규정하면서도, 부르주아계급이 취약하므로 노농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여 민족혁명과 토지혁명을 직결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민족협동전선 결성에 있어서도 철저한 계급분석에 기초하여 각 계급과 계층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농계급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으며, 이를 위한 토지혁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에서는 기존 조선공산당이 소수 지식인 중심이며 파벌투쟁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당의 해체를 지시하고 노동계급에 기초한 당 재건 방침을 지시하였다. 이후 1930년대 전반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당 재건이 제일의적 과제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해방투쟁을 위한 민족주의 세력과의 민족협동전선은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다. 오히려 민족주의에 대한 투쟁이 당면과제로 설정되었으며,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노동계급의 주도권 획득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타협파와 비타협파를 막론하고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1930년대 전반 국내에서는 노동소비에트건설 노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좌편향적 노선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민족협동전선 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집단도 있었다. 여운형(呂運亨, 1886~1947) 배성룡(裴成龍, 1896~1964) 등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좌편향적 노선을 따르지 않고 민족적 현실에 적합한 운동 노선을 정립하여 독자 노선을 걸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이었다. 언론계, 교육계 등에서 활동한 이들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민중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들의 이념적 지향성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해외 사회주의 운동계에서는 과거의 극좌주의 노선을 청산하고 보다 현실적인 민족해방운동노선을 정립하게 되었다. 즉 1930년대 후반의 재만한인조국광복회와 1940년대 초반의 화북조선독립동맹은 공통적으로 전민족의 역량을 총결집한 민족해방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민족협동전선론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노동소비에트국가 건설을 지양하고 장래 수립할 국가 형태를 ‘조선인민정부’라든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등 좌편향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국가건설 노선은,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를 일부 수용하면서 발전적 변모를 하였던 민족주의 세력의 국가건설 노선에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해방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연합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와 함께 좌우익이 이념적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7. 1940년대 국가건설기 민족주의 이념의 체계화

독립운동 시기 전개된 민족협동전선운동에는 좌우익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작업이 뒷받침되었다.

먼저 우익 민족주의자가 제시한 이념으로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제시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평등주의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다. 그것은 식민지 시기 중국 관내 우익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적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다. 1930년대 국내의 대표적인 비타협적 민족주의로서 ‘좌우익 병진론’을 주장하면서 민족협동전선론적 입장을 견지했던 안재홍은, 8·15 해방 이후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좌익 사회주의자의 경우, 민족협동전선론의 이론적 근거는 레닌(Vladimir Illich Lenin, 1870~1924)의 통일전선론이었다. 그러나 민족협동전선론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코민테른과 다른 독자 노선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여운형, 배성룡, 조봉암(曹奉巖, 1898~1959)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1920년대 민족협동전선운동에 참여했

던 제1세대 사회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은, 극좌노선을 걸었던 제2세대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1930년대 및 해방 이후에도 민족협동전선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8·15해방 이후 여운형은 박헌영(朴憲永, 1900~1955)과는 달리 대중 정당 노선을 견지하여 우익의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고, 조봉암과 배성룡도 역시 민족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했다. 특히 배성룡은 신형민주주의라는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성이 분명한 독자적 이념을 제시했다.

이들의 경우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는 사회주의이다. 그러나 당면의 민족적 과제가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 수립임을 중시한다. 따라서 계급혁명의 과제는 민족혁명 달성 이후 혹은 민족국가 수립 후 정책의 실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민족을 중시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념을 진보적 민족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 자신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식민지 시기 민족협동전선운동이 추진되면서 민족해방운동 진영에서는 장래의 신국가 체제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1930년대 이후 국가건설론에서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적 민주공화국 건설을, 사회경제적으로는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정책 실시를 방침으로 채택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또는 민주사회주의적 합일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성은 해방 이후 좌우연합을 통한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을 전개한 세력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해방 이후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통일운동을 주도한 중도파는 신국가건설 구상에서 미국 자본주의와 소련 공산주의를 지양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원리를 조화시켰다. 이것은 한민족의 주체적인 민족해방운동이 발전하면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에 준하는 이념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8. 해방 직후 신국가건설론의 성격

1945년 8·15 해방 직후 등장한 신국가건설론을 크게 유형화한다면, 우익의 부르주아민주주의론과 좌익의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양자를 조정하고자 했던 중도세력이 제기한 제3의 이론이 있었다. 좌익과 우익의 국가건설론은 미소 냉전체제 하에서 남북의 분단국가 수립을 정당화하는 이론이었다. 이에 비해 중도파의 제3유형의 신국가건설론은 개인에 따라 그 이름이 달랐지만, 미소 냉전체제에 의한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당시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립적인 두 이념의 화해와 융합을 추구함으로써 두 이념의 문제점을 지양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것은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을 최대의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이다. 또한 중도파가 제시한 제3의 민주주의론은 좌익과 우익의 민주주의론을 자본가나 노동자



그림 2 한국을 앞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1945년 11월)

라는 특정 계급에 의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는 제3의 민주주의론이 민주주의를 중심 가치로 설정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중심 가치로 설정하면서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성을 중합하고자 한 것이다. 한민족의 자주 독립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중심 가치로 설정했던 민족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했다고 하겠다.

III. 중국 민족주의와 민족운동²

19세기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에 의거하여 변방 민족과 서양인들을 야만 시하였다. 이에 서양과도 조공 체제 아래에서 교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서양 세력의 포함외교에 굴복하여 서구 중심의 국제사회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는 중국인들의 민족의식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청 왕조의 고급 관료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 자강을 도모하는 양무자강(洋務自強)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서양세력에게 패배한 뒤 서양문명이 유입되자 민중들은 이에 저항하였다. 홍수전(洪秀全, 1814~1864)은 1850년 무장 봉기하여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다. 태평천국운동을 평등주의로 민중을 결집시켰고, ‘멸만흥한(滅滿興漢)’을 내세우면서 청 왕조를 타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민족주의는 만주족을 타도하자는 한족 중심의 전통적인 중화주의에 의거한 것으로 근대적인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중국의 근대적 민족주의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한 이후 서양 제국주의 침략이 심화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강대함에 눈뜬 중국 지식인들은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황인종 전체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그들에 대항하는 부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만이 아니라 법과 사상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1898년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 량치차오(梁

2 중국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신승하(1991), 「중국의 민족주의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0~212쪽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啓超, 1873~1929)와 같은 변법파들이 등용되어 변법자강운동이 추진되었다. 무술변법(戊戌變法) 운동은 서태후의 쿠데타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본으로 망명한 Kang Youwei와 량치차오 등은 서구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여러 종족을 통합한 중국 민족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청조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헌법의 제정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쑨원[孫文, 1866~1925] 등이 이끄는 혁명파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하여 청조의 타도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만주족을 부정하는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의 전통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1년 신해혁명에 성공한 뒤에는 오족(五族: 한족, 몽고족, 만주족, 위그르족, 티베트족)의 평등을 내세워 민족주의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1912년 1월 민주공화정을 표방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신해혁명의 지도자 쑨원은 혁명의 완성을 위해 내각총리대신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와 협력하여 황제를 퇴위시키도록 하고 임시대총통을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하였다. 신해혁명의 지도이념은 쑨원이 제시한 삼민주의(三民主義)였다. 쑨원은 러일전쟁 후 일본에서 중국혁명동지회를 조직하고 반청혁명의 이념으로 만주족 축출과 중화 회복, 공화국의 수립, 토지소유권 평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념이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유럽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여 중국을 민주주의적이며 평등한 독립국가로 건설하고자 한 것이었다.³

3 체스타 탄 저·민두기 역(1977), 『중국현대정치사상사』, 지식산업사, 125~126쪽.



그림 3 쑨원

〈자료 1〉 쑨원의 삼민주의

내 생각으로 구미의 진화는 민족, 민권, 민생의 3대 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로마제국이 망한 뒤 민족주의가 일어나 구미와 여러 나라가 독립하였다. 전제정치가 발달되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민권주의가 일어났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전

제정치가 무너지고 그 대신 입헌정치가 들어섰다. 세계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지혜도 발전된다. 지난 백년 동안의 물질발달은 그 전의 천년 동안의 성과보다 낫다. 이에 정치문제 뒤에 경제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민생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민생주의가 20세기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쑨원, 「발간사」, 『民報』(1905).

중국에서 근대적 민족주의 관념에 기초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인 것은 1900년의 의화단(義和團) 운동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의화단원들은 농민들과 함께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수구파는 이를 양무운동에 대한 공격에 이용하기 위해 지원하였다. 이에 의화단은 '부청멸양(扶清滅洋)'의 기치를 내세우고 반제운동을 전개했으며, 청조 정부는 1900년 열강에 대해 선전을 포고하였다. 결국 의화단은 북경을 점령하고 열강의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하였다. 이후에도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반대운동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혁명운동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대전에 참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독일이 갖고 있던 중국의 이권을 넘겨받고자 하였다. 이에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 산둥 21개조를 중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 대통령의 제안 중에 비밀조약의 폐지 조항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베르사이유회의에서 산둥 21개조의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에 의해 거절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1919년 5월 4일 베이징[北京]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산둥[山東] 21개조 취소', '우리 칭따오[靑島]를 돌려 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했다. 학생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에는 상인과 노동자들도 파업 투쟁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신문화운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5·4운동을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문화운동의 요소를 띤 광범한 민중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베이징 정부는 베르사이유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5·4운동은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의 과제를 최초로 동시에 제기한 근대적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이었다. 5·4운동에는 러시아혁명과 한국의 3·1운동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5·4운동 이후 민족운동에서 대중적 조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쑨원은 일본에 있던 중화혁명당을 상하이[上海]로 옮기고 중국국민당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1921년 중국공산당을 조직하였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대립과 연합을 반복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을 이끄는 양대 세력이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설립 당초부터 민족혁명을 내세우고 국민당과의 합작을 표방하였다. 쑨원도 군벌과의 투쟁과 국민혁명을 위한 노선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1924년 국민당은

연소(聯蘇), 용공(容共), 노농원조(勞農援助)의 3대 정책을 결정하면서 공산주의자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였다. 1차 국공합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손문은 신삼민주의에 의거한 ‘건국대강’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삼민주의는 민주주의의 성격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대기업의 국유화와 토지혁명을 포함하는 등 평등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1920년대 중국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노동운동이 크게 성장하였다. 공산당의 지도에 의해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1925년 상하이에서 일본인 자본가들에 의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대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파업투쟁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어 5월 30일 학생들 노동자 지지 시위운동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삼파(三罷, 노동자의 罷業, 상인들의 罷市, 학생들의 罷課)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9월까지 계속되었다.

국공합작 시기 국민당은 5·30운동을 통해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자 1925년 7월 혁명정부인 광둥(廣東) 국민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듬해에는 북방의 군벌을 타도하는 북벌(北伐)을 추진하였다. 북벌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농민운동의 지원을 얻어 순조롭게 진행되어 1927년 상하이 노동자들의 지원 하에 상하이를 점령하였다. 장제스(蔣介石, 1887~1975)와 국민당 우파는 노동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좌파와 공산당원들을 체포하였다. 이어 난징(南京) 정부를 세워 좌파와 공산당의 연합정권인 우한(武漢) 정부와 대립하였다. 이로써 제1차 국공합작은 와해되었다.

1929년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북벌을 완성하여 전 중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반대파의 등장으로 공산당을 토벌하는 초공(剿共) 작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1년 9월 18일 일본의 만주침략이 자행되었다. 장제스는 먼저 초공작전을 통해 내부를 안정시킨 뒤 외

부의 적을 물리친다는 ‘선안내후양외(先安內後攘外)’ 정책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만주 군벌 장쉐량(張學良, 1898~2001)에게 일본에 대해 저항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일본은 1932년 1월 28일 상하이사변을 일으켰으며, 이후 점차 침략을 확대하였다. 중국 민중들은 국민정부의 무저항 정책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항일선언을 발표하면서 항일투쟁에 역량을 모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초공작전에 집중하였다. 중국 공산당도 쫓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은 현지의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한 유격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주 농촌의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조선인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무장부대에서는 조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무장부대들은 1935년 항일민족통일전선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는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조선인과 만주인 중심으로 구성된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까지 치열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 관동군의 토벌작전으로 세력이 약화되자, 잔존한 소수의 유격대원은 1941년 소련으로 넘어갔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의 토벌작전에 밀리면서도 북상(北上) 항일의 명분을 내세우며 1만리 대장정 끝에 1935년 10월 연안(延安)에 정착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장정 중인 1935년 8월 1일 ‘내전 중지’를 선언하고 일치단결하여 항일전쟁을 수행하자라는 ‘항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일찍부터 ‘일치항일(一致抗日)’을 주장했던 재야의 지식인과 학생들은 1936년 전국각계구국연합회를 결성하여 국공합작과 일치항일을 압박하였다. 이들은 국민당에게 ‘안내양외’ 정책의 포기를, 공산당에게는 소비에트국가 건설 노선의 폐기를 각각 요구하였다. 1936년 12월 만주 군벌 장쉐량은 시안(西安)에 온 장제스를 구급하고 내전 종식과 구국 항일을 호소하였다. 이에 장제스와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937년 2월 국민당은 내전 종식을 선언했고, 중국공산당에서는 소비에트혁명노선을 포기하였다.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여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1937년 9월 정식으로 국공합작이 조인되었다. 화북(華北)의 홍군은 국민혁명군 제 8로군(第八路軍)에, 화중(華中)의 유격대는 신사군(新四軍)에 편입되었다. 일본군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간선도로를 점령하면서 내륙으로 침입했다. 그러나 광대한 농촌과 산간 지역을 지배하지 못했다. 국민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벌면서 미점령 지역을 지키는 방어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침략자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인 부대는 팔로군과 신사군이었다. 이들 부대는 항일전쟁 수행과정에서 1940년에는 팔로군이 40여만 명, 신사군이 10여만 명으로 세력이 확대되었다.

1940년 1월 중국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은 '신민주주의론'을 발표하여 중국 혁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중국혁명은 일본제국주의 및 봉건지주를 타도하기 위한 반제반봉건 투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혁명 주체는 노동계급, 빈농 및 중농, 부르주아 및 지식인, 민족자본가의 4계급이라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4계급 연합에 의해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지향하는 신민주주의는 서구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소련의 소비에트 민주주의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이념은 중국공산당을 상징하는 가운데 별을 4계급의 별이 사방에서 감싸고 있는 오성홍기(五星紅旗)로 상징화되었다.⁴

4 장 세노, 프랑소와즈 르 바르비에, 마리-끌레르 베르제르 저·신영준 옮김(1982), 『중국현대사, 1911~1949』, 까치, 308쪽 ; 체스타 탄 저, 위의 책, 270~276쪽.

〈자료 2〉 마오쩌둥의 연합정부론

중국은 각당각파와 무당무파의 대표자를 단결시켜 민주적인 임시의 연합정부를 성립시켜, 민주적 개혁을 실행하며, 당면의 위기를 극복하여 전중국의 항일세력을 동원하고 통일하여 일본 침략자를 타파하는 것을 긴급필요로 한다. 그 후 광범한 민주적 기반 위에 국민대표대회를 개최하여 한층 더 광범위한 각당각파와 무당무파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연합적 성격의 민주적 정식 정부를 성립시켜 해방 후의 전국 인민을 이끌어 중국을 하나의 독립된 자유, 민주, 통일, 부강의 신국가로 건설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결과 민주주의 노선을 밟아 침략자를 타파하여 신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1945년 4월)

장제스는 1943년 ‘중국의 명운’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신중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이 미국 및 영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폐기한 것을 국민혁명의 성과이며 건국 공작의 참된 시작으로 민족주의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과제는 민권 즉 민주주의와 민생주의라고 하였다. 곧 다가올 건국 사업은 유교적 도덕과 윤리의 회복을 통한 대국으로서의 국력 신장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항일전쟁 전략과 민주적 평등사회 건설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마오쩌둥이 1945년 발표한 ‘연합정부론’은 신중국의 건설이 중국의 제 계급, 제 당파의 연합에 의한 항일전쟁을 통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냈다.⁵

1942년 1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과 필리핀을 기습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장제스는 대일 선전을 포고하였으나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미국 등 연합국과의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군에 대

5 姫田光義, 阿部治平 외, 편집부 옮김(1985), 『중국근현대사, 아편전쟁에서 1982까지』, 일월서각, 362~364쪽.



그림 4 장제스와 마오쩌둥(충칭, 1945년 8월)

한 무장 항쟁은 주로 공산당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다. 1943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수세에 몰린 이후, 항일전쟁의 주도권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팔로군, 신사군, 그리고 민병들에게 넘어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 국제사회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정부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신중국 건설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 내전의 결과 공산당이 승리

하여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패전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건너가 중화민국을 건설하였다.

IV. 베트남 민족주의와 반제투쟁

베트남은 북쪽에 강대국 중국과 접하여 고래로 중국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받았다. 19세기에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8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과 미국이 연이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계속된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베트남은 외침에 대해 지속적인

로 저항하면서 민족적 자주성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을 북부의 톤킨, 중부의 안남, 남부의 코친차이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는데, 국제법 상으로 코친차이나는 식민지, 안남과 톤킨은 보호령이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분할 통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에서는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단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함께 식민주의자들의 분할통치로 조장된 지역주의, 종족주의, 종교적 대립 등으로 발생한 민족 내부의 대립을 극복하여 민족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 점에서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한국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근대 이전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강대국 중국과 대립 혹은 협조하면서 민족자주성을 견지했던 점이 그러하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분할 통치와 미소 냉전체제로 인한 한국의 국토 분단은 베트남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것이다.

베트남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서 크게 보아 전통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3단계를 거치며 발전하였다. 전통주의 운동은 1860년대부터 1900년까지로 유교적 지식층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저항운동으로서 한국의 의병전쟁과 유사한 것이었다. 베트남은 프랑스 침략 이전 응웬[阮] 왕조(1802~1945)에 의해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응웬 왕조는 프랑스의 연속적인 군사적 침략에 저항했으나 1884년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빼앗겼다. 프랑스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근대 문명을 베트남에 이식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펼쳤다. 왕조가 굴복한 이후 프랑스에 대한 저항은 유교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중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천주교와 서구 문명의 유입에 반대하면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촌락공동체 문화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항의 이념은 군주에 대한 충성에 머물렀고, 근대적 민족국가 의식은 박약하였다.

전통주의적 민족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1885년에 시작하여 1896년까지 지속된 근왕운동이었다. 주전파 관리들은 어린 황제를 옹립한 뒤, 황제를 모시고 수도를 탈출하여 ‘근왕령(勤王令)’을 발표했다. 유교적 충군 의식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호소하는 ‘근왕령’에 호응하여 전국의 유교 지식인층과 민중이 저항운동에 참여하였다. 근왕운동은 1888년 11월 황제가 프랑스군에 체포된 뒤에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전통적인 충군 의식에 머물러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지역적 연대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베트남에서는 중국을 통해 서구의 근대 사상을 수용하여 봉건사회를 개혁하려는 개명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근왕운동의 과정에서 생겨난 지식인들로 유교적 소양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전래된 새로운 서적을 통해 서양 근대사상을 수용하였다. 중국의 양무운동과 변법운동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Kang Youwei와 Liang Qichao는 베트남 지식인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에 의해 베트남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문신들이 주도한 전통주의적 근왕운동이 봉건적인 왕조 국가로의 회복을 추구한 데 비해 이들은 서구의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에 의거한 근대 민주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⁶

초기 민족주의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는 판 보이 쩌우[潘佩珠, 1867~1940]와 판 쩌 쩌[潘周楨, 1871~1926]이었다. 판 보이 쩌우는 프랑스에 저항하는 혁명주의자였지만, 입헌군주제를 옹호했다. 반면 판 쩌 쩌는 프랑스와 타협하면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판 보이 쩌우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 동양 일본이 서양 러시아에게 승리한 것에 고무되었다. 이에 일본으로 가서 활동하였다. 그는 1905년 량치차오와 만나 베트남의 식민지화 과정에 대해 이야

6 송정남(2010), 『베트남 역사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377쪽.

기를 나눈 뒤, 『월남망국사』를 저술했다.⁷ 베트남인의 민족적 각성을 촉구한 그의 책은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의해 번역 소개되었다. 그는 일본을 배워야 할 근대 국가의 모델로 생각했다. 이에 베트남 유학생을 일본으로 오게 하여 근대 문물을 배우도록 하는 ‘동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입헌군주제 하의 임시정부를 지향하는 유신회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유신회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면서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는 독립운동 단체였다. 그러나 일본의 도움을 받아 전개하고자 한 독립운동은 1908년 프랑스가 일본과 협상하여 베트남인들이 추방됨으로써 중단되고 말았다. 일본에서 추방된 판보이 쩌우는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고 1912년 유신회를 해산하고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광복회는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여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주공화제를 지향하였다. 광복회에 의한 무장항쟁이 몇 차례 전개되었으나 자금난과 대중 조직이 미약하여 뚜렷한 활동은 하지 못했다.⁸

판 주 찐은 프랑스에 대한 무력 투쟁을 비판하면서 프랑스와의 협조 아래 근대적 교육과 사회개혁을 통해 베트남 국민에게 민권과 자주의식을 갖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⁹ 그는 1907년 일본의 게이오의숙을 모방하여 하노이에 도쿄의숙을 만들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러한 개량주의운동조차 허용하지 않아 도쿄의숙을 1년도 되지 않아 폐쇄시켰고, 그를 프랑스로 데려갔다.¹⁰ 판 주 찐은 개명한 애국지사들과 함께 학교 설립, 상공업 발전, 풍속 개

7 Hue-Tam Ho Tai, *Radicalism and the Origins of the Vietnamese Revolution*, 클라이브 크리스티 편저·노영순 옮김(2004),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심산, 69~70쪽.

8 김기주(1991), 「베트남의 독립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10, 91~102쪽.

9 김기주, 위의 글, 107쪽.

10 판 쉼 수(2005년 8월 11일~12일),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제도에 대한 투쟁과 독립의 쟁취」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광복 60주년 및 독립기념관 개관 18주년 기념 제19회 독립운동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이하 독립기념관 발표문으로 약칭], 53~54쪽.

혁, 봉건 관습 타파 등을 주장하면서 유신운동을 전개했다. 유신운동은 부분적으로 프랑스에 무장으로 저항하는 의병이나 농민시위와 결합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식민 정부는 지도자들을 체포 투옥하고 학교와 회사들을 파괴하는 등 유신운동을 탄압하였다.¹¹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베트남의 민족운동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초기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베트남 국내에서는 프랑스의 신식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1910년대 서구의 새로운 사상의 유입으로 민족자본가 중심의 민족주의운동이 주도하였지만, 점차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대중에 기초한 공산주의 운동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온건한 개량주의자들은 합법적 공간 내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타협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무력 투쟁을 위한 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1924년 6월 광둥(廣東)에서 총독 폴 메르랭(Paul Merlin)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총독 암살에는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투쟁은 베트남인들의 민족해방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에 힘입어 1927년 하노이에서 베트남국민당이 결성되었다. 중국의 국민당을 모델로 삼은 베트남국민당은 쑨원의 삼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였으며, 민족혁명을 추구하면서 피압박민족의 민족운동과의 연대를 선언하였다. 지식인, 자본가, 학생, 군인 등 엘리트 위주의 조직이었고, 대중적 조직을 결여하였다. 요인 암살과 무장 봉기와 같은 혁명적 투쟁 노선을 취하였다. 1930년 프랑스에 대한 무장 투쟁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¹² 이로써 민족주의 운동은 쇠퇴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혁명

11 송정남, 앞의 책, 381~383쪽.

12 이 사건으로 프랑스 식민정부에 체포된 베트남인은 1,490명이었는데, 이 중 사형 1명, 10년형 이상 10명, 10년형 이하가 206명이었다. 송정남, 앞의 책, 400쪽.

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¹³

베트남에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고 공산당을 창건하여 이끈 지도자는 응우옌 아이 꾸옥(후에 호치민)이었다.

가난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8세에 프랑스 파리로 가서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하여 최초의 베트남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1924년 중국 광둥으로 온 그는 이듬 해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Revolutionary Youth League of Vietnam)를 조직하였다. 중국의 국공합작 시기 중국에서 공산주의 베트남 청년들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 단체는 민족해방, 노농정부 수립, 토지 혁명, 민족자결권 쟁취, 베트남 공산사회 설립을 목표로 삼은 공산주의 단체였다. 이 단체는 이전과는 달리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이념 중심으로 조직되어 대중적 조직과 해외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192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된 노동자 계급과 전국 농촌의 농민층에 기반을 두고 민족혁명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민족혁명 노선을 고수하려는 주장과 공산당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이에 공장 노동자가 다수인 북베트남위원회에서는 1929년 인도차이나공산당을 조직하였고, 민족혁명 고수를 주장했던 중앙에서는 남부 조직을 중심으로 안남공산당을 조직하였다. 코민테른에서는 분열된 공산당의 통일을 지시하여 호치민은 1930년 2월 두 공산당의 지도자를 홍콩으로 불러 베트남공산당으로 통합시켰다. 그는 남은 공산당 조직에 이를 통합시켜 10월 인도차이나공산당(Indochinese Communist Party)으로 개칭하였다.¹⁴ 이후 베트남의 독립투쟁은 1945년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이 조직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¹⁵

13 김기주, 앞의 글, 108~111쪽 ; 송정남, 앞의 책, 392~400쪽.

14 김기주, 앞의 글, 111~115쪽.

15 팜 꾸옥 수, 앞의 글, 60쪽.

〈자료 3〉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정치테제

인도차이나 혁명의 특징과 과업

현재의 반식민 투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전사회주의적이고 근대적인 경제체제를 갖춘 독립된 베트남 인도차이나를 건설하려는 단계에 있지만, 이는 노동자 농민 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아직 민족주의적 엘리트 세력이약하고, 투쟁을 이끌고 있는 지주 계급은 이기적이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의 기본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 지주 제도를 타도한다.
2. 노동자 농민 정부를 건설한다.
3. 외국인과 현지 지주의 모든 토지와 종교 집단의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중농과 빈농에게 배분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노동자 농민 정부에 귀속시킨다.
4. 외국인 자본가들의 모든 대기업을 국유화한다.
5. 현재의 모든 세금과 인두세(강제노동)를 폐지하고 누진세를 적용한다.
6. 8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고 노동자와 고통받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7. 인도차이나는 완전히 독립된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인정한다.
8. 노동자 농민 군대를 조직한다.
9. 남녀평등을 이룬다.
10. 소비에트연방을 지지한다.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운동과 식민지와 반식민지(중국)에서의 혁명운동과 연대를 구축한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정치 테제」, 1930년 10월)

공산당 창립 이후 비합법 노동조합들이 각지에서 조직이 되었다. 공산당의 지도를 받은 조직 노동자들은 1930년 베트남 북부의 두 성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그들은 비록 3개월의 단명이지만, 두 개의 성에서 프랑스 식민 지배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를 진압한 프랑스 식민 통치 당국은 공산당과 노동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1936년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이 내각이 탄생하여 공산당을 합법화할 때까지 공산당은 시련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¹⁶

1940년 9월 일본군은 인도차이나를 침략하여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이를 이용하여 북부와 남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프랑스 군대에 의해 진압당하였다. 1931년 홍콩에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소련의 모스크바에 머물렀던 호치민은 1941년 2월 중국을 거쳐 귀국하였다. 그의 지도에 의해 민족해방, 토지개혁, 유격 근거지 건설 등을 목표로 한 통일전선 조직인 베트남독립동맹[약칭 Viet Minh 또는 월맹]이 결성되었다. 일본은 프랑스군을 격퇴하였으나 식민지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이중의 적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공산주의자들만에 의한 무장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민족의 제 계층을 연합한 조직적인 저항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베트민은 구국민족해방을 목표로 내세워 민족주의자들도 끌어들이면서 각종 구국회(救國會)를 만들어 대중조직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각 지역에 해방구를 설치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1944년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무장봉기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호치민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정치 활동을 중점을 둔 베트남해방군전선대를 창설하였다. 이것이 후일 월맹군의 모태가 되었는데, 선전 선동 활동에 주력하면서 대중조직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¹⁶ 김기주, 앞의 글, 115쪽.

1945년 3월 일본은 프랑스 식민통치 권력을 무너뜨리고 바오다이[保大, 1913~1997]를 국왕으로 한 괴뢰정부를 수립하였다. 베트남은 즉각 봉기하지 않고 각 지역에 해방위원회를 조직했고, 무장세력을 통합하여 베트남해방군을 결성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이어 소련이 대일 전쟁을 선언하였다. 일본의 패배가 확실하게 되자 인도차이나공산당은 전국회의를 열어 일제봉기를 결정하였다. 8월 16일에는 베트남 주최로 국민대회를 열어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민족해방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어 북부의 하노이, 중부 안남의 후에, 남부의 사이공을 장악한 뒤, 9월 2일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대표로 한 베트남민주공화국 독립이 선포되었다. 이 8월혁명으로 베트남은 거의 1세기에 걸친 식민지배를 끝내고 민주공화제에 의한 독립국가 되었다.¹⁷

V. 타이완 민족운동

청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 타이완(臺灣)에는 중국인들이 이주하여 토착민과 함께 거주하였다. 19세기 후반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에 대해 청 나라는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1884년과 1885년에 걸친 청불전쟁 시기 프랑스 함대가 타이완 북부를 공격하자 중국은 타이완을

¹⁷ 김기주, 앞의 글, 115~119쪽 ; 팜 꾸옥 수, 앞의 글, 62~63쪽.

성으로 승격시키고 방위를 위해 류명전(劉銘傳)을 순무로 파견하였다. 이후 류명전은 타이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대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1895년 청일전쟁 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의 결과 중국은 타이완을 일본에 양도하였다. 1895년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타이완인들은 타이완민주국을 수립하여 일본으로의 할양을 거부하면서 5개월 동안 일본군에 저항하였다. 타이완총독부는 1895년 10월 타이완 전역이 평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타이완은 1945년까지 60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¹⁸

타이완민주국이 와해된 이후에도 타이완인들의 조직적인 무장저항은 1902년까지 계속되었다. 개별적인 무장항일운동은 1907년까지 계속되었다. 1895~1902년까지 1단계의 무장항일투쟁의 주체 세력은 지주, 기업가 혹은 청년층이었다. 북부 지역에서는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결집하여 일본인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했고, 중남부 지방에서는 지주 계급이 농민들을 이끌면서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적 연계가 없었고, 일본군의 무자비한 토벌작전으로 진압되었다. 일본군은 항일 인사들을 회유하여 투항을 권유하고는 투항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898년부터 1902년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다가 피살된 인원이 1만 명을 넘을 만큼 타이완인들의 항일투쟁은 격렬하였다.¹⁹

일본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적 침략이 확대되면서 타이완 민중들의 항일 의식이 날로 강화되었다. 또 중국의 신해혁명의 성공에 자극받아 항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중남부 지역을

18 林德政(2005년 8월 11일~12일), 「일제강점기 대만의 항일투쟁」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독립기념관 발표문, 177~178쪽.

19 林德政, 위의 글, 179~180쪽.

중심으로 10여건의 항일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민족혁명적 성격을 띤 것도 있었고, 민중에 의한 생존권 투쟁도 있었다. 타이완총독부의 엄격한 통제로 대부분 계획 단계에서 검거되었고 소규모 항일운동이 많았다. 그러나 마오리[苗栗] 사건과 자오바니엔[礁吧岬] 사건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마오리 사건은 여러 건의 항일독립운동에 마오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사건의 중심 지도자인 루어푸싱[羅福星]은 중국 광둥 출신으로 어려서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타이완의 마오리로 이주하였다. 일제의 타이완 식민통치에 불만을 느낀 그는 광둥으로 돌아가 1911년 신해혁명 직전에 일어난 황화강 기의에 참여했고, 쑨원이 이끄는 동맹회에 가담했다. 이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동남아 화교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912년 타이완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타이베이와 마오리를 오가며 동맹회와 혁명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와 항일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탄로되어 주모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루어푸싱은 농가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하려 하다가 1913년 체포되어 1914년 순국하였다.

이 외에도 1913년에는 리아치[李阿齊]가 타이난[臺南]의 관띠마오[關帝廟]에서 의거를 계획했고, 1914년에는 루어시우토우[羅臭頭]가 타이난의 류지아[六甲]에서 지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계획 단계에서 체포 검거되었다.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타이완에서도 여러 인사들에 의해 항일투쟁이 계획되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에 일제는 항일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여 300명 이상의 항일인사를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였다.²⁰

1915년까지 타이완 민중의 항일투쟁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가장

20 임택정, 위의 글, 180~184쪽.

광범한 지역에서 전개된 최대의 사건은 자오바니엔 사건이었다. 이것은 시라이안[西來庵] 사건 혹은 위청팡[余清芳]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투쟁의 주요 지도자는 위청팡[余清芳], 루어쥔[羅俊], 지양땡[江定] 3인이었다. 일찍부터 항일투쟁에 참가했던 이들 3인은 서로 연락하여 1915년 가을에 거사할 것을 계획하였다. 종교조직을 기반으로 무장 세력을 양성하고 농민과 중하층민을 대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운동은 타이베이[臺北], 타이쑹[台中], 타이난[台南]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1915년 7월 타이난의 자오바니엔에서 의병대는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교전했으나 의병대는 일본군에 밀려 산속으로 퇴각했다. 일본군의 포위 공격으로 8월 지도자 위청팡이 체포되어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으로 2,000명이 체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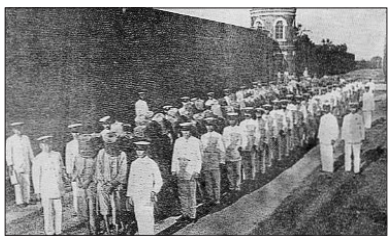


그림 5 자오바니엔 사건 피고들이 타이난 감옥에서 임시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

었으며, 재판 결과 866명이 사형, 45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검거된 인사들에 대한 추가 재판이 열려 37명이 사형, 1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2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90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²¹

1930년에는 타이완의 원주민인 고산족에 의한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타이완 중부의 산악 지대에 위치한 우서[霧社]에는 타이야[泰雅]족이 살고 있었다. 산악 지역 원주민들은 일제의 강제 노역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1930년 7월 고산족의 수령 모나 루파오[莫那 魯道]의 아들 혼례에 일본 순경이 풍속을 무시한 것을 계기로 무장 봉기하였다. 모나 루파오의 지도 아래 우서 주민 300여명은 파출소, 학교, 우체국 등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

21 임택정, 위의 글, 185~187쪽 ; 주완요 지음, 손준식 신미정 옮김(2003),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128~134쪽.

무장하고 일본인 134명을 처단하였다. 원주민들은 일본 군경의 공격에 산악 계곡으로 퇴각하면서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전투기로 독가



그림 6 타이완 고산족의 추장 모나 우따로

스를 살포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진압하였다. 우서의 원주민은 1,399명이었는데, 진압과정에서 276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자살하였다. 나머지 생존자들은 일본에 의해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일본의 고산족에 대한 야만적인 토벌 작전은 일본인 자신들도 식민통치사의 오점으로 인정하여 타이완 총독과 민정장관을 면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²²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유학생과 엘리트를 중심으로 정치운동을 통해 티아완인의 권익 신장과 자주권 획득을 목표로 한 개량주의적 운동이 등장하였다. 1918년 타이완 내의 지식인들은 린셴탕(林獻堂)의 지도 아래 타이완에 대한 식민통치를 규정한 악법인 '삼일법(三一法)'을 철폐운동을 전개하였다.²³ 그들은 식민지법을 철폐하고 타이완이 일본 헌법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20년 11월 도쿄의 타이완 유학생들은 신민회를 결성하여 식민지 자치 의회로서 타이완의회 결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1921년 설립된 타

22 임택정, 앞의 글, 187~188쪽; 주완요 지음, 앞의 책, 135~145쪽.

23 1896년 일본은 법률 제64호 즉, '타이완에서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계속 연장되다가 1906년 12월 이를 대체하여 '삼일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타이완은 일본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 되었고, 타이완 총독은 입법, 행정, 사업, 군사 상의 최고 권력을 갖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다. 이 법에 의해 타이완에 대한 일본 총독의 무단적인 폭력적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완문화협회도 타이완의회 설립 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제국의회에 청원서는 매년 제출되어 1934년까지 15차례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린셴탕 등은 1934년 운동의 종결을 선언하였다.²⁴

1927년 타이완문화협회의 우파 인사들이 탈퇴하여 별도로 타이완민중당을 창당하여 최초의 정당을 조직하였다. 타이완민중당은 장웨이쉘이(蔣渭水)의 지도 아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급진적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에 1930년 린셴탕 등의 온건파들이 탈당하였다. 결국 타이완민중당은 1931년 강령과 정책을 개정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운동을 목표로 삼고, 총독 전제정치 반대, 제국주의 침략정책 반대, 제국주의 전쟁 반대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타이완민중당이 항일 독립운동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자 일제는 이를 해산시켰다.²⁵

1930년 타이완민중당을 탈당한 우파인사들은 타이완자치연맹을 결성하여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1935년 타이완총독부가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제한적인 자치를 허용하자 이에 참여했으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자동 해산되었다.

1928년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공산당이 결성된 후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에 침투하여 노동운동을 지도하면서 조직 활동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1931년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로 이렇다 할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²⁶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1940년대에 타이완에는 지도적인 항일독립운동 단체가 없었다. 이에 1945년 10월 25일, 일본제국의 패망 후 연합국의 합의로 타이완 섬과 펑후(澎湖) 제도가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24 임택정, 앞의 글, 193~197쪽.

25 임택정, 앞의 글, 198쪽.

26 임택정, 앞의 글, 199쪽.

VI. 필리핀 민족운동

필리핀은 마젤란(Ferdinand Magellan, 1480~1521)에 의해 ‘발견’되었다. 1565년 스페인 군대가 상륙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후 380여 년간 필리핀은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330여년의 스페인 식민 통치 기간 필리핀의 농민들과 회교도들은 끊임없이 저항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와 남아메리카에서 여러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자 필리핀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독립운동이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는 필리핀계 가톨릭 성직자, 스페인 유학생, 농민들이었다. 초기의 대표적 지도자는 호세 리살(Jose Rizal, 1861~1896)이었는데, 1892년 필리핀민족동맹을 조직하여 사회개혁운동을 지도하다가 체포되었다. 보니파시오(A. Bonifacio)와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1869~1964)는 1896년 민족주의 비밀결사 카티푸난(Katipunán)을 조직하여 스페인 지배세력, 성직자와 대지주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아기날도는 홍콩으로 망명하였다. 이에 연루된 혐의로 호세 리살이 사형을 당하자 필리핀인들이 대규모 봉기하였다. 이에 힘입어 아기날도는 홍콩에서 18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자 아기날도가 이끄는 필리핀 혁명군은 미국을 도와 스페인군을 물리쳤다. 이에 필리핀은 독립을 선포하고 혁명정부를 구성하고 아기날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헌법을 제정하고 1899년 1월 필리핀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인정

하지 않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필리핀 혁명정부는 1899년 2월부터 미국과 격렬한 독립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1901년 3월 아기날도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되었고, 감금된 상태에서 그는 교전 종식을 선언하고 미국의 지배권을 승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무장 저항은 계속되었는데 1902년 4월에 이르러서 종결되었다.²⁷ 이후 미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은 일부 게릴라에 의한 산발적 투쟁에 머물렀다.

미국은 필리핀의 식민 지배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미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탄압을 가하는 대신, 자치를 약속하면서 급진주의자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에 1903년에는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고, 1907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필리핀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한적으로나마 정치활동이 허용되면서 1906년 완전하고 즉각적인 독립을 목표로 한 민족당이 결성되었다. 민족당은 미국과의 합병을 주장하는 연방당을 매국당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연방당은 미국과의 합병이라는 정강을 폐기하고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들 세력들은 민족운동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다가 협력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인정받기 위한 장기적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²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민족지도자들은 미국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8년 필리핀 의회는 필리핀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독립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미국에 독립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이었는데, 1919년 초부터 1935년 필리핀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사절단

27 권오신(2000), 『미국의 제국주의 :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문학과 지성사, 27~67쪽.

28 권오신, 위의 책, 113~114쪽.

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사절단의 독립 요구는 미국에 의해 번번이 거절되었다. 이에 1927년 필리핀의회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식민지 총독과 미국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필리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1930년 독립의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2차례에 걸쳐 열린 독립의회에서는 독립 결의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케존(Manuel L. Quezon)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미국에 다시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²⁹

1930년대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필리핀에서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낀 농민 단체들은 필리핀의 독립을 지지하였다. 이 결과 미국에서는 필리핀을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독립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34년 7월 선거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어, 1935년 2월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헌법에 의해 시행된 선거를 통해 11월 케존 대통령과 부통령 오스메나(Sergio Osmena)가 이끄는 독립 과도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³⁰ 이로써 식민지 총독 체제는 종식되었다.

미국의 협조 아래 독립을 준비하고 있던 필리핀 과도 정부는 일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4시간 뒤 필리핀을 기습 공격하였다. 곧이어 1월 3일 일본군은 마닐라를 점령하였다. 일본의 공격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지원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필리핀 인들을 대일전쟁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필리핀 정규군과 예비군은 미국군에 통합되어 대일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42년 5월 필리핀은 일본군에 의해 완전 점령당하였다. 케존 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망명하

²⁹ 권오신, 위의 책, 184~192쪽.

³⁰ 권오신, 위의 책, 211~214쪽.

였다. 필리핀은 다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³¹

일본은 필리핀을 백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군정을 실시했다. 일본은 필리핀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군정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독립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1943년 6월 일본 군정 당국에 의해 신필리핀봉사대 내에 라우렐(Laurel)을 의장으로 하는 필리핀독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어 9월 필리핀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단원제로 구성된 국회에서 공화국 대통령으로 라우렐을 선출하였다. 10월 라우렐 대통령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군정은 형식적으로는 종식되었지만, 사실상의 통수권은 일본군에 있어 필리핀은 일본군의 통제를 받았다.

일본은 1944년 9월 위성정부에 대해 대미 대영 선전포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라우렐대통령은 명목상의 선전포고만 하였고 군을 징집하지 않았다. 또 선전포고안의 승인을 위한 국회가 소집되었으나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불참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필리핀 정부가 전쟁 참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일본은 친일적인 필리핀애국동맹을 조직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³²

필리핀인들은 일본의 군사점령에 대해 무장으로 저항하였다. 게릴라들의 무장 투쟁은 미군과의 협력 속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에 망명한 필리핀 정부는 1944년 8월 케존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는 오스메나가 이끌었다. 망명 정부의 선전 활동은 필리핀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을 고무하였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은 1944년 10월 필리핀에 진주한 이후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끝에

³¹ 권오신, 위의 책, 254~264쪽.

³² 권오신, 위의 책, 272~277쪽.

1945년 2월 마닐라를 탈환하였다. 패퇴한 일본군은 라우렐과 위성정부 내 각 요인을 억류하였다가 일본으로 데려갔다. 라우렐은 일본이 항복하자 정부를 공식으로 해산했다.

미국에 망명 중인 정부 요인들은 미군과 함께 1944년 10월 레이테만(Leyte Gulf)으로 귀국하여 1945년 2월 27일 독립과도정부가 마닐라에서 재수립되었다. 이로써 군사령관으로 필리핀 정부를 대표하던 맥아더 사령관은 과도정부 대통령인 오스메나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1945년 7월 4일 잔여 일본 세력이 미군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필리핀은 완전히 해방되었다.³³

과도 정부는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국가로서의 기초 작업을 추진하였다. 해방 후 감옥에서 풀려난 로하스(Manuel Roxas, 1892~1948)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민족지도자로 부각되었다. 1946년 4월 23일 시행된 선거에서 로하스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를 거두어 로하스가 대통령에, 쿼리노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5월 28일 로하스는 과도정부의 마지막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하자 로하스가 필리핀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필리핀은 380년간 지속된 식민통치를 벗어나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다.³⁴

〈자료 4〉 필리핀의 독립을 승인한 미국과의 조약

TREATY OF GENERAL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July 4, 1946)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ing animated by the desire to cement the relations of close and long friendship

³³ 권오신, 위의 책, 277~290쪽.

³⁴ 권오신, 위의 책, 292~305쪽.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ovide for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s of July 4, 1946, and the relinquishment of American sovereignty over the Philippines Islands,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1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s to withdraw and surrender, and does hereby withdraw and surrender, all rights of possession, supervision, jurisdiction, control or sovereignty existing and exerci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nd over the territory and the people the Philippine Islands, except the use of such bases, necessary appurtenances to such bases, and the rights incident thereto,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may deem necessary to retain for the mutual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urther agrees to recognize, and does hereby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s a separate self-governing nation and to acknowledge, and does hereby acknowledge, the authority and control over the same of the Government instituted by the people thereof,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Signed an Manila this fourth day of July one thousand nine hundred forty-six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MANUEL ROXAS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AUL V. MCNUTT

VII.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독립운동

근대 이전 인도네시아 지역에는 통일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라는 근대 국가의 탄생은 근대 이후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는 여러 종족을 통합하여 인도네시아라는 근대 국가로 통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의 엘리트 집단들은 제국주의 세력과 타협하고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독립을 성취하였다.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은 전통적 통일 국가가 제국주의와 투쟁하면서 혁명적 방법으로 독립을 성취한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³⁵

1800년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가 점령하고 있던 전 지역을 네덜란드령 인도(Netherlands Indies)라고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식민통치를 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토착 왕국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자바(Jawa) 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이에 190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는 전 지역을 네덜란드 식민지로 만들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침략에 대한 저항은 토착 왕국들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농민들에 의한 식민지 농업 정책에 대한 산발적 저항이었다. 1825년부터 5년간 지속된 자바 전쟁은 20만의 자바인들이 희생된 격렬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19세기의 반침략운동은 전통적인 왕조나 종교에 의한 저항에 머물렀고, 근대적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주의운동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대적 민족운

35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신윤희(1991),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독립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10』, 154~181쪽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동은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정복이 완결되는 시점에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때부터 종교와 지역을 넘어선 민족국가 단위로 인도네시아인들이 결집하게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에는 네덜란드와 중국의 이주민이 등장하여 새로운 사회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적 사고를 갖고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네덜란드령 인도에서 토착인들과 종족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토착인들은 반네덜란드인, 반중국인 감정 속에서 식민지 당국의 차별적 정책에 대항하면서 민족 의식을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네덜란드 식민통치 당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윤리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은 토착민에 대한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고 그들에게 관료로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으로 서양의 근대 교육을 받은 토착 엘리트 계층이 출현했고, 이들이 독립운동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이 싹트게 되었다.

자주적이고 근대화된 인도네시아 건설을 주장한 최초의 민족주의자는 까르띠니(Raden Adjeng Kartini)였다. 자빠라(Japara) 주지사의 딸이었던 그녀는 여성해방, 인도네시아인과 유럽인의 동등한 인권, 식민지 착취 종식, 전통 비판을 주장했다. 까르띠니의 영향을 받아 1908년 자바의 학생들이 부디 우토모(Budi Utomo)라는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했다. 부디 우토모는 자바어로 마음을 뜻하는 부디(budi)와 으뜸을 뜻하는 우따마(utama)의 합성어인데, ‘탁월한 지성과 성격 또는 문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³⁶ 1911년에는 네덜란드에서 그녀의 정신을 따르는 유학생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단체들은 식민지배 타도와 인도네시아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계몽적 문화운동 조직이었다. 1911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중정당이

36 양승윤 편저(2010), 『인도네시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74~275쪽.

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상인연합이 도시의 상인 계급에 의해 만들어졌다. 1912년 이슬람연합(Sarekat Islam, 회교연맹)으로 이름을 바꾼 이 조직은 근대화된 이슬람교운동에 의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17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화하고 식민통치에 대한 공격하자 창립의 주역인 상인과 중소기업가들은 조직을 떠나게 되었다. 게다가 1920년 공산주의자들이 인도공산당(Perserikatan Komunis India)을 조직하자 이슬람연합은 조직 내에서 공산당원들을 축출하였다. 추방된 공산주의자들은 1927년 서부 자바와 수마트라(Sumatra)에서 혁명을 기도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공산당 활동은 금지되어 1945년까지 공산주의자 운동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슬람연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었고, 지식인, 관료, 상인, 노동자, 농민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가했다. 그러나 타협적 노선을 취했고, 합법적 운동을 고집하였다. 유럽인이나 중국인에 대항하여 토착민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단체에 머물러 정치적 독립운동단체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민족독립운동은 새롭게 등장하는 학생운동 출신의 엘리트에게, 종교 교육운동은 1912년 결성된 무함마디아(Muhammadiyah)와 전통적 회교 단체인 나흐다툴 울라마(Nahdatul Ulama)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³⁷⁾

192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이슬람, 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 세 요소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반동공과대학을 졸업한 수카르노(Sukarno, 1901~1970)도 그

37 무함마디아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1912년 아흐마드 다흘란(Ahmad Dahlan, 1868~1923)이라는 이슬람교 지도자에 의해 조직되었다. 나흐다툴 울라마는 '종교학자들의 융성'이라는 뜻으로, 1926년 정통 이슬람 종교학자인 하심 아사리(Hasjim Asjari)에 의해 조직되었다. 양승운 편저, 위의 책, 289, 301쪽.

러한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 민족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1927년 7월 그는 반동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민족주의자연합(Peserikatan Nasional Indonesia)을 결성했다. 이 조직은 1928년 인도네시아국민당(Partai Naoisnal Indonesia)으로 개칭되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독립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당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청년지도자 수카르노가 자신이 이끌던 반동연구회와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정당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당이었다.³⁸ 이를 계기로 독립을 목표로 한 여러 정치조직들이 출현하고 연합전선도 결성되었다.

1928년 전 도서를 대표한 청년조직들이 집결하여 “하나의 조국-인도네시아, 하나의 민족-인도네시아인, 하나의 언어 인도네시아어”라고 하는 ‘청년선언’(Sumpah Pemuda)을 발표하였다.³⁹ 여기에서는 흥백기를 국기로, ‘위대한 인도네시아’를 국가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결집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회교연맹이 인도네시아회교연합당(Partai Sarekat Islam Indonesia)으로 개편되었고, 부디우토모는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대인도네시아당(Partai Indonesia Raya)을 출범시켰다.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운동 정당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자 네덜란드 식민 통치 당국은 1933년 8월 수카르노를 반국가혐의로 체포 구금하였다. 이후 수카르노를 비롯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먼 섬으로 유배되어 일본 점령시까지 활동이 금지되었다.

38 양승윤 편저, 위의 책, 310쪽.

39 부디 우토모는 인도네시아인의 근대적 계몽을 위해 네덜란드 언어의 교육과 보급을 중시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네덜란드어로 인도네시아인들의 다수를 결집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토착어를 국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청년단에서는 1928년 자바어는 나이, 계급, 지위에 따라 표현이 달랐기 때문에 말레이어를 인도네시아국어로 채택하였다. S. Takdir Alisjahbana, *Indonesia and Cultural Revolution*, 클라이브 크리스티 편저 (2004),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심산, 84~87쪽.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운동은 온건하고 타협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1935년 보수정당들의 연합인 대인도네시아당이, 1937년에는 온건좌파연합인 인도네시아인민운동이 네덜란드가 토착인들을 제국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국민협의회 참여를 시도했다. 국민협의회에서는 독립 대신에 자치권을 네덜란드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당국은 자치권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1939년 인도네시아의 여러 민족주의단체들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연합체로 인도네시아정치연합을 결성하였다.⁴⁰ 이어 1941년에는 청년들이 제창한 인도네시아 국어, 국가, 국기의 채택을 위해 인도네시아국민회의를 소집하는데 성공하였다. 세계 파시즘의 대두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인도네시아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통일 노력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력의 부재와 대중적 지지의 약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 독립에 결정적 기회가 된 것은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이었다. 1941년 7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한 일본은 1942년 초 발리(Bali)와 수마트라에 상륙하여 3개월 만에 네덜란드군을 항복시켰다. 일본은 3년간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는데, 태평양전쟁 동원을 위해 인원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일본은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 독립을 약속하면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였고, 인도네시아인 군대를 조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 점령으로 섬에 유배되었던 수카르노와 하따(M. Hatta)는 석방되어 일본의 점령 세력을 도우면서 독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일본이 동원과 통제를 위해 조직한 조국방위대, 보충대, 알라의 군대, 청년단, 국민운동본부, 자바호국

40 Pieter Joost Drooglever(2005년 8월 11일~12일),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전략과 선택」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독립기념관 발표문, 120~121쪽.

회, 추진대 등의 각종 조직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와 독립의식을 대중들에게 교육시켰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1945년 8월 일본의 후원 하에 조직된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일본의 항복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 수카르노 대통령과 하타 부통령은 인도네시아



그림 7 독립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부통령 하타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연합군의 자바 공격에 대비하여 조직된 조국방위대는 독립 후 창설된 국민안보군의 근간이 되었고, 자바호국회는 독립정부 관료조직으로 편입되었다.

VIII. 동아시아 각국 민족주의의 특징

19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동아시아의 민족운동과 민족주의는 19세기 이전부터 민족으로서 결집했던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19세기 이전까지 원초적 형태로나마 민족적 결집을 통해 독립된 하나의 정치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국 중국 베트남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는 19세기 이전까지 소수 종족으로 나뉘어 민족으로서의 결집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던 지역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속한다. 타이완의 경우는 둘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타이완 주민 구성이 이중적이며, 토착민

에 대한 이주민 지배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토착민들의 그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다는 점, 나아가 현재 타이완의 국제적 위상이 독특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19세기 이전 한국 중국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주의적 태도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삼국의 민족운동은 점차 종래의 전제군주제를 지양하고 국민 주권주의에 의거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는 근대적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경우 청국의 봉건왕조를 타도하는 명분으로 '멸만흥한'이라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제 군주제의 청산과 함께 종래의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근대적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러시아혁명 이후 아시아의 민족운동 진영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익과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좌익으로 나뉘었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좌우익의 대립과 연합을 반복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좌익의 우세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분화는 중국의 경우 국공내전을 통해 공산당의 승리로 귀착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미소 냉전체제의 형성과 함께 민족의 분단으로 진행되었다.

삼국이 직면한 외세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청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일본과 영향력을 다투다가 모두 일본에 패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완전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일본의 혹독한 탄압으로 국내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본 패망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군에 의해 국토를 분할 점령당하는 사태가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서양의 열강들이 침략을 했으나 부분적으로 조처지를 얻거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머물렀다. 이와는 달리 한국을 발판으로 삼은 일본은 193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침략 전쟁을 통해 중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비점령 지역을 거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친 후 독립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베트남 침략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패망을 앞둔 유리한 국제적 상황에서 베트남인들은 기민하게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다.

19세기 이전 타이완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청불전쟁 이후 중국의 지배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청일전쟁 후에는 중국이 지배권을 일본에 양도하였다. 이후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타이완인들이 타이완민주국을 수립하여 독립을 선포하였다. 타이완인들의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은 19세기 후반에는 무장투쟁, 20세기 후반에는 비밀결사를 통한 조직적 항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마오리사건과 자오바니엔사건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항일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본격화하지 못했다. 식민지의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한 개량주의 운동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타이완 내에 지도적인 정치 결사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자 연합국은 타이완을 일본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300년 이상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19세기 후반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 필리핀공화국을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필리핀인들의 독립을 위한 항미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의회 구성을 통한 자치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필리핀의 민족운동은 필리핀 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미국에 대표단을

과견하여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독립을 거부하던 미국은 세계공황으로 위기에 빠지자 독립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1935년 독립 과도정부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생한 후 필리핀은 일본군이 점령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 필리핀공화국의 독립을 허용하였다. 1944년 미군이 일본군을 격퇴하자 필리핀은 다시 미군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점령 시 조직된 정부는 해체되었다. 결국 미국에 망명해 있던 독립과도정부 요인들이 중심이 되어 1946년 필리핀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세기까지 네덜란드 식민지 침략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저항은 토착 왕국들에 의해 개별 분산적으로 전개되었다. 식민지 이주민에 대한 토착민들의 반감은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토양이 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식인과 회교 지도자들에 의한 근대적 계몽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는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개량주의적 운동이었다. 일시 공산당이 조직되었으나 활동은 극히 미약했다. 1927년에 비로소 독립을 목표로 정당으로 인도네시아국민당이 결성되었다. 이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독립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근대 민족주의적 목표가 확립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민족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네덜란드의 탄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42년 일본이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일본에 협력하면서 대중들에게 민족주의와 독립의식을 계몽하였다. 이러한 독립 준비 덕분에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독립을 선포할 수 있었다.

- 권오신(2000),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문학과지성사.
- 김성권 외(1995), 『일제 하의 동남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송정남(2010), 『베트남 역사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승윤 편저(2010), 『인도네시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지음, 한철호 이규수 옮김(2000),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 유인선(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장 세노, 프랑소와즈 르 바르비에, 마리-끌레르 베르제르 저·신영준 옮김(1982), 『중국현대사, 1911~1949』, 까치.
- 체스타 탄 저, 『중국현대정치사상사』, 지식산업사, 1977.
- 姬田光義, 阿部治平 외(1985), 편집부 옮김, 『중국근현대사, 아편전쟁에서 1982까지』, 일월서각.
- 김기주(1991), 「베트남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10, 국사편찬위원회, 77~121쪽.
- 김희곤(2005년 8월 11일~12일), 「한국독립운동 지도기관의 성격」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광복60주년기념 및 독립기념관 개관 18주년 기념 제19회 독립운동사 국제학술포지움 발표문.
- 신승하(1991), 「중국의 민족주의 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0~212쪽.
- 신운환(1991),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10, 국사편찬위원회, 154~188쪽.
- 林德政(2005년 8월 11일~12일), 「일제강점기 대만의 항일투쟁」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광복60주년기념 및 독립기념관 개관 18주년 기념 제19회 독립운동사 국제학술포지움 발표문.
- 조길태(1991), 「인도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10, 국사편찬위원회, 37~74쪽.
- 클라이브 크리스티 편저·노영순 옮김(2004),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심산.
- 팜 꾸옥 수(2005년 8월 11일~12일),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제도에 대한 투쟁과 독립의 쟁취」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광복60주년기념 및 독립기념관 개관 18주년 기념 제19회 독립운동사 국제학술포지움 발표문.
- 한상도(2006. 12), 「일제 침략기 한국과 대만 항일운동세력의 국제연대」 『한국민족운동사연구』49, 169~214쪽.
- (2009. 3), 「일제 침략기 한국인의 베트남 인식과 연대의식」 『역사학보』 201, 125~164쪽.
- Milagros C. Guerrero(2005년 8월 11일~12일), 「필리핀 식민지의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1898~1935)」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광복60주년기념 및 독립기념관 개관

18주년 기념 제19회 독립운동사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문

Pieter J. Drooglever(2005년 8월 11일~12일),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전략과 선택」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 광복60주년기념 및 독립기념관 개관 18주년 기념 제19회 독립운동사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문.



평화를 향한 노력과 국제연대

김정현 |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II. 동아시아 반전 평화 사상과 연대

III. 동아시아 아나키즘 연대와 반전운동

IV. 1930년대 이후 한 중의 항일을 위한 국제연대

V. 맺음말

I. 머리말

동아시아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 전쟁이 계속되었다. 전쟁의 피해가 큰 만큼 평화를 지향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다. 반전 평화 운동은 식민지 조선과 반(半)식민지인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침략국인 일본에서도 전개되었다. 청일 러일전쟁의 영향으로 1900년대 일본 동경(東京)에서 먼저 반전과 민족독립을 위한 아시아의 연대운동이 등장하고 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가 조직되었다. 한국에서는 1909년 안중근(安重根)이 반침략 평화사상인 ‘동양평화론’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910년 일본에 의해 한국이 식민지화되고 동양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한인 민족운동가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의 혁명단체와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시기 일본과 중국에는 다양한 조류의 사회주의가 수용되고, 그 중에서도 아나키즘¹이 제국주의의 사회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1910~20년대 반전사상의 주류를 형성하였다.² 한 중 일 3국의 아나키스트들이 반전 반제를 위해 연대한 활동이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들은 국제연대를 위해 소통

1 아나키즘의 번역으로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라는 단어는 아나키즘의 진정한 목표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긍정적 측면보다, 정부를 없애자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오장환(1998), 10쪽). 무정부주의 대신 무강권주의(無強權主義)로 바꾸어 쓰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처음의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를 대체하지 못하였다(조광수(2006), 25쪽). 본고는 아나키즘이란 원어를 사용하되, 원문 인용 등의 필요시 무정부주의를 겸용하고자 한다.

2 이호룡(2008), 5쪽. 아나키즘을 비롯한 사회주의 수용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호룡(2001),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참고.

과 평화의 언어인 에스페란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에는 일본의 침략확대에 따라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상호 연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고 평화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선 연대활동을 조사하고 서술하는 것은, 일국 단위 민족국가의 역사를 초월하여 동아시아사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동아시아에 침략과 저항만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한 연대와 교류의 역사가 있었고, 상하 연대가 아닌 평등한 관계의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에 중요한 주제이다.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반전 평화를 추구한 연대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 더욱 풍부한 연대활동의 사례가 발굴되고, 올바른 동아시아상을 만드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계승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II. 동아시아 반전 평화 사상과 연대

1. 반전·평화사상의 등장과 전파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 노력은 전쟁의 역사와 함께 처음부터 존재해왔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 시대는 전쟁의 형태와 사람들의 전쟁관이 크게 달라졌다. 18세기까지

는 홍수 등 자연재해나 콜레라나 페스트로 대변되는 질병이 인류에게 전쟁보다 무서운 사건이었지만, 19세기 이후는 전쟁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졌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 자연재해나 질병에 인간이 대응해 갈 힘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파괴력을 증대시켜 전쟁 피해가 확대되었다(木畑洋一, 2004:15). 자연과학의 발달을 기반으로 대량살상용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국가권력의 민간인 통제와 '총력전' 개념이 등장한 바, 전쟁은 이제 전염병보다 무섭게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었다. 이 시기 반전운동은 반제국주의적 반국가적 계급적 혁명운동의 형태를 띠면서, 유럽에서나 동아시아에서나 대체로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박진수, 2008 : 14).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무렵 일본에서 먼저 비전론(非戰論)이 등장하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비전론자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를 비롯하여, 사카이 도시히토[堺利彦, 1871~1933],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885~1923], 가타야마 센[片山潛, 1859~1933] 등을 들 수 있다. 고토쿠 슈스이는 주간 『평민신문(平民新聞)』(1903. 11~1905. 1)을 창간하여 비전론을 전개한 초기 반전운동의 핵심적 인물이다. 그는 1900년 「비전쟁주의(非戰爭主義)」라는 논설에서 처음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쟁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는 군인들의 고생, 전장지 인민의 불행, 군인유족의 비참함, 무역과 생산위축으로 인한 빈민증가 등 전쟁의 참화를 지적하였다. 1900년 11월 그는 「배제국주의론(排帝國主義論)」을 신문에 연재하였고, 1901년 4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전면적 비판서인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를 펴냈다. 서양에서 제국주의 주장이 전쟁론과 결합되고, 제국주의 반대의 사상은 평화론의 형태를 취하였다(入江昭, 1986: 38)고 한다면, 고토쿠 슈스이의 제국주의 비판은 일본에서 반전론을 향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박양신, 2008 : 99). 러일전쟁을 막기



고토쿠 슈스이

※ 자료 <http://cafe.naver.com/anarchism.cafe>

위해 고토쿠는 1904년 3월 러시아사회민주당에 편지를 보내 국제연대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일본내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 종교인 등이 다양한 형태의 반전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대외적 위기의식의 소산으로 그리고 문화적 인종적 지정학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3국의 연대론이 부상하였다. 즉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³ 연대론을 주장한 일본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의 『대동합방론(1885)』⁴, 1880년 흥아회(興亞會)의 출범, 독립협회의 한일제후론 등이 그것이다. 일본 망명 중 새로운 사상에 접하게 된 량치차오(梁啟超)도 1898년 11월에 발족한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의 동인종동맹론을 배경으로, 일본의 흥아론(興亞論)이나 아시아주의에 기대를 걸었다.⁵ 당시 일본에는 조선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망명 지사들이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연대 활동을 전개하여 동아시아청년협회가 성립하였다. 이시기 일본에서 혁명운동을 펼치던 쑨원(孫文)도 조선 개화파 인사와 회담하고 교류하였다(楊天石, 2006: 109).

1905년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 이후,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 일본의 승리에

3 중국에서 Asia의 음역인 아세아(亞細亞)는 20세기 초에 들어서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신해혁명 시기의 근대 지식인들은 아주(亞洲) 동방(東方) 등으로 표현된 아시아를 황인종의 포괄적 인종구성체로 이해함으로써 유럽 및 서구로부터의 독자성을 인식했다. 조성환 김용직(2002), 참조.

4 다루이 도키치는 백인종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황인종인 아시아 제민족이 단결해야 하며, 쇠퇴하는 동양의 기운을 만회하는 흥아(興亞)의 대업을 양성하기 위해 대동아연맹(大東亞聯盟)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백지은 옮김(2004), 267쪽.

5 량치차오가 일본의 흥아론이나 아시아주의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최원식 백영서 편(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문학과 지성사, 참조.

감격한 대다수 한국인들 역시 일본이 내건 ‘동양의 평화’에 기대를 걸었다. 러일전쟁 후 한 때 동경은 아시아인 혁명가나 독립 운동가들이 일본을 아시아의 해방, 독립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일본을 배우고 일본의 지원을 통해서 자국의 독립이나 변혁을 완수하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동경에 모여들었다. 당시 동경에 망명중인 량치차오 등의 저작을 통하여 일본 근대화에 공명한 베트남의 지식인 판 보이 찌우(Phan Bội Châu, 1867~1940)가 일본을 방문하여 정부요인과 접촉하고 원조를 요구하였으며(유인선, 2004 : 185), 유학생을 파견하는 동유(東遊)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1906년 200명 이상의 베트남 유학생이 일본에 머물렀다.



량치차오



판 보이 찌우

※ 자료 <http://image.baidu.com>

당시 일본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1만 명에 달하였으며, 1905년 동경에서 홍중회의 쑨원, 화홍회의 천텐화[陳天華], 광복회의 장빙린[章炳麟] 등이 단결하여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 : 총리 쑨원)를 성립하였다. 중국동맹회 기관지 『민보(民報)』(주필 장빙린)의 편집에 관여했던 중국인 혁명가들은 1907년 사회주의연구회를 창설하고, ‘사회주의강습회’를 개최하여, 일본에서 초기 반전운동의 핵심 인물인 고토쿠 슈스이 등을 강사로 초대하여 교류하였다. 고토쿠



쑨원

※ 자료 <http://www.xhgmw.org/archive-50852-1.shtml>

슈스이 등 일본인들도 ‘금요강습회’를 만들어 강연회를 개최하여 중국 유학생과 망명객 외에도 김여춘 황태경 박종진 등 한국인이 참가하여, 3국의 혁명가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들이 교류하였다. 고토쿠 슈스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1907년 7월 조선침략에 반대하는 「대한결의」를 공표하였다. 일본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유지자결의’를 발표, 일본정부가 한국

독립을 보장하고 한국민의 자유 독립 자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고토쿠 슈스이의 저서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신채호는 아나키즘을 자신의 사상으로 수용한 1910년대 말 이후 아나키스트로서 활동하였다(이호룡, 2003: 68).

2. 아시아의 연대와 ‘아주화친회’

러일전쟁 이후 東京에서 활동하던 중국인과 인도인 및 일본인 혁명가들 사이에 교류가 깊어지면서, 이들은 새로운 연대조직을 결성하였다. 1907년 중국 혁명가 장빙린 류스페이[劉師培] 허진[何震] 등과 인도인 펄한 바오스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아주화친회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아시아 세계에 처음 등장한 국제연대 조직이다. 아주화친회 첫번째 회합은 중국 혁명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고토쿠 슈스이 등의 일본인이 참가하였고, 두번째 회합에서는 판 보이 짜우와 베트남인 유학생, 필리핀인들이 새롭게 참가하여 함께 규약을 만들었다. 장빙린의 이름으로 작성된 「아주화친회약장」에는 모임의 목적을 ‘제국주의에 반항하여, 아시아에서 주권을 잃어



장빙린

※ 자료 <http://www.northedu.com.cn>

버린 민족의 독립 달성’으로 정하고, 회원자격을 ‘아시아인으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자를 불문하고 모두 입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침략적 민족주의자를 제외한 진보세력의 연합을 추구하였다(조세현, 2010: 68). 나아가 만약 가맹한 어떤 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다른 각국의 동지가 서로 지원해야 할 것 등을 명기하였다.

이후 베트남 필리핀 조선 미얀마 말라야 등의 혁명지사들이 계속 가입하면서, 이 조직은 아시아 각국의 혁명 지사가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 해방을 쟁취하려는 혁명연맹이 되었다. 아주화친회는 아시아의 연대와 사회혁명의 완수를 위해 팽창적 억압적 침략적 자국 중심적 아시아론이 아닌, 문명 지역 인종 등의 경계를 초월한 초민족적 초지역적 연대로서의 아시아를 주장하였고(황동연, 2005: 154~155), 본부를 동경에 두고 중국 인도 조선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지에 분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800명 정도의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아주화친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본의 한국침략이 점점 드세지는 가운데 ‘일본인이 출석한다면 우리들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대다수 한국측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한 사실은 제국주의 일본이 ‘화친(和親)’의 대상인 아시아란 개념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조소앙(趙素昂)은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아주화친회에 참가하여 일본인 및 중국인과 연대하였다.⁶ 조소앙은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중국 인도 타이 필리핀 베트남 혁명가와 연대를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사상은 아주화친회의 활동경험과 관계가 있다.



조소앙

※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아주화친회가 성립된 배경에는 일본이 러일전쟁에 내건 ‘동양의 평화와 서구의 식민지 침략에 저항하는 아시아인의 해방’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정부는 이들의 기대

6 조소앙은 1904년 한국 황실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부립 제1중학교에 재적하면서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한 항의집회를 주도하거나, 한국인 유학생을 결집하는 학회지에 주필로 관계하는 등, 일본 체류 유학생 민족운동의 중심적 존재였다. 김기승(2008) 참조.

와 달리, 1907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과 협조 관계를 맺어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으면서 한국의 식민지화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일본 정부는 1908년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일본과 프랑스의 협약을 근거로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응해 베트남 유학생의 국외 퇴거를 강행하였다. 일본정부의 군국주의화에 따른 사회주의자 단속 및 아시아 민족운동가 추방으로 인해, 1908년 10월 아주화친회 핵심인사들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하고, 『민보』는 일본 정부의 조사를 받아 폐간되었다.

아주화친회 규약이 내건 각국 혁명의 상호원조나 민족 독립이 직접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1900년대 동경에서 아시아의 민족해방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추진한 활동은 아시아에서 선구적인 국제연대의 사례로 큰 의의를 남겼다. 아주화친회가 시작한 동아시아 반전 평화를 위한 연대활동은, 일본인 아나키스트 단체인 ‘금요강습회’와 중국인 아나키스트 단체인 ‘사회주의강습회’간의 상호 밀접한 교류를 비롯하여, 1910년대 이후 일본과 중국에서 계속 이어졌다.⁷

3.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한 중 일의 항구적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반전 평화 운동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일본은 ‘동양평화’

7 1910년대 동경에서 반제국주의운동을 결의한 한인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1915년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을 결성하였고, 중국 유학생들은 졸업후 근거지를 상해로 옮겨 1916년 대동당(大同黨)을 조직하였다. 조세현(2010), 160~161쪽.

라는 구호를 동아시아로의 팽창과 전면적 침략과정에 이용하였다. 러일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905년 2월 한국을 압박하여 맺은 ‘한일의정서’는 “한일 양 정부는 영원한 친교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한다”(제1조) “대일본제국의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 한국에 통감부를 세우고 12월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안중근은 이 조약의 체결에 분개해 애국계몽 운동에 합류하고 각지에 사립학교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1907년 7월 제3차 한일협약으로 한국군이 해산되자, 안중근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력투쟁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의병투쟁에 몸을 던졌다. 한편 안중근은 일본의 지도층과 인민을 분리하여 사교하였고, 부하 의병에게 일본인이란도 양민을 살해하여 서로 감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실제로 그는 의병부대 지휘관으로 활약했던 1908년 7월 교전 끝에 생포된 일본군 포로들을 석방하였다.⁸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조선 식민지화 정책의 책임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검거되어 여순(旅順) 감옥에 투옥되었다. 안중근은 일본인 검찰관의 심문에서, 이토를 사살한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며, 절대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토의 15가지 죄⁹를 열거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양평화는 각국이 자주독립하고



안중근

※ 자료 <http://ko.wikipedia.org>

-
- 8 여기에는 일본군 포로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강력히 비난한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현광호(2010), 385쪽.
- 9 이토의 죄상 15가지는 한국의 황제를 폐위한 죄, 무고한 한국인을 살해한 죄, 한국 정권을 빼앗아 통감 정치로 바꾼 죄,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죄, 동양평화를 파괴한 죄 등이다.

있는 상태이며, 동양의 한 나라라도 자주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양 평화라고 말할 수 없고,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자주독립이 동양평화의 조건' 이라고 동양평화를 강조하였다.

안중근이 여순(旅順) 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는, 반제국주의 평화사상과 일본 한국 중국의 협력에 근거한 동아시아 평화의 발전구상이 들어 있다. 그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같은 황색인종인 동아시아 3국이 대등 평등한 관계로 제휴하고, 서구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안중근은 당시 한국에서 활발하게 거론되었던 '동아시아 협력론'¹⁰에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걸쳐 모색된 아시아 연대론이 결국 공허한 논리로 변질¹¹되어 갔던 반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중심이 되어 주창한 아시아 연대주의와 구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반침략주의라는 점이 다른 특징이다(강동국, 2009 : 400). 안중근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은 일본 지도층의 일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도층과 인민을 분리하여 사고하였으며, 일본 인민들 다수는 평화를 희망한다고 확신하였다(현광호, 2010 : 391).

안중근은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역시 일본의 침략정책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국권을 반환

10 '동아시아 협력론'은 논자에 따라 '삼국제휴론' '삼국공영론' '동양주의' '동양평화론' 등으로 불린다. 예를 들면, 김도형(2000),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3; 김신재(1990), 「독립신문에 나타난 '삼국공영론'의 성격」 『경주사학』 9; 백동현(2001),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 『한국사상사학』 17, 등과 같이 그동안 연구에서는 대한제국기 한 중 일 삼국의 협력을 통한 서구 열강의 침략을 저지하는 논의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광호(2010), 389쪽.

11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 서구와의 관계 설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일 강창일(2000), 참조.

해야 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여순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나아가 여순을 한중일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화회의를 조직하고, 이곳을 평화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하면서 제국주의와 대결한 사상이었다는 점에 독보적인 역사적 의의가 있다(강동국, 2009:434). 그의 반전 평화 주장은 일본제국의 야만성을 드러내 일본의 평화 민중을 포함한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으며,¹³ 안중근 사후 15년 후 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논조의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하였다.¹⁴

12 안중근은 여순이 러시아 일본 청동의 분쟁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순을 영세 중립지대로서 대립의 위험을 제거할 것, 아시아 각국이 여순에 대표를 파견해 항상 평화위원회를 마련할 것, 평화위원회는 각국 군대를 공동 관리하고, 분쟁 방지와 지역의 안전보장에 노력하는 것, 각국이 자금을 제공해서 개발 은행을 설립하고, 지역개발이나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 로마교황청도 평화위원회에 대표를 보내고, 서구 제국의 관여없이 국제적인 승인과 영향력을 얻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안중근, 「동양평화론」, 국가보훈처 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55쪽.

13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사건에 고무되어 베트남에서도 1912년 프랑스 총독의 암살이 기도되었고, 1913년에는 친프랑스파 관료와 프랑스 군 대령 등이 살해되었다. 유인선(2004), 202~203쪽.

14 쑨원은 1924년 말 ‘대아시아주의’를 골자로 한 연설에서 ‘일본이 열강 침략의 주구가 아닌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방패와 성벽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히면서 안중근과 동일한 논조를 이야기 하였다. 徐勇(2009), 64쪽.

4. 1910년 이후 한중 연대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은 베트남의 망국 이상으로 중국 혁명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중국혁명을 앞당기는 촉진 작용을 하였다. 한국의 독립지사들 역시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자, 중국혁명이 성공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도 독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하였다(유용태, 2009 : 232). 이후 신규식(申圭植) 등 한인독립지사들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혁명을 지지하거나 실제 참가하였다.¹⁵ 신규식은 중국 혁명가들과 연대하기 위해 남경(南京)에서 중국동맹회에 가입하고 중국혁명당원인 쑨자오런(宋教仁) 다이지타오(戴季陶) 황싱(黃興) 쑨원 등과 교류하였으며, 남경임시정부를 지지하였다. 중국 혁명과 인사들과의 교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한인들의 ‘연락기구’인 동제사(同濟社:同舟共濟의 의미)가 1912년 만들어졌고, 이들 바탕으로 한 한중연대 활동의 결과 한중 연합단체인 신아동제회(新亞同濟會)가 조직되었다(배경한, 2007 : 232~233).



신규식

※ 자료 <http://people.aks.ac.kr>



여운형

※ 자료 <http://people.aks.ac.kr>

동제사는 신규식이 1912년 7월 박은식(朴殷植) 김규식(金奎植) 등과 상해에서 설립하였으며, 이후 조소앙 등 한인 지사들이 ‘한중이 함께 새로운 아시아를 개조하자’고 발의하여 신아동제회를 조직하자, 중국국민당의 천치메이(陳其美) 쑨자오런 후한민(胡漢民) 다이지

¹⁵ 신규식은 다른 항일민족운동가들이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것과 달리 중국 혁명의 중요한 활동기지인 상해지역을 선택하였고,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국혁명당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연대활동을 개척하였다. 신승하(1983), 595, 604쪽.

타오 천리푸[陳立夫] 등도 참가하여 한국 지사들을 적극 지지하였다(楊天石, 2006 : 112). 조소앙은 또한 천리푸 등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지사들을 중심으로 국제 항일조직인 아시아민족반일대동당(亞細亞民族反日大同黨)이라는 연맹단체도 조직하였다(배경한, 2002 : 7).

쑨원의 중국혁명정부는 일본의 한국침략을 비판하고 한인의 독립운동을 계속 지원하였으며, 천치메이¹⁶가 1913년 신규식과 한인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혁명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계속되었다.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중국의 혁명정부였다. 1919년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나고 각계가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반일집회를 열었을 때, 한국 교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다이치타오 등은 한국 지사들과 함께 항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일본기자회견에서 「고일본국민서(告日本國民書)」를 발표하여, 일본이 ‘조약을 어겨 배신하고 조선을 병탄한 것은 실은 중국 본부를 침략한 일면을 보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¹⁷

1920년 9월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중화민국 호법정부에 신규식을 특사로 파견, 한국독립 승인의 사안을 논의하였다. 신규식과 회동한 탕지야오[唐繼

16 천치메이[陳其美, 1878~1916]는 1906년 일본에서 중국동맹회에 가입하고 1911년 11월 3일 상해에서 봉기를 일으켜 滬軍도독에 취임하였고, 1913년 손문을 도와 중화혁명당을 조직하고 위안스카이[袁世凱] 토벌활동에 참가하였다가 1916년 5월 암살당하였다. 중국 혁명당 인사 중에서 천치메이와 신규식이 ‘가장 오랫동안 교류’하였고 도움이 많았기 때문에, 천치메이가 암살되자 신규식은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였다고 한다. 천치메이의 혁명정신과 국민당 안에서의 그의 사업은 그의 조카인 천과푸[陳果夫]에게 연결되어, 국민정부와 이후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계가 밀착될 수 있었다. 신승하(1983), 609~610쪽.

17 「告日本國民書」(상해, 『민국일보(民國日報)』, 1919. 5. 9); 戴季陶는 일본 유학시절 한국 독립지사들과 왕래하였으며, 상해에서 언론활동에 종사하면서 1911년 동맹회에 가입하여 혁명대열에 참여하였고, 혁명당원과 가까이 지내던 신규식 등 한인 지사들과도 교류하였다. 그는 자신이 창간한 『민권보』를 통해 일본의 한인에 대한 잔악 행위를 규탄하였다. 신승하(1983), 606~607쪽.

堯]는 운남지역에서 한국인 군사관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후 한국임시정부는 운남에 50여명의 청년을 파견하여 군사교육을 받았다(楊天石, 2006: 116~117). 신규식이 1920년 10월 상해에서 『진단(震壇)』주보를 창간하고 ‘중한제휴’를 주장하자, 쑨원 후한민 장제스(蔣介石) 등 국민당 요인들이 이를 지지하였고, 쑨원은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글을 보내 지원하였다. 중국 혁명당원들은 1920년 12월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상해에서 출판하였을 때에도, 서문을 써서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 우리측 임시정부도 1921년 4월 쑨원이 비상대통령에 당선되자 여운형(呂運亨)을 광주(廣州)에 파견하여 호법정부의 수립을 축하하였다.¹⁸

1920년대 들어 늘어난 중국 거주 한인들은 새로운 한 중 연대 조직인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를 중국 각지에 결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하여 한 중 혁명을 선전하였다. 1921년까지 한 중 인사들이 결성한 단체는 장사(長沙)중한호조사, 상해(上海)중한국민호조사, 안경(安慶)중한국민호조사, 귀주(貴州)중한국민호조사, 운남(雲南)중한호조사,汉口(漢口)중한국민호조사 등 중국의 주요도시에 분포되었다(김희곤, 2004: 117). 한중 호조사의 한국인 대표는 김규식 여운형 신규식 등이고 중국측에는 초기 공산주의자도 참여하였는데, 장사중한호조사에는 마오쩌둥(毛澤東)도 참여하여 한국인의 항일구국운동을 지원하였다.¹⁹ 각 호조사의 전국조직인 중한국민호조총사는 1921년 8월 15일,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조약의 폐지,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치 경제 군사통치 종료’ 등을 호소하는 선언을 태평양회의에 제출하였다.

18 1921년 10월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 외무총장 신규식이 다시 광둥을 방문한 후, 쑨원과 중국 혁명당인들의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孫科志(2001), 247쪽.

19 마오쩌둥은 1920년 장사에서 신민학회 활동을 하였으며, 당시 그가 읽은 도서목록에는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도 포함되어 있다. 康基柱(1997), 309쪽.

1921년 9월 광주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협력하여 만든 중한협회(中韓協會)가 성립되어, 광둥(廣東)군정부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지를 받았다.²⁰ 중한협회는 워싱턴회의와 중국 각계에 선언서 등을 보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과 중국주권의 유지를 호소하였으며, 기관지 『광명(光明)』을 통해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고 한중연대를 호소하였다(許壽童, 2010: 204).

1923년 쑨원의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과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광둥호법 정부가 중국혁명의 중심이 되자, 조선과 중국 각지 그리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광주로 모여들었다. 1924년 6월 국공합작의 구체적 상징인 황푸(黃埔)군관학교가 광주에 건립되어, 장제스(蔣介石)가 교장으로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정치부주임으로 임명되었다. 황푸 군관학교는 1927년 3월 한국인 혁명가들에게 부탁하여 한인 학생을 모집하였다. 각종 한인 단체가 1928년 7월 제3기부터 광둥 황푸군관학교에 파견한 한인 학생들은 200여명에 달하였고, 조선인 교관도 있었다. 장제스는 한인 학생들을 모두 중국군에 편입하고 일체의 경비는 학교측이 지급했으며, 이들은 모두 졸업후 동북 항일무장투쟁과 한중 항일통일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¹

1927년 장제스가 국공합작을 배반하는 4·12 반혁명정변을 일으키자, 공산당이 12월 광주에서 무장기의를 거행하였다. 이에 한인 청년 150여명도 기의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쑨원의 국공합작에 희망을 두고 중국혁명에 투신하는 것을 한반도 민족독립운동의 출로로 보았기 때문이다(고영일, 2002: 402~403). 1920년대 후반부터 중국 사회에 계속된 북벌과 국공내전 등 전쟁 상

20 1921년 9월 廣州에서 중국 안휘성 의원과 광둥정부의 사법부장 등은 한인 김단정 김희담 박화우 손사민 등과 함께 중한협회를 결성하였다. 또 광주시장 쑤커(孫科) 등 수십 명은 기관지 발간기금으로 수백 달러를 모금하였다. 孫科志(2001), 249쪽.

21 황푸(黃埔)군관학교의 한인 교관은 기술교관, 포술전문가, 포병교관, 러시아어교관 등 다양하였다. 고영일(2002), 401쪽.

황으로 인해 한인들이 항일 독립운동 이외에 중국의 정치문제에도 깊이 간여하게 되었다. 한인혁명가들은 공산당의 광주기의(廣州起義) 뿐만 아니라,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북벌(北伐)전쟁과 1931년 중앙공농민주정부(中央工農民主政府)수립, 1934년 장정(長征)에도 참가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였다.

이상 1910년 이후 중국에 망명한 한국인 독립운동 지사들과 혁명가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혁명파들과 진행한 연대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당시 중국에는 일본과 유럽에서 들어온 아나키즘을 통해 국제 연대를 추구한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III. 동아시아 아나키즘 연대와 반전운동

1. 아나키즘의 수용과 적용

동아시아에서 아나키즘은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시대조류인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상호부조론을 중심으로,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먼저 활발히 전파되었다.²² 반전론자인 고토쿠 슈스이가 아나키즘을 받

²² 사회진화론은 강자의 입장에 있던 일본인에게는 침략적 제국주의론으로 변질되었고, 약자였던 중국인과 한국인에게는 더 이상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과 그 비판적 대안으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한중일 3국의 사상계에 고루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조세현(2005), 270쪽.

아들인 이후, 그의 영향으로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중국인과 한국인 아나키스트들도 등장하였다. 중국인 아나키스트들은 1907년 일본에서 단체를 결성하였으며, 잡지 『천의(天義)』를 발간하여 ‘천의’파로 불린다.²³ ‘천의’파의 대표는 류스페이(劉師培, 1884~1919)이며, 이들의 사상은 중국의 전통가치와 서구적 아나키즘이 결합된 또는 국학과 혁명이 결합된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노자(老子)를 아나키즘의 창시자로 보았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자발성과 상호부조라는 중국의 전통적 가치와 서구의 근대적인 평등사상을 결합한 중국식 아나키즘을 만들어 내었다.²⁴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아나키스트들도 단체를 결성하고 잡지 『신세기(新世紀)』를 발간하였다. ‘신세기’파의 대표는 리스쥔(李石曾)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아나키즘이 일찍이 존재했다고 보지 않고 사회진화의 산물로 보았는데, 이들의 사상은 크로포트



류스페이

※ 자료 <http://news.xinhuanet.com>



리스쥔

※ 자료 <http://www.cau.edu.cn/dag/hmuseum>

킨(1842~1921)의 ‘상호부조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호부조론’은 제국주의 위협에 대항하는 국제적 민중연대라는 반제의 논리를 제공하여, 제국주의를

23 『천의』는 류스페이의 처 허전이 여자복권회를 조직하고 1907년 6월 여성잡지를 간행하기 시작한 것인데, 아나키스트들이 이 여성지를 자신의 기관지로 삼았다. 따라서 『천의』는 진보적인 여성잡지인 동시에 아나키즘 잡지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조세현(2010), 59쪽.

24 노자를 아나키즘의 효시로 추앙한 류스페이는 『천의』에 노자상을 그려 놓고 중국 아나키즘의 시조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노자에게서 만정부적 혁명사상이나 급진적인 평등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류스페이가 아나키스트로 활동한 시기는 동경에서 『천의』를 발행하던 1907년부터 불과 몇 년 정도이며, 이후 아나키즘을 포기하고 복고주의자로 되돌아갔다. 조광수(2002), 86~88쪽.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론이었다.²⁵ 신세기파는 중국의 봉건적 반식민지 상태를 ана키즘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국의 모든 가치와 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질서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급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는데, 이들과 교류한 한인 ана키스트들도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²⁶

한국인의 ана키즘 수용은 상호부조론 이념과 더불어 한국 전통사상의 공동체意識도 ана키즘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되었다(구승희 외, 2004 : 83~86). 동양의 공동체주의의 이념인 대동(大同)사상은 인간애의 관심과 반패권주의적 이념, 평화주의, 권력욕을 배격한 측면에서 ана키즘과 유사했다. 한인 ана키스트들도 전통사상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회영(李會榮)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대동사상을 결합해 이해하였다(조세현, 2005 : 254). 주체성을 강조했던 신채호의 ана키즘 수용은 민족해방운동과 대동사상의 사상적 기반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상호부조론이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론을 극복하는데 가장 적합한 논리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박남영, 2008 : 58). 또한 조국이 식민지화 위기에 처하자, 민족해방을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당시 중일 양국에서 혁명사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ана키즘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ана키즘이 국권회복과 민족해방을 위해 실천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가 한국병합을 비판했던 ана키스트들을 탄압하고²⁷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는 군국주의의 길로 나

25 상호부조론은 본래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비판한 진화론의 수정이론으로, 자연계나 인간사회에서 적자생존의 원리보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 학설은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국제적 민중 연대라는 반제의 논리를 제공하였다. 조세현(2001), 77~78쪽.

26 중국내 한인 ана키스트들이 공산주의 세력보다는 민족주의 세력과 주로 연합했던 것도 이런 성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구승희 외(2004), 208쪽.

27 일본정부는 한국병합 3개월 전 고토쿠 슈스이를 비롯한 ана키스트들을 대역사건

아감에 따라,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식민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중국의 아나키스트들과 연대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인들이 언제부터 아나키즘을 수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 많은 한인들이 중국에 건너가 혁명운동에 참가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1910년대 중국사회에 풍미한 아나키즘을 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1913년 8월 신규식의 초청으로 상해로 간 신채호는 류스페이의 논설을 탐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이해할 정도로 아나키즘에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이호룡, 2003:77). 중국내 한인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국인 아나키스트와 직접 교류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신채호는 1921년 1월 북경에서 잡지 『천고(天敵)』를 발행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한 중 연합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때 중국인 아나키스트 리스쥔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조세현, 2001 : 105).

3·1운동 이후 아나키즘의 조직과 이론이 체계화되면서, 아나키즘에 의거하여 민족해방 문제에 접근하는 한인들이 늘어났다. 원래 아나키스트들은 강권을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일체의 권력과 국가를 부정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곧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권력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이호룡, 2003 : 91).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 운동의 목적은 민족주의자들이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식민지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민중(민족)의 해방을 위해 식민지 권력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한국 아나키즘은 제국주의 식민지 상태에 처한 한국적 상황에서 국가



신채호

※ 자료 <http://people.aks.ac.kr>

의 주모자로 검거하고 1911년 사형에 처하였다.

와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아나키즘과 민족해방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모순되지 않게 결합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논거를 확보하였다(구승희, 2004: 85). 일본 한국 중국 사회에 아나키즘이 수용되어 한때 광범위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사회 내부의 절박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2. 재일 한인의 반전활동과 한일연대

일본의 반전운동은 일본에 유학중이던 한인들이 신학문 수용과 국제연대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문과 잡지, 각종 책자와 ‘평민대학 강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나키즘 사상을 접한 유학생들은 일본 아나키스트들과 직접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한국 유학생 나경석(羅景石)과 정태신(鄭泰信) 등은 1913년 오스기 사카에 등 일본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며 아나키즘 사상을 수용하였고, 김철수(金綴洙)와 최익준(崔益俊) 등 유학생들은 1916년 중국 대만의 유학생들과 함께 일본제국주의 타도와 새로운 아시아건설을 목표로 비밀결사인 신아동맹회(新亞同盟會)를 결성하였다. 한인 유학생들은 3·1운동의 좌절이후 일본 사상단체에 더욱 적극 참여하여, 정태성(鄭泰成)과 이룡기(李龍基) 등은 이와사 사쿠타로[岩佐作太郎]가 주관하는 자유인연맹(自由人聯盟)에 참여하였다(김명섭, 2006: 44).

당시 동경에는 한인 유학생이 1천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1920년 11월 조선인 고학생과 노동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고학생동우회’를 창립하였다. 간부는 박열(朴烈) 김약수(金若水) 백무 등으로 총회원수가 200명이 넘었다. 박열 원종린 김약수 등은 일본 아나키스트 사상에 공명하여 오스기 사카

에 이와사 사쿠타로 등과 접촉하면서 대표적인 한인 아나키스트 되었다(조세현, 2005 : 263) 한인 유학생들은 1920년 12월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를 망라한 일본사회주의동맹이 창립되자, 직접 참여하여 교류하는 한편 한인조직도 결성하였다.

1921년 11월 동경에서 박열 원종린 황석우 백무 등 재일 아나키스트들이 흑도회(黑濤會)를 결성하고 기관지 『흑도』를 발행하였다. 『흑도』에는 일본 아나키스트들의 추사와 일본 노동단체의 추하광고도 실어 한일 연대의식을 과시하였다. 이후 흑도회가 분화하면서 1920년대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흑우회(黑友會, 1923)와 흑풍회(黑風會, 1927)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자아의 해방과 민중의 직접행동에 입각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테러활동으로 저항했고, 상호부조론과 자유연합주의로 지배와 권력이 없는 신사회 건설을 추구하며 독자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김명섭, 2001 : 96).

이시기 일본인 중에서 한인 아나키스트와 연대한 대표적인 반전 활동가로는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1903~1926]와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880~1953]를 들 수 있다. 가네코 후미코는 19세 때 도쿄에 와서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을 접하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해방에 전념하던 한국인 박열과 만나 함께 흑도회 기관지 『흑도』를 발행하였고, 불령사(不逞社)를 결성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일본 천황제 타도를 지향하였다(야마다 쇼지 저 정선택 옮김, 2003:123). 후미코는 박열과 함께 일본민중을 억압하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여 지배하는 천황제에 반대하여 조선민족과의 공동투쟁을 선언하였다. 두 사람은 천황과 황태자에 대한 폭탄투척을 계획하기는 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채,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에 의해 구속되었다.²⁸ 후미

28 1923년 9월 1일 일어난 관동대지진을 빌미로 일제는 사회주의자와 조선인 토벌에 나서 9월 3일 이들을 붙잡아 갔고, 일본 아나키스트의 대부 오스기 사카에 부부를 총살시켰으며, 조선인 6,000명을 잡아죽였다. 이 과정에서 박열 후미코 부부를 천

코는 일본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항하여 법정투쟁을 전개하였고, 우쓰노미야 형무소에 갇힌 후에도 전향공작을 뿌리치고 비전향을 관철하다가 1926년 7월 옥중 자결하였다.

‘한국판 신들러’라고 불리는 후세 다쓰지는 관동대지진 후에 대역죄로 기소된 재일 한국인 박열을 변호하고, 대심원 특별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다.²⁹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가 옥사하자, 그녀의 유골을 인수하여 박열의 고향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타이완에서도 활동하였으며, 의열단사건과 조선공산당사건도 변호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는 한국인에게 법률가 변호사로서의 ‘의무’보다 ‘진정한 친구로서의 연대감’을 보였다(다테노 아키라 편저/오정환 이정환 옮김, 2006: 220).



가네코 후미코

※ 자료 jpn.anarcho
pedia.org



후세 다쓰지

※ 자료 東洋經濟日報
2009/08/07



박열

※ 자료 <http://mpva.tistory.com>

흑우연맹(黑友聯盟, 1928~1936)은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결집하고, 일본 아나키즘 단체와 연대하여 3·1운동 기념투쟁, 8월 국치일투쟁 등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활동가들에

황 암살을 모의한 대역죄인으로 사형수로 만들었다. 이 일로 박열은 일본 정치범 최장기수로 22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김태준, 「가네코 후미코, 조선의 흙이 된 여인」 『한국일보』, 2010년 11월 29일)

²⁹ 박열은 1945년 10월, GHQ(연합군사령부)의 지령으로 아키타형무소에서 석방되어 1974년에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다테노 아키라 편저, 오정환 이정환 옮김(2006), 353쪽.

대한 대량 검거와 전향공작 등으로 재일 아나키즘 운동이 침체하고 단체 해산도 속출하였다. 일본과 조선에서 활동이 힘들게 되자, 아나키스트들은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국으로 진출, 무장투쟁에 가담하는 등 민족해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³⁰

3. 재중 아나키스트의 국제 연대

중국내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독립운동가 각 개인과 각 단체가 자유의사에 의해 연합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자유연합’을 가장 효과적인 독립운동 방안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중국내 한인 아나키스트인 이정규(李丁奎) 이을규(李乙奎)³¹ 형제와 신채호 이회영³² 등은 함께 1921년 한국인의 아나키즘 계열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아나키즘과 민족

30 재중 항일무장단체로의 진출과 비밀결사에 의한 무장봉기 계획 등은 민족해방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한인 아나키즘운동의 전통과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명섭(2001), 124쪽.

31 이정규는 북경대 생물학과 교수인 리스쥔과 총장 차이위안페이(蔡元培)의 도움으로 경제학과 2학년에 편입해 공부할 때 러시아인 에로센코와의 교제중에 감화를 받아 아나키즘에 공명했다고 한다. 친형인 이을규도 ‘한국의 크로포트킨’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비슷한 경로를 통해 아나키즘을 수용했다. 조세현(2010), 248쪽.

32 이회영은 1919년 2월 북경으로 망명하였으며, 이때부터 민족주의로부터 점차 아나키스트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3 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임시의정원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중국에 흩어져 있던 동지들이 상해에 모여, 이회영을 의장에 추대하고 의열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는 1932년 만주에 연락근거 마련 및 주만 일군사령관 암살 등을 목적으로 대련행 기선을 타고 만주로 가던 중, 일정에 체포되어 무자비한 고문에 의해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이회영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4卷, 國家報勳處, 1987).



이회영

※ 자료 <http://www.woodang.or.kr>

주의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많은 한인들이 해외기지를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듯이, 한인 아나키스트들도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 공간인 중국에서 중국인 아나키스트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아나키스트들과 연대활동을 벌였다.

1923년 재중 한인과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은 국제연대 활동으로 이상촌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상촌 건설에 앞장선 이정규 등은 크로포트킨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중국인 아나키스트³³와 합작하여 호남성(湖南省) 한수현(漢水縣)에 이상촌인 ‘양도촌(洋壽村)’을 건설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공동경작 공동소비 공동소유하는 협동조직체를 구상한 것이다. 이들은 인삼같은 특수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한국으로부터 인삼 경작 농부를 이주시켜 한중합작의 이상촌락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호남성에 내분이 일어나 무산되었다(구승희 외, 2004: 231). 이후 이정규 등 한인들은 상해에 가서 공장이나 회사에 공회를 조직하는 등 노동운동을 하였고, 5·30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한편 1924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합작’ 후에 원로 아나키스트의 대표적인 리스쥔 차이위 안페이 등이 모두 국민당에 가입하는 이른바 ‘안국합작’(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변화를 맞이했다. 그들은 여전히 아나키스트라고 자부하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 아래 노동운

³³ 이상촌 건설을 주도한 중국인 아나키스트는 루쉰(魯迅)의 동생 周作人이다. 그는 일본 유학중 아나키즘의 ‘반제 반군벌 반절대권력 만민평등’이라는 사상과 이상주의 문화파인 「백화파(白樺派)」가 주창한 ‘개성의 해방과 존중, 생명의 창조력을 믿으며, 권력을 반대하고, 새로운 윤리와 도덕의 이름을 찾는다는’ 이상주의를 수용하였다. 周作人은 1919년 백화파들이 큐슈(九州)지방에 건립한 이상촌인 ‘신촌(新村)’에 가서 직접 ‘자연 속에서의 노동의 신성’함을 체험하고 귀국하여, 1920년 2월 ‘신촌운동(新村運動)’ 북경지부를 설치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김시준(1997), 133~137쪽.

동과 농민운동에 참여하였다.³⁴

1924년 4월에는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 결성되어 『정의공보』를 간행하였다. 창립맹원은 이회영 이을규 이정규 백정기 유자명 정화암 등이다.³⁵ 이들은 북경사대교수 루쉰 형제(周樹人 作人 建人), 러시아 망인시인 에로센코, 북경대학 교수 리스쥔, 북경대학총장 차이위안페이 등이며, 대만의 혁명동지(范本梁) 등과도 긴밀한 접촉을 갖는 등 한국 중국 대만 동지들의 국제적 제휴에도 주력하였다(無政府主義運動史편찬위원회편, 1987 : 288~289). 1924년 10월에는 북경 민국대학에서 ана키스트 연대조직 흑기연맹(黑旗聯盟)이 결성되었는데, 유기석(柳基石, 일명 柳絮) 심용해(沈龍海) 등 한인과 중국인들(向培良 李沛甘 高長虹 등)이 참여하였다. 흑기연맹은 1925년 봄부터 북경대 총장이던 차이위안페이와 민국대 이사장이던 장지, 리스쥔, 우즈후이[吳稚暉] 등의 지원으로 『동방잡지(東方雜誌)』를 발간하였다(구승희 외, 2004 : 212). 중국에서 북벌전쟁이 한창이던 1926년 말에도 중국 무한에서 중국 조선 인도 대표들이 참석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가 성립(이후 남경으로 옮김)되는 등 연대 활동이 이루어졌다(황동연, 2005 : 147).

1920년대 후반 동아시아 세 나라의 ана키즘 연대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상해 노동대학 건설, 복건(福建)지역의 농민자위군 운동, 동방무정부주의자(東方無政府主義者)연맹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1927년 상해노동대학 건립에는 이정규 이을규 등 한인 ана키스트들이 중국인(沈仲九) 뿐만 아니라 이와사 사쿠타로 등의 일본인 ана키스트들과 함께 참여하

34 국민당에 가입한 리스쥔 등은 국민당 극우파의 백색테러나 볼셰비키의 공격에 대비하여, 중국과 한인 ана키스트를 보호 지원하였다.

35 이때 신재호는 북경에서 역사편찬에 몰두하고 있었고, 유림(柳林)은 성도(成都)대학에 재학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편(1987). 298쪽.

었다. 상해노동대학은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적 연대의 실험장이었으며, 교육으로 아나키즘 사회를 건설하자는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오랜 집념을 담은 뜻깊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세현, 2001 : 147~149). 1928년 북건지역의 농민운동에는 이정규가 중국인 동지(梁龍光과 秦望山)의 요청으로 참여하였다. 북건 농민운동은 토비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농촌조직을 보호할 인재양성을 위해 ‘선전원양성소’를 설치했는데, 농촌운동의 방향을 지도해줄 교관이 필요하였다. 이정규는 의열단 출신인 이기환 유기석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정규가 정치주임, 이기환이 학생대장에 선임되었다. 이들은 농민의 무장향토자위 조직을 결성했으나 토비들의 공격과 자금 부족으로 와해되었다(구승희 외, 2004 : 232). 1928년 5월 상해로 철수한 이을규 정규 형제와 정화암 유기석 등은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였다.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 아주화친회와 사회주의강습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1928년 결성된 아나키스트 연합체이다.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의 결성을 위해 1927년 9월 북경에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등 6국 대표자 120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가졌고,³⁶ 1928년 4월 천진에서 개최된 각국 아나키스트 대표대회를 거쳐, 6월 상해 프랑스 조계내의 화광(華光)의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대표 200여명이 회합하여 창설하였다. 서기국 위원으로 한국의 이정규 외에도 일본인(赤川啓來), 중국인(毛一波 汪樹仁)을 선출하고 『동방(東方)』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안종수, 2006 : 26). 이들은 동아시아 각 나라의 아나키스트들이 단결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자유연합의 조직 원리 아래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인 사회건설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³⁷ 이정규는

36 국제연대에 앞장섰던 신채호는 이 대회에 한국 대표로 이필현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호룡(2003), 89쪽.

37 조세현(2001), 「동아시아(한 중 일) 아나키즘의 비교」, 17쪽.

동방무정부주의자대회를 개최하는데 주역이 되어 선언문을 작성하였다.³⁸

이회영은 이 대회에 「한국의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 ‘한국 무정부주의운동은 곧 약소민족의 진정한 해방운동이요, 한국민족의 진정한 해방운동은 곧 무정부주의운동인 까닭으로 각국 동지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의 글은 대회 결의안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이같이 이회영은 아나키즘을 한국의 독립운동과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았다(김명섭, 2007 : 131~132). 이회영 뿐만 아니라 신채호 등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독립운동과 아나키즘 사이에 이론상 모순이 없다고 인식하였다.³⁹

중국에서의 아나키즘 운동은 1927년 장제스의 4 12 쿠데타 이후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극우노선을 걷자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은 종결되었다. 일부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중국의 원로 아나키스트의 활동에 적극 동참했고, 일부는 독자적인 길을 갔다. 1930년대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화한인연맹(南華韓人聯盟)을 결성하였다. 1920년대 후반 신채호 이정규 이을규 등이 잇달아 체포되거나 살해당하자, 유서(柳絮)⁴⁰ 등 청년 아나키스트가 중심이 되어 만

38 이정규는 1924년 9월 이후 4년여간 상해에 거주하였으나 1928년 10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광복직후 귀국하여 1945년 9월 서울에서 무정부주의운동의 총체인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을 조직하였다. 1946년 이후 국학대학과 성균관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1958년 청주대학 총장과 1963년 성균관대학 총장을 역임하였고 1966년 퇴임 후 1984년 87세로 서거했다. 김시준(1997), 142쪽.

39 신채호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무정부주의를 택하였다.(신채호, 「공판기록」 『단재신채호전집』(하), 428쪽 ; 신복룡(2007), 85쪽.

40 유서(柳絮, 유수인 또는 유기석, 1905~1980)는 황해도 금천출신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공부했다. 1916년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경 화중공학을 졸업 후 민족주의 단체에 가입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북경에서는 일제의 한국 중국 침략을 반대하며 조선후기단(민국대학의 후기연맹)과 관련을 맺었으며, 뤼신과도 왕래하였다. 아나키즘 활동에 적극적인 그는 항일기 언론계와 교육계에서 활동했으며, 해방

든 조직이다.⁴¹ 남화한인연맹은 주로 한 중 연합투쟁을 전개했는데, 몇 개의 테러조직을 만들어 천진의 일본영사관에 투탄, 주중국 일본대사 암살기도 등 일제와 친일분자를 응징했다. 한편 다른 한인 아나키스트들과 달리 신채호는 제국주의적 전쟁에 대한 철저한 저항을 부르짖으면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연대해야 한다는 중국인 아나키스트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국외에서 독립운동의 방략을 모색한 운동가로서의 신채호와 반식민국가 중국인 아나키스트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 아나키스트의 연대와 활동은 제국주의 전쟁에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자국이 처한 상황에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반전활동이 갖는 다층적인 의미와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준다(박난영, 2008 : 86).

4. 국제연대와 평화의 언어, 에스페란토

중국에서 한인들은 중국 아나키스트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대만인 등 과도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나갔는데, 특히 이들은 세계어(世界語)-에스페란토(Esperanto) 학습을 통하여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사상적으로 교류하였다(박환, 2005 : 44). 에스페란토는 1887년 폴란드의 안과의사 자멘호프 박사가 만든 세계 공용문자이다. 이 문자를 발명한 목적은 언어와 문자의 통일을 통해 세

후인 1952년 강소(江蘇)사범학원 역사과 교수를 지냈다. 박난영(2008), 67쪽.

41 남화한인청년연맹은 유서 외에 정해리(鄭海理) 김광주(金光州) 원심창(元心昌) 박기성(朴基成) 이용준(李容俊) 유산방(劉山芳)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으며, 이 회영도 관련을 맺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계평화를 이루고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있다(조세현, 2007: 233). 에스페란토는 민족 간의 소통의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들 개인의 국가는 존재하지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전체 안에는 국가라는 틀이 존재하지 않으며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다. 따라서 에스페란토에는 민족적 국가적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호간의 평등성이 자리잡고 있다(안종수, 2006: 37, 44). 이시기 평화의 언어인 에스페란토는 아나키스트들을 민제적(民際的) 관계속에서 사상적으로 결성시켰으며,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연구 보급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아나키즘이 먼저 전파된 일본에는 에스페란토 역시 빨리 도입되어, 많은 에스페란토 아나키스트들이 배출되었다. 오스기 사카에 사카이 도시히토 이와사 사쿠타로 등 일본 아나키스트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을 위해 에스페란토 강습회를 열었는데, 류스페이 등 중국인과 김약수 박열 등 한인들이 이들과 적극 교류하면서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다. 박열 김약수 백무 등 조선고학생동우회 회원들이 1921년 이와사 사쿠타로의 집에 모여 결성한 흑도회의 세계어연구회(에스페란토) 모임 중 해산 명령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는 일본에서 에스페란토가 아나키스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1919년 10월 북경대학에 세계어연구회가 발족하여, 『북경대학일간(北京大學日刊)』에 ‘세계어학회’ 모임 안내광고가 정기적으로 실리는 등, 지식인들의 에스페란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북경대학 총장 차이 위안페이가 리스펑을 생물학 교수로, 우즈후이를 학감으로 초빙하자, 이들의 영향력 아래 아나키즘과 세계어가 북경대에서 유행하였으며, 중국에 유학한 한인들도 북경대학을 통해 에스페란토를 접하였다. 1922년 2월부터 러시아의 맹인 시인이자 아나키스트인 에로센코(1889~1952)가 북경대에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루쉰 집에 기거했던 에로센코는 아나키즘

을 공부했던 정화암과 이정규, 이을규 형제를 비롯하여, 백정기, 유림, 이희영, 유자명, 김원봉 등 한인들과도 교류하였다. 특히 리스펑은 북경의 한인 아나키스트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고, 이정규가 아나키스트 조직을 건설하는데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이들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리스펑, 우즈후이 및 일본인 아나키스트인 야마가 타이지와 함께 1923년 북경 세계어 전문학교 설립에도 깊이 관여하였다(안중수, 2006 : 60, 93).

1920년대 중국의 활발한 에스페란토 운동 하에서 바진(巴金, 1904~2005)이라는 걸출한 아나키스트 문학가가 배출되었다.⁴² 1920~1930년대의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바진은, 성도 외국어전문학교에 들어간 1920년 당시 성도사범학교 영문과 학생이던 한국인 고자성(高自性, 柳華永 또는 柳



루원

※ 자료 <http://tupian.hudong.com>



바진

※ 자료 <http://news.dayoo.com>

林)⁴³이 개설한 세계어반에서 에스페란토어를 배웠으며⁴⁴, 이후 북경에 와서도 한인 아나키스트인 심여추(沈茹秋)를 만나 에스페란토를 계속 배웠다. 바진은 1924년 유서, 심여추 등 한인 아나키스트들과 연합하여 민국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흑기연맹을 조직하였다.⁴⁵

⁴² 필명 ‘巴金’은 바쿠닌[巴古寧]과 크로포트킨[克魯泡特金]의 중국어 이름에서 한글자씩 빌려왔다고 한다.

⁴³ 고자성은 유림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이름의 하나이다. 유림은 1919년 3·1 운동 참가후 중국에서 활동하였고, 1920년 북경에서 신재호가 잡지 『천고』를 발간하는데 관여하였으며,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후 에스페란토어를 보급에 나섰다. 김영천(2007), 171~172쪽.

⁴⁴ 바진과 한국인의 인연은 소년시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영웅으로 숭배한 것으로 시작하며, 이후 한국인을 솔직하고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느끼게 된 것은 다분히 처음 만난 유림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박난영(2005), 403, 410쪽.

⁴⁵ 1926년 유서, 심여추는 1924년에 중국아나키스트들과 만든 흑기연맹을 계승하여 조선의 청년조직인 고려청년사를 만들었다. 無政府主義운동사편찬위원회(1978), 298쪽.

1930년대 바진은 유자명 등 한인과 일본인 ана키스트와 반파시즘 연합전선 활동을 펼치고, 스페인 내란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국가라는 인위적 제도의 장벽을 넘어 온 인류의 의사소통과 보편적 이상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였다(박난영, 2008 : 85~86).

중국인 ана키스트들은 에스페란토를 교육하기 위해, 1927년 건립한 상해 노동대학에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 중국인 및 한인 청년노동자 700여 명에게 가르쳤으며, 중국인 외에도 이와사 사쿠타로 이시카와 산시로[石川三四郎]⁴⁶ 등 다수의 외국인 ана키스트가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ана키스트인 에로센코, 일본의 야마가 타이지[山鹿泰治]와 중국의 후스 루쉰 바진, 한국의 이정규 이을규 정화암 유림 심여추 등 많은 ана키스트들이 세계의 모든 인간은 형제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제국주의 언어가 아닌 에스페란토로 소통하고 연대하였다(안중수, 2006 : 118~119쪽). 단재 신채호가 ана키스트 활동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있을 때, 에스페란토어 책과 사전을 차입해 줄 것을 부탁한 것(오장환, 1992 : 48)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일본의 대륙침략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민족주의의 고조는 에스페란토어 전파에 장애물로 등장하였다(조세현, 2007 : 271).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ана키스트들의 연대는 이후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한 조직으로 불가피하게 재편되었다.

46 石川三四郎은 고토쿠 슈스이와 함께 평민사에 참가해 반전론을 주장하였던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다. 『평민신문』에 참가했다가 투옥되고 이후 ана키스트가 되었다. 전후 일본무정부주의연맹의 고문을 지냈다. 조세현(2010), 198쪽.

IV. 1930년대 이후 한·중의 항일을 위한 국제연대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해 대일전쟁이 본격화되자, 재중 한인의 각 항일단체들이 국제연합전선 결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31년 11월 동방아나키스트 연맹의 간부를 맡았던 중국인(王亞樵 華均實 등) 7명, 한국의 이회영 정화암 백정기 등 7명과 일본인(佐野一郎와 伊藤) 등이 모여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국제연대의 취지에 맞게 조선인부와 중국인 일본인부를 두었고, 대만인부와 미국인부를 증설하는 등 국제연합기구로의 확장을 꾀하였다.⁴⁷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남화한인연맹 맹원들도 조직을 재편해 적극적인 항일투쟁에 나서, 일제의 밀정으로 활동한 친일분자들을 숙청하는 한편, 기관지 『남화통신』을 발간해 항일 연합전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와 남경 국민정부의 연대활동도 강화되었다. 국민 정부는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김구가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별반을 개설하여 군사간부를 양성하도록 지원하였다.⁴⁸

이후 한 중 연합단체는 더욱 많아졌다. 중한민족항일대동맹(中韓民族抗日大同盟), 아주문화협회(亞洲文化協會), 동방문화협회(東方文化協會), 동방인민반

47 대만인 林成材와 미국인 존슨 등이 합류하였다. 김명섭, 「한일 아나키스트들의 사상교류와 반제 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49, 2006, 59~60쪽.

48 1933년 5월 민국정부 주석 장제스는 김구와 회답하고, 천귀푸에게 김구 등에게 매월 5,000원의 경상지원비와 필요시 임시사업비를 추가 지출토록 지시하였다. 낙양군관학교는 1933년 북경 천진 상해 남경 등지에서 100여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학칙에 올리고 이청천과 이법석을 교장교관으로 임명하였다. 이 군관학교는 겨우 제1기생을 졸업시키고 일본영사의 항의로 남경정부가 폐쇄령을 내렸다. 고영일, 윗책, 407쪽.

파시스트동지회(東方人民反法西斯同志會), 중한문화협회(中韓文化協會) 등이 조직되어 양국의 우호협력과 혁명활동을 선전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공동 항일투쟁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항일연군에 참여하였고, 중화민국정부도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1930년대 중반부터 한인 아나키스트들도 항일 민족전선에 참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유림과 유자명 등은 임시정부에 참가해 활동하였고⁴⁹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국민당에 가입해 항일전에 참가했으며, 다른 일부는 공산당의 민족통일전선에 호응해 공산군으로 항일전에 참가하였다. 정화암 유자명 라월환 등의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중일전쟁 발발 직전 좌파계열의 연합전선인 조선혁명자연맹⁵⁰을 결성하였고, 1938년 항일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를 결성하였다. 이런 행동은 일본과 중국의 아나키스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조세현, 2001: 151~152)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이후 중국에서 국공합작의 기운이 높아지자, 한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인 각 단체들도 한국광복전선과 조선민족전선 연맹등 연합전선을 결성하였다. 1938년 조선민족전선은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조직하여 중국과 공동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조선의용대 일부는 중국공산당의 항일근거지 연안(延安) 등으로 이전하여 항일투쟁을 벌였고, 일부는 1940년 여름 광복군(光復軍)에 합병되었다. 1940년 한국임시정부가 중경에서 조직한 '한국광복군'은 산서(山

49 유자명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임정에 통합하면서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기도 하였으나, 임정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의 임정활동은 아나키스트로서 외세침략에 맞서야 하는 저항적 민족주의 의식과 합치한 결과였다. 한상도(2007), 158~159쪽.

50 중국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1931년 결성한 남화한인청년연맹은 7년여에 걸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지역에서 결성된 모든 단체와 민족전선을 이루기 위해 조직의 명칭을 조선혁명자연맹으로 개칭하였다. 박난영(2005), 419쪽.

西) 수원(綏遠) 산둥(山東) 등지에서 항일 전투를 벌였다. 1941년 1월 한인 아나키스트들도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편입되어, 일제의 강권통치의 파괴와 자유연합적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였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하고, 적 후방 전선에서 팔로군(八路軍)과 신사군(新四軍) 및 조선의용대가 모두 참여해 공동 작전을 펼쳤다(한상도, 2004 : 258). 1942년 10월 11일 중국 국민당정부의 전시수도인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의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지사들과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 각계 인사들 400여명은 함께 중한문화협회를 창립하여,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고 동아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한시준, 2010 : 374).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내 일본인의 반전 연대활동도 전개되었다. 일본인 하세가와 테루는 중국 상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대일방송에 종사면서, 일본군인들에게 ‘그릇되게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⁵¹ 당시 중국 군대가 일본군 포로를 조선의용대에 인계함으로써, 중국내 일본인 반전 운동은 한 중 일의 국제연대 활동이 되었다.⁵² 당시 일본군에게는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포로가 되기 전에 자살하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선에서 중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들이 교육을 받은 후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향해 투항과 전선이탈을 호소하는 반전운동을 벌였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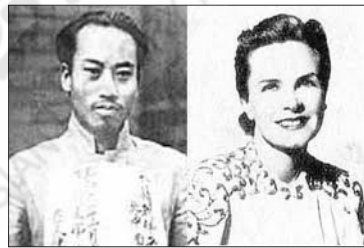
51 하세가와는 1932년 나라 여자고등사범학교 재학중에 에스페란토를 배우다가 체포되어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6년 중국인 유학생인 류런과 결혼하였고, 류런이 항일구국운동을 위해 귀국하자 그를 따라 상해로 건너가서 반전운동을 전개하였다.

52 중국국민당 정부의 ‘적극항전’ 노선을 배경으로 조선의용대 대만의로용대 재화일본 인민반전동맹이라는 3민족의 국제연대조직이 결성되었다. 한상도(2006), 17쪽.

53 중국내 일본군 포로들의 반전운동 지도자인 가지 와타루는 국민정부 쪽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인민 반전동맹 서남지부(1939년 11월 결성)를 조직하였다. 노사가 산조는 일본 병사 반전동맹 연안지부(1940년 5월 결성)를 조직, 포로가 된 일본병사의 교육을 위해 연안에 일본노동학교를 창설하였다. 1942년 8월 개최된 화북 일본인 반전단체 대표자대회 및 화북 일본병사 대표자대회를 계기로 ‘재화일본인 반전동맹 화북연합회’가 결성되었다. 1944년 2월 화북연합회는 ‘일본인민해방연맹’이라는

그런데 1941년 중국국민당과 공산당이 충돌한 환남(皖南)사건을 계기로, 조선의용대 주력이 공산당 항일근거지로 옮겨가면서, 일본인 반전활동은 화북의 공산당 관할지역에서 펼쳐졌다(한상도, 2004: 267).

이 시기 중국에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주의자거나 공산주의자거나 모두가 중국혁명의 승리어부를, 항일투쟁의 승리어부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과 항일통일전선을 맺고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피를 흘렸다. 중국정부는 1949년 신중국 건립후 중국혁명에 참가하여 희생된 한인들의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혁명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비문을 설치하여 기리고 있다(광주기의 열사능원에 건조된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誼亭) 등). 한편 전쟁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례도 있다. 예컨대 님 웨일즈의 『아리랑』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김산(본명 장지락)⁵⁴은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던 중,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격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일본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다. 이후 김산과 님 웨일즈가



김산

님 웨일즈

※ 자료 <http://people.aks.ac.kr>

이름으로 조직을 바꾸고, 전쟁의 즉시 종결, 참전국과의 공정한 강화, 전쟁 주모자의 처벌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⁵⁴ 김산은 1905년 3월 평양 부근에서 태어나, 1919년 3 1운동 후 구국의 일념으로 고향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공산주의자로 변모하였다. 그는 1925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26년 중국에서 분열된 조선 청년들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김원봉 김성숙 등과 조선혁명청년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는 중국 공산당원들과 광둥봉기에 가담하였고, 해륙봉 소비에트에도 참여하였다. 1930년과 1933년 두차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증거가 없어서 석방된 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일본 스파이로 의심을 받게 되자, 그는 의심을 풀기 위해 연안으로 가서 군정대학에서 일본경제 등을 가르쳤다.

공저한 『아리랑의 노래-어느 조선반역자의 일생』이 미국 뉴욕에서 출판되고, 일본어와 중국어로도 번역되었다. 1983년 1월 27일 중공중앙 조직부는 『장명(장지락) 동지의 명예회복에 관한 결론』에서 “장명 동지의 피살은 특정한 역사 조건하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다. 우리는 마땅히 오랫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당적을 회복시켜야 한다”⁵⁵고 하여 중국공산당과 연대한 그의 항일 활동을 인정하였다.

V. 맺음말

19세기 후반에서 1945년까지 동아시아 반전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과 국제연대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1900년대 일본에서 먼저 등장한 반전론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등의 평화사상이 제기되었고, 일본에서 전개된 아주화친회 등 반제국주의 독립을 위한 아시아의 연대운동,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 이후 중국에서 한중호조사 한중협회 등 다양한 조직 활동이 전개되었다.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한국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중국의 혁명활동에 참여하였고, 중국혁명가들과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다.

55 「阿里郎之歌-張志樂和中國革命的古事」 『中國人民報』 2010年 7月 2日 ; 阿里郎之歌-張志樂和中國革命的故事来源 : 『中國民族報』 <http://minzu.people.com.cn/GB/166719/12039296.html>

이시기 제국주의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고 아시아의 평등한 연대를 추구하기 위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진 아나키즘은, 1910~20년대 동아시아에서 반전과 국제연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00년대 일본 고토쿠슈이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1910년대 중국 리스펑의 상호부조론, 1920년대 신채호의 민족독립을 위한 민중해방의 논리로 대표되는 한중일 3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시기의 아나키스트들은 국제연대를 위해 소통과 평화의 언어인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였다.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일본과 중국에서 연대활동을 통해 농촌운동과 노동운동을 하였고, 여러 조직을 만들어 일제에 맞서 대항하였다.

1930년대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군국주의가 확대되자,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아나키스트들은 다양한 형태의 반전 활동을 전개하고 상호 연대하였다. 재일 한인아나키즘운동은 1935~37년경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박열 정철 등 아나키스트들은 해방후 거류민단을 결성하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아나키즘 국제연대는 비록 취약한 조직운영과 현실문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운동의 패인이라고 종종 지적된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민족과 지역을 넘어선 반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다양한 활동은 계속 이어져 왔으며, 무(無)강권 무(無)지배의 신사회 건설을 추구한 그들의 자유정신과 공동체 이념은 당시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다(김명섭, 2001:124쪽). 오늘날에도 그들이 제시한 이상주의적 전망은 여전히 새롭게 해석될 가치가 있다.

김산의 명예회복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 잘못 기술되거나 평가되었던 역사를 올바르게 재해석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8년 항일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1945년까지만을 공산당의 항일투쟁사로 규정하고, 1931년 만주사변 발발 후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하여 6년간 일제에 항거했던 조선인과 중국

인의 연대투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의 한중간 항일연대투쟁에서 한국의 역할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손잡고 만주 일대에서 벌였던 6년간의 항일투쟁을 ‘중국의 항일투쟁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⁵⁶, 그동안 잘못 평가되었던 역사를 재평가한 좋은 사례이다.

이 시기 반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경험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1942년 중경에서 결성된 한중문화협회는 1945년 8월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65년 한국이 이를 계승하는 한중문화협회를 결성하여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 1999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NGO대회를 계기로, 국제평화주의자 후세 다쓰지 표창운동이 일어났고, 그의 탄생 120주년 기념일인 2000년 11월 13일에는 ‘후세선생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다테노 아키라 편저, 오정환 이정환 옮김, 2006: 217).

중국에서 한중간 항일연대의 역사 유적지 일부는 현재 기념시설로 보존되고 있다. 상해와 항주 장사 중경의 임시정부청사 유적, 남경의 한국대일 전선통일동맹 회의개최지, 무한의 조선의용대 창설 장소, 쑨원의 호법정부가 세워진 뒤 임시정부와 각별한 관계를 갖게 된 광주,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계림 등지의 역사유적을 발굴 연구 보존하기 위해, 오늘날 한중 양국의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순에는 한국애국지사 안중근이 재판받았던 일본관동지방방법원구지진열관, 그리고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등 한국독립지사들이 순국한 여순 일야(日俄)감옥이 박물관으로 보존 전시되고 있다. 2008년에는 하얼빈의 조선민족예술관 내에 안중근 전시실이 마련

56 지난 30여 년간 “항일투쟁의 역사는 8년이 아니라 14년”이라는 李閔 전 黑龍江省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주장을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이 인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東北抗日聯軍의 투쟁이 중국의 항일투쟁사로 인정받게 되었다.(『흑룡강신문』 2010년 9월 6일 보도)

되는 등 기념관 건립과 기념행사 등을 통해 반전 평화 사상과 연대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 중 일간 추진되고 있는 공동역사교재 개발은 삼국간 불신과 대립을 끊고 평화와 상생의 재생산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공동교재개발은 동아시아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억공동체’를 만드는 교육, 세계시민으로서의 역사 또는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역사인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김성보, 2007 : 834~837). 공동교재 개발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반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과 역사 유적들을 발굴 보존 기념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의 동아시아사 교육은 반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연대활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편협한 민족주의나 애국주의가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단행본

- 고영일(2002), 『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1910~1952년 조선민족통사』, 서울: 도서출판 백암.
- 구승희 외(2004), 『한국아나키즘100년』, 서울: 이학사.
- 국가보훈처 편(1996), 『21세기와 동양평화론』, 서울: 국가보훈처.
- 김명섭(2008),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일본에서의 투쟁』, 서울: 이학사.
- 김희곤(2004),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덕 백지운 옮김(2004), 『일본과 아시아』, 서울: 소명출판.
- 다테노 아키라 편저 오정환 이정환 옮김(2006), 『그때 그 일본인들-한국 현대사에 그들은 무엇이었나』, 서울: 한길사.
- 無政府主義運動史편찬위원회(1978),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서울: 형설출판사.
- 박환(2005),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서울: 선인.
- 배경환(2007), 『쑨원과 한국-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교차』,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손염홍(2010),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서울: 역사공간.
- 안중수(2006), 『에스페란토, 아나키즘 그리고 평화』, 서울: 선인.
- 야마다 쇼지 저 정성태 옮김(2003), 『가네코 후미코-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일본 제국의 아나키스트』, 서울: 산치럼.
- 오장환(1998),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한국사연구총서 14.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원택 옮김(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일조각.
- 이호룡(2001),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서울: 지식산업사.
- _____(2008),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조세현(2001),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서울: 책세상.
- _____(2010),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 교류와 연대』, 서울: 창비.
-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5), 『미래를 여는 역사-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서울: 한겨레출판.
- 陶希聖(1938), 『反戰運動在日本』, 漢口: 自強出版社.
- 萬里賓(1933), 『世界反戰運動』, 上海: 生活書店.
- 反侵略運動大會中國分會編(1939), 『反侵略運動小冊1-反侵略運動地方組織須知』, 重慶.
- 石源華(2007), 『中韓文化協會研究』, 北京: 世界智識出版社.
- 井上學(2008), 『日本反帝同盟史研究: 戰前期反戰, 反帝運動の軌跡』, 東京: 不二出版.
- 鹿地亘資料調査刊行會 編(1994), 『日本人民反戰同盟資料』, 東京: 不二出版.

鹿地 亘(1982), 『日本人民 反戦同盟闘争資料』, 東京: 同成社.

加藤陽子(2002), 『戦争の日本近代史』, 東京: 講談社 박영준 역(2003), 『근대일본의 전쟁논리
-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서울: 태학사.

加藤陽子(2005), 『戦争の論理』, 東京: 勁草書房.

加藤陽子(2009), 『それでも日本人は‘戦争’を選んだ』, 東京: 朝日出版社.

藤原彰 姫田光義(1999), 『日中戦争下中國における日本人の反戦活動』, 東京: 青木書店.

入江昭(1986), 『二十世紀の戦争と平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 논문

康基柱(1997), 「中韓互助社研究」, 경원대 『아세아문화연구』 2집.

강동국(2009),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과 그 시대』, 경인
문화사.

김경일 강창일(2000),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

김기승(2000), 「일본유학 시기 조소앙의 사상형성」 『삼균주의연구논집』 제21집.

_____(2002), 「단재 신채호의 생애와 역사관」 『인문과학논집』 34.

_____(2008), 「일본 유학을 통한 조소앙의 근대 체험-제국주의적 근대 배우기에서 근대
극복으로」 『삼균주의연구논집』 제29집.

김명섭(2001), 「1930년대 在日韓人 아나키즘운동의 제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7집.

_____(2006), 「한일 아나키스트들의 사상교류와 반제 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_____(2007),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운동」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제1호.

김성보(2007), 「민족 국민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동아시아의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모색」,
『역사와실학』 32.

김승용(2004), 「韓 中 知識人の 交流史 연구를 위하여」, 『중국사연구』 29.

김시준(1997), 「노신이 만난 한국인」 『중국현대문학』 13.

김영천(2007), 「단주(坦洲) 유림(柳林)의 아나키즘과 독립운동」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제1호.

김희곤(1984), 「同濟社의 結成과 活動」 『한국사연구』 제48호.

노명환(2010), 「유럽통합 사상과 역사에 비추어 본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세계사적 의의」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박난영(2005), 「바진(巴金)과 한국인 아나키스트」 『혁명과 문학의 경계에 선 아나키스트 巴金』,
한울.

- (2008), 「신채호와 바진(巴金)의 아나키즘과 반전사상」 『반전으로 본 동아시아 : 사상 운동 문화적 실천』, 혜안.
- 박양신(2008), 「메이지 사회주의자의 반전론-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非戰論을 중심으로」 『반전으로 본 동아시아 : 사상 운동 문화적 실천』, 혜안.
- 박진수(2008), 「동아시아의 반전과 근대국가」 『반전으로 본 동아시아 : 사상 운동 문화적 실천』, 혜안.
- 박환(1988), 「1920년대 在韓國人의 무정부주의운동과 ‘奪還’의 간행」 『한국학보』 14-3.
- 배경한(1996), 「손문과 상해한국임시정부」 『동양사학연구』, 제56집.
- (2002), 「삼균주의와 삼민주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15집.
- 孫科志(2001), 「한인사회와 중국인」 『上海漢人社會史 : 1910~1945』, 한울아카데미.
- 신복룡(2007), 「신채호의 무정부주의」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제1호.
- 신승하(1983), 「예관 신규식과 중국혁명당인과의 관계」, 중국학논충간행위원회 『김준엽교수 회갑기념중국학논총』.
- 신주백(2002),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억의 차이, 그리고 역사교육」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 楊天石(2006), 「중 한 애국지사의 초기 연계」, 제13차 국제역사교과서학술회의, 『한 중 대 학생의 비폭력 항일 애국운동의 비교』.
- 오장환(1992), 「1920년대 재중국 한인 무정부주의운동」 『국사관논총』 25.
- 유용태(2009),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유인선(2004), 「판 보이 찌우(Phan Bội Châu, 1867~1940)-방황하는 베트남 초기민족주의자」,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제90집.
- 이호룡(2003), 「신채호의 아나키즘」 『역사학보』 177집.
- 조광수(2002), 「중국 근대 한 아나키스트의 이상과 좌절: 劉師培의 경우」 『정치사상연구』 7집.
- (2006), 「동아시아 아나키즘의 시론적 비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구 영남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9-2.
- 조성환 김용직(2002), 「문명과 연대로서의 동아시아」 『대한정치학회보』 9권 2호.
- 조세현(2001), 「동아시아(한 중 일) 아나키즘의 비교」,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1집.
- (2003), 「1920년대 전반기 재중국 한인 아나키즘운동-한 중 아나키스트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 (2005), 「동아시아 3국(한 중 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相互扶助論』을

- 중심으로』『中國史研究』39집.
- (2007), 「에스페란토(世界語)와 중국 아나키즘 운동」,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제63집.
- 한상도(2004), 「조선의용대와 재중 일본인 반전운동집단의 연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 (2006), 「국제적 반제국주의 연대투쟁으로서의 한국독립운동—중일전쟁 전후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6집.
- (2007), 「유자명의 아나키즘 이해와 한 중 연대론」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제1호.
- 한시준(2010),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 현광호(2010), 「안중근의 한중일 인식—동양평화론의 배경」 『한국학논총』 33.
- 황동연(2005), 「20세기초 동아시아 급진주의와 ‘아시아개념」 『대동문화연구』 50.
- 徐勇(2009), 「論日本の東亞擴張與安重根東洋和平論」, 안중근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미래』 (자료집), 안중근 하얼빈 학회, 동북아역사재단.
- 石源華(2007), 「中國抗戰洪流中的朝鮮志士」 『世界知識』, 19.
- 木畑洋一(2004), 「20世紀の戦争とは何であったか」 『講座 戦争と現代2』, 東京: 大月書店.
- 許壽童(2010), 「國境を越える連帯—1920年代廣州における‘中韓協會」 『國民國家の境界』,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서구 문물수용과 변화

조명철 | 고려대학교

- I. 에도 막부 말기의 문화
- II. 메이지 유신과 문명개화
- III. 근대문화의 변용
- IV. 국민생활의 근대화

I. 에도 막부 말기의 문화

1854년 개국이 되자 일본은 구미제국의 외압과 내부 통치체제의 동요로 인해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막부는 구미제국과의 교류를 넓히고 대내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 문화와 학문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꾀하고자 했다. 이처럼 서구 문물의 수용에 있어서 막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막부에 저항했던 서남의 옹변 세력은 존왕양이론을 내세워 서양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물론 서남 옹변들의 반서양화 경향은 1860년대 초반 서양과의 무력충돌에서 패한 시기를 기점으로 극적인 반전을 보이지만 개국초기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중심은 막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학(大學)의 탄생

개국한 다음해인 1855년에 막부는 기존의 반쇼와게고요[灣書和解御用]¹를 독립시켜 양학소(洋學所)를 세우고 곧 이것을 한쇼시라베쇼[番書調所]²로 개칭했는데 여기에서는 구미 각국의 어학과 과학에 관한 교육과 연구 및 외교

1 1811년 蘭學(당시 서양학)을 가르치기 위해 막부가 설치한 교육기관. 네덜란드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학술의 충칭. 물론 민간에서도 난학을 가르치는 많은 사설 학원이 있었다.

2 1855년 양학소가 설치되었으나 그 해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불타버려 다음해 한쇼시라베쇼라는 명칭으로 새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난학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외국문서의 번역과 외국과의 외교절충 등도 담당했다. 1862년 요쇼시라베쇼[洋書調所]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863년 가이세이쵸[開成所]로 개칭되었다. 주로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외국어와 서양 과학을 가르쳤다.

문서의 번역 등이 이루어졌다. 물론 현실적인 필요와 학문 연구, 교육 등이 분리되기도 전이었고 관련된 용어조차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능이 한 곳에 몰려 있기도 하고 기관의 명칭도 수시로 바뀌었다. 1863년 요쇼시라베쇼[洋書調所]에서 가이세이쵸[開城所]로 개칭되어 의학, 군사 등 자연과학에 치중해 있던 기존의 서양학이 철학, 정치, 경제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 가이세이쵸는 메이지정부 시기에 가이세이 학교가 되었다가 도쿄대학[東京大學]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근대적인 교육기관인 대학도 수차례의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의학 분야에서는 1860년,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민간이 만든 종두소(種痘所)를 막부가 직접 관할하고 나아가 의학소로 개칭하여 서양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시기에 막부는 막부의 관료인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長]나 요쇼시라베쇼[洋書調所]의 교관인 니시 아마네[西岡], 쓰다 마미치[津田眞道]를 네덜란드로 유학보내고 1866년에는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를 영국으로 유학시켜 구미제국의 정치, 법제, 경제를 공부하게 했다. 조슈[長州]번에서는 1863년,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번의 관리 5명을 영국으로 보냈고 사쓰마번에서도 고다이 도모아쓰(五代友厚),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등 무려 19명을 영국으로 보내는 등, 양이론에서 개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막부뿐만 아니라 유력한 번들도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외국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여 막부는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시켜왔던 조치를 완화하고 1866년에는 학술과 상업을 위한 외국으로의 도항을 허가했다. 그 외에도 요코하마[横浜]에는 외국인 선교사, 신문기자가 내일하여 그들을 통해 구미의 정치와 문화가 일본인에게 소개되었다.

1857년 통상조약 체결에 의해서 내일한 선교사 중에서 의사이기도한 미

국인 헛번(Hepburn)은 진료소와 영학숙(英學塾)을 열고 헛번식이라고 불리는 일영사전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서양문화를 일본에게 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영국 공사 올코크(Rutherford Alcock)는 일본의 미술공예품을 수집해서 1862년 런던의 세계산업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했고 막부는 1867년 파리만국박람회³에 우키요에[浮世繪]⁴와 도자기 등을 출품하고 일본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제고시키고자 힘썼다. 이처럼 양이의 사고방식이 점차 바뀌어지면서 구미를 본받아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소리가 강해졌다.

II. 메이지 유신과 문명개화

메이지[明治] 유신은 왕정복고라는 형태로 행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고적 색채가 상당히 강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습타파를 외치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강력하게 구미의 새로운 제도, 지식, 문물을 수용했기 때문

3 파리에서는 1855년부터 1947년까지 아홉차례의 국제박람회가 열렸다. 일본은 1867년 제2회 만국박람회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사쓰마번이 막부와 다른 독자적인 이름으로 참여하는 등 막부 말기의 혼란상을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보여주었다.

4 에도시대의 풍속화를 가리키는 말. ‘우키요’는 당시, 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제로는 고전문학, 전설, 괴담, 당시의 풍속, 풍경, 황실, 종교, 연극 등 매우 다양했다. 양식에는 판화와 회화가 있으나 직접 그린 회화는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의 손이 미치지 힘들었고 서민은 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판화 형식의 우키요에에 만족해야 했다. 남아 있는 우키요에도 판화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우키요에 하면 풍속도를 그린 판화로 이해되기도 한다.

에 교육, 문화, 사상, 국민생활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이른바 문명개화라고 불리는 풍조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1. 종교

정부는 처음 왕정복고에 의해서 '신무창업(神武創業)⁵'의 때로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제정일치의 입장을 취하여 신무관(神武官)을 부활시키고 많은 국학자, 신도가를 등용했다. 그리고 선교사(宣敎使)를 두어 신도를 중심으로 국민교화를 지향하여 1870년 '대교선포(大敎宣布)의 조(詔)'를 발포하고 이어 신사제도(神社制度)를 만들어 신사의 직무를 정하고 제사의식을 통일하는 등 정부의 보호 아래 신사신도(神社神道)의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1869년 보신(戊辰)전쟁의 전사자를 합동으로 제사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설치된 초혼사(招魂社)가 1879년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로 개칭되어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로 자리잡게 되었다.⁶

이러한 과정에서 천황의 친정(親政)이 강조되어 국민에게도 천황이 옛부터 일본의 통치자였다고 하는 선전이 행해져 천황의 신격화가 진행되었다. 천장절(天長節), 기원절(紀元節)이 국가의 축제일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의도의 하나였다.

5 신무(神武)는 초대 천황을 가리키는 말로 초대 천황이 일본을 처음 만들던 일을 신무창업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의 명분과 본질이 왕정복고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의 하나였다.

6 야스쿠니 신사에서 모시는 신은 일본의 전통신이나 천황이 아니라 전몰자와 이른바 나라를 위해 죽은 영령들이다. 제사 행사는 1945년까지 육군성과 해군성에서 주관해왔다.

또 1868년 정부에서 나온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을 계기로 폐불훼석(廢佛毀釋)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절, 불상, 경전 등이 파손당하거나 불타버려 불교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신도에 의한 국민교화와 불교의 배척은 국민에게 충분히 수용되지 않아 점차 퇴조했다. 1872년 신기성(神祇省)은 교부성(敎部省)으로 개칭되고 불교의 승려도 교도직(敎導職; 선교사의 후신)에 임명되도록 했다. 그러나 교부성도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1877년에 폐지되었다.

한편 기독교는 새 정부 수립 후에도 여전히 금지되어 나가사키의 우라카미[浦上]에서는 많은 신도가 체포되어 개종을 강요당하는 우라카미 신도탄압사건이 일어났다. 외국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는 한편, 이와쿠라[岩倉] 사절단⁷ 일행이 구미를 시찰할 때, 기독교 금지가 조약개정 교섭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메이지정부는 기독교 금지를 풀었다.

2. 교육제도

근대화를 유효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계몽, 개명화에 힘을 쏟았다. 그 첫 걸음으로서 구미의 근대적인 학교교육제도의 채용을 꾀하여 1871년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문부성을 설치하고 이어서 다음해인 1872년 학제(學制)를 공

⁷ 이와쿠라 사절단은 사절과 수행원, 유학생을 포함하여 106명의 대규모 사절단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12개 국가를 순방했다. 목적은 서양문물의 견식과 조약개정이었으나 조약개정은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사절단은 1871년 11월 13일에 출발하여 1873년 9월 3일에 귀국했다.

포하여 남여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몸을 세우고 지식을 쌓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리주의적 교육관에 입각하여 국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전국에 2만개 이상의 소학교(小學校; 초등학교)⁸가 설립되어 학교 교육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것은 에도시대에 테라고야[寺子屋]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서민교육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875년에는 남자 아이의 소학교 진학률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자는 18.7%에 지나지 않아 남녀의 초등교육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었다. 또 농촌에서는 귀중한 노동력인 아동의 통학을 반대하는 요구도 있고 수업료와 학교 설립비와 같은 부담도 적지 않아 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농민의 이끼[一揆]⁹가 일어난 지역도 있었다.

학제는 주로 프랑스의 제도를 모델로 해서 전국을 8개 대학구, 각 대학구에 32개의 중학구, 각 중학구에 210개의 소학구를 두고 각 학구마다 대학, 중학, 소학교를 1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쳐 당시의 실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실시하지 못한 채, 1879년 새로 제정된 교육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또 정부는 막부의 쇼헤이자카[昌平坂] 학문소와 가이세이조[開城所]를 이어받아 1869년 대학남교(大學南校)를 설치하고, 일본인 양학자와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양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학교

8 소학교는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군국주의 시기인 1941년 황국신민(皇國臣民)의 학교라는 의미로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45년 패전후에 다시 소학교의 명칭을 되찾았다. 다만 한국에서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최근까지 계속되다가 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9 농민이나 서민층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평화적인 시위나 읍소의 형태에서 간혹 무력을 동원한 저항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란이나 폭동으로 번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는 그 후에 도쿄[東京] 의학교와 합병하여 1877년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근대적 종합대학인 도쿄대학[東京大學]이 되어 학술연구와 고등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나아가 여자 교육에서도 1872년 도쿄에 관립여학교, 이어서 여자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여성교육의 발전을 모도했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니이지마조[新島襄]의 도시샤[同志社] 등 사립학교가 창립되어 특색있는 학풍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담당했다.

3. 국민생활

문명개화의 풍조는 도쿄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나타났다. 1872년에 발생한 긴자[銀座] 일대의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방화와 미관을 고려하여 긴자 거리에 벽돌식의 서양식 건축을 나란히 세웠다. 1871년에는 산발탈도령(散髮脫刀令)이 나왔고 짧은 머리와 양복 착용이 점차 퍼져나갔다. 거리에는 가스등과 램프가 켜지고 인력거, 마차 등이 달리게 되었다. 식사에 있어서도 육식의 습관이 서양으로부터 전해졌는데 특히 소고기를 좋아했다. 또 정부는 서양제국의 예에 따라 지금까지의 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을 채용하기로 하고 1872년 12월 3일을 양력으로 1873년 1월 1일로 삼았다. 그후에 일요일을 휴일로 삼아 쉬는 제도도 만들었다.

문명개화의 풍조 속에서 일본 고래의 전통적인 예술이나 미술공예품이 홀대를 받고 유서 깊은 사찰이나 고성이 파괴되는 등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어 갔다. 나라의 흥복사(興福寺)의 오층탑이 겨우 25엔(현재 30~40만엔정도)에 팔려 나가기도 했다.

메이지 초기에 내일한 독일 의사 베르츠(Erwin von Bälz)는 일본의 젊은 지식인이 일본의 전통적 문화와 역사를 무시하고 오래된 것을 모두 부정하려는 모습에 놀랐다. 그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외국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 풍속, 습관이 퍼진 것은 도쿄, 요코하마 등의 대도시, 개항장, 관청, 학교, 군대 등으로 농촌에까지는 깊이 확산되지 않아 지방의 농촌에서는 여전히 음력에 의해 연중행사가 이루어지는 등, 에도시대 이래 전통적인 생활 습관이 계속되었다. 문화 생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여전히 컸다.

4. 사상

문명개화의 풍조와 더불어 사상계도 활성화되어 인간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자립을 존중하는 구미의 새로운 자유주의, 공리주의 사상과 학문이 들어오고 그것에 기초를 둔 정치제도, 경제조직, 법률 등의 신지식이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소개되고 주창되어 일반에게 수용되어 갔다.

특히 후쿠자와 유키치는 『학문을 권함』을 써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학문을 배워서 봉건적 신분을 타파해야 하고 자주(自主)와 자유의 정신에 기초한 개인의 독립이 국가의 독립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초판에서 17판까지 출판되었는데 1880년까지 약 70만부가 인쇄되는 경이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후쿠자와는 『문명론의 개략』을 저술하여 인간의 지덕의 진보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라고 외쳤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사상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막부 말기에 『인초(隣草)』를 써서 서양의 입헌정치를 소개하고 그것을 채용할 것을 주장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유신 후에도 계속 『입헌정체본략』 『국체신문』 등을 저술하는 한편 입헌정치의 지식을 전파하고 천부인권론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1880년대에 들어가자 사회진화론의 입장으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천부인권론을 부정하게 되었다.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는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 『자유 의 이치』를 번역하고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사상을 전했다. 니시 아마네[西岡]는 쓰다 마미치[津田真道] 등과 함께 막부 말기에 막부 유학생의 한사람으로서 유럽에서 공부했는데 메이지 초기에는 철학이나 이론 등에 관련된 저작을 주로 저술하였다. 쓰다는 만국공법과 법률학을 공부하고 이러한 분야의 저작과 함께 출판의 자유, 폐창(廢娼)¹⁰ 국회의 조기 개설 등을 외쳤다. 또 이와쿠라 사절단에 동행하여 프랑스에 유학한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은 귀국후 급진적인 자유주의 사상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하여 『민약역해(民約譯解)』라는 제목으로 공간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전하고 자유민권운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문명사관의 입장에서 『일본개화소사(日本開化小史)』를 써서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몽사상가들이 1873년 서양의 학회를 모방한 메이록샤[明六社]를 결성했다.

메이로쿠샤는 미국에서 귀국한 외교관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1873년 8월 구미제국의 학회를 모델로 학술, 담화의 모임을 설립하려는 뜻으로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등과 상의한데서 시작되었다. 정식 발족은 1874년 2월로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매월 2~3회, 각 4천에서 5천부)와 강연회, 담

10 공창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여성운동으로 전개되어 공창제도가 폐지되는 국가가 나타나기도 했다.

화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학술, 지식, 사상의 계몽운동을 추진했다. 모리, 니시무라 이외에 후쿠자와 유키치, 가토 히로유키, 나카무라 마사나오, 쓰다 마미치, 니시 아마네,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 등 양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들은 모리를 제외하면 서남의 웅변 출신이 아니고 그 대부분은 중, 소번의 출신이면서 막부 말기에 막부의 양학교 기관에서 근무하고 막부의 신하로서 서양학의 연구와 교육, 서양서의 번역 등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 유신후 후쿠자와 유키치를 제외하고 대부분 메이지 정부에 들어가서 관료로서 그들의 신지식을 크게 활용했다. 구막부의 인재육성 정책이 일본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75년 6월, 참방률(讒謗律)¹¹ 신문지조례의 제정과 같이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메이로쿠샤의 활동은 활기를 잃고 1875년 11월에는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도 폐간되었다.

이러한 신사상과 신지식의 보급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신문, 잡지, 출판 사업의 발달이었다. 신문은 이미 막부 말기에 나왔지만 1870년 일본최초의 일간 신문으로서 『요코하마마이니치신문[横浜毎日新聞]』이 발행된 것을 시작으로 1870년대에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 『닛신신지지[日新眞事誌]』 『조야신문[朝野新聞]』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유빙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이 연이어 창간되었다. 그 대부분은 정치문제 등을 논평하고 정치적 주장을 전개하는 등 정론신문의 색채가 강했는데 그 중에는 에도 시대의 요미우리가와라반[讀賣瓦版]¹²의 전통을 이어서 사회

11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서 신문이나 풍속화 등으로 당시의 관리나 위정자를 비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2 에도시대 대사건, 화재, 괴담 등 시사성이 높은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준 정보지. 길거리에서 팔기위해 걸어다니면서 읽었다고 해서 요미우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후 현재의 요미우리 신문이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도 한다.

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작은 신문들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출판물이 발행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모토키 쇼조[本木昌造]가 연제활자의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여 활판인쇄가 수월해졌기 때문이었다.

5. 고용 외국인

메이지 정부는 선진국의 제도, 지식, 기술 등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구미제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자, 학자, 교사, 군인 등을 초빙했다. 그 수가 픽크에 달한 것은 1870년대 중반으로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이 500명을 넘어섰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인이 과반수를 넘었고 이어서 프랑스인, 미국인, 독일인의 순이었다. 1880년대 이후 점차 일본인이 그들을 대체해 가면서 1892년에는 130명으로 전성기의 4분의 1로 줄었다. 이 때에는 독일인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법률 제도와 군사 제도의 분야에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용된 외국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고액의 월급을 받았다. 예를 들어 1870년 철도건설을 담당한 초대 건축소장인 영국인 모레일(Edmund Morel)은 28세였지만 첫해의 월급이 멕시코는 700달러, 3년째부터 1000달러(당시 1달러는 약1엔)의 계약으로 일본정부의 최고관직인 태정대신의 월급 800엔보다 많았다. 최하급의 고용 외국인 직공도 월급 72달러로 일본인 직공의 10~15배에 달했다.

III. 근대문화의 변용

1. 메이지 문화의 특색

메이지 문화의 특색은 먼저 에도시대 이전의 일본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사상, 학문, 예술 등 각분야에서 급속히 서양의 근대화를 받아들여 일본 특유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한 것이다.

둘째로 문화는 당초 정부의 지도와 육성을 통해서, 발전했지만 이후에는 점차 국민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국민문화로서 성장했다. 이러한 문화의 보급은 교육제도의 충실, 통신, 교통기관의 발달, 저널리즘과 출판사업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셋째로 근대문화의 특질로서 과학적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와 함께 학문, 문학, 예술 등이 정치, 도덕, 종교로부터 독립해서 발달했다. 하지만 충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치권력이나 도덕적 견지에서 학문의 이론이나 학설이 왜곡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에도 시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학문, 문학, 예술 등의 독립성이 훨씬 강화되었다.

네번째로 서양 근대문화의 수용, 발전이 너무나 급격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천박함에 빠지기 쉬웠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 서양 문화의 수용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근대국가의 형성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반드시 국민의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상적인 모방의 성격은 피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전통적, 일본적인 것과 외래적, 서양적인 것과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문화적 혼란을 만들어낸 면도 있다.

2 사상계의 동향

구미열강으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근대적 국민 국가 형성의 길을 걸어온 일본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식인 사이에 일찍부터 개인의 권리, 자유와 함께 국가의 독립과 국권의 확장이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과제로서 자각되었다. 그런 이유로 메이지 초년부터 나카에 조민, 오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 등이 프랑스식의 천부인권론에 근거한 자유민권사상을 전파했지만 거기에는 국권론의 요소가 크게 포함되어 있었다.

1880년대 말부터 정부가 그때까지 추구해온 구화정책이 껌데기뿐이라고 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민간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도투토미 소호[徳富蘇峰]는 1887년 민우사(民友社)를 설립하고 그해 잡지 『국민의 벗(國民之友)』, 1890년에는 『국민신문(國民新聞)』을 창간하고 아마지 아이산(山路愛山), 다케고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 등과 함께 평민적 구화주의를 주창했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구화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서양문화를 섭취하는 것으로 영국적인 의회정치와 사회정책도 주장했다. 한편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스기우라 주고[杉浦重剛], 구가가쓰난[陸羯南],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등의 정교사(政教社)의 그룹은 잡지 『일본인(日本人)』과 신문 『일본(日本)』에서 서양문화의 무비판적 모방을 반대하고 일본의 고유한 전통 속에서 가치의 기준인 진선미를 찾아 그것을 기초로 국민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이른바 국수보존주의를 주장했다. 어쨌든 국민을 기초로 한 내셔널리즘의 입장에 서서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청일전쟁을 계기로 점차 비판적인 입장은 사라지고 도쿠토미의 국가주의로의 변신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가주의에 동화되어 갔다. 또 1900년 쯤에는 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형태로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는 잡지 『태양(太陽)』에서 일본주의(日本主義)를 주창했다.

청일전쟁 후에는 일본의 대외팽창, 대륙진출과 그것을 지탱하는 국가주의가 사상계의 주류가 되었다. 가토 히로유키,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등 제국대학의 학자가 중심이 되어 독일식의 국가주의와 사회유기체론을 수용하여 개인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회진화론이 가토 등에 의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것을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적용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승열패, 약육강식을 긍정하는 사고방식이 강화되었다. 국가주의 사상은 전통적인 유교도덕과 결합되어 일본을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대가족으로 보고 ‘충효일치’ ‘충군애국’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가족국가관은 메이지 시대 말기에는 정부에 의해 국정 도덕교과서에 들어가 의무교육의 보급과 국민도덕론의 전개와 더불어 널리 국민 사이에 국제관념으로 뿌리를 내리고, 천황제 국가의 사회질서를 내면에서부터 지탱하는 강력한 도덕적 정신적 기둥이 되었다.

이러한 사상에 반하는 사고방식이나 학문 연구에 대해서는 종종 강한 압박이 가해졌다. 신도의 실증적 연구 「신도는 제천의 고속(古俗)」이란 논문을 『사학잡지(史學雜誌)』에 발표한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가 신도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제국 대학 교수를 사임하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교육칙어에 대한 배례를 거부한 제일고등중학교의 촉탁 교원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가 학생과 저널리즘의 비난을 받고 이에 동조한 학교당국에 의해 교단으로부터 쫓겨났다. 또 초등학교용 역사 국정교과서에 남북조 병립설을 집필한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가 남조를 정통으로 삼는 입장으로부터 격렬하게 공격을 받아 편수관을 휴직하는 사건도 있었다.

3. 신앙의 자유

메이지 초년 신도에 의한 국민교화의 방침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정부는 국가의 통제 하에 신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와 동시에 민간의 신도로서 정부의 공인을 받은 것이 교파신도였다. 메이지 연간에 13개파의 교파신도가 공인되었다. 그중에서도 막말에 일어난 천리교(天理教), 금광교(金光敎) 등은 서민 사이에 널리 퍼졌다.

한편 불교는 폐불훼손의 풍조가 약해지면서 세력을 회복하고 이노우에 엔료(井上門了)와 같이 국수주의의 입장에서 불교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默雷)와 같이 신도의 국교화에 반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불교부흥을 꾀한 불교사상가도 나타났다.

기독교는 막말부터 네덜란드인 버베크(Verbeek), 미국인 헛번, 제인스(Janes), 러시아인 니콜라이(Nikolai) 등의 외국인 선교사가 내일하여 포교했는데 1873년 금지초지가 풀려 구미의 새로운 문화, 사상의 유입과 함께 주로 지식인 계층에게 수용되어 갔다. 특히 막말에 새롭게 들어온 개신교의 각파는 외국인 선교사 중심으로 왕성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교회와 학교들을 세웠다. 또 일본인 신도들 가운데 니이지마 죠(新導襄), 우치무라 간쥬,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 에비나 단쥬(海老名彈正)와 같은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 교육자가 나타났고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독교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와 폐창운동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 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강해져 1889년에 공포된 메이지 헌법 가운데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는 식으로 명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서민 사이에서는 그다지 널리 퍼지지 못했다. 또 교육칙어가 발표되고 우치무라 간쥬 불경사건이 일어나자 ‘충군애국’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맞지 않는다는 공격도 일어나고 불교계로부터도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 종교계는 혼란스러웠다.

4. 교육의 보급과 통제

정부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민교육을 중시하고 그 보급,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872년에 발표된 학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국민의 실생활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1879년 정부는 이것을 폐지하고 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교육령은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띠어 소학교 교육도 대강만을 정하고 그 실제의 운영은 각 지방의 자주성에 맡기기로 했다. 최저 취학기간은 16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임주의에 의해 오히려 교육이 쇠퇴할 위험이 있어서 다음해 정부는 교육령을 대폭 수정하여 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취학 기간을 3년간으로 정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1877년, 도쿄가이세이[東京開城]학교와 도쿄의학학교가 합병하여 도쿄대학이 설립되어 일본에서 최초의 서양식 근대적 종합대학이 발족했다. 이처럼 교육은 점차 보급되어 갔지만 반정부적인 자유민권의 풍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초기의 자유주의 공리주의적인 교육정책에서 점차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초등학교에서는 유교도덕에 기초한 윤리 교육이 중시되었고 정부에 의한 교과서의 검정제도도 실시되어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1886년에는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에 의해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중학교령, 소학교령 등 일련의 학교령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소학교령

에서는 소학교[초등학교]는 보통 소학교 4년으로 하고 보호자에게는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했다. 나아가 1894년 고등학교령, 1899년 실업학교령, 고등여학교령, 사립학교령, 1903년에 전문학교령, 1918년 대학령이 연이어 공포되었다.

교육의 보급에 있어서는 1890년 소학교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보통 소학교에서 3~4년간의 의무교육제도가 정해졌고 1900년의 개정으로 4년간의 의무교육기간이 확정됨과 동시에 학교의 수업료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의무교육의 취학률 특히 여아의 취학률이 대폭으로 증가되었다. 1907년에는 보통 소학교가 6년으로 연장되고 이것이 의무교육이 되어 국가의 의한 초등교육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메이지 말기에 소학교는 2만5천개가 넘었고 아동의 취학률은 98% 이상까지 올라갔다. 남녀의 취학률의 격차도 거의 없어졌다.

정부의 국가주주의적 교육이념을 널리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1890년에 발표된 교육에 관한 칙어였다. 이것은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교적인 가족주의의 도덕과 근대적 국가주의에 기초한 애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충군애국’ ‘충효일치’를 교육의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황은 단지 정치적 주권자일뿐 만 아니라 국민의 도덕적 사상적 중심이 되었다. 교육칙어는 학교에서 봉독됨으로써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그 이념은 1903년에 시작된 초등학교의 검정교과서 제도와 어울려 특히 윤리 교과서를 통해 널리 국민에게 국제관념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를 내면으로부터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 의숙, 니지마 조의 도지사 영학교, 오오쿠마 시게노부의 도쿄전문학교(후에 와세다대학)을 비롯하여 도쿄법학사, 메이지법률학교(후에 호세[法政]대학), 영국법률학교(후에 주오[中央]대학), 관서법률학교(후에 간사이[關西]대학)이나 기독교계의 미션스쿨 등의

사립학교가 발달했다. 관학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교육의 보급에 힘써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여자고등교육 측면에서는 여자사범학교, 여학교 등이 만들어졌는데 수요가 점차 많아져 정부는 1899년에 제정한 고등여자학교령에 따라 전국에 고등여학교를 설치하고 여성교육의 보급을 꾀했다. 1900년 전후에는 일본여자대학교, 여자영학숙(女子英學塾) 등이 창설되었다. 대부분은 이른바 현모양처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여자고등교육은 남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5. 학문 발달

19세기 유럽에서는 다윈의 진화론 등의 영향으로 과학적 정신이 중시되었다. 그것은 인문, 사회과학 제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종종 종교상의 교의와 대립하거나 충돌했지만 점차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학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진화론은 1870년대 후반, 미국의 동물학자이면서 제국대학의 교수로 초빙된 모스(Morse) 등에 의해 일본에도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미국과 달리 기독교사상과 충돌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일찍부터 확산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초기 정부는 왕성하게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그의 지도하에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1890년대 이후가 되면 점차 일본인의 학자에 의해서 독창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리학 분야에서 오오모리 후사기치[大森房吉]의 지진계 고안, 기무라 히사시[木村榮]의 위도변화공식의 Z항의 발견, 나가오카 한타로[長岡半太郎]의 원자모형이론의 발표 등이 있다. 의학에서는 고츠(Heinrich Hermann Robert

Koch)에 이어서 세균학을 연구한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가 파상풍균의 순수배양, 면역체의 발견 등 업적을 올리고 그의 제자 시가 기요시[志賀潔]가 적리균(赤痢菌)을 발견하고 노구치 히데요[野口英世]는 독사의 연구, 매독스피로헤타의 순수배양에 성공하는 등 모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약학에서는 하타사 하치로[秦佐八郎]의 살바산(salvarsan)의 발명, 다카야마 조기치[高峰讓吉]의 아드레날린, 다카지아스타제의 복제, 스즈키 우메타로[鈴木梅太郎]의 비타민B1의 발견 등 중요한 업적이 나왔다. 식물학에서는 많은 신종을 발견하고 식물분류학에서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마키노 도미타로[牧野富太郎]가 유명하다. 수학에서는 근대수학의 개척자 기쿠이케 다이로쿠[菊池大麓]가 있고 응용화학에서는 시모세 마사치카[下瀬雅允]가 발명한 신화약이 러일전쟁에서 실용화되어 큰 위력을 발휘했다.

한편 공업기술의 분야에서는 도요다 사키치[豊田佐吉]에 의한 자동기계의 발명을 비롯한 일련의 기계의 개량이 먼직업과 방직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또 백열전등, 무선전신, 전화 등이 수입되어 실용화되고 메이지 말기에는 자동차가 수입되어 육상교통기관으로 쓰이게 되었다. 전기사업 특히 수력발전사업이 크게 발달했는데 그와 맞물려 공장의 전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과학기술교육도 점차 보급되어 대학의 이공계학과 각종 학회, 연구소 등이 설립되고 정비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과학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책에 의해서 현저하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수준에 다가갔지만 관학과 군사연구에 편중되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민간의 자주적인 연구가 냉대받아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인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인문과학 사회과학에서는 처음에 영미계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주류였지만 메이지시대 이후에는 독일계의 국가주의적 학문이 점차 우세해졌다. 철학에서는 독일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오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오오니

시 하지메[大西祝], 법학에서는 프랑스법의 우메겐 지로[梅謙次郎], 도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영국법의 호즈미 노부시게[穂積陳重] 경제학에서는 다쿠치 우키치[田口卯吉] 등이 업적을 내었다. 역사학 분야에 있어서도 서양류의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들어와 에도시대 이래의 고증학적 전통과 연계되어 여러가지 업적이 나왔다. 메이지 초기에는 문명서관에 기초한 새로운 역사관이 수용되었고 다구치의 『일본개화소사』와 같은 문명서관에 의한 일본사의 개설서가 나타났다. 메이지 중기가되자 제국대학에 초빙되어 온 리스(Riess)의 지도 하에 독일류의 실증주의 역사학이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시게노 야스즈구[重野安釋], 미카미 산지[三上參次], 동양사에서는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나이토 고난[内藤湖南], 서양사에서는 쓰보이 쿠메조[坪井九馬三] 등이 배출되었다. 제국대학에 사료편찬소가 만들어지고 『대일본사료』 『대일본고문서』 등의 편찬사업이 진행되었다. 일본문학에서는 하가 야이치[芳賀矢一], 후지오카 사쿠타로[藤岡作太郎] 등의 문학사연구가 시작되었다. 각종 전문적인 학회도 만들어지고 학술연구의 잡지도 간행되었다. 예를 들어 역사학 분야에서 보면 1889년 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 국사과의 교수, 학생을 중심으로 사학회가 창립되어 『사학회잡지(史學會雜誌)』(후에 『사학잡지』)가 창간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학 연구에서 가장 수준 높은 전문 학술지의 하나로서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적인 학계가 형성되어 갔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연구나 고등교육은 메이지 전기에는 서양인 교사 학자에 의해 외국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메이지 후기가 되면 유학하고 돌아온 일본인 교사와 학자에 의해서 일본어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학에서 서양 학문에 대해서 대부분 서양언어가 아닌 자국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였다.

6. 저널리즘 발달

메이지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는 점차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 때에 큰 역할을 한 것이 교육의 보급,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신문, 잡지 등의 저널리즘의 발달이었다.

저널리즘의 선구는 에도 시대 이래, 서민 사이에서 퍼져있던 요미우리 가와라반과 보신전쟁의 와중에 창간된 민간의 『모시호쿠사(もしほ草)』 『중외신문(中外新聞)』 정부의 『다조간일지(太政官日誌)』 등이 있는데 그 이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많은 신문이 창간되었다. 이시기 정치문제를 다루면서 정론을 펼 신문들을 대신문이라고 불렀다.¹³

한편 흥미본위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서민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기능이 강한 신문을 소신문이라고 불렀다. 이런 소신문은 1870년대 후반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890년 전후가 되면 대신문과 소신문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뉴스보도에 비중을 두는 전국적 상업신문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사카 지역의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毎日]』 두 신문을 중심으로 청일전쟁에 관련된 뉴스보도를 전기로 삼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했다. 나아가 1900년대에 들어와 러일 전쟁 시기가 되면 『만조보(万朝報)』 『이륙신보(二六新報)』를 선두로 유력한 신문은 점차 대중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발행부수의 증대와 함께 정치문제도 사회면에서 다루고 커다란 표제를 달고 내용도 일반적으로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는 기사가 많아졌다.

잡지는 『메이로쿠잡지』(1874), 후쿠자와 유키치의 『민간잡지』(1874) 등이 일

13 참고로 신문들 중에서 1898년 1년간 발행부수 베스트5를 꼽으면 『오사카아사히』 3621만, 『만조보』 3148만, 『오사카마이니치』 3059만, 『중앙』 2072만, 『도쿄마이니치』 1548만으로 1일 평균 5~12만 부수가 인쇄되었다.

찍 등장했지만 메이지 중기가 되면 『국민의 벗(國民之友)』(1887), 『일본인』(1888)에 이어서 『태양』(1895), 『중앙공론』(1899) 등 시사평론을 중심으로 종합잡지가 연이어 창간되어 신문과 나란히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가운데 『촌촌진문(寸寸珍聞)』(1877)이나 프랑스인 비고(Georges Ferdinand Bigot)의 『도바에(鳥羽繪)』처럼 정치와 사회풍자를 목적으로 풍자만화를 그리는 잡지도 간행되었다. 또 『국가학회잡지』(1889), 『사학잡지』처럼 각종 학술잡지, 여성 교육에서 사회, 문예평론 등 광범위한 분야를 취급한 『여학잡지』(1885)와 『문학계』(1893), 『시가라미소시(しがらみ草紙)』(1889) 등의 문예잡지도 등장했다. 메이지 후기가 되면 『노동세계』나 『평민신문』과 같이 노동문제를 취급하거나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잡지와 부인잡지가 등장했다. 1911년에는 히라쓰카 하루(平塚明)가 창간한 『청담(靑鞆)』은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특색있는 잡지였다.

출판계도 1880년대부터 활자인쇄가 발달하여 이제까지의 목판본을 대신해서 활판의 양장본이 보급되었다. 문학, 예술, 학술 등 각방면에 걸쳐서 출판물이 간행되어 국민의 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7. 근대문학

메이지 초기에는 에도문학의 계통을 이은 가나가키로분(假名垣魯文)의 『안우락과(安愚樂鍋)』와 같이 이른바 희작문학이 유행했다. 유교적인 문학관이 강하게 남아있었지만 문명개화시대에 유행한 번역소설과 함께 신문, 출판업의 발달에 의해서 문학작품은 국민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다.

1880년전후부터 자유민권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상을 선전하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정치소설이 유행하게 되었다. 야노 류케이(矢野龍溪)의

『경국미담(經國美談)』, 도카이 산시[東海散土]의 『규인지기우(佳人之奇遇)』, 스에히로 데츠초[末廣鐵腸]의 『설중매(雪中梅)』 등이 대표적이다.

1880년대 중반이 되면 서양 근대문학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대해 예술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선구가 된 것은 1885년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쓴 『소설신수(小說神髓)』였다. 그는 이제까지의 권선징악적 소설을 배격하고 소설은 삶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실(寫實)적인 소설을 강조하고 『당세서생기질(當世書生氣質)』을 발표하여 자신의 주장을 실천했다. 이어서 후타바 테이시메이[二葉亭四迷]는 언문일치를 주장하고 『부운(浮雲)』을 저술하여 당시 살고 있는 인간의 고뇌를 묘사했지만 충분히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80년대 문단의 주류를 점한 것은 『다정다한(多情多恨)』, 『금색야차(金色夜叉)』 등을 쓴 오자키 고요[尾崎紅葉]를 중심으로 한 연우사(硯友社)의 그룹이었다. 그들은 잡지 『아라다문고(我樂多文庫)』에서 풍속사실풍의 소설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문예소설을 일반서민에게 알렸다. 리로즈 류로[廣津柳浪], 이즈미 교가(泉鏡花) 등이 이 파로부터 나왔다.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도 1893년 창간된 『문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커다란 문예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중심은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등으로 그들은 문예의 자립을 주장하고 그것을 공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 반대함과 동시에 연우사 문학의 저속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도손은 『약채집(若菜集)』을 간행하여 청년의 청순한 이상과 열정을 노래하여 시가사에 있어서 일획을 그었다. 또 같은 시기에 나온 여류작가 히쿠치 이치요[樋口一葉]도 『다케쿠라베(たけくらべ)』 『니고리에(にこりえ)』 등에서 독특한 필치로 서민의 애환을 묘사했다. 낭만주의는 그후 요사노 히로시[與謝野寛],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등 『명성(明星)』파의 시인들에게 이어져 점차로 분방한 관능적 작풍을 보이게 되어 다카야마 쇼규[高山樗牛]는 본능적,

감각적 쾌락에 중점을 두는 미적 생활론자가 되었다. 또 쿠니키 다독포(國木田獨步)는 개인적인 내면생활의 탐구에 치중하여 자연주의로의 길을 열었다.

시단에서는 1880년대에 처음으로 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 야타베 료키치(矢田部良吉) 등이 『신체시초(新體詩抄)』를 만들어 신체시 운동을 전개하고, 가단(歌壇)에서는 1890년대 말에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가 『만요슈(万葉集)』의 전통으로 돌아가 사생적 작품으로 단가 혁신을 외치고 문하에 이토 사치오(伊藤左千夫) 등을 배출했다. 시키는 배구(俳句)에 있어서도 사생(寫生)을 외쳐 1893년에 문하생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와 함께 잡지 『호토토기즈(ホトトギズ)』를 발간했다.

이렇게 해서 러일전쟁 후의 문예사조의 중심은 낭만주의에서 자연주의로 옮겨가고 있었다. 산문으로 전환한 시마자키 도손이 『과계(破戒)』 『봄』, 『이에(家)』를 발표하고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가 『후통(蒲團)』 『시골선생(田舎教師)』을 저술하여 자연주의 문학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노골적인 현실묘사와 내면의 진실을 중시하고 개인적 체험에 기초한 신변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사소설의 길을 걸었다. 나가츠카 다카시(長塚節), 도쿠다 슈세(徳田秋聲) 등도 이러한 흐름에 동조한 인물들이었다.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는 「시대폐쇄의 현상」을 써서 메이지 말기의 꽉막힌 사회적 현실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자연주의를 넘어서고자 했으나 빈곤 속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이러한 문단의 흐름 속에서도 독자적인 존재를 과시한 것은 모리 오가이(森鷗外)와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였다. 오가이는 처음 『무희(舞姫)』 등의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고 잡지 『스바루(スバル)』에서 창작과 문학이론 활동을 했는데 후에는 점차 역사소설로 기울었다. 또 소세키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로 작가생활을 시작하면서 서구의 근대적 개인주의를 수용하여 사회의 사악함을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마음』 『도초(道草)』

『명암』 등 만년의 작품에서는 추악한 인간의 이기주의와 대결에서부터 동양적 깨달음의 윤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8. 예술

메이지기의 예술, 예능의 세계는 초기의 구화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서양풍이 크게 일어났지만 국수주의의 대두로 전통예술에 대한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나 서양풍예술을 흡수, 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1) 연극

에도시대 이래의 전통을 가진 가부키는 메이지 초기에는 막말부터 활약하고 있던 가와다케 목쿠아미[河竹默阿彌]가 문명개화의 풍속을 수용하여 산절 물이나 활역극을 써서 인기를 얻었다. 또 쓰보우치 쇼요는 『동일엽(桐一葉)』 등의 사극을 발표하여 가부키의 혁신을 꾀했다. 1889년에는 도쿄에 가부키좌 결성되고 1890년대에 들어오면 전통문화 부활의 풍조를 타고 이시가와 단주로[市川團十郎], 이시가와 사단지[市川左團次], 오노에 기쿠고로[尾上菊五郎] 등이 중심이 되어 가부키계는 크게 활성화되어 이른바 단(團), 기쿠(菊), 사(左)의 전성시대가 출현했다. 이 시기의 작가로서는 후쿠치 오치[福地櫻痴]가 유명하다.

이에 대해 자유민권운동을 선전하기 위해 스도 사다노리[角藤定憲], 가와카미 오토지[川上音二郎]로 등이 시작한 소시[莊土] 연극은 청일전쟁 뒤, 전쟁극을 공연해서 입지를 쌓은 후, 점차 가정을 다룬 비극을 공연하게 되었다. 이것이 신파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러일전쟁 후에는 서양 근대극의 이식이 시작되었다. 선구자인 쓰보우치 쇼요가 1906년 시마무라 호게츠[島村脩] 등과 함께 문예협회를 만들고 셰크스피어나 입센의 작품을 공연했다. 또 1909년에는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 이치가와 사단지가 중심이 되어 자유극장을 창설하고 신극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2) 음악

음악도 서양음악의 수입됨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다. 1879년 문부성에 음악조사부서가 설치되어 이자와 슈지[伊澤修二]를 중심으로 서양의 가요를 모방한 창가(唱歌)가 초등학교 교육에 도입되고 국민 사이에 친숙하게 되었다. 1887년엔 도쿄음악학교가 설립되어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작곡가로서는 「황성(荒城)의 달」로 알려진 다키 렌타로가[瀧廉太郎] 나와 뛰어난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 한편 영화와 축음기가 도입된 것도 1890년대의 일이었다.

3) 회화

일본화는 메이지 초기 구미송상의 조류로 일시 쇠퇴했지만 미국인 페놀로사(Ernest Francisco Fenollosa)가 전통적인 일본 미술의 부흥을 주장하고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은 가리노 호가이[狩野芳崖], 하시모토 가호[橋本雅判] 등과 함께 1887년 도쿄미술학교를 설립했다. 텐신은 결국 반대파와 대립하여 교장직을 사임하고 1898년 일본미술원을 설립했다. 그의 문하에서 요코야마 다이칸[横山大観], 히시다 슌소[菱田春草], 시모무라 간잔[下村観山] 등이 배출되었다.

한편, 서양화에서는 워그만(Charles Wirgman)에게 사사받은 다카하시 유이치[高橋由一]가 사실적인 화풍으로 근대 서양화의 개척자가 되었다. 메이지 초기에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내일한 이태리인 기욤네(Edoardo Chiossone)는

동판화기술을 지도하고 더불어 폰타네시(Antonio Fontanesi), 라구사(Vincenzo Ragusa) 등이 초빙되어 고부[工部] 미술학교에서 각각 서양화와 서양조각 기법을 가르쳤다. 그들에게 배운 아사이 츠[淺井忠], 고야마 쇼타로[小山正太郎] 등은 1889년 메이지 미술회를 결성했다. 이어서 프랑스에서 귀국한 구로다 세이키[黒田青輝]는 1896년 하쿠바[白馬]회를 결성했는데 프랑스 인상파의 밝은 화풍에 근거한 신선한 기법을 외광파(外光派)라고 불렀다. 세이키는 도쿄 미술학교에 신설된 서양화과의 교수가 되어 후지시마 다케지[藤島武二],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郎助], 와다 에이사쿠[和田英作] 등 후진을 양성해냈다. 아사이 츠 문하의 미즈타니 쿠니시로[満谷國四郎] 등은 태평양화회를 만들어 하쿠바회에 대항하는 한편 아사이 츠는 무대를 교토로 옮겨 간사이[關西] 미술원을 시작하고 야스이 소타로[安井曹太郎], 우메하라 류사부로[梅原龍三郎] 등을 키워냈다. 이 밖에 하쿠바회로부터 나온 아오키 시게루[青木繁]는 특이한 로맨틱한 화풍으로 메이지 후기의 화단을 장식했다.

4) 조각, 공예, 건축

조각에서는 메이지 초기 외국인의 취향에 맞춘 상아 조각이 유행하면서 서양 조각기법도 전해졌으나 이윽고 목각이 부흥하여 다카무라 코운[高村光雲], 다케우치 큐이치[竹内久一] 등이 명작을 남기고 서양조소에서는 오가와라 모리에[荻原守衛], 아사쿠라 후미오[朝倉文夫] 등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

공예에서는 도자기, 칠기, 칠보 등에 관련된 전통적 기술에 있어서도 서양적 기술이 가미되어 뛰어난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건축에서는 영국인 콘테르(Josia Conder)의 지도를 받은 다쓰노 킨고[辰野金吾] 등이 나와 붉은벽돌로 된 서양식 건축에 힘을 쏟았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메이지 후기의 건축물로서는 일본은행본관, 아카사카 리궁[赤坂離宮; 현재의 영빈관] 등이 유명하다.

IV. 국민생활의 근대화

1. 교통, 통신의 영향

메이지 시기에는 근대화의 진행에 의해 국민의 생활양식에도 변화가 일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양식의 생활방식이 도입되었다. 도쿄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관청, 회사, 학교, 군대 등에서 실용적인 서양식 식생활이 채용되어 점차 일반 가정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메이지 초기에는 가로등으로 가스등이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램프가 사용되었지만 메이지 중기가 되면 관청, 회사, 공장, 학교 등 공공시설에 전등이 이용되게 되었고 마침내 메이지 후기에는 대도시의 일반 가정에도 보급되었다. 대도시의 중심부에는 서양식 건축이 줄지어 올라갔는데 특히 도쿄의 마루노우치(丸の内)에는 1894년 미쓰비시[三菱] 일호관을 비롯하여 붉은 벽돌의 오피스 빌딩이 연이어 건설되어 갔다. 그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임대 사무실도 나타나 마루노우치는 붉은벽돌 시가지로서 일본의 비즈니스 센터로 발전했다.

식생활에서는 육식, 의복에서는 양복을 입는 습관도 점차 퍼져나갔다. 교통, 통신에 있어서는 메이지 초기에는 인력거나 마차를 사용했으나 철도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1890년대 후반이 되면 도카이[東海] 철도의 도쿄-고베[神戸]간, 일본철도의 우에노[上野]-아오모리[青森]간 철도가 모두 개통되어 에도시대에는 10일에서 15일 걸렸던 도쿄에서 오사카까지가 불과 20시간 정도로 단축되었다.

1890년대에서 1900년대에는 교토를 시작으로 대도시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전차가 개통되었다. 또 우편과 전신이 전국적으로 이용되었고 전화도

1890년대부터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통 통신기관의 발달은 인간과 상품이 단 시간내에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언론기관과 교육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생활권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좁은 지역사회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의식이나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일체감을 서민층에까지 확대시켰다. 에도시대에는 대개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먼 지역간의 결혼이 서민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된 것도 교통기관 특히 철도의 발달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생활의 근대화는 어디까지나 도시 중심의 이야기였고 교통, 통신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일에 필요한 음력이 계속 사용되는 등 여전히 에도시대의부터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지켜지고 있었다.

2. 식생활 변화

메이지 후반이 되면 일본인의 식생활이 풍부해지면서 도시에서는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가 식탁을 장식하게 되었다. 1897년의 조사에 의하면 요리점이 476개, 음식점이 4,470개, 찻집이 143개가 있었다. 정육점도 많아지고 스키야키(すき焼き) 이외에 오믈렛, 카레, 비프스테이크 등이 요리되었다. 1899년 여름에 신바시[新橋]의 비어홀(맥주집)이 개점되어 샌드위치와 함께 맥주가 제공되자 문전성시를 이루어 곳곳에 비어홀이 생겨나게 되었다. 메이지 초기 미국인이 가져온 사과가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에서 재배되고 식민지 대만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들어와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농촌은 여전히 보리가 섞인 밥을 먹었지만 도시에서는 흰 쌀밥이 일반화되어 갔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벌어져 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6장

오늘날의 동아시아

-1945년 이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사
문화

전후처리와 국교회복

최영호 | 영산대학교

- I.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2차 대전 종결 양상
- II.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동아시아 지역
- III.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전후처리
- IV.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국교 수립과 외교 관계

본 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처리 과정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 사이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전후처리 문제와 국교회복 문제는 현대에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항목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전후처리와 국교회복 문제는 자연스럽게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 연합국과 관련 국가들이 패전국 일본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쟁배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며, 어떻게 새로운 외교관계를 형성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합국이 1951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조약을 하나의 절로 따로 구성하고 각국의 관계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동아시아 지역의 2차 대전 종결 양상'에서는 전후 일본을 둘러싼 연합국의 질서 재편과 일본의 전후 처리 조건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이 과거 획득한 영토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 상황을 소개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후 처리 조건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패전 후 본국으로 귀환해 갔는가, 일본에서 강제동원자들이 본국으로 얼마나 귀환해 갔는가, 전범 재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전후 처리를 규정하는 강화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에 전개된 전후 처리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화회의를 주도한 미국과 영국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중국과 한국이 어떠한 이유로 강화회의 참가국에서 배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나온 주요 국가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 회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강화조약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함께 조약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절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전후처리’에서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배상과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전쟁 시기 일본의 해외자산에 대한 전후 처리 상황을 개괄하고 중화민국, 베트남, 한국, 중화인민공화국 순으로 일본과 맺은 조약과 공동성명 내용을 검토하며 정부간 전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전후처리의 한계와 과제로써 아직 일본과 국가간 전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문제와 전쟁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제시하고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전후처리 문제는 국교정상화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4절의 서술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가능한 여기서는 배상과 보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해 가고자 한다.

제4절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국교 수립과 외교 관계’에서는 각국이 전후에 어떻게 지역 내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는지 살펴본다. 국교 수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자연스럽게 2개국 사이의 국제관계를 따로 따로 언급해 갈 것이며, 국교 수립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다루고자 한다. 세계적인 냉전 구도에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각각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와 우선 수교하고 외교관계를 이어나갔다. 냉전의 붕괴에 따라 단절되었던 국가들의 수교도 이루어졌고 북한의 경우처럼 아직 주변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도 있다. 여기서는 개별 국가 사이의 수교 상황을 정리하면서도 통일적인 국가 범위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묶고, 한국과 북한을 한반도 국가로 묶으며,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국 그리고 베트남공화국을 베트남으로 묶어서 국가 범위간의 외교관계 수립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2차 대전 종결 양상

1. 일본의 영토축소와 중간 배상

나치스 독일이 항복한 후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연합국 정상이 모여 2차 대전 전후처리에 관하여 회의하고, 1945년 7월 26일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항전이 계속되자 미국은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또한 9일에는 소련이 그때까지 지켜오던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 동북지방의 만주국 주둔 일본군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는 9일 서둘러 국체(國體) 즉 천황제(天皇制)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했다. 그리고 8월 14일 스위스와 스웨덴 주재 일본공사관을 통하여 연합국에게 항복 의사를 통고하고, 이튿날 천황의 목소리를 통해 국내외 일본 국민에게 이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의 항복에 따라 카이로선언 알타협정 포츠담선언 등, 전쟁 중에 연합국측이 구상했던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구도가 현실로 나타났다.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지속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세력을 확장해 온 일본은 침략전쟁을 통해 얻은 해외 영토들을 모두 상실했다. 반면에 중국은 타이완과 동북지역을 회복했고 중일전쟁으로 일본군에 점령당했던 지역에서 주권을 회복했고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일본이 상실한 영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타이완 식민지 : 청일전쟁 결과 할양받은 타이완과 평후[澎湖] 섬들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중화민국에 넘겼다.
- b. 남부 사할린(Sakhalin)과 쿠릴(Kuril) 열도 : 러일전쟁 결과 할양받은 남부 사할린과 함께 오늘날 북방영토로 불리는 섬들을 포함한 쿠릴 열도가 소련 지배권 하에 들어갔다.
- c. 한반도 : 일본군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여 분할 점령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독립 정부가 수립되었다.
- d. 남양군도 : 1차 대전 이후 위임통치 후에 일본이 병합했으나 패전 이후 실효적 지배권을 상실하고 미국의 신탁통치로 이어졌다.
- e. 오키나와 :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도서들이 미국의 군정 아래 들어갔다가 1972년에 모두 일본의 지배권으로 복귀했다.
- f. 오가사와라섬 등 :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화산열도(火山列島), 미나미토리섬[南鳥島], 오키노토리섬[沖ノ鳥島]이 미국의 관리권 아래 들어갔다가 1968년에 일본으로 복귀했다.

일본은 패전 결과 중간배상의 형태로 전쟁배상 일부를 지불했다. 중간배상이라 함은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군수공장의 기계 등 일본 국내에 있는 자본설비를 철거하여 과거 일본이 지배했던 국가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형태의 배상을 말한다. 이것은 패전 직후 폴리(Edwin E. Pauley)를 단장으로 하는 대일 배상조사단이 추진한 배상정책이다. 패전 이후 1950년 5월까지 일본에서 총 1억 6,515만엔 상당의 공장 기계가 중간배상을 위하여 철거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54.1%, 인도네시아(네덜란드)가 11.5%, 필리핀(미국)이 19%, 버마¹와 말레이(영국)가 15.4%를 가지고 갔다.

¹ 버마(Burma)는 1989년부터 미얀마(Myanmar)라는 국가 명칭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2. 일본군의 무장해제

패전과 함께 일본제국 군대는 모두 무장해제를 당했다. 일부 일본군 육군 장교 가운데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육군본부 지휘부의 반대와 진압에 의해 실패했다. 패전 후 해외의 일본군이 동요할 것을 예상하고 일본정부는 급히 황족을 난징[南京] 만주[滿州] 사이공(Saigon) 등에 파견하여 순순히 항복하고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도록 다독거렸다. 패전 당시 일본군의 규모는 육군이 약 550만 명, 해군이 약 170만 명으로 총 720만 명 가량되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을 떠나 해외에 주둔하고 있었다. 대략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81만 명, 만주국을 포함한 중국 대륙에 170만 명, 한반도에 30만 명, 타이완과 남서제도에 17만 명,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9만 명이 주둔하고 있던 중 패전을 맞았다. 이들을 합하면 모두 3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패전과 함께 무장해제를 당하고 대부분 일본으로 귀환하게 된다.

한편 연합군은 9월 2일 도쿄 앞 바다에 정박한 미군 군함에서 항복 의식을 거행했다.² 이와 함께 일본군 주둔 지역을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 국가에 의한 관할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실시했다. 중국 난징에서는 중국파견군 총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대장이 9월 9일 중국 국민당의 육군 총사령관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도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어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1940년대와 50년대를 언급하는 까닭에 역사적 용어로서 버마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일본군의 항복은 미해군 군함 미즈리(Missouri)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군함들 가운데 이 배가 선정된 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출신 지역이 미즈리주였던 것과 관계가 깊다. 이 배는 오늘날 하와이 진주만에서 태평양 전쟁을 기념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部信行] 대장과 조선군 사령관 고쓰키 요시오[上月良夫] 중장이 미군정 청장 존 하지(John R. Hodge)에게 통치권을 이양했다. 한편 일본군 남방군 총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内壽一] 원수는 9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했다. 이때 항복을 의미하는 행위로 가문의 전통으로 간직해 오던 칼을 연합국 지휘관에게 바쳤다. 일본군 예하부대 대부분의 지휘관은 이러한 행위를 따라서 했다. 베트남 사이공에서도 일본군 헌병대장이 인도인 영국군 장교에게 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하였다.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중국이나 조국 해방의 열기에 휩싸인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사회적 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군은 서둘러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9월 19일까지도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무장해제한 일본군을 억류하여 시베리아에 이송시켜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패전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이 1만 대가 넘는 작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연합군의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파괴되었다. 또한 패전 당시 남아있던 함정 대부분은 해외에서 귀환하는 군인과 민간인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전투함 대부분을 소련, 중국, 미국이 배상물로 가져갔다. 타이완에서는 10월 25일 중화민국이 일본군 항복 의식을 거행하고 타이완 총독부를 해체하는 대신 중화민국의 행정기관을 설치했다.

3. 해외거주 일본인의 귀환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300백만 명의 해외 주둔 군인과 함께 300만 명이

넘는 해외 거주 민간인들도 대거 귀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동 아공영권’의 기치 아래 각 지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들이 결국 현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군인들과 함께 대부분 생활기반을 상실한 채 일본으로 귀환해 간 것이다. 일본 패전과 함께 귀환 쇄도 움직임이 시작되어 1946년 말까지 5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일본으로 돌아갔다.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를 포함하면 1988년까지 약 63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일본으로 귀환했으며 이 가운데 민간인이 약 320만 명에 달한다.³

전쟁 종결 직후 중국 동북지방이나 북한과 같은 소련 점령지역에서 잔류 일본인에 대해 수많은 폭행이 발생하는데 비하면, 중국 타이완 베트남 남한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귀환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타이완 사람들은 50년간의 식민지 통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패전 후 치안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했으며, 일본인 귀환자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온후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재산은 모두 동결되어 국민당 정부 당국에 의해 접수되었으며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일본인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식민지 기간에 주민을 탄압하고 악정에 앞장섰던 극히 일부의 경찰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대륙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일본인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일본정부가 포츠담 선언 수락을 확정된 8월 1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폭력을 덕으로 갚자’고 하며 중국인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호소했다. 당시 공산당과의 전투로 여념이 없어 일본인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기는 했지만 그의 메시지

3 와카쓰키 야스오[若槻泰雄](1991)의 저서,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の 기록에 따르면, 1988년 말까지 중국의 동북지방과 대륙에서 2,809,574명(이 가운데 민간인 1,712,281명), 한반도에서 919,903명(713,303명), 타이완에서 479,544명(322,156명), 홍콩에서 19,347명(5,062명),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에서 32,303명(3,593명)이 일본으로 귀환한 것으로 되어있다.

는 정부 관료나 국민당 군대에 의해 실행되었고 전반적으로 중국인의 보복 행위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비교적 순조롭게 일본인 귀환이 이루어진 편이다. 북부 베트남에서는 패전 이전에 일본군이 하이퐁(Hai Phong) 항구 부근에 있던 프랑스군 막사를 개조하여 부녀자들을 보호한 일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본군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되어 베트남 독립전쟁의 와중에도 일본인에 대한 약탈이나 도난을 최소한에 그치게 했다. 북부 베트남에 진주한 중국 국민당 군대도 비교적 장제스의 메시지를 지켰다. 한편 영국군 관리 하에 들어간 북위 16도선 이남의 남부 베트남에는 일본인 민간인이 가장 많았을 때 주변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을 포함하여 3천 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패전 직후 반제국주의 운동에 휩쓸려 피해를 입기도 했으나, 영국군이 사이공 시내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체로 안전하게 귀환 선박을 기다려 승선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 패전 직후 군중에 의한 해방감이 폭발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을 둘러싼 치안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일본인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다투어 은행예금을 인출하고 가능한 대로 귀환을 서둘렀다. 가재도구를 헐값에 내다 파는 일본인들이 많아졌고 일찍부터 부산항을 비롯한 항구나 부두로 달려가 갖가지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 도항에 나섰다. 개인적으로 선박을 빌려 도향한 사람도 있었으며, 상업용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청 등 관공서나 일본인 단체가 알선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산의 일본인 단체는 부산 경남 거주 일본인들 가운데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에 걸쳐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선박을 빌려 귀환한 사람이 33,000명이었다고 파악했다.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는 일본인들의 무질서한 귀환 쇄도를 통제하기가 무리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환자들을 수송할 교통

편이 형편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산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선박의 접안시설이 잘 되어 있어 귀환 항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 남북한 거류 일본인은 물론 중국에 거류하던 일본인들 가운데 일부도 부산항을 경유하여 귀환해 갔다. 부산 일본인 단체 기록에 의하면 점령당국의 허가를 받아 일본인을 송출한 한반도 항구 가운데 부산항이 패전 이후 1948년 7월까지 총 674,406명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나, 귀환자 총수의 89.7%를 송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군산항은 1946년 6월 한 달간 약 4,300명(0.5%)을, 그리고 인천항과 주문진항은 1946년 6월부터 7월까지 각각 약 4만명(5%)과 1만명(1%)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은 귀환자 송출량에 있어서나 송출 기간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귀환하는 일본인의 대부분을 송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의 본국 귀환

일본제국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량의 식민지인과 점령지역 주민들을 군사력과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일부 여성들 가운데는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본제국이 감행한 침략전쟁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하다가 패전을 맞이한 것이다. 1944년에 한반도와 타이완에 징병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본군 군인과 군속으로 식민지 출신 젊은이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45만 명 정도의 식민지 출신 청년이 일본군 군인과 군속으로 동원되었다가 40만 명 정도가 제대했거나 살아서 귀환한 것으로 되어있다.

표 1 일본제국 식민지 출신의 군인과 군속

		징용 징병	제대	사망자수	사망률
	군인	116,294명	110,116명	6,178명	5.3%
	군속	126,047명	110,043명	16,004명	12.7%
타이완	군인	80,433명	78,287명	2,146명	2.7%
출신자	군속	126,750명	98,590명	28,160명	22.2%
계		449,524명	397,036명	52,488명	11.7%

일본제국 정부와 기업에 의해 한반도나 중국에서 노무자로 동원된 인원은 군인 군속 수에 비해 훨씬 많다. 일본정부의 통계자료에는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 72만 5천명의 한반도 출신 노무자가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동원된 곳은 석탄을 캐는 광산이었다. 일본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석탄산업 부문에 동원된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55%가 석탄 탄광이 많은 규슈(九州)로, 그리고 31%가 홋카이도(北海道)로 동원되었다. 석탄 노동자 가운데는 대부분이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위험하고 가혹한 작업장에 배치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무자의 공급원이 점차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책으로 중국인들을 동원했다. 1942년 11월 ‘화인(華人) 노무자 내지 이입에 관한 건’을 결정하고 중국인 노무자의 강제동원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43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험적으로 동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한 후 이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원에 들어갔다. 일본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패전 당시까지 중국 대륙에서 동원된 노무자 총수가 3만 9천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패전을 계기로 하여 이들을 본국으로 대거 귀환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 내무성 통계에 의하면 1944년 말에 한반도 출신 일본 거주자 수가 총 1,936,843명으로 되어 있고 1947년 9월에 총 529,907명이었다. 이것을 감안하면 약 140만 명의 사람들이 패전 직후 일본

에서 한반도로 귀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해방의 감격을 만끽하며 일본정부의 송환계획 실시를 기다리지 않고 각 항구로 쇄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귀환을 서두르는 사람들 가운데 소형 선박을 이용하다가 어뢰나 해적 풍랑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그 중에도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선박의 침몰은 단일 사고로 귀환자 피해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8월 22일 해군특별수송선 우키시마마루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가족을 태우고 아오모리현[靑森縣]을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해 항진하던 중 마이즈루[舞鶴] 항구에 기항하기 직전 폭발 사고를 일으켜 침몰하면서 대형 참사를 발생시켰다. 일본정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출신자 524명과 일본인 승무원 25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 단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5. 침략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연합국은 일본점령과 함께 지난 전쟁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1945년 9월부터 일본인 전쟁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를 시작하여 그 해 12월 까지 100명이 넘는 혐의자들을 체포했다. 이윽고 이듬해 1월 전쟁범죄자 재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호주 대법원 판사인 윌리엄 웹(William Flood Webb)을 재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연합국 11개 국가가 피점령 일본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기관으로

극동위원회를 조직했는데,⁴ 이 극동위원회가 1946년 4월에 재판 조례를 개정하고 각국이 모두 한 명씩 판사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여 결국 총 11명의 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점령 당국이 1945년 12월에 설치한 국제검찰국에도 11개국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 검찰관이 파견되어 기소 업무를 담당했으며, 수석검찰관에는 미국 변호사로 국제검찰국 국장이던 조셉 키난(Joseph Berry Keenan)이 임명되었다.

1946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도쿄[東京]에서 군사재판이 열려 A급 전범들이 심판을 받았다. 전쟁 범죄에 관한 검찰측 입증이 47년 1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동안, 검찰측이 제출하여 법정증거물로 채택된 자료가 총 228건에 달하며, 이 사이 법정에 소환된 증인도 100명 이상이 된다. 검찰측의 입증 과정에서 법정을 통해 역사의 산 증인들이 침략전쟁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들에게 전쟁 실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도쿄 군사재판 결과 전범 용의자로 체포된 200명 가량의 일본인 가운데 교수형 7명, 종신금고형 16명, 금고형 2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도쿄 군사재판은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일본인 스스로의 전쟁책임 추궁과는 거리가 먼 재판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일본인 법조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는, 전쟁책임자로서 일부 정치가와 군인만을 심판한 재판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전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것이 전후 일본사회에 전쟁 책임에 대한 자의식을 미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식민지 종주국 재판관에 의한 심판으로 식민지

4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에서 발생한 전쟁 피해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천황(天皇)에 대한 전쟁 범죄 추궁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종결 직후 연합국 국내에서 일본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일본 국내에서도 급격한 민주화 가운데 일본공산당을 비롯하여 천황의 처단과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 안에서는 효율적인 점령 통치를 위하여 천황을 기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여기에다가 점령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1945년 9월 27일 천황을 만나고 나서부터 원할한 점령을 위해서 천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을 굳혀 갔다. 결국 맥아더와 국제검찰국이 적극 방어하는 가운데 도쿄재판에서 천황이 소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합국의 전쟁범죄 추궁은 A급 전범보다 BC급 전범에 대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합국은 요코하마[横浜]와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태평양 군도 등에서 2천여 건의 재판을 열고 5,700명에 달하는 일본군 관계자들을 BC급 전범으로 지목하여 이들을 기소했다. 그 결과 사형 984명, 무기형 475명, 유기형 2,944명, 무죄 1,018명, 기타 279명 등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에서 A급 전범을 재판한 결과와 비교하면 BC급 전범 재판이 상대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무자비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BC급 전범으로 체포되고 처형된 사람 중에는 일본의 식민지 출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반도 출신자는 148명이 체포되어 2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타이완 출신자도 173명이 체포되어 14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식민지 출신 BC급 전범

BC급 전범이라고 하는 것은 A급 전범과 마찬가지로 극동국제군 사재판소의 조례 제5조 B항과 C항에 분류된 전쟁범죄를 말한다. 제5조 B항에는 통례의 전쟁범죄, 즉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C항에는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혹은 인종적 이유에 기인한 박해 행위라고 되어있다. 실제로 BC급 전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주로 연합국군 포로의 관리를 둘러싼 불법행위와 폭력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B급 전범은 포로 관리 업무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장교나 부대장이었으며, C급 전범은 직접 포로 감시 업무를 맡았던 하사관, 병사, 군속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출신 전범은 거의 C급에 속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전역을 확대하면서 예상치 않게 수많은 연합국 포로를 끌어안게 되었다. 특히 1942년 2월 싱가포르에 이어 3월 자바를 점령하면서 일본군은 30만명에 달하는 연합국군 포로를 관리하게 되었다. 전투 요원이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 포로 관리에 배정할 인적 자원에서 여유가 없게 되자 일본은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포로감시원 수 천 명을 모집하여 그 해 8월부터 태국, 말레이반도, 자바섬 등에 설치된 포로수용소에 배속시켰다.

일본군 부대에서 포로를 학대하는 일은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학대하는 정도가 다르기는 했지만, 구타가 일상화된 일본군 부대의 분위기에다 포로 관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군 당국의 무관심은 전반적으로 포로감시원이 포로 학대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일본이 패전하자 연

합국은 즉시 모든 연합국군 포로들을 즉각 해방시키면서 포로 학대에 관한 범죄자 적발과 군사재판을 시작했다. 포로들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어서 얼굴이 알려진 포로감시원은 연합국군에게 일차적으로 원한과 보복의 대상이 되었고, 포로들의 증언만으로도 간단히 체포되거나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II.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동아시아 지역

1.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특징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의 사이에 점령상태를 종결하고 일본의 전후 독립을 규정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 조약은 이듬해 4월에 발효됨으로써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이 사실상 끝났다. 대일 강화조약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과거 전쟁에 관한 전후처리 문제를 규정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⁵⁾

5 대일 강화조약문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당시 UN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5개국 언어 가운데서 소련과 중국이 강화조약 체결에 참석하지 않게 되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여기에 강화 당사국의 언어인 일본어가 사용된 것이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프랑스 베르사이유(Versailles)에서 강화회의가 열렸고 그 후 6개월 채 안 되어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것과 비교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2차 대전 종결 후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뒤늦은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년의 기간 동안 강화회의와 관련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일본과의 강화를 둘러싸고 주로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와 관련하여 강대국 사이에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점령 종결 방식에서 전면적인 강화를 할 것인가 혹은 부분적인 강화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세력간에 커다란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그 만큼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비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강대국간의 치열한 이해 다툼 가운데 국가간 조정을 거쳐서 마련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나 일본정부가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된 회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일찍이 1947년 3월 맥아더가 기자회견에서 대일 강화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크게 알려진 일이 있다. 그 해 7월 미국정부가 대일 강화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급진전하는 듯이 보였다가 이듬해부터 여론에 오르지 않고 잠잠해졌다. 이렇듯 강화회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냉전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냉전이 심화되기 이전에 강화가 이루어졌다면 일본제국의 영토 분할 문제나 전쟁배상 문제에서 일본에게 훨씬 더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대일 강화회의는 전적으로 미국의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다. 여기에 전쟁 전부터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고 아시아 지역에 넓은 식민지를 보유해 온 영국도 대일 강화조약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과 영국은 공동으로 소련의 개입을 억제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강화를 모색했다.

이런 의미에서 강화회의에 제출된 조약안은 미국과 영국의 합작품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은 현실적인 방책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배제한 부분 강화를 선택했다.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여 자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국의 군비를 억제하고 그 대신 경제력 재건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냉전의 분위기를 타고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일본은 비교적 관대한 조건의 강화를 맞게 되었다. 반면에 과거 일본제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변 국가들은 대일 강화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2. 대일 강화회의에서 제외된 중국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것은 미국이 대일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신생 중국공산당 정부에 대해 영국은 이듬해 1월 한 발 빠르게 이를 승인했으나 미국은 타이완으로 옮겨간 국민당 정부를 계속하여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했다. 이렇듯 미국과 영국이 대일 강화를 앞두고 중국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 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성이 강화를 서두르는 반면 국방성은 이에 반대하는 등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려 결과적으로 강화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둔해졌다.

그런데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그 해 11월 말 중국공산당 군대가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군사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국의 클레먼트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 수상이 12월 초 급거 미국

을 방문하여 해리 트루먼(Harry Shippe Truman)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애틀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완을 중국 대륙에 반환하든지 UN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양보안을 가지고 중국공산당 정부와 교섭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의 교섭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국에 대한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했다. 미영 양국이 중국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가운데 UN에서 영연방 군대가 이탈하지 않을 것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에서 양국은 타협점을 찾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군대와 전면 충돌을 피하는 대신 미국 국무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공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태평양협정 구상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하여 5개국에 의한 집단방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미국의 구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자국이 반공전선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 이외에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허용하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한편, 미국과 타이완 국민당 정부를 포함시키는 독자적인 반공전선 구상을 제시했다. 미국의 구상에 대해서는 영국도 자국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이 구상이 타이 말레이시아 버마와 같은 아시아 대륙국가에 대한 공산주의 침략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집단방위 구상은 결과적으로 1951년 9월에 체결된 ANZUS 군사동맹으로 귀결되었다.⁶

1951년에 들어 미국정부는 존 딜레스(John Foster Dulles)를 특사로 하여 적

6 ANZUS 군사동맹(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필요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또한 1951년 당시 호주는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판단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추구하기도 했다.

극적으로 일본과 강화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성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견해 차이는 대일 강화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대표권 문제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었다. 영국은 대일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며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두둔했다. 두 개의 중국을 허용하지 않는 영국의 방침에 대해 미국은 내부적 검토를 거듭한 후에 강화회의에 중국의 두 정부를 모두 초청하지 않기로 하고 어느 쪽과 개별적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독립한 후의 일본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이 초대받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3. 대일 강화회의에서 제외된 한국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 강화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식민지 시기의 임시정부 활동을 이유로 하여 강화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 배상청구 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에 대해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화회의를 추진하고 있었고, 여타 연합국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하지 말도록 종용했다.

미국은 대일 강화회의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1951년 1월 딜레스 특사는 도쿄[東京]에서 장면 주미 한국 대사와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의 강화회의의 참가 희망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대일 강화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공산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서 대일 강화회의는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일본과의 전쟁당사국으로서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배상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강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과 영국은 한국의 참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에게 전달했다. 일본은 한국이 전후에 해방된 국가로 전쟁 상대국이 아니었으며 만약 한국을 강화회의에 참가시키게 된다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들이 모두 연합국 국민이 되어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영국도 한국이 일본과 교전한 적이 없는 국가로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며,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면서 한국을 참가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를 제기하면서 끝까지 한국의 강화회의 참가를 반대했다. 결국 미국은 영국의 반대에 봉착하여 한국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1951년 7월 델레스는 주미 한국대사에게 새삼스럽게 한국과 일본은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연합국 선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대일 강화회의에 서명국으로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했다. 그 후 한국측의 거듭되는 참가 요구에 대해 미국은 다시 이를 거부했고 강화회의에 읍저버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한국은 강화회의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미국을 중재자로 하여 강화조약 초안을 전달받고 한국의 검토 의견을 강화회의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데 그쳤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진행과정

1951년 7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각국에 강화회의 초청장을 발송했다. 8월에는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했다. 초청장을 받고도 회의에 불참한 국가는 인도 버마 유고슬라비아 등 3개국이다. 1951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 소재한 오페라하우스에서 일본을 포함하여 5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강화회의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을 포함하여 6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베트남 대표로는 프랑스가 인정하는 사이공의 바오다이(Bao Dai) 정권에서 4명이 참석했다.

이틀째 9월 5일 아침부터 실질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의사진행 규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Andreevich Gromyko) UN 안전보장이사회 대표가 등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중국 대표를 초청하자고 긴급 제의했다. 그의 제안 이유는 중국을 제외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영속적인 평화를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소련의 제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체코와 폴란드만이 소련을 지지하여 3대 3으로 부결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 소련은 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며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만주 타이완 평후제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주권을 승인할 것,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 주권을 인정할 것, 일본이 어떠한 국가와도 연합국에 대적하는 동맹관계에 들어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 육군 규모를 15만 명으로 하는 등 일본의 재군비에 상한선을 규정할 것, 핵무기 세균화학무기 미사일 인간어뢰 등을 건조하거나 실험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일본 본토의 국제 해협을 비무장화 하고 모든 국가의 상선 통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개방하며 군함에

대해서는 연안국에게만 통과를 허용하도록 규정할 것 등이다. 이러한 소련의 주장에는 소련의 영유권이나 패권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시 연합국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강화조약 초안에 과거 구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었다.

텔레스는 강화회의의 준비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전쟁에 대하여 잊을 수도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지만, 연합국은 전대미문의 자제력을 발휘하여 분노 없이 평화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는 관대한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만약 일본에게 거액의 금전 배상 청구권을 요구한다면 일본의 대외적 신용이 떨어지고, 일본인의 노동 의욕도 상실되어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독재자나 혁명가나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가공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초청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그는 2차 대전 발발 훨씬 이전에 한국이 독립을 상실했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독립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그는 강화회의에서 한국의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의 투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의 대표로 참가하여 연단에 오른 케네스 영거(Kenneth Gilmour Younger)는 무엇보다 강화조약 초안에 영연방 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견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따른 잔학행위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말레이와 홍콩 주민들이 일본의 점령에 따른 타락성과 야수성을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도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일치하여 평화 해결을 위하여 증오와 복수를 지양해야 하며, 과도하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눈을 돌리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락연설을 담당하기 위해 등단한 요시다 수상이 두루마리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그는 이 강화조약이 복수를 의미하는 조약이

아니고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공정하고 관대한 조약을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인도와 버마가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만큼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우호와 협력관계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 국가와 일본은 예로부터 전통이나 문화, 사상을 함께 해 왔다고 하면서 아시아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 오전 강화조약에 대한 조인식이 열렸다. 강화회의 참가국 가운데 소련과 체코, 폴란드 대표가 조인식에 결석하여 조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49개국이 국가별 영어 명칭의 알파벳 순으로 서명을 진행했다.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하여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서명을 마친 후 일본 대표가 마지막 서명을 했다. 미국은 모든 서명국에게 새로운 만년필을 준비하고 각 대표들이 서명을 마친 후 그것을 기념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요시다 수상은 자신이 가지고 간 만년필로 서명하고 기념 만년필을 받아왔다. 이렇게 하여 강화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다.

그날 오후 요시다 수상은 샌프란시스코 북부 작은 군부대로 자리를 옮겨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 딜레스 등과 함께 미일안보조약 문서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미일동맹 조약으로 불리는 것으로 미국에게 육해공군을 일본 열도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안보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은 중립 국가나 비동맹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위성국으로서 전후 새로운 출발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과 문제점

대일 강화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상태가 끝나고 일본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다. 이 조약문은 총 7장 27조로 되어 있으며 전문(前文),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 제2장 영역, 제3장 안전, 제4장 정치 및 경제, 제5장 청구권 및 재산, 제6장 분쟁의 해결, 제7장 최종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일본과 연합군 간의 전쟁상태 종료(제1조 a항), 일본 국민의 주권 회복(제1조 b항), 한반도에 대한 독립 인정과 청구권 포기(제2조 a항), 타이완 및 펑후제도에 대한 청구권 포기(제2조 b항), 쿠릴열도와 남부 사할린에 대한 청구권 포기(제2조 c항), 남태평양 제도에 대한 청구권 포기(제2조 d항과 f항),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섬들에 대한 미국 신탁통치 인정(제3조), 일본 지배권에서 연합국 재산 처리권의 인정(제4조 b항), 중국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포기(제10조). 그리고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제14조 a항-1에는 전쟁 피해국에 대한 배상은 생상품과 서비스로 하며 배상액은 개별적으로 교섭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온 독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는 양국간 영토 분규의 씨앗을 남겨놓았다. 조약문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울릉도(Dagelet) 등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여기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강화조약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뿐 아니라 독도와 파랑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무인도인 독도(Liancourt Rocks)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측 주장을 일축하고 이를 명기하지 않

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이 조약은 영토 변경에 따른 해당 주민의 국적 변동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조약문 제2조 a항과 b항의 해석을 연장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자도 일괄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 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에 법무성 민사국장의 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일본 국적이 없음을 통보했다. 강화조약 체결 직후에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예비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일본 거주 한반도 출신자의 법적지위를 논하는 가운데 일괄적으로 이들의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제법상 관례로서 영토 변경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에게 국적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과 일본정부는 행정적인 편의를 중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III.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전후처리

1. 일본의 전쟁배상

대일 강화조약은 제14조 a항 2에서 일본의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과거 해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현지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배상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해외에 놓고 온 재산을 배상이라고 한다면, 중국도 내몽골과 만주지역 등에 있던 일본의 재산, 광업권, 철도권익 등을 전후에 취한

만큼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강화조약 제4조는 한국과 같이 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도 일본 재산을 처분을 통한 청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패전 때까지 일본의 기업과 민간인이 해외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1945년 8월 5일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3,800억엔 가량의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계를 인정한다면 1945년의 환율 1달러당 15엔을 적용하여 일본은 패전과 함께 약 250억 달러 어치 해외자산을 전쟁배상으로 지불한 셈이다.

또한 대일 강화조약 제14조는 일본이 전쟁 기간 피해를 끼친 연합국과

표 2 패전 당시 일본의 해외자산

지 역		금 액
한반도		702억 5600만엔
타이완		425억 4200만엔
중국대륙	東北지방	1465억 3200만엔
	華北지방	554억 3700만엔
	華中·華南지방	367억 1800만엔
기타 지역		280억 1400만엔
합계		3794억 9900만엔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전쟁배상은 이처럼 양국간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이 1950년대에 배상을 지불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버마 인도네시아 등 4개국으로 배상금은 총 3,643억 4880만 엔에 달한다.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양국간 협정을 통하여 일본이 연합국에 준하는 배상을 지불한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버마(추가) 등 6개국으로 총 605억 8000만 엔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한국의 경우는 대일 강화회의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까닭에 일본으로부터 연합국에 준하는 배상은 받지 못했으나, 1965년에 체결

된 청구권 협정을 통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 회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배상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협정 체결 후 한국 국민들에게 그러한 성격임을 홍보했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경제원조’ 내지는 ‘독립축하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했으며 협정 체결 후 그렇게 자국민에게 설명했다. 이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동일하게 생산품과 용역서비스에 의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대일 강화조약 제16조는 중립국과 일본의 동맹국에 있던 일본의 해외 재산 등을 통하여 일본이 연합국 포로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1955년에 45억 엔을 국제적십자사에 지불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전후처리 문제를 다루었다. 생산품과 용역서비스에 의한 전후처리 방식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견인차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아직도 북한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간 전후처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간 청구권 타결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본제국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전후처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이제까지 제기된 수많은 소송 가운데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 단 한 건의 보상 의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후보상에 관한 청구권은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기업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⁷⁾

7 다만 일본 사법부가 1997년 9월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 11명

2. 중화민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중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해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 규모인 까닭에 중국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⁸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강력한 발언력을 가질 수 있었던 중화민국은 공산당 군대와와의 내전에서 계속 밀려 급기야 1949년 타이완으로 쫓겨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비호 아래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영국 등의 반대로 중화민국이 대일 강화회의에 중국을 대표하여 참가하기는 곤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화민국은 일본과 교섭을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었다.

중화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평화조약은 1952년 4월에 체결되고 그 해 8월에 발효되었다. 조약 제1조에는 이 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양국간 전쟁상태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조약 전문(前文)에는 양국 정부가 평화협정에 이르게 된 배경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역사적 문화적 긴밀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비추어 상호 선린관계를 희망했다. 둘째, 공동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셋째, 양국간 전쟁의 결과로써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피해자 유족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일본정부와 기업에게 유골 반환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처럼, 일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보다 인도적인 차원의 화해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 8 비교적 일본에 대해 관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전쟁 기간 중에 국민당 정부의 육군총사령관 직위에 있던 허잉친[何應欽]은 그의 저서 『日軍侵華八年抗戰史』(黎明文化事業公司, 1982)에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때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 때까지 8년간에 걸쳐 132만 4천명 가량의 중국군 병사와 578만 7천명 가량의 중국 민간인이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360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곧 전후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평화조약 제2조와 제5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초하여 양국이 확인한 전후처리와 관련된 규정이다. 제2조에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타이완, 평후제도,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서사군도(Paracel Islands)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0조에 의거하여 1901년 베이징[北京] 최종의정서에 의한 이권이나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과 이익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약과 함께 양국이 체결한 평화조약 의정서에는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화민국도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즉 의정서 제1조 b항에 중화민국이 일본국민에 대한 관대와 선의의 징표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a항 1에 기초하여 일본국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수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3. 베트남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일본군은 일찍이 1940년 8월에 베트남 북부에 진주하기 시작했고 1941년 7월에는 베트남 남부에까지 들어갔다. 그 후 베트남에서 프랑스 비시(Vichy) 정부를 추종하는 식민지 당국과 일본군이 공존하는 상태가 이어지다가 1945년 3월에 뒤늦게 일본군이 식민지 당국을 접수하여 바오다이 친일 정권을 앞세워 패전 때까지 실질적으로 베트남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때 일본은 이미 태평양전쟁에서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던 시기로 베트남의 치안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 상태였다. 여기에다가 1945년에 들어 베트남에 자연재해

가 빈발하면서 쌀 작황이 나쁜데다가 미군 공습에 의한 수송기관 차단으로 식량 수송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 북부에서는 식량 부족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과 현지주민 사이에 식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일본군 지배 하에서 굶어 죽은 주민이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45년 9월 하노이에서 발표한 베트남민주공화국 독립선언 가운데 호치민(Ho Chi Minh)주석은 베트남 인민들이 파시스트 일본과 제국주의 프랑스로부터 이중의 지배를 받아 종래보다 훨씬 고통을 받고 비참해졌다고 하며 일본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1944년 말부터 1945년 초에 걸쳐서 북부 베트남에서 200만 명이 넘는 베트남 주민이 굶어죽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 수립을 전후하여 베트남에서 일본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한 보복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후 8년이 지난 1959년에 강화조약 제14조에 따라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 개별적인 배상액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때 베트남은 북부에는 호치민 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설립되어 있었고 남부에는 고 딘 디엠(Ngo Dinh Diem)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설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던 까닭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 베트남만이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었고 교섭 대상이 되었다.

1959년 5월에 체결된 양국간의 배상협정 제1조는 일본이 배상액으로 140억 4천만 엔으로 환산되는 3천 9백만 달러 상당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협정 발표부터 5년간에 걸쳐 베트남에 제공하기로 명시했다. 또한 배상협정과 동시에 체결된 차관협정 제1조에는 일본이 차관으로 27억 엔으로 환산되는 7백 5십만 달러 상당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협정 발표 직후부터 3년간에 걸쳐

베트남에 제공하기로 규정되었다.⁹

한편 북부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57년 8월 남부에서 일본과의 배상액 교섭을 위한 준비 소식이 전해지자 대일 배상 청구권 보류를 선언했다. 1973년 9월 일본이 베트남민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1975년 4월 베트남이 통일 되자 일본은 경제발전을 위한 증여라는 형태로 통일 베트남 정부에 대한 전 후처리 보완을 시도했다. 1975년에 일본은 베트남에 대해 85억 엔 상당의 무 상원조를 제공했으며 1976년에도 50억 엔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했다.

4.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후 한일 양국은 국교수립과 전후처리를 위한 예비회담을 시작하여 14년 만에 기본조약과 함께 청구권 협정을 체결 했다. 양국이 청구권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은 한 국에 제2공화국이 들어서고 1960년 10월에 5차 회담을 가지면서부터이다. 양국은 기존에 한국측이 내세운 8개 항목의 틀에 맞추어 일반청구권 소위 원회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청구권에 관한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의 반환, (2) 1945년 8월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 총독부 채무의 변제,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돈의 반환,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5) 한국법인 또는 한국인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9 1964년 1월 일본외무성은 5년간에 걸쳐 조약상의 배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6)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기타 증권에 대한 법적인 인정, (7) 앞의 여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행한 여러 과실의 반환, (8) 앞 사항의 반환 및 결재를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등이다.

한국의 5·16 군사혁명 이후 양국 정부는 모두 청구권협정 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한일 양측이 원론적으로 협정 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금액을 둘러싸고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개별적인 청구권 금액 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1962년 3월에 개최한 외상회담을 계기로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타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한일 양측이 청구권 금액의 총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이전의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청구권 협상에서 퇴색하게 되고 대신 청구권 자금의 성격은 애매하게 되었다.

196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상이 회담을 갖고 청구권 금액 총액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그 후 청구권 협정을 위한 실무협약에서 양국은 ‘경제협력’과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병기하여 자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문구를 넣는데 합의했다.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청구권 협정 제1조에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금액에 관한 규정과 함께 협정 발효로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일본이 생산품과 용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협정 제2조에는 양국과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었다.

5.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냉전과 중화민국과의 대립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전후처리를 할 수 없었다. 1952년 일본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UN에서 대표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중화민국은 UN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도 서둘러 중국대륙에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외교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사이의 전후처리 문제는 1972년 9월에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으로 일단락되었다. 공동성명에서 일본측은 과거에 전쟁을 통하여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해 온 국교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여기서 거론된 3원칙은 모두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두 개의 중국 혹은 두 개의 정부와 같은 주장에 대한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문제로 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는 일본과 중화민국 간에 맺어진 조약은 불법 무효이며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 제1항에서는 양국간 비정상적인 관계가 성명 발표일로 끝나고 되어 있었다. 일본 패전 후 27년, 대일 강화조약 발효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쟁상태의 종결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공동성명 제5항에는 중일 양국의 우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

한다고 되어 있다. 1952년의 중화민국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도 2차 대전 연합국 가운데 여타 강대국들이 취한 바 있는 무배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6. 전후처리의 과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로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제로서는 북한과의 전후처리 문제와 개인청구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전후처리도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적어도 국가간에 있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서는 전후처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일본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쟁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일본은 ‘국가 무답책’ ‘시효 및 제척기간’ ‘청구권 포기’ 등을 논거로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일본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서 일본정부의 ‘시효 및 제척 기간’ 주장이나 ‘청구권 포기’ 주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는 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니가타[新潟] 지방법원은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일본 대법원은 중국인 ‘위안부’ 소송과 강제연행 피해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측의 ‘청구권 포기’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에도 개인청구권 인정 문제는 때때로 한국과 일본에서 전후보상과 관련하여 논란 대상이 되어 왔다.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협정 제2조에 대해 “국제법상 정부가 국민을 대신 해 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는 외교적 보호권의 소멸만을 뜻한 것으로 개인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발언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일본 사법부의 기각 패소 판결이 잇따르자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해 오고 있다. 일본 사법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 소송 가운데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 단 한 건의 보상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다. “재판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개인청구권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일본 기업과의 화해를 권고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개인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별적인 기업이 배려해야 할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IV.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국교 수립과 외교 관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전후 국교를 맺는 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냉전 초기에 점령과 내전 혹은 독립전쟁을 거쳐 태어난 새로운 국가들로서, 각각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 속하여 같은 진영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념이 다른 국가들과는 단절 정책으로 임했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 사이의 전후 국교 수립 상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각 국가별 국교 수립 상황

통일범위	국가명	상대국	수교 시기
한반도	한국(대한민국) [1948. 8~] (Republic of Korea)	중화민국	1949. 1
		베트남공화국	1956. 5
		일본국	1965. 6
		중화인민공화국	1992. 8
		베트남민주공화국	1992. 12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1948. 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중화인민공화국	1949. 10
중국	중화민국 [1912. 1~] (Republic of China)	j	1950. 1
		한국	1949. 1
		일본국	1952. 4
	중화인민공화국 [1949. 10~] (People's Republic of China)	베트남공화국	1955. 10
		북한	1949. 10
		베트남민주공화국	1950. 1
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 [1945. 9~]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일본국	1972. 9
		한국	1992. 8
		중화인민공화국	1950. 1
	베트남국 [1949. 6~1955. 10] (State of Vietnam) 베트남공화국 [1955. 10~1975. 4] (Republic of Vietnam)	북한	1950. 1
		일본국	1973. 9
		한국	1992. 12
일본	일본국 [1952. 4~] (State of Japan)	중화민국	1952. 4
		베트남국	1952. 4
		한국	1965. 6
		중화인민공화국	1972. 9
		베트남민주공화국	1973. 9

1. 한반도 국가와 중국의 국교수립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은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한국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는 등 일찍부터 한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정부수립 이전 미국의 군정 시기에도 중화민국은 1947년 2월부터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한반도 거주 화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 한국은 정부수립 후 미국보다도 앞서 1948년 12월 중화민국 난징[南京]에 최초의 대사관을 설치하고 김홍일 대사를 임명했다. 그 후 한국의 외교공관은 국민당 군대의 패퇴와 함께 광둥[廣東] 타이페이[臺北]로 옮겨 갔다. 1948년 12월 UN 총회가 한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후 1949년 1월 미국에 이어 중화민국이 한국 정부를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 사절을 파견했다. 1949년 8월 장제스 총통은 신생 한국을 방문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중화민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그 후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결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물론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첫 공식 접촉은 1983년 5월 탑승객 105명을 태운 중국의 민항기 1대가 납치되어 춘천 부근에 불시착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제3국의 중재가 없는 가운데 한국과 직접 교섭을 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교섭 결과 양국이 상호 국호를 사용하면서 합의 각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중국 어뢰정이 한국 해안에 표류한 일과 같은 사건으로 몇 차례 양국이 직접 교섭을 했고 냉전 체제 완화에 따른 민간 차원의 양국간 교역량도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990년 10월 베이징에서 한국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무역상회가 서로 무역대표부를 상대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민간교류와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정부는 비밀리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추진했다. 1992년 5월부터 양국 외무부의 실무팀이 국교수립 원칙을 확인하고 공동성명 문안을 점검했다. 특히 중요한 문제로 한국측은 공동성명 문안을 통한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중국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측은 중화민국과의 단교와 한국 내 중화민국 재산의 승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참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회의록에 이 문제에 관한 양측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반면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 조건으로 제시한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대륙과 외교관계를 개설하면서 그때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모든 국가가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교를 수립했다.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대륙과의 교류 협력은 나날이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양국간 교역량은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에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1,7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것이다. 2010년 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고 있다.

한편 소련의 군정을 거쳐 1948년 9월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그 다음 달에 소련에 이어 몽고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마자 이를 승인하고 곧 바로 외교관계를 개설했다. 1950년 6월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개시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했으나 한국군과 미군에 의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북한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구호 아래 30개 사단 38만 명의 대병력을 한반도 전쟁에 투입했다.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61년 7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지체 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안보의 절대적 후견국이 되고 있으며 교역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상대가 되고 있다.

2. 중국과 베트남의 국교수립

중국대륙과 베트남은 1,4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지니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고대로부터 상호 인구 이동이 빈번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본군이 중국대륙에 진출하면서 이를 피해 베트남으로 피신하는 중국인이 많이 생겨났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하여 18만 명이나 되는 중국의 군대가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에 일시 진주하기도 했다. 이때 베트남에 형성되어 있던 중국인 화교사회는 중국 군대에게 식량과 탄약 또는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남부 베트남에 거주하는 화교 가운데는 중화민국의 정치노선에 따라 베트남의 보수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미 1936년부터 사이공과 하노이에는 화교 보호를 위한 중화민국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이공을 수도로 하는 정권으로서 1949년에 수립된 베트남국이나 제네바 협정에 의한 남북 분단 이후 국가명이 변경된 베트남

공화국은 보수적인 정권의 성격상 프랑스와 미국에 의존하면서 중화민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는 1955년 10월 베트남공화국을 승인하고 사이공에 공사관을 설치했으며 이어 1958년 7월에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그러나 양국의 보수적인 정권 사이에는 이렇다 할 실질적인 외교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1975년 베트남공화국의 구엔 반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은 내전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에 패하자 사이공을 탈출하여 타이완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과거 그가 베트남민주공화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으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기도 하여 중화민국으로부터 냉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혁적 성향을 가진 세력은 내전과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국가 건설과 함께 긴밀한 외교관계로 이어나갔다. 1945년 9월 호치민을 지도자로 하는 베트남(Viet Minh)이 하노이를 수도로 하여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러나 곧 이어 프랑스가 다시 식민지 정책을 추구하자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46년부터 독립전쟁에 돌입했다. 이때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 쫓겨 남해 온 공산당 유격대와 공동 투쟁을 전개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중국공산당 유격대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이념과 전술을 전수받았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중국대륙을 평정하게 되자 1950년 1월에 베트남민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그 후 약 30년간 중국은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와 2만 명의 고문단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하여 베트남을 지원했다. 중국의 지원은 베트남에게 있어서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우호적이었던 캄보디아의 폴포트(Pol Pot) 정권을 통일 베트남이 붕괴시킨 것을 둘러싸고 1979년 2월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10년간 양국은 사실상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1989년 1월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1991년 11월 양국이 영토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다. 2004년에는 양국의 수상이 상대국을 상호 방문하면서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가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남사제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이따금 경비선이 상대방 어선에 대해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양국 사이에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만한 외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3. 한반도 국가와 베트남의 국교수립

일본 패전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은 중국에서 개별적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었다.¹⁰ 그러나 한반도에서 독립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고 나서는 냉전체제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베트남과의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북한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일찍이 1950년 1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소련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과 국교를 맺었다. 또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10 한국의 독립운동가 조정환은 『백강회고록』(1979, 한국종교협의회)에서 일본 패전 직후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베트남민주공화국 인사들과 교류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1945년 11월 김구 주석은 한반도로 환국하기 직전에 상해에 머물면서 호치민 주석이 초대하는 파티에 참석했다고 기록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베트남 대사를 역임한 임홍재는 『베트남 견문록』(2010, 김영사)에서 김구 주석의 아들인 김신 장군이 어렸을 때 호치민의 충칭[重慶] 임시정부청사 방문을 목격했고 김구와 호치민 사이에서 통역과 안내를 담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맺은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북한은 한국이 파병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비난하는 한편 군수품과 공병부대 등을 보내어 베트남을 지원했다. 베트남이 통일한 후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북한이 한때 중화인민공화국 편에 서서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를 대폭 축소시킨 일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는 냉전 시기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우호협력의 기초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 냉전 체제 아래에서 남부 베트남의 보수 정권과 외교관계를 시작했다. 1955년 10월 베트남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정부는 곧바로 이를 승인하고, 그 이듬해 1956년 5월 사이공에 공사관을 설치했으며 초대 공사로 최덕신 장군을 임명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공화국은 1956년 6월에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뉘옌 퀴 안(Nyuyen Qui Anh) 공사를 파견했으며, 1957년에 양국은 공사급 외교관계를 각각 대사급 관계로 각각 승격시켰다. 1957년 9월 베트남공화국의 고 딘 디엠(Ngo Dinh Diem)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1958년 11월 이승만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1960년대에 들어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군대를 파견하여 베트남전쟁에 깊이 관여했다. 1964년 9월 한국은 이동의 과병원 요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남부 베트남에 파견했고 이듬해 1월부터는 비전투요원 파병을 시작했다. 1965년 6월의 후방지원병 파견에 이어 그 해 10월부터는 전투부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요청을 받고 베트남에 파병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있지만 미군을 제외하고는 한국 군인의 수가 가장 많았다. 1973년 3월 완전 철수 할 때까지 총 31만 명이 넘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투입되었다. 군인과 함께 민간 기업인과 기술자들도 대거 베트남에 들어가 활동했다. 베트남 군대 파견과 기업 진출은 한일 청구권 자금의 도입과 함께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 통일과 함께 1975년 4월 한국은 남부 베트남으로부터 대사관을 철수시켰다. 그 후 17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는 중단되었다. 1983년부터 양국 사이에 시작된 직접적인 무역관계를 토대로 하여 1992년 4월 한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무역대표부를 설치했고 이것이 양국의 국교정상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2년 12월 양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사관을 설치했다.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과거 베트남 참전에 대한 유감과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호치민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오늘날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성장 모델로 삼고 있다. 현재 양국의 외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불리고 있으며 ASEAN+3와 같은 지역협력기구에서 매년 회합을 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정상을 비롯한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 사이에 유전개발과 이동통신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중국과 일본의 국교수립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중화민국은 중국을 대표하여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고 국교를 수립하고자 했다. 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국교 수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2국간 수교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다. 1952년 2월에 예비회의를 시작한 이래 신속하게 양국간 수교교섭이 진행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을 초안으로 하여 추진된 교섭 결과 1952년 4월 28일 양국정부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를 불과 7시간 앞에 두고 서둘러 중일 양국의 조약 서명식이 열린 것이다. 비준 절차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해 8월 양국간 평화조약이 발효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주도의 냉전 정책에 의해 일본과 중화민국 사이의 외교관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양국관계가 모두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1963년 9월 중국인 통역사 저우홍칭[周鴻慶]이 일본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타이완에 망명을 요구했다가 그 후에 망명 의사를 번복하고 이듬해 1월 중국으로 송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 정부가 일본의 대응을 ‘친중공’ 행위로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한때 주춤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냉전 체제 아래에서도 일본 사회와 정치권에서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촉구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1970년에는 중국대륙과의 국교회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연맹이 발족되기도 했다. 때마침 1971년 7월 미국의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이 곧 중국대륙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하고 양국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승인하는 흐름에 가일층 박차를 가했고, UN도 그 해 10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대표권을 인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대륙 방문은 일본의 외교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일본이 서둘러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 해 9월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이 중국대륙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갖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에서 유

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그간 외교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화민국 정부와 국교를 단절했다. 일본과 중국은 1973년에 각각 상대국에 대사관을 설치했고 1978년 4월에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그 후 양국은 때때로 역사인식 문제나 영유권 문제로 외교적인 갈등을 빚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각종 경제협력, 기술협력, 유학생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교류 등을 확대해 오고 있다.

5. 일본과 베트남의 국교수립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정부수립과 함께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46년 3월 하노이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그해 11월 호치민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항전을 호소하고 거국적으로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이때 일본으로 귀환하지 않은 일본군 700여 명 가운데 일부가 이 전쟁에 참가하여 베트남 편에서 또는 프랑스 편에서 싸우기도 했다. 그 중에는 베트남을 위한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장교들을 양성한 일본군도 있어서 1986년에 관계자 8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1951년 9월 사이공을 수도로 하는 베트남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대일 강화조약에 서명했다. 이때부터 1973년까지 일본은 냉전체제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민주공화국과는 국교를 맺지 않고 베트남국이나 베트남공화국과 같은 남부 베트남 정부하고만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 1955년 2월 사이공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이렇다 할 교류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이때 양국정부는 전후 배상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여 1959년 5월 일본이 베트남공화국에 대해 총액 200억 엔에 달하는 배상과

차관을 지불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1973년 1월에 들어 미국이 베트남민주공화국과 협정을 맺고 군대를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3월에 철수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서방국가들로부터 지원이 끊어지면서 베트남 전체 주민으로부터 그다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베트남공화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73년 7월 일본정부가 베트남민주공화국에 대해 국교수립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해 9월 파리에 소재한 베트남민주공화국 대표부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대사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윽고 10월에 라오스 주재 일본대사가 베트남 대사를 겸직하는 형태로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통일되자 그해 10월 하노이에 일본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듬해 3월에는 양국이 함께 대사를 상대국에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일본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계속 증가해 왔는데 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그리고 ASEAN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를 들 수 있다. ASEAN이 지역내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수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무상 유상 원조를 적극 실시해 오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상하수 처리와 같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6. 한반도 국가와 일본의 국교수립

국교정상화 회담은 1951년 10월에 미국의 중재 아래 예비회담을 열기 시작하여 14년간 끌어오다가 1965년 6월이 되어서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전에 일본이 아직 연합국 점령 아래 있을 때 한국은 1949년 1월부터 일본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외교기능과 함께 교민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나, 기본조약이 발효되자 양국은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정식 외교관계를 시작했다. 한일 기본조약은 그 후 빈번히 발생하는 역사인식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의 원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본조약에서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구 조약에 대해 양국의 인식차이를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문구로 처리하여 양국이 식민지 지배의 법적 효력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거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61년에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한국의 군사정부는 혁명공약으로 국민의 생활고 해결과 경제의 자립화를 내걸고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써 일본과의 수교타결을 서두르게 되었다. 1962년 11월 김종필과 오히라 마사요시와의 청구권자금 금액 합의를 계기로 양국의 수교교섭은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한일 수교교섭이 타결된 데에는 미국의 권유도 크게 작용했다. 한국에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시기는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냉전구조가 정착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60년대 중반에 들면서 한미방위협정과 미일방위협정을 양축으로 하여 미국 주도의 반공동맹체제가 견고해지고 있었으며,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반공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일양국의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김이 강해졌으며 이러한 미국의 지지와 권유가 수교 타결의 촉진제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6월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의 협정, 즉 청구권 협정, 어업 협정, 문화재반환 협정, 재일한인 법적지위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하며 광범위하고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나 군사정부는 계엄령을 내려 이를 억누르고 대일수교를 단행했다. 일본에서도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반공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이유로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1990년 11월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교정상화를 위한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그 결과 2002년 9월에는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에서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국교정상화 후에 무상자금과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교정상화 교섭은 중단되었다. 오늘날 북한은 UN 가맹국으로서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다.

- 高木健一(1995), 『전후보상의 논리』, 서울 : 한울.
- 국무총리실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2006), 『일본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후 보상 및 국내원호관련 자료집』, 서울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 김성철(2007), 『일본외교와 동북아』,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창훈(2002), 『한국외교 : 어제와 오늘』, 서울 : 다락원.
- 박진희(2008), 『한일회담 :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서울 : 선인.
- 소치형(2004), 『중국외교정책론』, 서울 : 골드.
- 외교통상부(2009), 『한국외교60년 : 1948-2008』, 서울 : 외교통상부.
- 우쓰미 아이코(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서울 : 논형.
- 유인선(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 이산.
- 이석우(2006), 『대일강화조약 자료집』,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이에나가 사부로(2005), 『전쟁책임』, 서울 : 논형.
- 이원덕(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2009),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임홍재(2010), 『베트남 견문록』, 서울 : 김영사.
- 정규섭(1997),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 일신사.
- 최상수(1966),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 서울 : 한월협회.
- 한국정치외교사학회(1999), 『제2차 세계대전 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 통일』,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해방직후 한국소재 일본인자산 관련자료』, 서울 : 선인.
- 황허이(1999), 『도쿄 대재판』, 서울 : 예담.
- 今川幸雄(2002), 『ベトナムと日本』, 東京 : 連合出版.
- 若槻泰雄(1991), 『戦後引き揚げの記録』, 東京 : 時事通信社.
- 何應欽(1982), 『日軍侵華八年抗戰史』, 臺北 : 黎明文化事業公司.

동아시아에서 분단과 전쟁

오일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I. 국공내전

II. 한국전쟁

III. 베트남전쟁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쟁에 시달려 왔다.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전쟁, 1930년대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발발, 그리고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1949년까지의 국공내전, 1950~53년의 한국전쟁, 그리고 1975년까지의 베트남전쟁 등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이러한 전쟁의 성격과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이고 제3국 마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양과 동양의 문명 간 충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쟁, 피압박민족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전쟁, 군국주의전쟁, 자유주의와 인민주주의의 연합전쟁, 시장경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진영 간의 충돌이 단일하게 또는 대부분의 경우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벌어진 지역의 오랜 민족적, 이념적, 사회 경제적 갈등이 외부적 요인과 결합하여 전면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설명도 있다. 물론 분쟁이나 전쟁의 원인이 내재적이냐 외생적이냐, 아니면 상호 연계되어 있느냐는 것은 분쟁 당사자와 분쟁의 기능적 생태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종료됨과 동시에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패퇴함에 따라, 중국의 민족해방과 반제국주의 혁명을 꿈꾸던 두 세력 간의 주도권 싸움은 일찍이 한 차례의 합작시도가 실패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양자 간의 합작과 배반, 전투, 그리고 전면전은 스스로 선택했고 자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집요하고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중국대륙의 통일은 소련과 중국, 북한의 공산국가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안겨주었지만, 미국과 자유진영에는 커다란 상실감과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자신감과 공포심은 곧 이어 전면적인 국제전의 형태로 한반도

에서 발현되었다. 국공내전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더라면, 한반도의 전쟁은 국공내전의 모습처럼 내전과 강대국들의 배후조정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국공내전의 성공과 실패로 인한 경험은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냉전의 본격적인 열전(熱戰)이자 중공과 미국, 미국과 소련, 공산진영과 연합군이 라는 세계적 전면전의 형태로 이끌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국제전은 어느 일방의 승리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봉합됨으로써 냉전을 고착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전쟁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던 강대국들 간의 긴장은 인도차이나에서 표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오히려 미 중 소 강대국에 심각한 피해만 안겨 주었다. 한국전쟁이 냉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반면에, 베트남전쟁은 오히려 냉전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데탕트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전쟁 과정에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인도차이나 전역의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전한 주변국과 외국군의 사상자도 결코 적지 않다. 전쟁은 사상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포로와 난민,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고 이들의 운명과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통해 각 전쟁 당사국들의 국가권력과 지배력은 공고해졌으나, 좌우 이념적 경직성은 심화되었고, 주변국들과의 대결과 국경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일부 국가는 전쟁특수를 누리고 경제적 이익을 보았으며, 전후 동서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진영에 편입되어 세계체제 속에서의 주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국공내전으로 중국대륙은 통일되었으나 오늘날까지 타이완과의 양안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양안 간의 갈등과 해결은 미 중 관계와 전략적 이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 한국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

되었으나 오늘날까지 남북통일에는 많은 장애가 남아 있다. 휴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국과 중국은 화해하였으나 한반도에 대한 양 진영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베트남은 오랜 시행착오와 고통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소련, 미국, 한국, 프랑스 등 거의 모든 관련 국들은 과거의 전쟁에 대한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고 화해와 미래를 향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이상의 전쟁을 살펴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전쟁에 익숙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베트남전쟁 이후 지난 30여 년간 동아시아에서 커다란 전쟁은 발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안정된 평화가 아니라 언제라도 군사적 갈등과 국제적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과거의 요인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위협은 항상 내재되어 있으며, 내부 요인이 격심하게 상승하는 순간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위협 요인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해소해 나가야 하는 데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1945년 이후 동아시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전쟁, 즉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발발 배경과 경과, 그리고 주요 강대국과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미친 영향과 대응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국공내전

1. 국공내전의 배경과 원인

1) 일본의 패전

1945년 8월 일본군이 항복하면서 8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중국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오랜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제2차 국공합작을 거쳐 국민당 정부군과 공산군이 함께 항일전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의 항복은 곧 두 세력 간의 숙명적인 무력대결을 예상케 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이 항복하기 전부터 양자 간의 긴장관계가 팽팽했던 데다가 항복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컸기 때문이었다. 전쟁 종식 이전부터 전후구상에 대한 국 공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으며,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해방구를 접수하는 문제에서부터 양측의 무력 충돌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45년 4~6월 사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전후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만 17년 만에 연안(延安)에서 개최된 공산당 제7차 전당대회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은 '연합정부를' 발표하였다. 한편 국민당도 5월에 충칭(重慶)에서 10년 만에 제6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개막식에서 장제스(蔣介石)는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 구현을 약속하면서 쑨원 탄생 80주년이 되는 1945년 11월 12일에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훈정기(訓正期)를 종식하고 새로운 헌정기(憲政期)를 시작하겠다고 선언

하였다. 이는 공산당을 배제한 채 국민당 주도로 정치계획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산당의 연합정부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국민당은 공산당의 홍군(紅軍)과 일본군으로부터 해방될 지역을 국민당에 예속시킬 것을 주장하는 한편, 공산당은 국민당정부가 대지주와 금융자본가, 매판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며 항일전쟁에서 소극적이었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였다고 비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이윽고 일본군의 패전이 다가오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승전의 명분과 실리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국민당정부는 일본의 패전으로 전승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되었지만, 공산당에 대한 주도권을 확장하기 위해 무력 대응을 선호하였다.

특히 양측은 중국대륙 전역에 퍼져 있던 130만의 일본군과 80만에 달하는 난징(南京)의 친일 괴뢰정권에 대한 무장해제와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광활한 지역을 누가 접수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장제스는 해당 지역의 일본군 최고사령관에게 국민당군이 점령지역을 접수할 때까지 치안을 유지하면서 공산당군을 축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때문에 산시성(山西省), 산둥성(山東省), 장쑤성(江蘇省) 등에서 일본군과 공산군의 전투가 계속되었다. 당시 충칭(重慶)의 국민당군은 미국의 수송지원, 일본주둔군과 난징정부군의 협력을 받아 화북, 화동, 동북, 만주, 서북 지역의 주요 도시와 철도 연변을 접수해 나갔다.

이에 공산당측도 국민당정부가 항일전쟁의 결실을 독차지하고 내전을 획책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점령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탈환을 지시하였고, 화북지방과 만주, 동북지역에서 인민해방군에 의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점령지를 접수해 나갔다. 당시 공산당은 만주 지역에서 소련군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주로 광대한 농촌지역을 장악해 나갔다.

2) 국민당과 공산당의 협상과 대립

국 공 양당 사이에서 일본군 및 난징 괴뢰정부 점령지역에 대한 무장해제와 접수를 놓고 치열한 무력투쟁과 내전의 위기가 심화되자, 오랜 전쟁의 참상과 국 공 양당 간 내전 조짐에 불안을 느낀 중국인들은 양당 간 평화 협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8년간의 중일전쟁 기간 중국인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중일전쟁 종결 직후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참혹한 내전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상에 의해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조차도 중일전쟁 기간 동안 국민당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고, 아직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국제적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국민당정부에 공산당과의 협상을 재개하도록 요구하였다.

당시 국민당군은 중일전쟁 기간 중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 중국 서남부의 변경지역으로 물러나 있었고 동북부 일대의 일본군 점령지역과 이 지역들의 배후에서 광범위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공산당군에 비해 전략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공산당과의 협상을 도모하는 동안 공산당군 활동을 저지시키는 한편, 국민당군을 신속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공산당군 역시, 미국이 국민당군을 후원하고 있고, 소련마저 내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국민당군과 정면으로 맞설 만큼 정치, 군사적으로 확고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당이 제안하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29일부터 45일 간 충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내전을 회피하고 평화적 건국을 지향하며, 정치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 등에 합의하고, 장래 모든 당파가 참여

하는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0월 10일에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고 하여 이를 ‘쌍십(雙十)협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충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전히 화북과 동북지역에서는 공산당군과 국민당군의 무력충돌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국민당정부에 제한적인 군사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공산당과의 협상에 의한 내전중지와 평화적, 민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독려하였다. 이에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1945년 11월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장군을 특사로 파견하여 국민당과 공산당의 협상을 중재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도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그해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 영 소 외상회담에서 중국의 내전중지와 제3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민주적 정부 수립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국내외 정세에 따라 1946년 1월 10일 미국의 마셜 장군, 국민당의 장쑤(張群)와 공산당의 저우언라이(周恩來)로 구성된 ‘군사 3인위원회’가 상호 합의 하에 ‘국공 정전협정(停戰協定)’에 조인하였고, 이날 한 해 전에 합의한 바 있는 정치협상 회의를 소집했다.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정치협상 회의에서 통일정부 수립, 국민대회 개최, 군제(軍制) 개혁, 화평건국강령(和平建國綱領), 군사문제안, 헌법초안 등 ‘5대결의’를 채택하고 가결하였다. 또한 정치협상회의로부터 국공 양군의 감축문제에 대한 협상을 위임받은 ‘군사 3인위원회’는 1946년 2월 25일 ‘국공 정군협정(整軍協定)’에도 합의하였다. 이처럼 중국대륙에서는 국공 양당과 여러 세력들이 참여하는 평화로운 정치협상과 획기적인 감군계획이 합의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내전이 중단되는 듯한 희망이 엿보였다.

3) 냉전의 시작

그러나 국공 양당의 합의는 일시적이었고 당초부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양측의 합의는 각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것도 아니었으며, 국내외 정세는 이러한 합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1946년 2월 소련의 원폭개발과, 3월 영국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의 ‘철의 장막’ 연설로 상징되는 유럽발 냉전의 서막에서, 미국 역시 ‘국공 정군협정’이 체결되던 날 약 1천여 명에 달하는 미군 장교와 병사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발족하여 국민당군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였고, 6월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법안을 가결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세계적 냉전의 심화와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공산당군의 반발은 격화되었고, 오히려 국민당정부 내 반공주의 강경세력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들은 냉전적 구도와 미군이 후원하는 군사적 우세를 과신하며, 정치협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당 일당독재 하의 정권수립에 나섰다. 3월에 개최된 국민당 제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一中全會)에서 정치협상회의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였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국민당 중심의 중앙집권적 헌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민당 일당독재를 비판하는 진보적 세력과 사회 세력들을 억압하고 진보적 운동가를 암살하는 등의 우익테러를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당이 항의하면서, 만주지방에서 양당 간의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양측은 1946년에 접어들자 예정된 소련군 철수 이후의 만주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4월에 소련군이 철수하자, 공산군이 만주의 농촌지역을 장악하고, 창춘(長春) 등 대도시 몇 군데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국민당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면서 5월 하순에는 만주지역의 대도시를 재점령하였고, 공산당군은 패퇴, 철수를 거듭

하였다. 7월부터는 국민당정부가 미국의 지원 하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산군의 거점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면적인 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2. 내전의 전개과정

1) 초기 전황, 국민당 우세와 난징 국민대회

국민당은 6월 이후 전면적인 군사공세로 전환하였고, 미국의 계속된 원조를 토대로 7~8월에 걸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공산당의 해방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전면적인 내전에 돌입하였다. 내전 초기 국민당군 규모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정규군 200만 명을 포함한 총병력 약 430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던데 비해 공산당군은 약 120만 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내전 초기 국민당군은 공산군을 압도했고 거의 모든 전선에서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1946년 하반기 동안 국민당군은 공산당이 지배하던 165개 도시와 17만 4천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내전 초기 양측의 규모와 세력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공 내전 초기 국민당과 공산당의 세력범위

	병력	점령지역	점령도시	관할지역 인구
국민당	430만	730만km ² (76%)	1545개(77%)	3억3893만(71%)
공산당	120만	230만km ² (24%)	464개(23%)	1억3606만(29%)

내전 초기 국민당군은 중국 전역으로 지배권을 확대하였는데, 국민당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산군의 영향 하에 있던 8로군은 일본에 의해 대규모 광산개발과 공업화가 진행된 만주 지역을 소련으로부터 인계받고, 잔류 일본인들을 징병, 징용함으로써 전력을 보강하고 있었다. 이때 국민당은 군사적 공세뿐 아니라 정치적 공세도 병행하였다. 초기의 군사적 공세에서 국민당은 우세를 차지한 것 같이 보였다. 왜냐하면 공산군을 중부평원과 양쯔강[揚子江] 하류지역에서 몰아내고 해방구의 중심지인 청태[承德] 장자커우[張家口] 린이[臨沂] 등을 차례로 점령한 끝에, 1947년 3월에는 마침내 장정(長征) 이후 공산당의 핵심근거지였던 옌안까지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군사적 승리에 고무된 국민당정부는 기존의 충칭 정치협상회의의 결정을 완전히 폐기하고 공산당을 배제하고 국민당이 주도하는 헌정체제 하의 새로운 정치기구를 수립하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11월 공산당과 민주동맹 등 진보세력의 반대와 보이콧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난징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헌법을 통과시키고, 1947년 1월 1일에 ‘중화민국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이 헌법에 따라 국민당정부를 개편하여, 청년당, 민사당, 그리고 무당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사실상 공산당은 물론이고 민주동맹 등 제3세력마저 배제한 채 국민당이 주도하는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진보적 인사와 여러 사회세력들이 국민당정부에 실망하여 점차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화하기 시작하였고, 이같은 국민당정부의 정치적 선택은 나중에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공산당의 반격, 대전환

내전이 본격화된 직후 공산당은 국민당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 정

면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후퇴하면서 병력의 보존과 확충을 중시하고 해방구의 안정과 동원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공산당은 근거지 방어 대신 군사력을 빼돌려 기동전 유격전을 구사하며 국민당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전개했다. 연안을 내주는 대신, 보다 광대하고 물자가 풍부한 산시[陝西]로 이동하여 반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당의 기본노선으로 확립된 대중노선에 입각하여 생산력증대 운동을 전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공산당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물론 공산당은 여전히 신민주주의 경제를 강조하고, 농촌에서 지주와 부농의 정치 경제적 권리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였지만, 사실상 내전이 격화될수록 빈농과 대중들로부터의 정치적 지지와 인민해방군 입대라는 군사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급진적 토지정책, 즉 일련의 토지분배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폐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 분배하여 농촌사회의 전통적 봉건체제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농과 중농의 토지까지 무차별적, 폭력적으로 몰수, 분배하는 ‘좌익적 무정부주의적 경향’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전이 확대되고 치열한 계급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토지개혁은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빈농들에게 최대의 과실을 분배해 줌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토지개혁과정에서 등장한 빈농을 대대적으로 흡수하여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1948년 공산당은 “지난 2년 동안 해방구에서 토지를 획득한 농민들 중에서 약 160만 명이 인민해방군에 지원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무렵 공산당원 수의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40년대 후반 중국공산당 당원 수의 변화

(단위, 명)

	1945년 4월	1946년	1947년 중반	1948년	1949년
당원 수	121만	135만	280만	310만	450만

토지개혁이야말로 내전에서 공산당이 세력을 보전하고 확대하고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발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통해 국민당의 농촌기반을 잠식하는 데 성공했으며, 민족자본가와 지식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제반정책도 실시하여 국민당의 고립을 도모하였다. 게다가 국민당의 부패, 국민당 지배지역에서의 악성 인플레이와 재정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 국민당의 전략적 오류, 만주에서 소련의 암묵적인 공산당 지원 등이 가세하여, 내전 초기 국민당의 우세는 소멸되고 말았다.

이처럼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의 정치적 지지와 토지혁명에 따른 폭발적 지지를 얻은 반면, 국민당은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잃고 고립됨으로써, 내전이 본격화된 이후 약 1년 만에 양측의 입장은 역전되고 말았다. 게다가 공산당이 방어적 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군사적 입장도 정반대가 되었다.

1947년 7월말 덩샤오핑[鄧小平], 류보청[劉伯承]이 이끄는 야전군이 황하를 건너 남진, 우한[武漢]과 난징을 공격할 수 있는 요충지역을 장악하였고, 8월에는 천이[陳毅]의 야전군이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장쑤로 진출하였고, 린 바오[林彪]의 부대는 만주지역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국민당군을 평톈[奉天], 지린[吉林], 창춘[長春] 등 대도시에 고립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윽고 국 공 간의 세력관계는 1947년 말 일대 전환점에 이르렀다. 1947년 12월 25일 산시성[陝西省] 양자거우[楊家溝]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마오쩌둥은 내전이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였다.

3) 국민당의 붕괴와 패퇴

공산당이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1년여 만에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데 반해, 국민당은 미국의 정치적 지지는 물론 엄청난 규모의 경제 군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내부의 분열과 부패, 무능 등으로 말미암아 중국 전역에서의 정치적 실패와 군사적 후퇴를 거듭하였다. 이로써 국민당군은 중국 대륙에서 패주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처럼 국민당 정권과 군이 정치 경제 군사적 실패를 거듭한 가장 중대한 원인은 대다수 중국 인민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당정부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일전쟁 종결 이후 국민당정부는 민족적 정통성 경쟁, 친일청산 문제에서 공산당에 패배하였다. 중일전쟁 직후 국 공 양당이 일본군 점령 지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은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 패전한 일본군과 난징 괴뢰정부의 관료, 군대, 경찰 세력 등의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이들 친일세력의 상당수를 국민당정부의 행정기구와 군대조직에 수용하였다. 게다가 국민당정부와 군대는 점령지역에서 일본군과 친일세력이 소유했던 재산과 토지, 물자 등을 마구 착복하고, 주요 산업시설이나 기업, 공장 등을 일부 매관매도자본들에게 독점시킴으로써 민심을 실망시켰으며, 부패의 만연으로 경제기반을 파탄시켰다.

둘째, 국민당정부는 평화와 민주화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 특히 대도시 청년학생과 지식인들의 평화운동,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기는커녕, 이들을 급진적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고 투옥과 감금,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며 탄압하였다. 이에 실망한 지식인과 청년, 학생, 진보적 세력들이 대거 이탈하여 공산당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셋째, 국민당정부는 공산당의 토지개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국민당정부는 일찍이 쑨원이 민생주의의 근본으로 주창했던 토지소유의 균 등화와 경자유전 원칙조차 제대로 이해하거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국민당의 주요 기반이 주로 농촌사회의 기득권층과 지주계급이었고 蔣 宋 孔 陳씨의 4대 재벌 세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장 온건한 형태의 토지법과 소작료 인하 운동조차 성공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국민당정부가 농촌사회와 대다수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민당정부는 중일전쟁 종결 이후 접수 또는 점령지역에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못했으며 만성적인 경제적 혼란과 무질서, 천문학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 대중의 염증과 혐오를 자초하였다. 전후 국민당정부는 미국제품의 수입초과로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전쟁비용 마련을 위해 통화를 마구 찍어내는 우를 범하였다. 1948년 국민당정부는 뒤늦게 일련의 통화개혁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실패함으로써 재정파탄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마지막으로 국민당정부의 부패와 혼란, 무능을 들 수 있다. 중국에 파견되어 있었던 수많은 미국의 외교관, 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당정부의 부패를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국민당정부가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을 때, 공산당의 전면적인 군사적 공세가 전개되었다. 1948년 9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이어진 유명한 3대전투가 그것이다. 이 3대전투가 실질적으로 국공내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대 계기였다. 9월 7일 마오쩌둥의 작전지시에 따라 린바오와 뤼룽환[羅榮桓]이 이끄는 동북야전군이 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를 공격, 점령하였다. 11월 2일까지 52일간의 전투에서 국민당군 47만을 섬멸하고 동북지방의 기반을 굳혔다(랴오선[遼瀋]전투).

이와 동시에 천이[陳毅]가 이끄는 화동 야전군이 산둥성에서 국민당의 마지막 보루였던 지난[濟南]을 장악하였다.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10일까지

덩샤오핑이 지휘하는 중원(中原) 야전군과 화동 야전군이 합세하여 산둥, 허난, 장쑤, 안후이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쉬저우(徐州)를 공략하여 55만의 국민당군을 패퇴시켰다(화이하이[淮海]전투).

그리고 요심전투에서 패주한 국민당군 52만이 베이핑(北平, 지금의 베이징)과 텐진(天津)을 방위선으로 구축하며 저항하자, 이에 대해 동북 야전군과 화북 야전군이 11월 29일부터 진격하여, 12월 24일 양자거우(楊家溝)를 점령하였고, 이듬해 1월 4일에는 텐진을, 그리고 1월 31일에 마침내 베이징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핑진[平津]전투).

4)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처럼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에서 국민당군이 공산군에 대패하여 괴멸 위기에 빠지자, 장제스는 1949년의 연두성명에서 총통직을 사임하고 총통대리로 선임된 리쑹린(李宗仁)을 내세워 평화협상을 제안하고 공산당과의 교섭을 시도하였다. 이에 국민당정부의 수도인 난징으로의 진입만 남아있던 공산당은 실질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국공평화협정 8개조’를 제시하였다.

수세에 몰린 국민당은 8개조를 기초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4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 마지막 국공 평화협상이 시작되었다. 국민당 대표는 장즈중(張治中)이었고, 공산당 대표는 저우언라이였다. 양 대표는 8개조를 기초로 ‘국내화평협정’의 초안에 합의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국민당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난징의 국민정부를 대체하는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한다는 것과, 국민당 측의 전쟁범죄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정복자에 대한 조치라며 극도로 반대하였다. 마침내 국민당은 4월 20일 정식으로 이를 거절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거절 이유로는 공산당의 제안 목적이 일당독재인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며 국민당

이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날인 21일 마오쩌둥과 인민해방군 주더[朱德] 총사령관은 전군에 대하여 양쯔강을 도하하여 국민당정부의 수도인 난징과 상하이[上海]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도강[渡江]전투). 23일 리쑹런이 난징에서 철수하자 24일 인민해방군이 난징에 무혈입성하였고, 5월 27일에는 당시의 최대 도시였던 상하이가 점령되었다. 그 후 국민당정부는 광저우[廣州], 충칭으로 천도해 가며 저항하였고, 국민당정부는 계속 남하하며 국민당군을 추격하였다. 최후의 대전투는 스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에 걸쳐 벌어진 시난[西南]전투였다. 12월말까지 인민해방군은 저항하는 90만 국민당군을 추격하였는데, 마침내 12월 10일 국민당군 50만이 타이완[臺灣]으로 도피하고 나머지 40여만이 공산당 측에 투항함으로써 전투가 종식되었다.¹

공산당 측이 빠른 속도로 중국대륙을 장악해 나가는 가운데, 마오쩌둥은 1949년 9월 중국인민 정치협상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광장에 모인 30만의 군중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아편전쟁 이후 100여 년 간 지속된 중국대륙의 전쟁과 혁명은 공산당의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1 이후 1950년에 들어 하이난[海南島]과 푸젠성[福建省]의 동산다오[東山島]에서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4월말에 하이난을, 5월 12일에 동산다오에서 전투를 종식시켰다. 그 뒤 1951년 10월 인민해방군이 티벳 라사(Lhasa)에 진주하여 중국에 편입시킴으로써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이 확정되었다.

3. 소련, 북한, 그리고 일본

소련은 중국공산당의 창립 때부터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을 통해 중국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한 1927년 이후 국민당의 본격적인 공격으로 중국공산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물자를 원조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직후 소련은 중국공산당이 만주로 진공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게 된다. 만약 만주의 일본 관동군이 가지고 있던 공장이나 전쟁물자들을 국민당이 접수했다라면 내전의 승리는 국민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그것들을 먼저 입수하여 공산당에게 넘겨줌으로써 국민당은 국내의 거의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을 내전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 소련이 만주로 들어오지 않았었다면 만주의 풍부한 자원이 국민당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당 북부 지배지역의 고질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는 자원들은 외국으로 수출하여 외환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1947년과 48년에 겪게 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처음부터 공산당에게 무조건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소련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하루 전에 국민당 정부와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 진영을 견제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일본 관동군에 대한 공격과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당의 협력을 의도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일본의 패전 직후 소련은 국민당과의 협력 노선을 밝히고, 경제합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46년 2월 이후 장제스가 소련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자 소련은 다시 공산당과의 관계로 기울게 되었다.

그밖에 소련은 무역을 통해서도 공산당을 도왔는데, 무역에서 소련은 해

방구에 대하여 의료, 자동차, 석유제품, 약품과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콩, 옥수수등과 같은 농산품을 받았다. 또한 동북지역의 철도 복구를 지원하여 교통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었다. 당시 소련은 120개에 달하는 교량을 복구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외에도 외교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고, 미국을 견제하였다.

국공내전 당시 북한도 중국공산당을 적극 지원하였다. 국공내전 시기 만주 지방에 있던 조선족 대부분은 공산당을 지지하였고, 약 6만2천여 명이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으로 지원하여 참전하였다. 이들의 지원은 중국의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북한은 중국공산당과 그 부대가 국민당 군대에 밀려 남만주에서 철수해 다시 전열을 정비할 때까지 북부지방을 후방기지로 내주고 전략적 교통로도 제공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북한 지역의 후방기지를 활용해 부상병의 철수 안치, 병력 및 전략물자의 수송, 화교공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1949년의 경우 수송물자만 30만9백 톤에 달했다.

한편 북한측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국공내전 시기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격문을 만들어 뿌린 적도 있고, 북한 내 병력과 물자를 직접 제공했다고 한다. 1945년 마오쩌둥의 지시로 북한을 방문한 천원(陳雲)의 요청에 따라 10만정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으며, 중국에 광목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북한 전역에서 면직물을 징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동맹, 혈맹 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7월 북한에 들어온 조선족 출신 중국인민해방군 2개 사단 등 3개 사단 5만여 명이 조선인민군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한국전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공내전 시기 일본인들은 본의 아니게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양측에 이용되거나 소극적으로 참전하였다. 만주에 억류 중이던 1만여 명의 일본군은 8로군에 편입되어 공산군에 훈련과 전쟁기술을 전수하였다. 8로군은 일본

군 군인을 교관으로 한 동북민주연군항공학교를 설립하여 항공전력을 보유하였다. 일본인 의사와 간호사 등은 중국공산당의 강요로 동북군의 병원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한편 장제스의 의뢰를 받은 전(前) 지나(支那)파견군총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는 몰래 토미타 나오키[富田直亮] 전 육군소장이 인솔하는 구 일본군장교단을 타이완으로 밀항시켜, 장제스의 군사고문으로서 지원하였다. 이들은 국민당군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함정, 항공기의 운용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나중에 8·23진먼[金門]전투의 포격전방어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이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양측에 의해 이용, 억류 또는 자발적으로 참전하였던 일본인들은 1950년대 이후에도 약 3만여 명이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적십자사를 내세워 1952년 북경에서 협정을 맺은 이후 이들을 순차적으로 귀국 송환 시켰다. 이때 중국에서 귀국한 일본인들은 전후 중일 간의 인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는 물론이고 1972년 중일 수교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4. 내전의 결과와 영향

국공내전의 종결은 단순한 전투의 종식이 아니었다. 아편전쟁 이래 1세기에 걸친 중국대륙에서의 분쟁과 전투를 종식시키는 것을 넘어서, 서양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등의 외세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모두 배격하고, 수천 년 동안의 봉건사회를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대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패퇴시킨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은 서둘러 소련과의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국제공산주의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미국과 NATO동맹체제에 대항하였다. 그 후 중국은 양대 진영 간의 첫 대결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에 적극 참여하였고, 티베트와 내몽고에까지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특히 국공내전을 통해 형성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전쟁 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의 조선족과 북한은 국공내전 초기 위기에 처한 중국공산당이 전략적 요충지인 만주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협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곧 북한의 통일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국공내전에 참전하고 숙련된 조선족 고급인력을 받아들여 국가건설과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였다. 이들은 북한이 한국전쟁을 도발하는 데 중요한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국공내전의 승리는 김일성과 북한의 전쟁 욕구를 고무시켰다. 내전 초기 국민당에 비해 군사 경제적 열세에 있던 중국공산당이 전쟁에 승리하고 공산혁명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한국전쟁 직전 남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확보한 김일성과 북한에게 전쟁승리의 자신감을 고취시켰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연합군에 쫓겨 수세에 몰렸을 때 김일성이 중국의 지원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국공내전 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공내전에서부터 시작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확고한 ‘혈맹관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한국전쟁 뿐만 아니라 이후 베트남전쟁, 중월전쟁, 중 인도 국경 분쟁, 중 소 국경 분쟁에 이르기까지 국제공산주의 확산과 영토분쟁, 그리고 진영 내 헤게모니 분쟁까지 적극 개입하였다. 중국은 70년대 이후 소련과 결별하고 미국과의 데탕트를 통해 평화노선을 지향하고, 80년

대부터 개혁개방 내세워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함으로써 현재는 미국의 일극체제를 견제할 만큼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대륙에서 패퇴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은 미국의 후원 아래 유엔(UN)에서 자유중화로서 인정받고 한국, 일본 등과 국교를 수립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등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현지 주민에 대한 국민당 정권의 압제가 2·28사건으로 폭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며, 중국 대륙과의 간헐적인 포격전과 전투로 인해 오랜 기간 계엄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70년대 미 중 간 국교수립을 계기로 UN에서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중국을 대표하게 되자 타이완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갔다. 90년대부터 민주화가 진행되어 전후 최초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현재는 2008년 이후 다시 국민당 정권 아래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공내전 시기 이전부터 국민당 정부를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대륙 전체를 공산당에 빼앗긴 것은 미국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공산화된 중국과 소련의 동맹체제 구축은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공내전 시기 동안 소련과의 대결이 주로 유럽을 무대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아시아에서 국공내전의 실패와 중국대륙 전체의 공산화, 중국 소련 북한의 공산주의 동맹체제의 형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 한국 타이완에 대한 동맹국 보호와 책임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것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II. 한국전쟁

1. 전쟁 발발의 배경과 원인

1) 광복과 한반도 분단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맺게 되자, 한민족의 자주독립이 실현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종전 후 한반도의 38도선은 남 북한뿐만 아니라 미 소를 양축으로 하는 동서 냉전구조 속에서 자유세계와 공산진영이 마주하는 최전선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갈등은 국제 냉전이 심화될수록 더욱 고조되어 갔다.

미국은 한반도에 38도선을 설정하여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군이 각각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했다. 일찍이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한반도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22일에 평양에 도달하였다. 8월말 소련군은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북한의 공산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하였다. 1945년 10월 14일 소련군정은 김일성을 대중 앞에 등장시키고, 이듬해 2월 8일에는 이른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소위 '확보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남한 지역에는 9월 4일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 휘하의 미 제24군단 선견부대가 김포에 도착하고, 9월 7일에는 더글라스 맥아더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 남한에 대한 군정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정책준비 없이 출범한 미군정은 초기부터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남한의 혼란상은 광복과 더불어 조직된 수많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회의(1945.12.26)가 개최되어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 문제가 논의되었다. 강대국들 간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좌익계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신탁 찬성 대 반대 세력 간 분열과 대립이 극심해졌다.

모스크바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미 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인사와 정당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남한 측 대표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미국은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하였다. 9월 17일, 미국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UN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다. 한반도에서 소련의 협력 아래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UN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자유선거와 외국군 철군 문제를 둘러싸고 미 소 양국과 주변국들은 대립하였고, 국내에서도 각 정파들마다 입장이 대립하였다. 결국 1947년 11월 14일 UN총회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이로써 미 소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관계에서 완전히 결별하였다. UN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소련은 UN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1948년 2월 26일 UN 소총회에서 남한 지역에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였다.

한편 소련 군정은 1947년 11월 중순 북한에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한 이른

바 ‘인민헌법’ 초안을 기초한 후 이를 남한의 ‘5 10 선거’에 때를 맞춰 통과시켰다. 북한은 1948년 8월 하순 북한전역에 걸쳐 공산당의 단일후보만 출마시킨 선거를 실시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같은 날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수상으로 선출되었다.

UN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고, 소련과 공산국가들은 북한을 합법정부로 각각 승인하였다. 남한과 북한 양측은 모두 상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였고, 수복하거나 적화통일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였다. 미 소 강대국과 한반도의 두 정부가 화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충돌할 가능성만 높아져갔다.

2) 한반도 국내외 정세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소련은 유럽에서의 공산세력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아시아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때까지 조용히 정세를 관망하면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시기의 성숙을 기다린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소련의 북한 진주는 처음부터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 38도선 이북에 장차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남진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강력한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시기가 성숙할 때까지 전력을 비축하려는 공산기지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은 북한에 최신 소련장비로 무장한 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적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와 무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49년 8월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과 10월의 중국대륙의 공산화는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과제로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스탈린은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군

의 전력화를 구체화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50년 4월 또다시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함께 남침계획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미국은 종전 후 국방예산의 감축과 미군의 감군으로 지상병력의 부족을 겪게 되자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남한과 북한 정부 수립 이후 북한과 소련 측이 한반도에서의 외국군철수를 제기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반도에서 철군을 이행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후 남 북한 간의 군사적인 불균형과 북한의 남침 징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국군의 증강과 군사 원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킨 소련의 군사정책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독일과 동유럽 지역에서 소련의 진출을 봉쇄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한편, 소련이나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일으키는 못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미국은 극동지역의 전략적 방위선으로써 일본열도를 더욱 중시하였다. 극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1950년 1월 12일 딘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에서 확인되었다. 이 선언에서 애치슨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알류산 열도-오키나와-류큐-필리핀을 연결하는 태평양방위선의 확보가 미국의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때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전략적인 극동지역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 애치슨은 방위선 밖의 지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우선은 자체적으로 저항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UN헌장 아래에서 전체 문명세계가 개입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이를 두고, 북한과 소련, 중국이 미국의 극동지역 방위선, 즉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을 확인하고서 남침을 해도 미군이 사활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지적과, 오히려

미국이 공산측의 오판을 초래하여 전쟁을 유발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애치슨의 발언은 미국이 4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대규모 침략에 대비해 수립한 핀서(PINCER), 문라이즈(MOONRISE), 오프태클(OFF TACKLE) 등 일련의 비상전쟁계획(Emergency War Plan)에 투영된 베링해협-동해-황해를 잇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도서방위선 개념을 제시한 데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후일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건에는 1950년 5월말 미국이 한국을 극동방어선에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어쨌든 당시 공산진영은 이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남침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전쟁을 준비하였고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토지분배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남한은 거의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만 경제가 유지될 정도로 산업활동이 미미했으며,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으로 사회 내부의 이념대립과 갈등이 심각했으며, 잦은 식량부족과 물가폭등으로 혼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최신에 탱크와 장비들을 제공받아 기계화 부대를 편성하였으며, 중국대륙으로부터는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5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들이 대거 귀환하여 인민군에 배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약간의 군사고문단을 설치했을 뿐 남한의 복침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사원조에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1948년 말 이후 한국군은 국내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병력을 전국 각 지역에 분산시키고 있었다.

3) 전쟁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의

한국전쟁의 원인과 전쟁발발 책임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으나 그동안 미국 측 자료만 공개되었다가 점차 소련 측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선별적인 중국 측 자료들이 공개됨에 따라, 전

쟁발발의 배경과 기본적인 윤곽은 상당 부분 규명되고 있다.

전쟁의 원인을 둘러싸고는 크게 미 소의 냉전과 중국의 개입 등에 주목하는 외인론(外因論)과, 한반도 내의 이념대립과 갈등 그리고 전쟁 발발 직전까지 산발적으로 있어왔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등이 전면전으로 폭발했다는 내인론(內因論) 또는 내전설(內戰說)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이 논리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스탈린이 전쟁을 주도했다는 전통주의적 관점이 서방의 정부와 학계, 언론계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점차 미 소 간에 진행된 세계적인 대결의 국지적 대리전이었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전쟁의 원인제공자로서 미국을 지목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한국전쟁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초기 전통주의 시각과 제국주의 비판은 모두 남한과 북한이 전쟁 발발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미국과 소련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한국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80년 이후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로 대표되는 수정주의 입장이 등장하였는데,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남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와 갈등이 폭발한 내전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한반도 내재되어 있던 사회 경제적 모순에서 야기된 계급투쟁적 요인들과 여러 세력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1946년 10월의 대구폭동으로부터 제주도 4·3사건, 여순사건, 지리산 일대에서 유격대의 공세와 토벌전과 같은 게릴라전이 계속 이어졌고, 1950년 이전까지 38선 근처에서 남북한 간에 수많은 전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내전적 갈등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존 메릴(John Merrill)과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 등은 내인론과 외인론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한국전쟁의 기원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들은 한국전쟁이 내전의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은 틀림없지만 국제 냉전의 복합 속에서 일어난 ‘국제적 내전’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90년대 이후 구 소련의 몰락과 함께 소련 측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이전의 전통주의와 스탈린의 전쟁책임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으며 아울러 김일성이 처음부터 집요하게 스탈린과 중국 측에 대해 전쟁물자와 인력을 요청하고, 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관철시켰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혀졌다. 아울러 중국에서 당시 마오쩌둥의 전쟁지휘 전문들이 공개되었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그동안의 소련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 김일성의 집요한 전쟁 지원 및 개전 요청에 대해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미 소 중 일이라는 한반도 주변 4대국의 정책과 입장을 국제적 요인으로써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주장과 입장들을 분석하고 각국별 최근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완범은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해방 후 한반도 내에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했고 남북한 간의 잦은 군사적 충돌도 있었지만, 이것이 전쟁의 배경과 무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스탈린의 개전 동의와 군사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대량살상과 전격적 기습에 의한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한국전쟁은 국제전적 내전이 아니라 ‘내전적 상황을 이용한 국제전’의 성격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한에서의 내전상황에 북한과 소련, 중국이 개입해 결국 남북 간의 전면적인 정규전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미 소 간의 세계적 대립인 냉전체제가 한반도에도 침투하여 내전적 상황까지 상승된 국면에서 국제적 전쟁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이 필수적이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전쟁은)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이었다.”

2. 전쟁의 전개과정

1) 기습남침과 연합군의 참전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었고, 북한군 기동부대는 서해와 내륙에서, 유격대와 육전대는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에서 남하하였다. 북한군의 주력부대인 제1군단은 서울로, 제2군단은 춘천과 강릉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당시 한국군은 오랫동안의 비상경계령이 불과 하루 전인 6월 24일(토) 해제되었고, 주말을 맞이해 많은 병력이 외출 외박을 나갔기 때문에 부대에 남아 있는 병력은 많지 않았다. 소련제 T-34전차와 SU-76 자주포로 무장한 북한군에 비해 한국군은 단 한대의 전차와 자주포도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국군의 방어 전선은 곧 붕괴되었고,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 주력부대는 서울을 포기하고 남하하였다. 전쟁 발발 3일만인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에 진주하였다.

북한군의 남침 소식이 미국 워싱턴에 전달된 시각은 6월 25일(토) 오후 9시 밤이었다. 트루먼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소집을 요청하였다. 당시 미국은 전쟁의 성격을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규정하고, 이는 곧 극동과 일본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써 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바로 UN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UN 한국임시위원단으로부터 ‘한국정부가 전복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받고, UN 안보리는 “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82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군의 투입과 UN 회

원국들이 한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같은 날 주 미한국대사 장면은 미국 상, 하원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한국에 파병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등 16개국의 회원국이 UN군을 조직하여 한국전에 참전하기에 이르렀다.

안보리는 7월 7일 UN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UN군 작전의 전권을 위임받고, UN군사령부를 통해 모든 UN군의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게 되었고, 동경에 있는 극동군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를 초대 UN군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아울러 이 결의는 UN이 최초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 지휘기구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7월 1일 미국 육군 제24사단 21연대(일명,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였다. 스미스 부대는 7월 5일 오산 북쪽 죽미령에서 조선인민군과 첫 교전을 벌여 큰 피해를 입었다(오산 전투). 맥아더 사령관은 스미스부대에 이어 미 제24사단 제34연대 등을 보내고, 미 공군의 화력을 활용해 북한군의 전력을 적극적으로 소모시키면서, 일단 전선을 안정시킨 후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하려고 계획하였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상륙하고 UN군 부대의 지휘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군과 UN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하였다. 한국군과 연합군은 개전 한 달여 만인 8월 1일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였다. 한국군과 UN군은 북한군의 집중 공격을 받은 마산 대구 경주 축선을 고수하며 부산을 근거지로 전세를 전환할 수 있기 기회를 기다렸다. 북한군의 남침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위기를 넘긴 UN군은 9월 15일 새벽 인천상륙작전을 단행하고 대반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미 제10군단은 9월 18일부터 서울을

향해 진격, 전쟁 발발 3개월 만인 9월 27일 연합군은 서울을 탈환하였다.

한국군과 UN군은 9월 말까지 38선 남쪽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사실상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 후 한국군과 UN군이 38선을 돌파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북진을 계속하여 통일을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 내 신중론자들은 소련과 중국을 의식하여 확전을 우려한 나머지 38선 돌파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미국은 전세를 활용하여 UN군의 작전목표를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는 데 두기로 하고,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은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을 해소하고 UN의 권능을 확립한다는 기조 위에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을 UN총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결의안은 10월 7일, UN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한국군의 선두부대가 10월 1일 최초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시작하였고, 10월 9일부터 한국군과 연합군의 전면적인 북진작전이 시작되었다. 10월 19일, 한국군 제1사단이 평양에 최초로 입성하였다. 1950년 10월 하순에 이르면서 한국군과 UN군은 추수감사절(11월 23일)까지는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자 맥아더 사령관은 “전 병력을 투입해 최대한의 속도로 압록강과 두만강선까지 진격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명령은 예상치 못한 중국 인민지원군²의 참전으로 빗나갔고, 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다.

2) 중국인민지원군 참전과 연합군 후퇴

연합군의 공세로 거의 괴멸 상태에 놓인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스탈린은 로디온 말리노프스키(Rodion Yakovlevich

2 당시 신생국이었던 중국은 미군의 만주공격을 우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정규군이 아닌 ‘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Malinovsky) 원수 휘하의 소련 극동군 소속 50만 병력의 투입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연합군과의 확전을 우려한 스탈린은 직접적 참전을 회피하는 대신, 중국의 참전을 독려하였다.

당초 중국은 북한군이 남진할 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1950년 7월 초부터 자체 판단과 소련의 권고에 따라 동북(東北)지역의 안전과, 필요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동북변방군’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UN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붕괴되고 한국군과 UN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자 공공연히 전쟁 개입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였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직후인 10월 1일, 소련과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접수한 중국은 10월 3일 참전을 결정하고, 10월 8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출전태세를 갖추어 온 동북변방군을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으로 개편(개칭)하고 출병 명령을 하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개입은 북한지역이 미국에 의해 점령된다면 적대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소련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획득하고, 당시 중국 내 정치 사회적 불안과 압박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도 반영된 것이다.

마침내 중국은 인민지원군 12개 사단 26만 명을 압록강 북부로 집결시켰다. 이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특사인 저우언라이(周恩來) 사이에 계속된 회담에서 50만의 중국군을 전선에 파병하기로 합의하여, 10월 중순경 펑더화이(彭德懷) 휘하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과 남한 간의 내전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미국과 연합군의 참전을 통해 전쟁 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침내 중국군의 참전과 소련의 적극적 후원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양 진영 간의 전면전, 즉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중국군은 10월 25일부터 본격적인 공세작전을 감행하였다. 중국군의 제1차 공세로 한국군과 연합군 부대들은 중국군의 포위망에 고립되었다. 갑작스런 중국군의 출현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미 제8군이 청천강 남쪽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11월 24일 '크리스마스 공세'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25일, 중국군도 30개 사단 30만 명을 투입한 2차 공세를 시작하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인해전술에 한국군과 UN군은 큰 충격과 피해를 입고 결국 흥남을 통해 긴급하게 남쪽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연말부터 중국군은 대공세를 전개하였고 연합군과 한국군은 38선과 수도권 북부를 포기하고 한강 이남에서의 방어선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대거 후퇴하였다. 이로써 1951년 1월 4일 중국군과 북한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은 미국 수뇌부가 연합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한국 정부요인과 군경 및 가족 약 100만 명을 제주도, 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할 경우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까지 검토할 만큼 긴박하였다.

한편 당시 미국은 중국군 개입에 따른 대처방안도 반드시 UN의 집단안전보장조치를 통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UN군의 전략은 38도선에서 휴전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미국의 수뇌부는 전쟁의 열세를 만회하고 전세를 역전시킬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전선이 38선 이북으로 다시 확대되는 것은, 중공뿐만 아니라 소련의 개입까지 초래하여 세계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새로운 전략이란 국방성과 극동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핵무기사용 계획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전세를 재역전하고 중국군을 한반도 밖으로 축출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이북 지역 즉 만주 지역에 대한 핵무기 사용까지 적극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나토(NATO)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영국의 애틀리(Clement R. Attlee) 수상이 즉시 워싱턴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영 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전면전을 회피하고 전쟁 이전의 38도선을 토대로 전투행위를 종결짓겠다는 결론에 합의하였다. 나중에 미국정부는 확전을 주장하는 맥아더 장군에게 주의를 주고 아울러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진지를 방어하되, 인력과 물자의 손실을 최대한 피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여기에는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시에 확전을 억제하고 휴전정책을 통해 전쟁을 종료한다는 의지도 담겨있었다. 영 미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현상유지정책에 기초한 지침이었다.

3) 교착과 휴전협상

UN군은 몇 차례에 걸친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를 격퇴시켰으나 완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산군도 그동안 전투에서의 손실로 더 이상 승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런 가운데 북진과 확전을 주장했던 맥아더 사령관이 결국 1951년 4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 후임으로는 제8군사령관 매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임명되었고, 지휘관이 교체됨에 따라 전쟁 자체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전선이 1년 만에 다시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양측은 군사적인 작전이라기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휴전을 위한 작전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 무렵 UN군이 휴전회담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UN군이 평양, 원산까지 진격할 경우 중국과 소련이 휴전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시 북진할 경우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병참선이 길어져 군사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정규군과 최소 9억 달러 이상의 전비가 필요한 데 의회와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 셋째, 1951년 6월말 미군의 전사자가 21,300명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

한편 중국과 북한은 1951년 6월 무렵 대체로 휴전을 희망했지만,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물자와 장비만을 추가로 지원할 테니 전쟁을 계속하라고 독촉하였다. 중국군은 1951년 춘계공세에서 입은 약 10만 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로 사기가 저하되었고 화력의 절대적 열세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북한의 김일성도 1951년 전선 상황과 내부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형편이 못 된다는 점, 그리고 체제 위기와 함께 또 다시 UN군의 상륙작전이 감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전협상을 재촉하였다.

스탈린은 처음부터 휴전협상에 반대하였으나,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 소 북한 영수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소련은 한국전쟁이 미 소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38선을 경계로 휴전이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려고 하였다.

6월말 경 미 소 양국은 상호 간에 협상의지를 내비치고 비밀접촉을 한 후 휴전회담을 시작하는 데 합의하였다.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위한 쌍방의 연락장교회담이 개최되어 쌍방의 정부대표 명단을 교환하고, 본회담 개최 장소를 개성으로 결정하였다. 이윽고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간 지속되었다.

UN측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의 해군제독 토너 조이(Turner Joy) 중장이었고, 공산측 수석대표는 북한인민군 총참모장 남일(南日)이었다. 한국군의 백선엽 소장 등도 참여했으나 발언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이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고, 10월에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다.

휴전회담의 주요 쟁점은 UN 측의 '선 휴전 후 협상' 대(對) 공산 측의 '선 협상 후 휴전'에 대한 공방, 군사분계선을 38도선 북방의 어느 한 선 대 38도선으로 하느냐, 북한 내 비행장 복구문제에 관한 설전, 전쟁포로 처리

문제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쟁포로 처리문제는 최대의 쟁점이었는데 공산측은 제네바 협정 제118조에 따른 ‘전원 자동송환’을 주장한 반면, UN측은 개인권리 불가침을 내세워 ‘개별적 자유송환’을 주장하였다.

특히 전쟁포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에 대해 양측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회담은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이나 중지되기도 하였다. 양측이 서로 협상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상대방을 압박할 수단으로써 협상 중에 또는 협상이 중단된 시기에는 특히 치열한 고지탈환 전투와 대규모 폭격, 기습작전 등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호 간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해당 국가들의 국내 사정이 열악해지자, 195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미국과 소련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모색되었다.

4) 휴전

1953년 1월 20일 민주당의 트루먼 대통령이 물러나고 공화당 출신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대통령이 취임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회담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현실적인 제안과 새로운 압박을 구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것은 휴전회담의 최대 쟁점인 포로송환 문제에 관해 부상포로의 즉시 교환을 제안함과 동시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이었다.

마침 중국도 오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발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부담 등으로 휴전회담을 빨리 종결짓고자 하였으나, 스탈린으로부터 확실한 언질을 받지 못하며 시간만 끌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3월 5일 스탈린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저우언라이는 모스크바를 다녀온 후 3월 30일 포로인도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휴전회담이 급진전하

였다. 이후 휴전회담은 다소의 우여곡절을 통해 어느덧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고, 1953년 6월 8일 UN군과 공산군 측 회담대표들은 회의 의제의 마지막 관문인 포로교환 협정에 합의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줄곧 휴전에 반대하였으며 UN군의 지속적인 북진과 한반도통일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UN군과 공산군 측의 포로교환 협정 합의 소식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전국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반공포로 27,000여 명을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석방하여 미국과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반공포로를 공산군에 넘겨줄 수 없으며 반공포로들의 자유세계에 대한 열망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북진통일을 향한 한국민의 의지를 과시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휴전회담과 미국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로써 항의를 표시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중국군의 철수, 미국에 대한 한미방위동맹의 체결 및 군사 경제면에서 한국 원조 등을 요구하였다. 자칫 한국 정부의 포로석방으로 휴전회담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경제원조 등을 시사하며 한국 측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휴전회담 개시 2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서명자는 제3대 UN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북한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었다. 한국 전쟁의 정전회담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이었다. UN군과 북한은 종전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는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게 되었다.

3. 전쟁의 결과와 영향

한국전쟁의 피해는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뿐만 아니라 미국, 소련, 중국, 연합국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25개국 약 150만 명의 군인이 한국전쟁을 치렀다. 그 결과 한국군 62만 명, UN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피해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을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10만여 명의 전쟁포로들은 중국과 북한으로 귀환한 후 가혹한 처우를 받기도 했으며, 제3국인 인도, 타이완, 브라질 등을 선택한 전쟁포로들 역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였다.

이밖에 남북한 지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관련국들이 쏟아 부은 전쟁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 남북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학교 교회 사찰 병원 및 민가를 비롯하여, 공장 도로 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36만 6,840ha의 농지가 손상되었으며,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휴전 후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을 국내파, 곧 남로당계열에 돌리고 대대적인 숙청을 벌였다. 그 뒤로도 반대파를 끊임없이 숙청하여, 58년 초 김일성 유일독재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북한은 소련과 중공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를 바탕으로 전후복구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집단농장과 노력동원에 편입시켜 동원체제사회로 만들었다. 전후에도 북한은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병영국가로의 노선을 추구해 나갔다. 주민들 사이에는 반미주의(反美主義)가 굳게 자리 잡았으며, 전쟁 중 북한이 패배위기에 직면했을 때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회생하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혈맹의식이 두터워

진 반면, 소련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고 스탈린 사후 소련의 공산주의 노선에 변화가 생기고 중 소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친중노선을 강화해 나갔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처참한 전쟁을 경험한 국민들은 우익 반공적 국가질서를 지지하였으며, 진보적 정치이념과 정당, 인사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묵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전쟁의 경험을 통해 서방과 미국 주도의 자유경제체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산업생산 시설과 주택, 사회간접자본 등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나 미국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유지시켜 나갔다. 50년대에 걸쳐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막대한 원조금액은 한국의 산업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나,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와 소비재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는 한국 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은 친미의존적 군사동맹체제 속에서 한국의 군부를 급격히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60년대 이후의 군사쿠테타에 이은 오랜 군부독재 정치체제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한국전쟁은 민족의 대이동을 초래하여 전쟁 발발로부터 휴전 성립 이전에 약 29만 명이 월북하였거나 납북되었고, 약 45~65만 명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 사회가 안정되자 베이비 붐 현상으로 대표되는 출산율 증가와, 농촌의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동하여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전쟁 이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남북한의 이질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분단은 고착화되었으며, 상호 간의 적대감정과 이질화현상, 그리고 분단의 고착

화는 다시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해당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갓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보면 비록 인명피해가 큰 전쟁이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영향력은 확고해졌고,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과 혈맹의식은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잉[毛岸英]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고, 그의 묘가 있는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역은 북중 혈맹관계의 상징이 되었다. 전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은 중소 간 분쟁과 '주체, 자립'의 강조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의식을 바탕으로 그 어떤 주변국들과의 관계 보다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싸웠고 휴전의 주체가 됨으로써 국제적인 입지와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고, 전후 소련 및 중국과 미국 사이의 냉전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봉쇄와 견제를 당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베트남 등 아시아와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소련을 견제할 수준이 되었다. 한편 타이완과의 분단과 갈등은 더욱 극명해졌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원과 개입을 초래하였다.

타이완의 중화민국정부는 대륙에서 패퇴한 뒤 절치부심하던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미국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였고, 심지어 대륙을 탈환할 기회로까지 활용하고자 하였다. 타이완은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군에 대한 화교군의 지원과 참전을 통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지원을 회복하는데 성공했으며, 미국의 개입과 중재로 일본과 국교를 맺고 경제협력을 강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자유중국의 지위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 정치체제와 경제적 기초가 한국전쟁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로써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경제부흥과 보수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과 연합군의 후방 병참기지화 전쟁 보급물자 생산의 공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전쟁특수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이로써 패전 상황을 빠르게 복구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서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보수화 점령정책이 확고해졌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반공기지로써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아, 신속한 미군점령정책의 종결, 평화조약 미일안보동맹조약 체결, 국제사회로의 복귀가 결정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급격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요청으로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현재의 자위대를 가능케 하였고, 이후 일본사회의 전후체제(일명 '55년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공산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대량보복전략 개념 아래 상비군을 확대시키고 국방예산을 크게 늘였다. 연간 국방예산이 1950년에는 1백20억 달러였으나 1953년에는 5백억 달러로 뛰었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육, 해, 공 3군의 군사력을 급속하게 늘렸는데, 특히 공군은 해외에 전략공군 기지를 확장시켰고 핵무기 보유량도 급증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국은 4백기 미만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휴전 무렵에는 이미 1천기를 초과하였다. 이처럼 군비를 강화하면서 미국은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지역에서는 태평양안보체제를 창설하였다.

미국은 우선 소련을 제외한 48개 연합국과 함께 1951년 9월 일본과의 평

화조약 및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미 일 평화조약은 미군의 일본주둔을 합법화했으며 태평양안보조약의 초석이 되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체결 직후 미국은 호주 및 뉴질랜드와 더불어 앤저스조약(ANZUS)을 체결하였고,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동남아조약기구(SEATO)와 바그다드조약기구(CENTO) 등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과는 한국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한미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군사동맹체제는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중동, 유럽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 등 주요 공산국가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국 내 공산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등 서방의 자유진영 체제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안전을 집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동남아조약기구의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3개국은 1954년 베트남에서 체결된 제네바 협정 때문에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의정서상의 조항에 의해 군사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상 한국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ce)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세계 최강대군사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군비를 대폭 증액하고 세계 각 지역에 미군의 기지와 핵전력을 대폭 강화하여 이후 세계질서의 최고 강대국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립해 나갔다. 둘째,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두 나라가 냉전관계를 완화하는 데는 한국전쟁 휴전으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을 소비하게 된다. 셋째, 한국전쟁은 서방동맹을 강화시켜 주었다. 한국전쟁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동맹은 대개 20년 이상 존속했으며, 그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거의 아무런 본질적 수정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서독과 일본의 재무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반면에 한국전쟁은 국제공산주의 진영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스탈린 사후 중 소대결의 씨앗도, 그리고 북한의 소련으로부터 이탈의 씨앗도 이때부터 심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전쟁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마지막 국제전쟁’이라는 인식을 강대국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핵무기의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정치는 본격적인 핵무기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편, 한국전쟁 휴전과 스탈린 사망 이후 잠깐의 군사적 긴장완화, 즉 데탕트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베트남에서의 민족해방 운동과 프랑스 구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 중국, 소련, 미국 등 강대국 간의 냉전구도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을 야기하고 있었다.

III. 베트남전쟁

일반적으로 베트남전쟁은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 즉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과 미국의 전면전을 가리킨다.³

3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은 1946년 12월부터 1954년 8월의 디엔비엔푸 요새 전투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가담하여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 것을 가리킨다. 베트남에서는 1975년까지 미국과의 전쟁을 ‘30년전쟁’이라 칭한다.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 즉 베트남전쟁의 발발 시점에 관해서는 1959년부터, 또는 1964년부터라는 주장도 있다.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독립과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1941년 호치민(Ho Chi Minh)과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베트남(Viet Minh), 즉 ‘베트남 독립동맹’(League for the Independence of Vietnam)⁴이 결성되었다. 당초 베트남은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전개하며 베트남 북부지역을 해방시켜 나갔으나, 일본의 패전 후에는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당으로 조직화되었다.

전쟁이 끝나 갈 무렵 베트남은 무장 세력과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일인사까지 가담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이 ‘8월 혁명’인데, 봉기는 3대 도시인 하노이(Hanoi), 후에(Hue), 사이공(Saigon)을 포함해 베트남 전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마침내 1945년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이 선포되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들은 비로소 ‘국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다시 주장하였고 지배의지를 드러냈다. 점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독립세력과 프랑스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1946년 12월에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전투가 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시작되었다. 베트남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이 프랑스 미국과 싸운 반식민지(민족해방), 반제국주의(민족자주) 전쟁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전쟁을 항미구국(抗美救國)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전쟁은 프랑스의 예측과 달리 민족적 정체성에 눈 뜬 베트남인들의

4 전쟁이 끝날 무렵 베트남은 베트남 민족인민전선(Lien Viet)으로 개편되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장기화되었다. 더욱이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어 인도차이나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공세가 강화되자, 프랑스는 이에 맞서 미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한반도에서의 한국 전쟁을 수행하면서, 17도선 이남의 베트남을 ‘자유세계의 보루’로써 공산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방위하러 하였다. 그 결과 인도차이나전쟁은 동서 냉전 구도 속에서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은 프랑스를 지원하였지만, 프랑스는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한편, 1953년 베트민은 효과적인 동원태세를 갖추기 위해 1953년 지주제를 폐지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에 착수하였다. 민족의 독립이 토지보상이라는 구체적 결실과 기쁨으로 이어지자 농민들은 베트민에 대한 충성을 보였고 프랑스 등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전의를 불태웠다. 그리고 마침내 베트남은 1954년 5월 7일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괴멸시켰다.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인도차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라오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캄보디아 프랑스 북베트남 정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회담이 개최되었고, 디엔비엔푸에 있던 프랑스군 요새가 함락된 다음날인 1954년 5월 8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열띤 논쟁을 거쳐 그해 7월 21일 프랑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부의 대표들 사이에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⁵

그러나 망명에서 돌아온 고 딘 디엠(Ngo Dinh Diem)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휴전협상을 하는 동안 자신의 친족들을 중심으로 남베트남에 독재정권

5 제네바 협정 또는 제네바 합의라고도 불림. 제네바회담은 2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평화 유지에 대한 것이었다.

을 세우고 총리가 되었다. 자신의 지배체제를 강화한 디엠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1956년으로 예정된 자유선거의 실시를 거부하였다. 인도차이나 지역을 중국 봉쇄의 최전선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은 호치민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총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없었고, 대신 디엠의 입장을 지지하여 베트남의 남북분단을 고착시키려 하였다. 이에 북베트남은 그때부터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 군사적인 힘으로 남 북 베트남을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2) 미국의 인도차이나 정책

미국은 원래 프랑스 등 유럽의 식민제국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인도차이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등장과 소련과의 대립이 명확해지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변화하였다. 즉 타이완,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도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직접 개입하게 된 이유는 인도차이나를 잃게 되면 동남아시아와 극동, 일본까지 연쇄적으로 공산주의자의 손에 넘어가버린다는 ‘도미노 이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디엠 정권은 남베트남 지역에서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일시적인 안정과 발전을 보이는 듯했지만, 강압적인 독재정치와 부패, 종교적 탄압으로 민중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디엠의 실정은 북베트남 공산세력에게 민심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였다. 북베트남의 공산세력들은 1960년 1월부터 메콩강 일대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디엠 정권의 농촌 지배력은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12월 남베트남지역의 민족통일전선인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Vietnam/NLF)이 조직되자, 북베트남에서 훈련받고 무장한 베트남 독립동맹 병사들, 즉 베트콩

(Vietnamese Communists)⁶ 들을 고향으로 내려 보내 암살 매복공격 태업 전향공작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게릴라전을 확대시켜 나갔다. 디엠 정권은 베트남 공화국 군대와 경찰을 건설하기 위한 미군 고문단과, 물자를 더 많이 보내줄 것을 요청해 원조를 받았으나 점점 커져가는 남베트남 공산주의자들과 베트콩의 세력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제3세계에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수많은 비전투 군사요원들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1962년 말, 남베트남 주둔 미군 고문단의 수는 9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어났고, 케네디 대통령은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전투를 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미국의 특수전쟁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특수정책과 병행하여 디엠 정권에 대해 정권기반 확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지만, 오히려 디엠은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며 독재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당시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불교도들의 반정부 시위를 디엠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디엠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 직후 민중의 불만이 군부에서 폭발하여 1963년 11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디엠이 암살되었다. 미국 정부는 그에게 실망하고 있었으며 사전에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쿠데타에 반대하지 않았다. 디엠 정권이 붕괴된 뒤에도 내각은 계속 바뀌었고, 남베트남이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베트콩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6 정식 명칭은 Viet Nam Cong San.

3) 통킹 만(Gulf of Tonkin) 사건

1964년 7월 말, 미국이 제공한 라오스 항공기가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남베트남의 사이공군의 기습부대가 통킹 만에 있는 두 개의 섬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때 미군의 구축함은 북베트남 연안에서 순찰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8월 2일, 미 구축함과 북베트남 초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3척의 북베트남 어뢰정이 베트남 통킹 만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Maddox) 호를 향해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독스호가 즉각 반격하였고, 주변에 있던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반격에 가담하여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2척에 손상을 입혔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대한 보복으로 미 해군 폭격기들에게 북베트남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의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통킹만 결의안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1년 6월 뉴욕 타임스는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보도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킹만 사건에 따른 미국의 폭격은 오히려 북베트남이 정규군과 전투부대를 남베트남에 내려 보내는 결정을 촉진시켰으며, 1965년 이후에는 남베트남 지역의 혁명반군이 사이공군의 정예부대를 격퇴시킴에 따라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 위기를 가속화하였다.

2. 베트남전쟁의 전개과정

1) 미국과의 전면전

1965년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급속하고도 대규모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남베트남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혹은 전복에 맞서 싸우는 다른 동맹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전쟁에 깊이 개입해 들어갔다. 존슨 대통령은 1956년 초 북베트남군의 공격에 따른 미군 사망 직후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명령하였다. 하노이와 남베트남 내 베트콩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공중폭격을 명령하였다. 3월에는 다낭(Da Nang)시의 미 해군 2개 대대 병력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를 해안 지대에 상륙시켰다. 6월이 되자 미군 5만 명이 남베트남 정부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도착하였다.

소규모의 부대로 편성된 북베트남군은 캄보디아 국경 서쪽의 호치민루트를 경유해 남베트남에 도착한 후 베트콩과 연합작전을 펴기 시작하였다. 베트콩 군대는 갈수록 많은 농촌지역을 장악해갔고,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는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킨다는 약속을 하고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였다. 1965년 중반 남베트남에 투입된 미군은 18만 명을 넘어섰고 1966년 말에는 50여만 명에 달하였다. 미국의 전쟁전략은 ‘적에게 승산이 없음을 깨우쳐주는 것’이었는데, 미군 사령관인 윌리엄 웨스트머랜드(William C. Westmoreland) 사령관은 1단계로 남베트남에 미군의 전략요충지를 확보해 사이공 정권의 군사적 붕괴를 막고, 2단계로 혁명 세력의 주력 부대를 파괴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1966년 중반 이후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군은 반란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민족해방전선 치

하의 농촌마을을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베트콩을 몰아내고 민간인을 정부군 지역으로 이동시켜 상호 분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미군은 주로 우세한 화력과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격 목표지역으로의 신속한 병력 이동에 의존한 반면, 베트콩은 은폐 잠복 기습공격 매복공격에 의존하였다. 우세한 무기와 장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교묘하고 결연한 자세로 싸우는 베트콩을 뿌리 뽑을 수 없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증파하였다.

2) 테트 대공세

1967년 말부터 베트콩은 미군의 소모전에 대한 한계를 일깨우고 전세를 장악하기 위해 주요 도시지역에 대한 기습공격과 베트남 전역에서의 동시다발적 봉기를 계획하였다. 1968년 1월 30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베트남인들의 음력설인 테트(Tet) 축제일을 기해 대규모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남베트남의 36개 지방 중심도시와 5개 주요도시를 공격하였다. 수 주일 동안 도시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민족해방전선의 정예 게릴라 부대 약 18만 명이 희생되었을 뿐 기대했던 도시지역에서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테트 대공세는 북베트남과 베트콩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득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결코 남베트남의 반군세력을 진압할 수 없으며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점을 각인시켜 준 것이다. 1965년경부터 시작된 미국 내 반전운동은 1967년의 흑인민권운동과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일으켰으며, 그해 가을 존슨 정권이 주장하는 베트남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증세 반대여론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 존슨 정권은 베트남전쟁이 호전되고 있으며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그런 가운데 전해진 테트 대공세의 소식은 존슨 정권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고, 반전여론에

확실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반전여론은 평화행진, 시위, 그리고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갈수록 많은 수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미국의 전쟁승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기 시작했으며, 베트남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편, 웨스트벌랜드 장군은 테트 공세를 계기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20만 6천 명의 대규모 증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베트남전쟁 방식을 벗어나 미국의 예비역 소집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사력 투입으로 바뀐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흑인민권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주(州)방위군 뿐만 아니라 연방 병력까지 동원하고 있었고, 1968년 1월에는 미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USS Pueblo, AGER-2)가 북한에 나포되는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병력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역 소집이나 군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수단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존슨 정권에 대한 반발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쟁비용 급증에 따른 달러화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에 1968년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은 체제위기와 사회분열상을 막기 위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웨스트벌랜드 사령관의 미군 20만 명 증파 요구를 거부하고, 북위 20도선 이북에서의 폭격은 중지될 것이며 가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하노이 당국(베트남 민주공화국)에 협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테트 대공세가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굴복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최종적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3) 평화협상

미국의 폭격 축소 및 협상 요구에 하노이측은 반군의 활동을 축소함으로써 응답하였고, 10월에 존슨 대통령은 폭격의 완전 중지를 명령하였다. 그 사이 미국과 하노이 당국은 파리에서 예비 평화회담을 시작하기로 동의하였다.

1969년 당선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베트남에서의 철군 여론과 미국의 위신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 사이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베트콩과의 비밀외교와 사이공 정권의 존속을 유지한다는 전략 아래 미군의 점진적 철군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전쟁의 현지화, 즉 사이공이 직접 전투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곧 사이공군의 '미군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군은 남베트남이 미국의 무기 장비 공군력 지원과 경제원조를 충분하게 받으면서 점차로 자국방 태세를 확립하도록 '베트남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파리에서의 평화회담은 지지부진하였는데, 1970년 봄,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이 북베트남의 요충지와 부대 집결지역을 파괴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접경지역에 침입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재개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협상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베트콩의 보급루트(호치민루트)를 단절하기 위해 1973년 캄보디아 군부 내 친미 쿠데타를 허용하여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를 축출하고 론 놀(Lon Nol) 장군을 후원하였다. 론 놀 정권과 미군은 캄보디아 내에서 베트콩 혁명세력을 공격하였는데, 이로써 베트남전쟁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실패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투가 캄보디아로 확산되자 미국 내 반전운동은 더욱 강력해졌으며, 권좌에서 축출된 시아누크는 오랜 숙적이었던 캄보디아 공산당과 베이징에서 손을 잡고 왕국민족 연합정부를 결성하여 론 놀 정권에 대항하는 한편

베트남과 라오스의 혁명세력과 공동 투쟁에 나섰다. 이것은 곧 북베트남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결과로써, 미군과의 전쟁을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대시켜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한편, 미국 내의 반전여론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호치민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1971년 2월부터 사이공과 미군이 대규모로 벌인 합동공격(람손 719작전)을 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베트남은 전쟁승리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베트남은 1972년 3월부터 남부 지역에 대대적인 군사 공세를 가하였다(춘계대공세). 그 목적은 사이공군에 큰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군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 다가 올 정전에 대비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닉슨 정권은 줄어든 미군의 전력상 B-52 전략폭격기를 총동원한 대규모 폭격으로 대응하였다. 당시 미국은 중국, 소련과 데탕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72년 중반 이후 베트남전쟁은 마지막 국면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1968년부터 진행된 파리평화회담의 막바지 합의를 향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되었다.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와 베트남 노동당 정치국원인 레 둑 토(Le Duc Tho)는 비밀협상을 진행하였는데, 1972년 여름부터 양측 간에 타협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즉 키신저는 그해 5월, 남베트남에서 이미 베트남이 차지한 지역으로부터 베트남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베트남은 1972년 가을 무렵 정전과 동시에 미군 철수, 포로를 석방하고 그 후 남베트남에서의 정치 문제를 당사자 간에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곧 군사 문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남베트남 지역에서 '두 정부와 두 군대' 그리고 '제3세력'이 함께 정치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상안에 대해 양측은 10월 31일 조인하기로 하였으나, 사이공 정권이 강하게 반발하였고 닉슨도 11월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협정

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베트남측이 반발하였고, 닉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을 압박하기 위해 12월 18일부터 12일 간에 걸쳐 이른바 ‘크리스마스 폭격’이라 불리는 대규모 북폭을 단행하고 사이공 측을 무마하기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군수물자를 지원하였다. 북베트남은 소련제 미사일로 B-52 폭격기에 대항하였으나 10일 만에 미사일이 바닥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폭격으로 약 1,6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으로부터도 엄청난 비난을 초래하였고 오히려 닉슨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미 의회는 닉슨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회가 전쟁을 중단시키겠다고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미국과 북베트남은 1973년 1월 8일부터 협상을 재개하여, 1972년 10월 협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1월 27일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의 종결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또는 이른바 ‘파리평화협정’이다.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즉각적인 휴전, 포로의 전원 석방,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모든 외국 군대 및 군수물자의 전면 철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 다국적군에 의한 평화감시, 북위 17도선을 통일 때까지 분계선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되었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각각 상대방이 정전협정을 수없이 위반한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평화협정은 1973년 3월 포로석방 이후 곧 사문화되었다.

1973년 여름 이후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졌고 베트남에 대한 공약을 걱정할 여유가 없었다. 8월 들어 미 의회는 인도차이나에서 미군의 전투를 금지시켰으며, 1973년 11월 말 ‘전쟁권 법안’(War Power Act)을 가결하여 대통령이 의회의 허가 없이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1973년 말경에는 남베트남에서 미군 병력이 거의 철수하였다.

이때부터 사이공의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은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남베트남 단독의 전쟁을 강행하였다. 초기에는 사이

공의 우세가 확실하였으나 1974년 중반 이후부터 전세가 역전되어갔다. 특히 1974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거의 단절됨으로써 사이공의 전쟁 수행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탈영과 탈출, 피난이 봇물처럼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1974년 남베트남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변경 지역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은 여러 지방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다. 베트남은 1975년 1월부터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때까지 남아 있던 미국인들은 베트남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비행기나 배를 타고 탈출하였다. 4월 21일 티우 대통령은 사임하고 타이완으로 도망하였다. 4월 30일 티우 대통령의 뒤를 이은 두옹 반 민(Duong Van Minh)의 남베트남 정부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사이공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점령되었다. 30년 전쟁이 마침내 종료되었다. 남베트남에는 군사정부가 세워졌고, 이듬해인 1976년 7월 2일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일되었고, 사이공은 호치민 시로 개칭되었다.

3. 베트남전쟁과 미국, 일본, 한국

1) 미국

미국으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년간 5만 명의 인명피해와 1,200억 달러가 소요된 대규모 전쟁이었으나 패배한 전쟁으로써 역사에 남게 되었다. 원래 미국은 유럽의 식민제국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냉전이 심화되던 시대에 ‘공산주의 봉쇄’라는 전략과 기치를 내걸고 인도차이

나 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은 자신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베트남의 저항의지를 과소평가하였고,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승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했으며, 전장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도 못하였다.

트루먼 정권은 뮌헨회의에서 나치 독일에 대해 유화정책을 펴므로써 침략주의를 격퇴하지 못했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며, 인도차이나에서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처음부터 강경하게 격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이젠하워 정권 역시 도미노 이론을 내세웠고, 케네디 정권은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차이나에서의 민족해방 투쟁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존슨 정권은 미국이 남베트남을 포기할 경우 여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닉슨 정권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경우 ‘피의 보복’이 전개될 것이라며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국제공산주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봉쇄와 응징, 대항을 고수한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가운데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 패권이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타이완과 한반도, 일본의 안정이 위협받자,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혁명과 패권이 확산될 수 있는 곳인 데다가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인 새로운 대체시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곳이 바로 베트남이었고, 도미노 이론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베트남이 도미노의 시발점이라면 일본은 바로 마지막 도미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패권국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베트남에 개입하는 길을 선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퇴하였고 초강대국 미국의 위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2) 일본

베트남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특히 일본과 한국, 태국, 필리핀은 베트남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오키나와[沖縄] 등 일본 내 미군기지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한국과 태국, 필리핀은 미군과 협력하여 남베트남에 파병하여 직접 참여하였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전쟁의 특수를 누렸다.

일본은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본토와 오키나와가 미군기지로써뿐만 아니라 병참기지로써 특수를 누렸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정권은 베트남전쟁이 격화되자 미군이 일본의 기지를 통해 자유로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범위가 ‘극동이란 용어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로써 미군은 당시 일본에 있던 12개의 기지와 130여 곳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토 정권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적극 협력한 이유는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1972년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권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외 지역의 관할권을 일본에 반환하였다.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일본은 고도경제성장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일본의 직접적인 특수는 통산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1965년 3억2천만 달러, 1966년 4억7천만 달러, 1967년 5억 달러, 1968년 5억9천만 달러, 1969년 6억4천만 달러, 1970년 6억6천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한국과 같은 베트남 특수를 누렸던 파병국에 대한 수출이나 대미수출(간접특수)도 급증하였다. 일본의 대미

무역은 1965년 수출초과로 바뀐 이후 1975년까지 연평균 21%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일본은 패전 직후 한국전쟁 특수로 단기간에 전후복구를 할 수 있었고, 곧 이어 찾아 온 불황과 미일안보투쟁 등의 정치적 혼란은 베트남전쟁 특수 등을 통해 극복하고 고도경제성장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한국

한국정부는 일찍부터 베트남에 대한 파병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1954년 2~3월경 이승만 대통령은 존 헐(John E. Hull) 주한 UN군사령관에게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국군 전투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미국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한국은 1959년에 20명의 태권도 교관을 파견하는 데 그쳤다.

그 후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베트남전쟁에 협력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이듬해인 1962년 3월 17일 윌리엄 해리먼(William A. Harriman) 미국 순회대사에게 송요찬 국무총리가 “남베트남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직접 협력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성급한 군사적 협력 내지 파병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새뮤얼 버거(Samuel D. Burger) 주한 미국대사는 “양국 사이의 모든 군사적 교류는 미국 정부와 주베트남 미군 고문단의 허락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1963년 말 디엠 정권이 붕괴되고 베트남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4월 23일 존슨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쟁에 “다른 동맹국가도 참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More Flag). 그러나 이때까지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

의 물질적 기여나 파병을 더욱 기대하였기 때문에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다.

미국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파병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추진해 나갔다. 7월에 이르러 한국군 이동외과 병원 및 태권도 교관 파견에 관해 주한 UN군사령관이 동의서를 수교하였고, 31일에는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파병 시 군수지원이나 군인들의 봉급(수당)에 관해서는 미국 측이 부담하는 등의 논의와 합의는 있었지만, 사실상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위해 파병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국 1964년 9월 140명의 1차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비전투부대로서 베트남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한국군의 사상 첫 해외파병이었다. 그 후 베트남 전세가 악화되고 한국군 등의 활동에 고무된 미국은 한국군의 증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해 12월 윈스롭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면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까지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해 연말 양측은 추가파병에 합의하였다. 이듬해인 1965년 3월 비전투부대인 비돌기부대가 파병되었다.

이 무렵 미국은 ‘다국적 또는 국제전투부대 구상’에 따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전투부대의 파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4월초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그해 10월까지 미군 15만 명과 함께 한국군 2만 1천 명의 파병 계획안(NSAM 328작전)이 작성되었고 존슨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발표되었다. 이어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회담할 때, 존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한국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병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의 증대, 경제원조의 지속 등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의 보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동맹국의 전투병참전이 시급했던 미국으로서는 한국 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의 파병 목적은 국제적 공산주의 확산 저지에 참여한다는 종전의 수준을 넘어, 한국군의 전투능력 향상과 현대화, 한미 유대 관계 강화, 국위선양, 경제성장이라는 실리를 두루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 전투부대가 처음 베트남을 향해 출발하던 1965년 9월, 또는 이듬해인 1966년 초기부터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이미 한국군 전투부대의 추가 파병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경의 전투부대 증파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 끝에, 3월 4일 발표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 지급, 참전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경비부담, 해외참전 전투 수당지급, 베트남 건설사업에 참여, 수출장려 및 기술원조 증가, 경제개발 차관 제공, 정부고속도로 건설지원 등이 약속되었다. 그해 여름부터 육군 백마부대를 주축으로 대규모 전투부대가 파병되었다. 한국군은 1973년 3월의 최종 철수까지 8년여 동안 미군 다음으로 많은 총 34만여 명이 참전하여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미국과 연합국에 대한 보답,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정치 경제 군사적 차원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강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최하위 빈곤국가로서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전쟁특수와 미국과 베트남, 일본 등과의 통상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고, 군사적으로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국의 국위선양과 해외진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참전으로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만1천여 명의 전상자, 그리고 귀국 후 고엽제 등 후유증으로 5만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직접

적인 인적 피해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명분도 없이 실패한 전쟁에 뛰어든 미군의 용병이라는 국내외의 비판과 수모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세계적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베트남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감내해야만 했다. 더욱이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고문과 강간 등 인권 유린, 그리고 이른바 한인호혈아를 뜻하는 ‘라이파이한’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담으로 남아있다.

한편 최근 들어 베트남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였던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약 800여 명의 공군 조종사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소련이 제공한 미그 17, 미그 21로 미 공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북한 공군 조종사의 수는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노이에서 북동쪽 60km 가량 위치한 백지양(Bac Giang) 지방에는 북한군 전사자들의 위령탑과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그밖에 북한은 공병, 심리전 부대 등과 화기, 군복 등을 북베트남에 지원하였다. 한국군 포로 중에는 일부가 북한으로 넘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4. 베트남전쟁의 결과와 영향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미국 등 연합군 추산으로는 약 120만 명, 베트남정부 추산으로 약 3백만 명에 이른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한 후 남베트남인들의 대규모 해외 탈출, 즉 보트 피플(Boat People) 난민의 숫자는 약 106~1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숫자가 11만 명,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이공 함락 후 남베트남의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지도층 인사들이 수용소에서 사상개조 학습이라는 명분으로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하였으며 그 수는 여전히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남베트남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주변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또한 비슷한 경로로 공산화되었다. 캄보디아의 친미정권에 맞서 대항하다가 미군 패배 후 캄보디아 공산정권 크메르루즈(Khmer Rouge)를 수립한 폴 포트(Pol Pot)는 3년 8개월 동안에만 무려 200만이 넘는 무고한 캄보디아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비단 폴 포트 정권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遠因)은 인도차이나 전역과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격화된 미 소 간 냉전은 세계를 양분하였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시작된 베트남전쟁은 역설적으로 냉전구도를 깨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의 북위 17도 군사경계선과 분단은 세계 냉전구도상 양 진영이 베트남에 강요하고 설정한 경계선이자 냉전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베트남인들이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달성한 것은 외세가 강요한 냉전의 굴레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양 진영에 대해서도 특정 국가에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지역 또는 민족의 운명은 결국 초강대국과 외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베트남전쟁은 냉전구도를 주도했던 강대국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에게는, 아시아 변방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조차 그 변방 지역의 사람들이 저항할 때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변방인들의 저항으로 미국은 전쟁에 패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계적 패권과 헤게모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인 소련과 중국에게도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로 인한 결과를 감내해야만 했다. 소련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북베트남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최소한 5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미국에 비해 적은 액수지만 소련의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에서 방위비를 몇 퍼센트 정도 증가시킬 정도로 큰 규모였다.

중국은 베트남전쟁 기간 중 북베트남에 호치민루트를 제공하는 등 결정적 물질·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역사적으로 베트남인들의 대중국 감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통일 후 공산 정권이 남베트남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를 탄압하여 양국관계는 험악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은 소련-중국 간 분쟁에서 소련 측을 지지하여 중국의 분노를 샀고, 중국과 가까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중월전쟁, 또는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단 17일 간의 중월전쟁에서 중국은 2만5천여 명이 전사하고 엄청난 군사적 손실을 입는 등 사실상 패배하고 퇴각하였는데, 당시 중국 수뇌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양대 진영의 대립과 냉전, 그리고 현지 내전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전쟁이었지만, 베트남이 통일되었다는 사실 외에 어느 쪽도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오히려 세계적 냉전구도의 핵심인 초강대국들의 헤게모니와 위신이 실추되고 공산국가들 간에 깊은 균열을 발생시킴으로써 그로부터 20여년 후에는 냉전이 해체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 국공내전 관련

- 문정인 김명섭 외(2007),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 서진영(1992), 『중국혁명사』, 서울 : 한올아카데미.
- 이종석(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 에드가 스노우 지 신흥범 역(1985), 『中國의 붉은 별』, 서울 : 두레.
- 요코야마 히로아키 지 박종현 역(2007), 『中華民國史』, 서울 : 신서원.
- 田垣 編(2001), 『戰後中日關係文獻集, 1945~197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嶋嶺雄 編(1990), 『中國現代史』, 東京 : 有斐閣.
- 石井明(1990), 『中ソ關係史の研究 1945~1950』, 東京 : 東京大学出版会.
- Gaddis, John L(1997), WE NOW KNOW :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Y :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한국전쟁 관련

- 염인호(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서울 : 역사비평사.
- 문정인 김명섭 외(2007),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 박명림(1996, 1997),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II』, 서울 : 나남출판.
- 와다 하루키 지 서동만 역(1999), 『6·25전쟁』, 서울 : 창작과비평사.
- 이완범(2000),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 백산서당.
- 이종석(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 김학준(2003), 『한국전쟁』, 서울 : 박영사.
- 제임스 매트레이 편(1991), 『한국과 냉전』, 서울 : 평민사.
- 최장집 편(1990), 『한국전쟁 연구』, 서울 : 태암.
- 6·25전쟁학회 편(2007),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 명인문화사.
- Cumings, Bruce(199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n 2 Volum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lko, Joyce and Gabriel(1972), The Limits of Power :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Y : Harper & Row.
- Merrill, Hohn R.(1989), Korea :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Newark, Delaware :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 Gaddis, John L(1997), WE NOW KNOW :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Y : Oxford

UNiversity Press Inc.

6 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http://www.koreanwar60.go.kr/main.asp>)

○ 베트남전쟁 관련

듀커 외 박성식 역(1986), 『베트남혁명연구』, 서울 : 세계.

문정인 김명섭 외(2007),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보 구엔 지아프 저 한기철 역(1988), 『인민의 전쟁 인민의 군대』, 서울 : 백두.

안병찬(1989), 『베트남, 오늘의 베트남-전쟁지대에서 무역지대로』, 서울 : 한국일보사 출판국.

유제현(1992), 『월남전쟁』, 서울 : 한원.

유지열(1986), 『베트남민족해방운동사』, 서울 : 이성과학실사.

이장길(1990), 『베트남 100년전쟁』, 서울 : 대한시청각.

후루타 모토오 저 박홍영 역(2007), 『역사 속의 베트남 전쟁』, 서울 : 일조각.

파이크 D. 저 녹두 편집부 역(1985), 『베트남공산주의운동사』, 서울 : 녹두.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최우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I. 시장경제 중심의 일본, 한국, 타이완

II. 사회주의 경로를 따른 중국, 북한, 베트남

본 장에서는 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전 이후 6개국-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베트남, 북한이 걸어온 경제적 발전 경로에 대해 구체적 사실 위주로 살펴본다. 본장은 최근(2000년대 이후)의 사실보다는 경제 기초의 확립이나 변혁의 초기 단계에 보다 많은 설명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의 사건들이 아직 명확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 글에 등장하는 6개국의 경로가 일단 수립된 제도적 기초에 따라 오랜 기간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수립된 제도적 기초가 이후 각국의 경제 성장에 장기간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초 확립 이후의 전개 과정보다는 제도적 기초가 어떻게 수립 또는 변형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각국의 경제발전의 이해에 더 필요하므로 본장은 형성기나 변혁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아시아 6개국 중 평탄한 경로를 걸어온 나라는 없다. 지속적인 도전과 시행착오,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6개국의 경제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시행착오'의 기간과 해결의 '정도'는 각국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각국의 대응이 달랐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국내외의 정세와 경제의 기본적 토대-물적 제도적-가 상이했던 점도 원인이다. 따라서 발전의 경로는 복잡한 조건의 조합에 의한 산물이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사건과 그 인과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장은 시장경제의 경로를 걸어온 일본, 한국, 타이완과 사회주의적 경로를 걸어온 중국, 베트남, 북한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듯이 시장경제라 해도 통제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경제도 조건에 따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과연 경제발전과 이데올로기가 어떤 연관 관계에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

제발전 과정에는 국가 주도적 성장, 대외 지향적 무역 정책, 투자 주도적 경제 성장, 양질의 노동력,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들이 정말로 적합한 설명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조합되고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해 고찰해 볼 기회를 본장이 제공하기 바란다.

I. 시장경제 중심의 일본, 한국, 타이완

1. 일본

1) 전쟁 전후 축적된 경험의 연속성

1945년 8월 15일 패전의 시점에서 일본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였다. 1941년에 650만 톤에 달했던 보유 선박량은 43년말에는 490만 톤이 되었고, 44년에는 무려 410만 톤의 선박이 격침되어 필사적인 건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전시 보유선박은 134만톤, 그 중 운항 가능한 선박은 80만톤에 불과했다. 이 결과 1945년에는 전시 경제를 총괄하던 물동(物動)계획이 전쟁 수행의 최중요 자재인 석탄과 철광석의 운반을 포기하고 식량인 소금과 곡물 수송에 전력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공업생산에 필요한 중요 물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유입해야 하는 일본 경제로써 이것은 사실상 경제 활동의 중단을 의미했다.

한편 군수산업의 성장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성과도 대부분 상실되었다. 1935년 국부는 약 1,868억엔으로 추산되는데, 1945년의 잔존국부는 1,889억엔에 불과하여 10년간 거의 증가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였다. 이외에도 장기간 원료공급지와 시장을 겸하였던 식민지와 점령지의 상실, 해외 거주 일본인의 유입으로 인한 농공산물의 부족, 파멸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처참하게 파괴된 인프라 등은 일본 경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

표 1 패전시 일본의 피해 상황(억엔)

	피해 합계	상정 잔존액	종전시 잔존국부	피해율(%)
자산적 국부총액	643	2,531	1,889	25
건축물	222	904	682	25
공업용기계	80	233	154	34
선박	74	91	18	82
전기가스설비	16	149	133	11
가재가구	96	464	369	21
생산물	79	330	251	24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듯, 일본은 1960년대의 급속한 성장을 거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고, 지금까지 기계공업을 비롯한 각종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이 전후 파멸적인 상황에서 부흥을 이룩한 것은 일본과 동일하지만, 2010년 시점까지 1인당 국민소득으로 표현되는 ‘부’, 그리고 근대적인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시장경제의 운용 경험에서 일본에 필적하는 나라는 없다.¹⁾

1 GDP에서 중국이 일본을 2010년에 추월하여 제2위에 올라 선 것은 사실이나, 산업 기술과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일본의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물론 전후의 일본경제 성장이 자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전후 미소대립에 의한 미국의 원조와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는 그토록 빨리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1950~60년대 서방 세계의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 역시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세계시장의 성장과 일본 엔화의 저평가는 일본 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만으로는 일본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던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단순히 외부 요인에 의해 일본이 타국을 능가하는 성장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일본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달랐던 것은 20세기의 에토스였던 대량생산 내구제품(耐久製品)에 대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기술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설계 능력, 또 하나는 경제성과 직결되는 생산 능력이다. 종종 조롱거리로 회자되던 태평양전쟁기의 일제(日製) 병기들은 분명히 구미 제품에 비해 성능에서 열등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4년에 걸친 전쟁에서 군함, 항공기, 전차, 각종 총포류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량생산해 냈고, 그 상당수가 일정 부분 단순한 구미 제품의 모조가 아니라 자력으로 개발해 낸 것들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아시아의 어떤 국가들도 이러한 일본의 '저질 모조 병기'에 필적하는 제작이나 생산을 할 수 없었다.

생산력에서도 일본은 미국은 물론, 소련, 독일, 영국에 뒤졌다.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항공기의 숫자는 1944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미국의 1/3 이하였다. 항공기만이 아니라 선박, 전차, 총포류, 의복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미국에 견줄 수 없었고, 독일, 소련, 영국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

나 이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적이었다.

두 번째로 전전(戰前)의 일본 경제는 이미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제도적으로 경험을 축적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공업발전에 기조한 수출 확대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870~1913년 사이의 경공업에 기반을 둔 상품수출증가는 20배에 달했고, 이 결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거인이었던 중국을 능가하게 되었다(1820년경 중국은 세계

표 2 일본과 세계의 상품 수출액 증가(백만불)

1. Angus Maddison(2006), The World Economy, p.358~359에서 작성.

	1870	1913 (성장률)		1929 (성장률)		1950 (성장률)	
미국	403	2,380	490.6%	5,157	116.7%	10,282	99.4%
영국	971	2,555	163.1%	3,550	38.9%	6,325	78.2%
독일	424	2,454	478.8%	3,212	30.9%	1,993	-38.0%
프랑스	541	1,328	145.5%	1,965	48.0%	3,082	56.8%
캐나다	58	421	625.9%	1,141	171.0%	3,020	164.7%
네덜란드	158	413	161.4%	800	93.7%	1,413	76.6%
이탈리아	208	485	133.2%	783	61.4%	1,206	54.0%
호주	98	382	289.8%	592	55.0%	1,668	181.8%
스웨덴	41	219	434.1%	486	121.9%	1,103	127.0%
소련	216	783	262.5%	482	-38.4%	1,801	273.7%
스위스	132	226	71.2%	404	78.8%	894	121.3%
인도	255	786	208.2%	1,177	49.7%	1,145	-2.7%
일본	15	315	2000.0%	969	207.6%	825	-14.9%
중국	102	299	193.1%	660	120.7%	550	-16.7%
필리핀	29	48	65.5%	163	239.6%	331	103.1%
조선(남한)	0	15		159	960.0%	23	-85.5%
타이완	-	26		125	380.8%	73	-41.6%

GDP의 32%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었다). 1929년에는 일본의 상품 수출액은 9억 6,900백만불로 1913년의 세계 16위에서 7위 규모로 상승하였고,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 필리핀(미국) 등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주요국 중 수위였다. 이러한 발전을 증명하듯이 일본 경제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까지의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분명히 고도성장이라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상위를 유지했다(표 2 참조). 더욱이

1930년부터 전쟁으로 인해 GDP규모가 축소되기 이전인 1942년까지 13년 동안의 GDP 성장률은 평균 4.2%로 세계 최상위 수준(같은 시기 서구 국가들은 대공황 시대였다)이었고, 여기에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의 역할은 막대했다. 즉 이 시기의 경제성장의 견인차는 기존의 경공업과 전후(戰後)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끈 중화학공업이었으며, 이것은 일본의 공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중점을 옮겨가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표 3 일본과 세계의 장기 경제성장률(%)

	1870~1913		1913~50		1950~73		1973~98	
	1인GDP	GDP	1인GDP	GDP	1인GDP	GDP	1인GDP	GDP
서유럽	1.32	2.1	0.76	1.19	4.0	4.81	1.78	2.11
비유럽권 서구	1.81	3.92	1.55	2.81	2.44	4.03	1.94	2.98
일본	1.48	2.44	0.89	2.21	8.05	9.29	2.34	2.97
아시아(일본제외)	0.38	0.94	-0.02	0.9	2.92	5.18	3.54	5.46
라틴 아메리카	1.81	3.48	1.42	3.43	2.52	5.33	0.99	3.02
동유럽 및 구소련	1.15	2.37	1.5	1.84	3.49	4.84	-1.10	-0.56
아프리카	0.64	1.4	1.02	2.69	2.07	4.45	0.01	2.74
전세계	1.3	2.11	0.91	1.85	2.93	4.91	1.33	3.01

1. Angus Maddison(2006), The World Economy
2. 비유럽권 서구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처럼 경제적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경제는 제도적으로도 각종 경제 관련 제도들을 수정해가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쇼와[昭和]금융공황(1927년)을 거치면서 소규모 부실은행의 정리가 진행되었고,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와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의 시대를 거치면서 외환과 재정 분야에서 뼈아픈 경험을 얻었다. 이어서 전시경제의 시작으로 자본과 물자의 집중, 배분, 통제의 시스템을 대규모적으로 경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긴 시스템과 제도는 결국 전후와의 연속성이 강력히 주장될 정도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 본 것과 같이 전전 일본 경제가 축적한 경험과 실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 수준이 서구의 주요 열강에 뒤진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그들과 일본 사이의 거리는 일본과 동아시아 제국(諸國)과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자산’은 패전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과 제도를 통해 전후에도 전달되었던 것이다.

2) 전후 개혁과 경제구조 변화

패전 이후 일본은 맥아더의 지휘 아래 미군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연합국사령부(GHQ)의 점령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다시는 일본이 군국주의적인 정책으로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점령정책의 주안점을 놓았다. 이 결과 일본에서는 전후 3대 개혁이라 불리는 상징 천황제의 신설, 노동운동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 경제개혁이 추진되었고, 이중 경제개혁은 다시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금융 및 재정제도의 개혁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또한 군대의 보유는 금지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추진된 이유는 연합국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전전 일본 사회의 지배계급인 재벌, 지주, 정치가, 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호도하여 전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재벌 조사단장인 에드워드(Corwin D. Edwards)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재벌의 지배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의 중산계급의 발흥을 억눌러 버렸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노동자에 저임금을 강요하여 국내시장을 축소시키고 수출의 중요성을 높여 제국주의적 노동을 강화시켰다...”

에드워드의 견해는 사실상 연합국의 일본의 전쟁 도발 원인에 대한 견해였는데, 국민의 대다수를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향상된 생산 능력으로 대량생산된 제품의 시장을 국제 경쟁이 아니라 식민지 획득으로 얻으려한 재벌이 지주, 정치가, 군대와 담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재벌과 지주는 일본 국내에서 노동자와 소작농을 착취하여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이들로 구성될 건전한 내수시장이 축소되어 재벌과 지주의 생산물을 판매할 해외시장을 획득할 목적으로 군부와 정치가를 지원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일본에서는 해외시장의 획득 이유를 1930년대의 블록경제 형성에 따른 수출시장의 축소에서 찾는 세력도 많았지만, 그 진위를 떠나 연합국의 이러한 해석은 당연히 구정치인 및 군인들의 공직 추방, 재벌 및 지주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의 재벌들은 4대 재벌²의 하나였던 야스다[安田]가 제출한 ‘야스다 플랜’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냉전의 진전으로 일본을 강력한 자본주의 우방으로 재건하여 공산권에 대항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47년을 경계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의 자유화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되고, 구정치인 및 경영인들의 사회복귀도 허락되었다. 이 때문에 결국 거대 재벌은 일단 해체되었으나 사실상 주된 자본 제공자인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기업이 재결합한 케이레쓰[系列] 집단이 형성되었고, 3개로 나뉘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다시 재결합한 것처럼 1960년대까지 구 재벌계의 대표기업이 다시 재건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 및 재정에 대한 개혁에서도 대장성(大藏省)의 일본 금융에 대한

2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야스다[安田], 스미토모[住友]를 말한다.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던 노력은 결국 동성(同省)의 강력한 저항으로 애매한 형태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경제 개혁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선 농지개혁은 상당히 철저히 진행되어 농촌부에 중산계층이라 할 만한 소규모 자작농을 다수 탄생시켰다. 이에 관해 표 4와 그림 1을 살펴보자.

표 4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단위 : 천인(千人))과 점유율(%)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분류불가
1920	14,672	(53.8%)	5,598	(20.5%)	6,464	(23.7%)	527
1930	14,711	(49.7%)	6,002	(20.3%)	8,836	(29.8%)	71
1940	14,392	(44.3%)	8,443	(26.0%)	9,429	(29.0%)	218
1950	17,478	(48.5%)	7,838	(21.8%)	10,671	(29.6%)	37
1955	16,291	(41.1%)	9,247	(23.4%)	14,051	(35.5%)	2
1960	14,389	(32.7%)	12,804	(29.1%)	16,841	(38.2%)	8
1965	11,857	(24.7%)	15,115	(31.5%)	20,969	(43.7%)	19
1970	10,146	(19.3%)	17,897	(34.0%)	24,511	(46.6%)	40
1975	7,347	(13.8%)	18,106	(34.1%)	27,521	(51.8%)	167
1980	6,102	(10.9%)	18,737	(33.6%)	30,911	(55.4%)	62
1985	5,412	(9.3%)	19,334	(33.1%)	33,444	(57.3%)	167
1990	4,391	(7.1%)	20,548	(33.3%)	36,421	(59.0%)	321
1995	3,820	(6.0%)	20,247	(31.6%)	39,642	(61.8%)	432

1. 矢野恒太記念会(2000),『数字でみる日本の100年』, p.80에서 작성.

1950년 단계에도 아직 일본은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1차산업에 가장 많은 취업자가 있었다(48.5%). 한편 그림 1을 보면 자작농, 자소작농(자작이 주(主)이나 소작을 겸하는 계층), 소자작농(자소작농의 반대)과 같이 자작(自作) 농지를 소유하는 계층이 1941년의 68.5%에서 90.1%로 증가하였고, 특히 자작농이 27.5%에서 55.0%로 두 배가 되었다. 이것은 제1차 산업이 차지하는 취업인구의 비중을 볼 때, 전전에 비해 국내시장의 구매력을 높여줄 중산계층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이것이 즉각적인 농촌의 부흥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나, 전전과는 분명히 다른 현상이었다.

한편 노동개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1945)과 노동관계조정법(1946), 노동기준법(1947)등이 제정되어 전전에 비해 대폭 향상된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부여되었다. 이것 역시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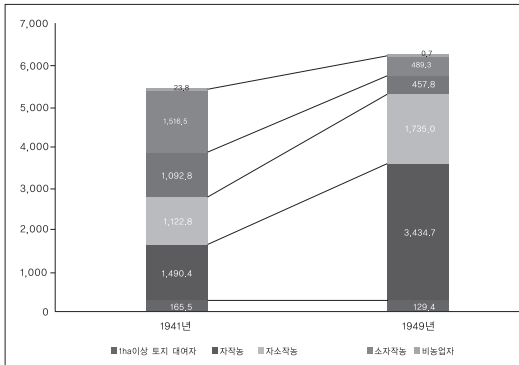


그림 1 농지개혁 이후의 소·자작농 구성 비율
(단위 : 천호(千戸))

1. Hitachi Digital Heibonsha(2000)『世界大百科』年鑑・便覧・地図』에서 작성.

시장이 상실된 대신에 국내시장에서는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열린 구조가 만들어진 반면,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가 변형되면서도 기존으로 회귀하는 측면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전전과 전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일부가 변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전과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3) 전후 부흥과 고도성장

패전 이후 절망적인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폭발적인 인플레이션과 식량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부족이었다. 패전에서 반년이 지나는 사이에 화폐는 약 2배가 증가했고, 전쟁 중에 계약된 군수물자와 국채에 대한 대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이다. 한편 공습으로 인한 주요 생산시설의 해체와 원료 공급의 두절³은 극단적인 생필품

3 패전 후 일본으로의 물자 도입은 연합군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부족을 일으켜, 화폐가치의 하락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겼다. 이로 인해 1945~49년 사이 소비자물가는 79배, 도매물가는 60배 상승하였고, 이를 막고자 실시한 화폐 개혁과 공정물가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하 경제만 키우게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경제를 유지 및 활성화할 자원, 자재, 설비의 부족과 지나친 통화 팽창에 있었다. 즉 공급되는 물자가 너무나도 적은 반면, 통화는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공급된 통화량에 맞추어 생산능력을 확장하던가, 아니면 통화량을 생산력이 지탱하는 선으로 축소시켜야 했다. 그러나 화폐개혁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통화량을 축소시킬 경우,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하며 대공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도된 첫 번째 부흥정책이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이었다. 점령당국으로부터 월동용으로 긴급 도입된 중유⁴를 철강 생산에 투입하고, 이로 인해 생산된 철강을 이번에는 탄광에 집중 투입하여 채탄량을 증가시킨 뒤, 다시 채탄된 석탄을 철강 생산에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계획의 요점이었다. 에너지원인 석탄과 공업의 근간인 철강의 생산량을 교차적으로 증가시켜 고용과 공급을 확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했던 것이다. 이 계획은 1947년 하반기까지 채탄량을 3,000만톤까지 회복시키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이것만으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금의 공급원으로 만들어진 정부출자의 부흥금고가 발행한 채권은, 결국 시중의 구입 능력이 약했던 때문에 일본은행이 인수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게다가 부흥금고의 자금을 대출받아 간신히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

4 당시 일본 정부는 석유 등 중요 원자재를 GHQ의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었고, 대금으로 지불할 외화도 없었다.

에, 산업경쟁력의 악화도 심각하였다.

바로 이때, 즉 1949년에 일본을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이 확정되면서 일본의 경제안정을 미국이 직접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수단의 핵심은 고도의 긴급예산이었다. 경제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이 인플레이션의 종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획의 실행자인 조셉 돗지(Joseph Morrell Dodge)의 이름을 따서 ‘돗지 라인’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심각한 다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일례로 1948년에는 697건에 불과하던 기업 정리가, 다음해인 1949년에는 무려 10,509건으로 급증하였고 정리해고는 22,829인에서 489,641인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도요타조차도 불황을 넘기기 위해 정리해고를 강행, 노사대립 끝에 해고 노동자와 함께 사장인 도요타 기이치로[豊田喜一郎]도 같이 사직하였다.

그러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각 분야의 기업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어난 ‘조선특수(朝鮮特需)’는 단숨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다. 당시 GNP의 3%에 해당하는 1,184억엔(1950.6~51.6)의 특수는 그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였지만, 자원 없이 공업 설비만을 갖춘 일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화를 획득하게 하였다.

획득한 외화로 제품을 생산할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는 부흥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표 5를 보면 GNP, 개인소비, 광공업 생산, 철강업 등의 주요 지표 및 산업이 조선 특수 기간 중에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전부터의 유산이 많았던 위에, 파괴된 인프라의 복구를 위해 한 발 먼저 전전의 수준을 넘어서 기계공업과 함께, 일본 경제의 각 분야는 확실히 부활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확고한 신뢰가 있는 외화(달러)의 증가에 기초하여 늘어난 통화는 그 상당 부분이 특수 관련 기업에 흘러 들어가 소비 시장의 형성과 설비 개선의 자금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소득이 증가한 개인들은 패전 이후 극도로 눌러왔던 소비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소비경기’라 불리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이 회복되고 수입이 증대된 기업은 다시 이윤을 장래를 위한 투자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1954년의 짧은 경기 조정을 거쳐 1955~73년까지 연평균

표 5 일본의 전후 부흥 전전 대비율

지 표	1946년	전전 수준을 돌파한 연도
GNP	69.3	108.8(1951)
(1인당)	(63.5)	103.4(1953)
개인소비	62.5	101.0(1951)
(1인당)	(57.1)	102.4(1953)
민간고정자본	87.5	102.6(1951)
수출등의 수입	2.5	109.3(1957)
수입등의 지출	13.2	116.0(1956)
광공업 생산	27.8	100.7(1951)
철강업	22.3	118.7(1950)
기계공업	50.5	116.2(1949)
섬유공업	13.0	105.0(1956)
농업생산	84.7	111.4(1952)

1. 1934~36=100

표 6 고도성장기의 일본

경기 순환 명칭	연 도
진무(神武) 경기	55~57
나베조코(鍋底)불황	57~58
이와토(岩戸) 경기	58~61
62년 불황	61~62
올림픽 경기	62~64
65년 불황	64~65
이자나기(いざなぎ) 경기	65~70
70년 불황(엔화 절상)	70~71
가격 경기	71~73
74년 불황(오일 쇼크)	73~75

15.1%(명목, 실질로는 9.8%)의 경제성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도성장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약 20년에 걸친 이 성장은 일본을 ‘경제대국’의 위치로 끌어 올렸다. 표 6에 의해 세분화된 고도성장기는 5번의 경기확장과 수축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경기의 이름에 붙은 진무(神武), 이와토(岩戸), 이자나기(いざなぎ)는 일본 신화의 인물이나 장소이다.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은 해당 인물이 태어난 이래 가장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다소 과장 섞인 표현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이듯 불황 국면은 단기간에 종식된 것에 비해, 호황 국면은 최장의 이자

나기 경기의 경우 57개월 4년 9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이러한 장기 호황속에 표7처럼 GDP는 급성장하였다(본문의 평균 성장률과 다른 것은 선택된 데이터의 수치 차이에 의한). 이 사이에 일본의 산업구조는 그림 2에서 보이듯 제조업이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확대하였고, 농림수산업은 축소되었다. 또한 그림 3처럼 건설업과 제조업의 성장률은 농림수산업을 크게 능가하면서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즉 고도성장의 견인차는

표 7 고도성장기의 국내총생산(GDP) (단위 : 십억엔)

	명목	(성장률)	실질('90년 기준)	(성장률)
1955	8,371.3		52,271.0	
1956	9,443.3	(12.8%)	55,512.6	(6.2%)
1957	10,861.3	(15.0%)	59,580.7	(7.3%)
1958	11,451.0	(5.4%)	63,391.1	(6.4%)
1959	13,088.1	(14.3%)	68,679.8	(8.3%)
1960	15,942.1	(21.8%)	76,414.6	(11.3%)
1961	19,325.8	(21.2%)	84,054.3	(10.0%)
1962	21,767.6	(12.6%)	89,699.6	(6.7%)
1963	25,131.0	(15.5%)	96,618.8	(7.7%)
1964	29,331.9	(16.7%)	105,541.0	(9.2%)
1965	32,687.6	(11.4%)	110,946.7	(5.1%)
1966	37,917.3	(16.0%)	121,710.5	(9.7%)
1967	44,743.9	(18.0%)	134,446.8	(10.5%)
1968	52,745.8	(17.9%)	148,601.1	(10.5%)
1969	61,971.9	(17.5%)	166,111.1	(11.8%)
1970	73,436.0	(18.5%)	182,944.3	(10.1%)
1971	80,473.2	(9.6%)	191,599.9	(4.7%)
1972	92,844.7	(15.4%)	208,064.3	(8.6%)
1973	113,807.3	(22.6%)	225,120.8	(8.2%)
연평균		15.7%		8.5%

제조업과 같은 공업 분야이었고, 이중에서도 특히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전전의 중화학공업 성장이 이어진 것을 의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화학공업의 성장(제조업내 비율이 1950년의 50%에서 70년

의 67%로 성장)으로 1차 산업생산물이나 경공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 대량생산되면서 막 회복된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서 순조로이 판매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어 소비시장이 재확대 되었으며, 생산자들은 장래의 생산 확대를 노리고 설비투자를 확장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는 구조였다. 이때 국내 소비시장과 수출, 투자가 고도성장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는데, 1955~70년 사이 경제성장 기여도는 국내 소비시장이 46%, 민간투자설비가 27.6%, 수출이 14.3%로 1~3위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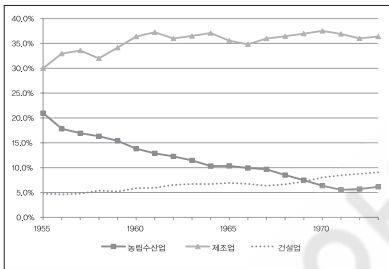


그림 2 고도성장기의 산업구조(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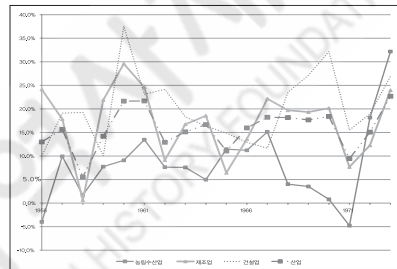


그림 3 고도성장기의 산업 성장률

이 같은 고도성장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는데, 같은 시기 세계가 동반성장(서구 선진국들도 평균 6~8%)하면서 일본의 수출시장이 되었고, 에너지원인 석유가격이 저렴한 가운데 환율이 저평가(1달러=360엔)되어 있었다는 외부 요건도 컸으나, 국내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한 기술력과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되었다는 점과 빈약한 사회복지로 노후를 대비한 국민 저축이 대단히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교육의 정착으로 이미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일본은 전쟁으로 생활수준이 극도로 하락한 탓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교육 확대라는 사회적 비용없이 후진국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철강업, 조선업과 같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선 기반산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서구로부터의 기술 도입 속도가 빨랐고, 중간

재의 국내 조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고도의 기계·전기공업-대량생산체제가 필요한 자동차, 가전산업 등-의 성장 역시 상대적으로 수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술하는 일본식 생산시스템이 성립되었다. 아직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본기업은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가절감형의 대체기술을 찾아냈던 것이다.

한편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선택된 국민의 저축 중시는 투자 자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호송선단방식 등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금융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여기에 수출장려 정책, 기술지도 정책 등 관료집단의 선택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 고도성장이 지속되었다.

이 결과 1968년에 일본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뒤를 이어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대중소비 사회가 정착되어 이미 1970년에 흑백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3종의 '신기(神器)'는 보급률이 90%를 넘게 되었다, 자동차 보급율도 23%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은 견실하게 성장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일본 자본주의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4) 경제대국과 시련

1973년에 일어난 오일 쇼크(oil shock)는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1974년의 실질 경제성장은 -1.3%로 떨어졌고, 75년에도 2.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타격이 오히려 일본을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였다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겠다. 오일쇼크의 영향은 일본에게만 온 것은 아니었다. 표8에서 보이듯 미국, 영국, 서독 등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도 급속히 하락하였고, 이에 비해 오히려 일본은 비교적 단기간에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도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의 성장이었다.

표 8 오일쇼크와 주요국 GDP 성장률(%)

	1960~68	1973~79	1979~87
일 본	10.2	4.0	4.1
미 국	4.5	2.4	2.6
서 독	4.1	2.3	1.4
영 국	3.1	1.5	1.8
프 랑 스	5.4	2.8	1.7
이탈리아	5.7	3.7	2.2

1974~79년 사이에 일본의 수출은 54,480백만불에서 101,232백만불로 연평균 19.6% 증가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도 같은 기간 평균 22.4%씩 증가했지만, 에너지 절약과 생산 합리화를 통해 생산된 일본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은 강력하여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평균 51.7%, 2차 오일쇼크 파동이 있었던 79년을 제외하면 무려 80.1%의 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장기간의 경제성장으로 더 이상 낮은 인건비만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본이 이처럼 높은 수출 성장을 달성한 사실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로 성장을 달성했다는 이미지는 서서히 불식되었고, 일본의 생산 및 경영 시스템의 장점이 인정되면서 일본 경제의 지위는 재평가되었다. 이것은 생산 공정의 합리화를 통한 철저한 원가 절감과 협조적 노사관계에 따른 생산현장 안정의 결과였다. 노사관계의 경우, 격렬한 국내 경쟁을 거치면서 지나친 노사대립이 기업을 파탄시킬 수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가 빈약하고 유사한 대우를 받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일본에서 자신에게 커다란 피해가 된다는 점을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다. 게다가 장기간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

표 9 일본의 노동쟁의 상황(%)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노동쟁의 연간 평균증가율	11.6	7.6	10.7	17.9	-11.4	7.1
쟁의행위 평균 발생비율	34.3	26.7	19.6	10.4	11.2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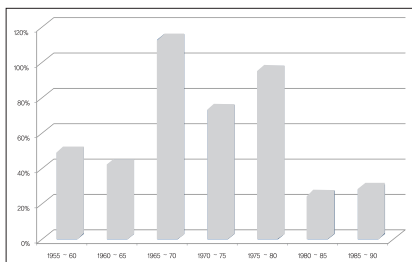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노동생산성 상승률(500인 이상 기업)

준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노사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이다. 이것은 선진적 노사관계나 민주적 시스템의 정착이라기 보다는, 전쟁과 전후의 혼란 속에 장기간 낮은 생활수준에 머물러 있었

던 일본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긴 결과라 여겨지나, 결과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과 연결되었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표9나 그림4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쟁의는 고도성장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중 직접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의 발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1965~80년 사이 급속히 향상되었다.

이처럼 노동현장이 안정되면서 장기근속에 의한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사실상 기업이 개인의 복지까지 말하는 일본식 고용시스템이 형성되었다. 'Japan as No.1'과 같은 일본식 시스템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널리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적 위치는 다시 한 번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에 일본의 무역수지는 급증했다. 1981년의 이례적인 상승은 예외로 하더라도 1983~86년에 이르는 4개년 사이 평균 51.7%의 무역수지 상승은 놀라운 속도였다. 표10의 결과는 수출대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주요 수출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당시 진행 중이던 인플레이션의 수습을 위해 고금리 정책을 취한 결과 달러 가치가 절상되면서 일어난 면도 컸지만, 이미 1971년 이래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1980년대 전반 1달러당

표 10 1980년대의 일본의 경상 및 무역수지(단위 : 10억엔)와 증감률

	경 상 수 지		무 역 수 지		수 출		수 입	
1980	-10,746		2,125		126,736		124,644	
1981	4,770	-144.4%	19,967	839.6%	149,522	18.0%	129,555	4.0%
1982	6,850	43.6%	18,079	-9.5%	137,663	-7.9%	119,584	-7.7%
1983	20,799	203.6%	31,454	74.0%	145,468	5.7%	114,014	-4.7%
1984	35,003	68.3%	44,257	40.7%	168,290	15.7%	124,033	8.8%
1985	49,169	40.5%	55,986	26.5%	174,015	3.4%	118,029	-4.8%
1986	85,845	74.6%	92,827	65.8%	205,591	18.1%	112,764	-4.5%
1987	87,015	1.4%	96,386	3.8%	224,605	9.2%	128,219	13.7%
1988	79,631	-8.5%	95,012	-1.4%	259,765	15.7%	164,753	28.5%
1989	57,157	-28.2%	76,917	-19.0%	269,570	3.8%	192,653	16.9%
1990	35,761	-37.4%	63,528	-17.4%	280,374	4.0%	216,846	12.6%
연평균				36.2%		7.5%		5.2%

220~250엔대에 형성되던 환율이 형성되었으므로, 단순히 환율 격차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1970년대 이래로 에너지 절약형의 일본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들이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은 것 역시 커다란 이유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마치 집중호우처럼 일본제품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인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달래고자 일본기업의 수출 자주 규제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드디어 고평가된 달러 때문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던 미국이 1985년 주요 무역대상국들에게 달러 평가절하, 즉 자국 통화의 상대적 평가절상의 협조를 요청한 플라자합의가 열린 후 환율은 1985년의 달러당 239엔에서 169엔, 145엔의 순으로 매년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무역수지도 축소되었지만, 수출액 자체는 매년 상승하였고 무역수지가 적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일본 경제의 능력은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게 되었고, 명실공히 ‘경제대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본식 경영과 생산 시스템에 대한 찬사가 줄을 이으며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이 바로 이 1985~90년

대 초반에 걸친 시기였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행은 엔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로 기업의 자금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확실히 경상 및 무역수지의 하락률은 표9에서 보이듯 경계를 요하는 수치였으나, 이러한 정책이 낳은 결과가 버블이었다. 5회의 기준금리 인하로 1987년 2월, 드디어 사상 최저의 2.5% 금리와 내수 시장의 진작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공공사업(87년 5조엔)이 결정되면서 시중 통화량은 대대적으로 팽창되었다. 1986~90년 사이에 거의 매년 통화량(M2+CD)은 10%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 대기업들은 이전과는 달리 재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조달한 자본 자체를 운용하여 수입을 올리려는 ‘재(財)테크’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인들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 대출 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투기적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10월의 블랙먼데이 사건에 일본은행이 개입하여 위기를 넘기자, 정책 당국의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유지를 확신한 투기세력의 투자는 절정에 달하였다. 각종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황궁(皇宮)의 지가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했고, 시기적으로 다소 앞서나 1987년 3월경 민영화 단계의 NTT 주가가 320만 엔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50조 엔에 달해 당시 독일과 홍콩의 상장기업의 주가 총액을 넘는 규모가 되었다.

지나치게 방만해진 통화량과 투기적 사태, 그리고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눈앞에 두고 일본은행과 정부가 정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1989~90년에 걸쳐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하여 6%로 올렸고, ‘총량규제(부동산 투자용 대출의 증가율을 전체 대출 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는 정책)’의 행정지도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투기적 상황이 종료되기 시작하면서 주가와 지가가 급락, 거액의 자산 손실을 입은 막대한 수의 기업과 개인의 파

산이 급증하였다. 1994년의 지가는 90년의 1/2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막대한 불량채권이 발생, 1992년 이후 1999년까지 총계 70조엔에 달하였다. 이처럼 막대한 자산손실과 파산은 그대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1995년에 주택전문 대출기관인 주센[住専], 1997년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척식은행과 창업 100년의 야마이치[山一]증권, 1998년에는 국립인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 2000년에는 5대 생명보험회사인 치요다[千代田]생명보험과 다이이치[第一], 교에이[協栄]와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연이어 파산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다시 금리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질 금리가 0%로 낮추어졌음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13년(1990~2003)’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이 시작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2001년 등장한 고이즈미[小泉] 정권은 우정성(郵政省)개혁, 재정지출 및 불량채권 삭감을 목표로 개혁에 착수하였고, 수출 및 디지털 기기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2002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밀레니엄 경기라 불리는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그 기세는 1980~90년대에 비할 수 없었다.

이처럼 버블경기의 종식은 일본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떠나서 종신고용, 연공서열제에 기반을 두며 오랜 기간 일본 경제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협조적 노사관계, 오랜 기간 산업구조를 지배했던 기업집단 역시 불황 탈출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손상을 입었다. 또한 고도경제 성장시기부터 적합한 정책 판단을 내려 일본의 경제 발전에 정책 결정자들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되었다. 고도성장 이래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일본의 경제시스템은 다시금 재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결코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주도형의 발전도 상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전전의 유산 위에 세워진 일본 경제는 이미 1970년대에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했었고, 성숙한 시장경제 국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서구권 국가에 비해 관권(官

權)이 강했음은 사실이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의 주역은 수출과 내수시장의 확대를 이루어낸 기업과 개인이었고, 일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일본식 생산시스템, 기업집단,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을 만들어내 것도 기업과 개인이었다. 일본 경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기업과 개인일 것이다.

2. 한국

1) 1945년 이전 경제체제와의 단절

1945년 독립 이전에 형성된 한국의 경제 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의는 극히 최근까지 진행되었으며,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은 물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은 시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1910~45년 사이에 한국 경제에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었고, 산업자본의 진입으로 경제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에는 중화학공업과 발전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남한에는 경공업과 농업의 성장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져왔다. 첫째로 공업화에 소요된 자본과 주요 중간재가 주로 외부에서 조달된 관계로 경제구조가 외부 의존적이 된 점과, 둘째로 남북한의 경제가 불완전한 상호보조의 형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에 대규모의 화학공업시설이나 발전시설, 제철소 등이 건설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소요된 자본(표 11 참조)과 설비, 자재는 물론 일본에

서 도입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제철소의 경우 가동에 필수적인 역청탄이 북한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았던 관계로 외부에 의존하거나, 일본에 의해 마련된 대체재를 이용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업 유지를 위한 자본 및 중간재, 그리고 원자재의 보급은 외부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1930년대 후반 조선의 군수공업지역화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한편 일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려된 농업, 그리고 이와 연계된 경공업이 발전한 남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생산력이 빈약했던 북한 지역에 곡물 및 경공업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전력 등 에너지를 북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조선의 공업화 자체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과 유기적 연계가 약하였지만, 일단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적 형태는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분단은 조선의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단절시켰다. 표 11에서 보듯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자본은 해방과 함께 사라졌고, 식민지기에 기술·관리나 경영의 상위 계층에서 극력 조선인을 배제한 탓에 인적 자원면에서도 단절로 인한 피해는 심대했다.

표 11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민족별 공칭 자본금(천원(千圓))

	총 액	조 선 인		일 본 인		조 선 · 일본합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11	39,766	7,395	18.6%	10,511	26.4%	21,861	55.0%
1915	55,117	9,637	17.5%	16,056	29.1%	27,424	49.8%
1919	200,500	23,405	11.7%	157,225	78.4%	17,870	8.9%
1921	422,042	58,033	13.8%	354,546	84.0%	7,313	1.7%
1925	482,353	64,000	13.3%	384,047	79.6%	34,010	7.1%
1931	555,419	63,964	11.5%	439,866	79.2%	44,089	7.9%
1935	695,936	70,825	10.2%	571,267	82.1%	45,394	6.5%
1939	819,385	82,536	10.1%	682,633	83.3%	45,298	5.5%
1942	1,776,345	187,505	10.6%	1,504,412	84.7%	81,130	4.6%

따라서 비록 설비가 남아 있다 해도 이를 운용할 자본과 인력이 해방이후 불충분하였으며, 그나마도 일본 전시경제의 붕괴, 해방 이후 혼란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다. 일본 전시경제의 붕괴로 인한 생산의 축소도 있었겠으나, 해방 이후의 혼란 과정에서 정리된 귀속재산 및 귀속사업체의 유실도 적지 않았다. 귀속재산의 가치는 1948년에 정부세출의 9배에 달하는 3,052억원(圓)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농지와 같은 각종 토지, 기업체, 주식, 주택, 점포, 창고, 선박, 동산 등 다양한 부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중 공장, 광산, 은행, 상점, 음식점, 여관 등이 귀속사업체에 해당했다. 그런데 같은 해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 내에 본점을 가진 귀속기업체 5,583개의 절반 정도가 해체, 소멸되어 있었다고 한다. 해방 직후의 원료 및 전력난 등으로 공장 경영이 어려워졌고, 일본인 재산의 양도·매각, 미군정의 소극적인 정책 등으로 조선인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이다. 또한 1951년 8월에 대체로 규모가 큰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행하여진 제조업 실태에 의하면 건물의 44%, 시설의 42%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진다. 귀속재산의 유실 및 손실은 막대했던 것이다. 다만 상당 부분의 유실에도 불구하고 1947~48년의 귀속공장이 공장 수에서 전체의 1/4(1,500~2,000), 노동자의 1/2(약 10만), 총공산액의 1/3 정도를 차지하여 향후 한국 경제의 성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다. 귀속사업체의 불하는 해방 후 초기 자본가 집단의 형성에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 지역의 중화학공업 및 발전시설과의 분리는 향후 남한 경제의 험난한 전도를 예고했다. 1948년 5월, 북한이 대금 미지불을 이유로 송전(送電)을 중단하자 남한의 공업생산은 즉각 타격을 입었고, 1949년부터는 남한 정부가 치안확보를 이유로 남북교역을 금지하였다. 한편 북한이 1947년 12월에 화폐개혁에 착수하여 이듬해부터 구백원권을 회수하면서 남북한 간의 공용 결제수단은 사라졌다. 이처럼 남북의 경제적 분리는 이미 한국전쟁 이

전부터 진행되었고, 그로 인한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대외 종속적이고 불균형적인 경제구조는 건국 초기부터 해외 의존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원조에 남한 경제가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이다. 이러한 미국의 원조와 ‘해방군’으로의 진주로 인해 남한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미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향후 남한 경제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요약하면 한국전쟁이 종식될 무렵의 남한은 해방 이전부터의 경제 구조가 붕괴하고, 대신에 대미 의존적인 경제구조가 정착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구조는 식민지기 이래의 빈약한 자본력과 기술력이라는 문제점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산업설비의 대대적인 파괴도 생산력의 감퇴라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내재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남한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기대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다음 항에서 살펴보듯 ‘원조경제’가 1950년대 한국 경제의 전부만은 아니었지만, 해방과 전쟁 이후의 한국 경제가 단순히 물질 기반의 상실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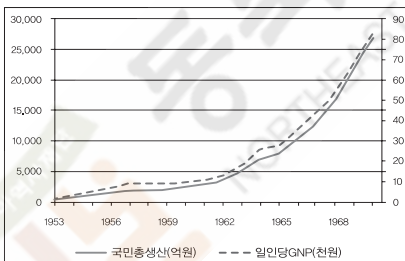


그림 5 1953~70의 GNP 및 1인당 GNP

제에 직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식민지기 이래의 근원적인 문제점인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2) 원조와 전후 복구, 초기 공업화와 수입 대체

1950년대 한국경제가 이룬 경제적 성과는 흔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 5에서 보이듯 장기적인 추세에서 1950년대의 경제 성장률이 그 이후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53~59년 사이에 평균 성장

률은 4%로 당시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주 낮은 성장률이라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이 기간의 공업 성장률은 평균 18.1%로 상당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업의 성장이 있었을까? 전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경제의 중심에는 원조가 있었고, 원조의 상당 부분이 정부를 통해 공업화에 상당 부분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로 1950년대는 수입대체화 전략의 시기였다. 이로 인해 공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는데(표12), 특히 초기에는 원조 받은 원면, 원맥, 원당의 가공업인 면공업, 제분공업, 제당업 등이, 후기에는 판유리, 시멘트, 카바이트, 소금 제조업 등이 원조 받은 원료와, 원조 외화로 구입한 설비를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따라서 수입대체 공업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근간은 원조로 지탱되는 대외 종속적인 구조였다. 사실 이 시기의 미국의 원조액은 막대한 액수

표 12 1946~60년의 공업생산 추계치와 성장률

	공업생산액(백만원)		공업부가가치(백만원)	
1946	41,923		13,505	
1947	45,382	8.3%	14,855	10.0%
1948	60,272	32.8%	19,404	30.6%
1949	78,096	29.6%	25,299	30.4%
1950	58,093	-25.6%	18,242	-27.9%
1951	57,297	-1.4%	18,813	3.1%
1952	70,815	23.6%	23,378	24.3%
평균	9.1%		9.6%	
1953	101,318	43.1%	32,753	40.1%
1954	117,250	15.7%	38,018	16.1%
1955	149,508	27.5%	48,777	28.3%
1956	180,254	20.6%	57,544	18.0%
1957	201,785	11.9%	63,954	11.1%
1958	217,387	7.7%	68,982	7.9%
1959	237,431	9.2%	74,961	8.7%
1960	258,980	9.1%	80,593	7.5%
평균	14.3%		13.7%	

1. 박기주 류상윤(2010), 「1940 50년대 광공업 생산통계의 추계와 분석」 『경제학연구』 제58집 제3호.

로 1946~62년 미국의 대외 원조 총액 97억 7,500만불 중 54억 3,400만불에 달했는데, 이것은 국가별 원조 규모 1위의 액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국내 시장이 정부의 보호 아래 놓여지고, 대기업에 원조 물자 및 자금 불하가 집중되면서 경영적 능력보다 정치적 능력이 기업 경영에 주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한편 아직 자유로운 금융 시장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초기부터 적극적이었는데, 자유당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자본형성을 이루려 하였다. 이 결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었고, 조세 효과를 감소시키면서 이 또한 대기업의 자본축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조가 수입대체공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구조를 크게 왜곡시키면서 대외 의존적이고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 것이다.

3) 고도성장과 중화학공업의 발전

원조의존 경제가 이어지면서 모순이 심각해진 가운데 4·19에 의해 퇴진한 자유당 정권의 뒤를 5·16군사정변을 통해 이어 받은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유당 정권의 무계획적 원조 의존 경제와 대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공업화로 인해 내수시장의 발전은 부진한 상태였고, 이것은 곧 생산능력의 과잉을 의미하고 있었다. GDP의 성장은 원조에 지탱한 수입대체 공업화에 의한 것이었고, 대기업에게 원조물자가 집중 투자되면서 일본과는 달리 내수시장의 성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원조의 삭감이었다. 미국은 1958년 이래 거액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해외 원조였다. 따라서 미국은 원조의 축소와 형태의 전환, 원조가 아닌 차관 공여로 정책 수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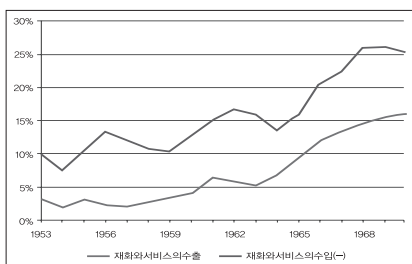


그림 6 수출과 수입의 GNP내의 비율

변경하였고, 이것은 당연히 한국경제의 위기를 의미하였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1957년의 8.1%에서 60년에는 2.3%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막 들어선 군사정부에게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정책전환을 모색한 것은 아니지만, 곧 원조 삭감에 따른 외화부족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책의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요 자원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조가 중단될 경우 보유한 외화로 이를 구입해와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은 수출주도 정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1961년경부터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의 상승은 당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960~71년에 액수로 수출은 약 33배, 수입은 약 7배가 증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오일 쇼크가 시작되기 전으로 세계 경제가 호황 상태였기에 수출전략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견인한 산업으로는 섬유, 각종 경공업, 화학, 금속, 기계 등이 있었다. 그림 7을 보면 1960년대에 농림어업의 성장률이 진퇴를 거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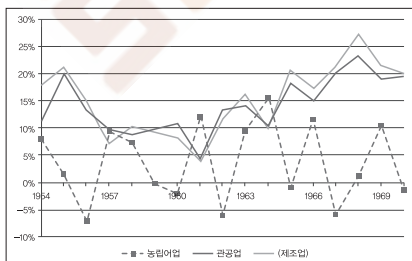


그림 7 각 산업의 성장률(1953~70)

는 가운데 광공업 및 제조업의 성장이 지속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반증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원래 수입 규모가 컸던 한국의 무역적자는 1972년에는 13억 2,670억불이 되

었는데 이것은 1960년의 4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것은 한국이 기본적으로 원료공급을 해외에 의존한 위에, 중간재 및 자본재 산업이 취약했던 관계로 각종 부품 및 설비를 해외, 특히 일본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것은 수출주도 전략하의 제조업이었으나, 이것은 건실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었기에 즉각적인 수입 확대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무역수지의 적자 구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외화는 차관에 의존해야 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경향이 점차 한국의 수출신장을 둔화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해졌다. 여기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일쇼크로 원자재, 중간재와 자본재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상황이 심각해졌다. 한편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구성하고 있던 경공업 제품에 대한 보호주의 장벽은 갈수록 심해졌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내 생산을 늘려야만 했다. 원유와 같은 원자재는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에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화학 공업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등 지원 부처가 설립되었고, 각종 재정·금융·조세상의 지원, 사회 인프라의 확충 등이 시작되었다.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전자, 조선이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위한 투자가 1973~81년에 2조9,800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제조업 총투자의 63.9%를 차지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조세 감면 정책, 재정투융자 지원, 사회 인프라의 확충 등 총력을 기울인 노력으로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1970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1977~81년에 제1차 생산품과 경공업의 수출 증가율은 각기 8.4%, 10.9%였으나, 중화학공업은 24.7%에 달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1년에는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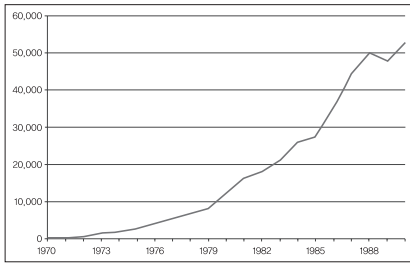


그림 8 1970~90년 수출액 증가(십억원)

다(47.8%와 43.5%). 이것은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급신장하여(그림8), 중화학공업 성장이 수출 확대에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육성 정책의 목표이었던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대체화라는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주로 조립가공 위주의 전자, 조선, 자동차산업이 육성된 결과, 수출 신장에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일반 기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것은 원래의 목적이었던 무역수지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의미했다. 또한 육성 정책의 혜택을 쫓아 경쟁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한 탓에 중복 투자도 상당 부분 일어났다. 중화학공업의 성장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중화학공업의 고도화는 아직 요원했던 것이다.

4) 경제와 산업구조 ‘고도화’

1970년대의 수출신장과 고도성장으로 한국경제의 성숙도는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반의 성공이었다. 중화학공업의 ‘고도화’라는 문제 이외에도 소수 거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체제의 정착, 분배 형평성의 문제, 자금 배분상의 불투명성, 민간의 자율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강력한 관권(官權), 금융산업의 낙후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한편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점도 생겨났다. ‘탈규제화’와 ‘민영화’의 기치아래 경

제의 자율화와 개방화에 대한 요구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해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에 대해 우선은 산업구조의 조정과 규제의 철폐로 한국은 대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 구조 합리화와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형태로 대응한 한국 경제는 산업 현장의 합리화 지원과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을 정하고, 점차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나갔다. 또한 1988년에는 IMF 8조국에 가입하여 외환 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1995년에는 WTO에 가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확정지었다.

한편 전자, 메카트로닉스, 항공, 신소재, 정밀 화학, 생명 공학, 광산업 등의 7개 분야를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강화, 국가의 기간 및 수출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중화학공업의 구조적 변환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1997년의 IMF사태는 그 이전까지의 구조조정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며, 이후의 노력이 가져온 성과에 대한 논의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림 9에서 보듯이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의 길을 계속 걸어왔다. 1990~2010년의 평균 실질 GDP성장률은 5.6%로 이미 자본주의의 성숙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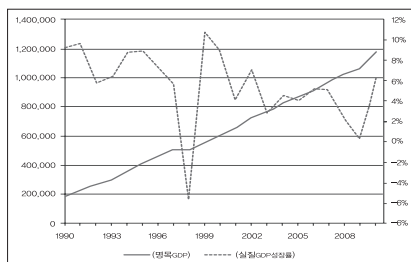


그림 9 1990년 이후의 경제 성장(좌:십억원 우:%)

에 접어든 한국에게 낮은 수치가 아니었다. 적어도 수치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에의 적합한 편입이 없이는 이루기 힘든 결과였다고 보여 진다. 또한 한국 경제의 개방화와 자율화 역시 지난 20년 사이

에 꾸준히 발전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의 주도권은 민간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로 판단할 때, 한국은 1980, 90년대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의 숙원인 중화학공업의 고도화, 금융 산업의 발전, 경제적 분배 형평성의 개선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아직도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R&D예산의 급증⁵에서 보이듯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앞으로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이끌어 나아갈지도 주목의 대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져올 결과는, 과거 50년간의 역사가 보여 주듯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경로를 걸을 것이기 때문이다.

5 2011년도 국가 R&D예산은 14.7조원으로 역대 최대액수이며,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하였다.

3. 타이완

1) 초기 혼란과 안정화

타이완은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으며, 사회 인프라가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 근대적 소유권 제도와 인프라가 일본에 의해 도입된 점도 같았지만,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이 일본의 곡물부족에 대응하여 미작(米作)에 집중된 반면, 타이완은 수출용 농산물을 위한 상업성 농업이 상당 부분 발전되었다. 식량 공급을 위한 미작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상업성 작물인 사탕수수의 재배에 기반을 둔 제당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한국에 비해 상품작물의 재배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계정에서 상당한 흑자를 낼 수 있었다. 1910~39년에 한국의 누적무역적자가 약 13억 엔이었던 것에 비해, 타이완의 누적 무역흑자는 약 20억엔에 달했던 것이다.

상업성 농업이 발달한 결과, 식민기 타이완 경제는 한국보다도 농업 중심적이 되어 '농업 타이완, 공업 일본'이라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대일 의존적 성격이 강한 경제의 성립을 의미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잠시 '공업 타이완 농업 남양(南洋)'이라는 정책이 펼쳐졌지만, 전쟁 중의 공습으로 대부분의 공업설비가 파괴되면서 거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만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안정화시키고, 농작물 가공 생산물의 운송을 위해 형성된 사회적 인프라가 남았던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의 타이완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3단계를 거쳐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단계가 1945~52년의 경제체제의 재편, 1953~63년 미당(米糖) 수출과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한 경제부흥기, 1964~87년경까지의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대외무역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성장기이다.

일본의 통치가 끝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첫 단계로 시행한 경제체제의 재편은 과거 ‘농업 타이완, 공업 일본’의 구조가 붕괴한 탓에 절실했다. 우선은 공업 생산품의 도입처를 새로 찾아야 했는데, 1949년 이전에는 아직 국민당 정권하에 있었던 대륙 본토의 상하이[上海], 난징[南京]이 그 대상이 되어, 쌀과 설탕을 수출하고, 의료품을 수입해오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산물 자체가 광대한 중국 본토의 시장을 대상으로 부족 상태였었기 때문에 타이완으로 수입 물가는 급등하였다.

한편 전전부터 발행된 대폐(臺幣)는 대륙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전후에도 유지되었는데,⁶ 환율이 과소평가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대륙 인플레이션이 상륙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입물가의 급등과 맞물려 1948년부터 급속한 인플레이션 악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1948년 12월에 본토로부터 대량의 피난 자금이 단기간에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에 한층 박자가 가해졌다. 이로 인해 1949년부터는 경제적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⁷ 이에 대응하고자 통화개혁이 실시되었다. 구 대폐 40,000원(元)을 신 대폐 1원(元)의 비율로 화폐를 개혁하고, 대륙 화폐(당시 금원(金圓)이라 불리었다)와의 교환을 금지하였다. 대륙과의 경제적 연계를 끊고자 한 것이다.⁸ 대 신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여 설탕 수출처를 일본으로 바꾸었다. 동시에

6 전전 일본의 엔화와 타이완의 원(元)화는 동일 비율로 교환되었는데, 이 원(元)화를 대폐(臺幣)라 한다. 전후에도 본토에 비해 안정된 상태였던 타이완의 경제를 지키고자 대륙의 법폐(法幣)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 구 대폐를 통용시켜, 당시 대륙에서 일어나던 인플레이션이 직접 상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7 본문에서 설명한 이유 등으로 1947~48년의 화폐 발행량은 증가, 타이완의 통화는 1947년말 3.2배, 1948년말에는 26.5배, 49년에는 99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1946~48년 물가는 연평균 500% 상승했으며, 1949년초에는 3,000% 상승했다.

8 이러한 개혁은 아직 국민당 정부가 피난오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국민당이 임명한 타이완성[臺灣省] 주석 천칭[陳誠]에 의해 추진되었다.

1950년 3월 타이완은행이 월 이자율 7%(연리 125%)의 극단적인고금리 정책을 실시하자, 시중통화가 예금으로 몰려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수습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300%로 떨어졌으며, 이후 물가는 장기적으로 안정 기조로 들어섰다(1953~60년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8.8%, 1960년대에는 평균 3% 이하).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안정이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과 비교해 타이완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1952년에도 전체 노동인구의 56.1%를 차지했던 농림수산 및 축산업(164만 2천인)의 절대 다수를 이루었던 농업의 개혁도 추진되었다. 1949년 4월, 소작료를 37.5%로 감면(三七五減租)하고, 1951년 6월의 구 일본인 소유지의 불하(公地放領), 1952년 11월의 지주소유 농지의 강제 매입과 농민에게의 매각(耕者有其田)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개혁의 결과, 1952년에 타이완의 농업은 전전 최고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이어서 표 13처럼 4.8~5.5%의 안정적인 성장이 1973년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 성장률이 상승되면서, 타이완 경제의

표 13 타이완의 시기별 경제성장(%). 무역수지액은 억 달러)

	1953 ~63	1964 ~73	1974 ~85	1986	1987	1988	1989	1990
	부흥기	안정성 장기	불안정 성장기					
	내수 주도	수출주도						
GNP 성장률	7.7	11.1	7.7	12.6	11.9	7.8	7.3	5.3
농업생산 성장률	4.8	5.5	3.0	-0.3	8.3	1.5	-0.2	2.1
공업생산 성장률	11.6	19.4	8.9	13.9	10.7	4.4	3.7	-1
수출 성장률	24.6	29.7	18.7	23.2	13.2	1.4	0.9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8.3	3.6	9.8	0.7	0.5	1.3	4.4	4.1
무역의존도 비율	28.7	57.3	98.0	96.4	97.7	98.5	92.9	89.4
국민 저축률	10.0	25.0	32.0	38.5	38.5	34.4	31.3	29.7
자본형성(투자)율	17.1	24.5	28.6	17.5	20.4	23.3	22.5	22.2
무역수지액	-0.7	-0.6	31	157	144	180	169	112

1. 園田哲男(2003), 『戰後台灣經濟の立証的研究』, 八千代出版, p. 15.

안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즉 도시거주자를 포함한 전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 획득에서 커다란 역할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2) 경제 부흥과 수입대체 공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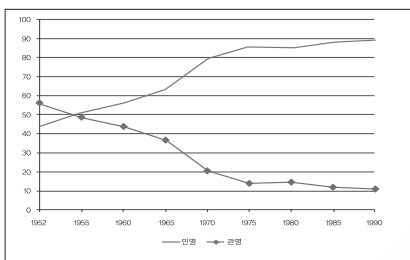


그림 10 제조업 생산의 관민영 비교(% , 부가가치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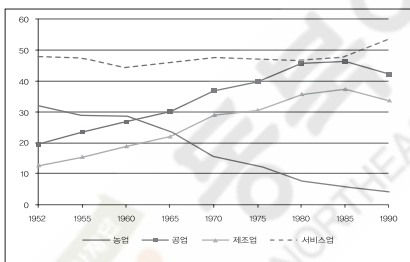


그림 11 GDP생산의 관민영 비교(% , 부가가치액기준)

앞에서 본 것처럼 1953년경까지 일단 타이완 경제는 커다란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 생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과 공업제품의 수입이라는 불완전한 경제였다. 주된 무역 상대는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일본에게는 사탕수수, 설탕, 쌀 등을 수출하는 대신 면제품 등 공업제품을 수입하였고, 미국으로부터는 거액의 원조물자와 함께 각종 공산품을 수입하였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공업

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농업의 발전을 비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선은 국내 시장을 탈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화, 즉 수입대체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간산업의 방대한 관영기업과 경공업의 민간기업으로 구성되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졌다.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설정한 고금리 정책으로 대규모의 대출을 하여 기업규모를 키우려는 민간 기업인이 적었고, 타이완의 자본형성투자의 42%를 차지한 미국의 원조는 정

부를 통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관영기업 대 민간기업이라는 도식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는 구조로도 정착하였다. 미국의 대 타이완 원조는 1946~62년에 44억 2,800만 달러로 한국에 이어 국가별 2위였으며, 1950~65년까지 연평균 1억불, 합계 15억불 정도의 원조가 이루어졌는데, 원조 삭감과 타이완 경제의 성장에 따라 1964년부터는 GNP의 1%선으로 떨어졌지만, 1951~61년의 기간에는 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었다. 이러한 원조 자금을 정부가 거의 독점한 결과, 거대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이 진출할 여지가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직, 식품, 자전거, 시멘트, 제지 등의 분야에서 민간 부문이 급성장하면서 일찍부터 타이완의 공업화를 견인하게 되었다. 표 13에서 부흥기의 공업성장률이 11.6%인데, 이것은 관업(官業) 분야의 성장률이 8.1%에 대해 민간이 18.1% 성장한 결과였다. 민간 공업이 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은 그림 10과 11에서 알 수 있는데, 수입대체 공업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1955년에 이미 민간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관영을 능가하였고, 이후 표 13의 안정성장기에 해당하는 1965년 이후에는 가속도적으로 편차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내수주도의 경제 부흥기에는 여전히 농업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타이완 경제의 부흥은 농업이 국내 수요 충족에 의한 물가 안정과 외화 획득에 기여하면서, 병행적으로 이루어진 수입대체공업화가 민간에 의해 이끌어진 결과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농지개혁, 고금리 정책, 그리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53년부터 성장보다 주로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한 제1차 경제개발 4개년 계획의 수립 등 적절한 정책을 시행한 정부의 역할도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뒤에는 가장 중요한 자본의 제공으로 미국의 원조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흥기 성과의 한계점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로 미국의 원조가 삭감되는 1950년대말부터 나타나는 외화부족이 타이완의 경제정책을 크게 전환시키게 되는 것이다.

3) 정책전환과 고도성장

195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자,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의 일반적 폐해인 시장 포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섬유, 종이, 고무, 비누 등 비내구성 소비재 분야에 포진하고 있던 민간 기업들은 빠른 성장만큼 빠른 공급 초과 현상과 조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GDP 성장률도 이전의 9%대에서 1955년 8.1%, 56년 5.5%, 57년 7.3%, 58년 6.6%로 61년까지 6~7%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미국 원조의 삭감과 국제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외화 수급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다. 설비와 자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 의존해야 하는 타이완의 입장에서 외화 감소는 중대한 문제였다. 정부와 사회 각 집단은 논의 끝에 이러한 사태를 수출주도 공업화로 극복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입대체공업화의 확대를 원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외화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수출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었다.

타이완은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보다 개방적인 경제 체계와 왜곡이 적은 가격 체계를 구비해야 했다. 수입대체 공업화의 시기에 타이완은 일반적인 경향인 환율의 과대평가와 복수 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약화시키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일련의 경제개혁과 함께 1달러 25위안이었던 환율을 1960년 40위안=1달러로 수정하는 환율개혁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1960년에 ‘투자장려조례’, 1962년에 ‘기술합작조례’를 발표하고, 시기적으로 다소 뒤처지나 1966년에 가오슝[高雄], 1972년에 타이중[臺中] 등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타이완의 저렴한 노동력

과 결합시킨 수출공업을 육성할 목적이었던 것이다. 타이완에는 1950년대에는 100만에 달하는 과잉노동자가 농촌에 있었고, 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해 수매하는 미가(米價)를 낮게 책정한 저가 정책으로 농민 소득과 일반적인 임금이 낮았다. 당시 타이완의 임금수준은 일본의 1/5, 미국의 1/10 정도였던 것이다. 또한 1987년까지 유지된 계엄령으로 노동운동의 제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자본의 유인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의도는 적중하여 1960년에는 15백만불였던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가 1964년에는 20백만불, 68년에는 90백만불, 72년에는 127백만불로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466백만불로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과 구미권의 외자는 화학, 전기·전자, 기계, 서비스 등에 진출하여 기존 타이완의 공업과 큰 마찰이 없이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수출주도 공업화는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표14에서 보듯이수출에서 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1970년경에는 사실상 대부분이 되었다. 한편 공업발전을 유지할 자본재는 1960년에 급증한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표 14 타이완의 수출입 구성 변화(%)

	수출			수입		
	농산물	농산 가공품	공업제품	자본재	농공원재료 및 연료	소비재
1955	28,1	61,5	10,4	16,0	74,7	8,8
1960	12,0	55,7	32,3	27,9	64,0	8,1
1965	23,6	30,4	46,0	29,3	65,6	5,1
1970	8,6	12,8	78,6	32,3	62,8	4,9
1975	5,6	10,8	83,6	30,6	62,6	6,8
1980	3,6	5,6	90,8	23,4	70,8	5,8
1985	1,5	4,7	93,8	23,8	67,7	8,5
1988	1,4	4,1	94,5	28,0	64,4	7,6

표 15 타이완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1955~85, 백만불)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55	123	201	-78
1960	164	297	-133
1965	450	556	-106
1970	1,481	1,524	-43
1975	5,309	5,952	-643
1976	8,166	7,599	567
1977	9,361	8,511	850
1978	12,687	11,027	1,660
1979	16,103	14,774	1,329
1980	19,810	19,733	77
1981	22,611	21,199	1,412
1982	22,204	18,888	3,316
1983	25,123	20,287	4,836
1984	30,456	21,959	8,497
1985	30,723	20,102	10,621

환율 조정과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노사관계, 외자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타이완의 공업은 경쟁력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어 1976년부터 안정적으로 흑자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것은 타이완의 오랜 고민이었던 외화 부족이 해결되면서 경제성장과 공업화가 동시에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이자율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였다. 1964년의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은 11.52%였고, 이후 1960년대에 11.52~10.80% 선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1970년대에도 약 9.9%, 1981~85년은 7.75%를 유지하였다. 환율도 1960년 달러당 40위안으로 정해진 이래 1972년까지 40 내지 40.05위안, 1985년까지 36에서 40.27위안 사이에서 안정되었다.

따라서 타이완은 물가와 환율 안정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NIES들이 겪었던 경로와는 다른 성장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여 타이완의 고도성장은 시작되었고(표 13 참조), 그 결과는 그림 12처럼 요약할 수 있다. 1945~50년경 상대적으로 근접한 GDP에서 출발한 한국, 북한, 타이완의 경제는 타이완이 부흥기를 거치면서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인구에서 한국의 절반 이하, 북한과 유사한 규모를 가져온 타이완은 비율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며 북한을 크게

추월해왔다. 1인당 GDP에 있어서는 수출지향 공업화의 개시를 전후하여 북한은 물론 한국에게도 일정한 격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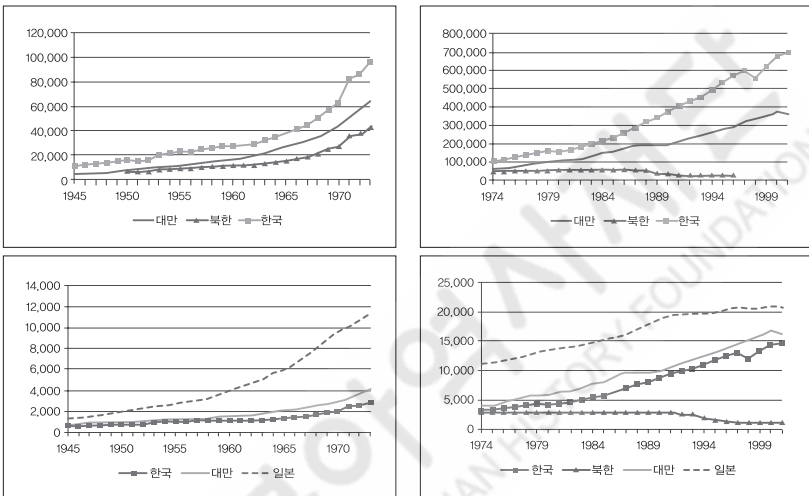


그림 12 타이완, 한국, 북한의 장기 GDP 및 1인당 GDP 비교(1945~2000, 상 : 백만달러 하 : 달러)

1. 상의 좌는 GDP 1945~73, 우는 1974~2000, 하의 좌는 1인당 GDP 1945~73, 우는 1974~2000.
2. 북한의 1945~1973년의 1인당 GDP는 한국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것으로 나오나, 통계수치에 발표치 및 추정치가 많아 제외.
3. Angus Maddison(2006), The World Economy 의 각소에서 작성.

4) 문제점 부상과 개방화

수출지향과 공업화의 달성에 성과를 거둔 타이완의 경제는 1971년 닉슨 쇼크에 대응하여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단행, 위기를 비교적 순조로이 넘겼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을 거둔 타이완 경제에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중화학공업의 확대를 이

루어 내야 했다. 또한 빠른 임금상승으로 단순 조립형 산업의 발전과 유지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인프라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활동이 확대되어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했고, 여전히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공업 부분에서도 생산력 확대를 위한 중간재 및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1969년에는 타이완 정부도 산업형태의 자본집약화와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가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도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었고, 단순 조립형 산업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타이완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필연적인 숙제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이 계획되었는데, 1974년에 최종 결정된 장징궈(蔣經國) 총통의 '10대사업'이 그것이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의 건설 및 확충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 10대사업은 계획 기간(1974~78)에 총 70억 달러, 타이완의 전체 투자액의 25%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힘입어, 타이완 경제는 다시 한 번 약진하게 되었다. 1975~77년에 타이완 경제는 13.9%, 제조업은 22.5%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어서 금리 인상을 통해 저축률을 상승시키고, 고도성장으로 인해 급증한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투자 자금을 축적하였다. 타이완의 재정 수입은 약 70%가 국영기업의 이익과 공공채 발행으로 충당되었는데, 이 때문에 낮아진 조세 부담은 민간의 저축과 자본 형성을 촉진시켰고, 조세 저항의 저하로 조세 수입도 순조로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호조건 아래, 석유파동기의 단기적 위기를 넘기고 중화학공업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타이완의 중화학공업은 전기, 기계 등 중화학공업에서도 비교적 노동집

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한국과 같이 대규모 민간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탓에, 거대 장치 산업보다는 숙련노동에의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완성재보다는 중간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언급한대로 타이완의 경공업으로부터의 수요와 함께, 당시 선진국들의 타이완에 대한 수요가 단순 조립상품에서 보다 수준 높은 조립 제품이나 부품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이완의 중화학관련 기업은 OEM방식이나 하청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 때 주로 국영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받아온 강력한 정부의 보호와 군수산업의 수입대체적 성격 때문에 수출 분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화학공업에 있어서도 수출 분야에 진출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류가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경제의 변화는 그 뒤로도 이어진다. 이미 높아진 임금과 지속적인 환율의 평가절상 요구, 개방화의 요구는 장래 타이완의 경공업이 지속적으로 수출산업의 주역으로 남아있는 것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타이완은 국가 주도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1980년대 중반 무렵에는 기계기구, 반도체, 컴퓨터, 통신,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이 중 특히 성공한 것이 IC산업이었고, 이 결과 PC와 주변기기들이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1980년대 이후 부상하였다. 이미 이 무렵에는 개방화에 대한 요구와 위안화 절상으로 전통적인 경공업 제품-섬유, 신발 등-은 거의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타이완 수출 산업의 주역으로 PC기기가 부상한 것이다.

이처럼 타이완은 1950년대 이래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산업 고도화,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왔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비교적 순조로이 극복했으며, 2000년대 초반의 세계 경기 후퇴와 양안(兩岸) 관계 악

화에 따른 경기 후퇴도 2003년부터 극복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WTO가입에도 성공하여 오랜 기간 중국에 밀려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져있던 외교 상황도 호전될 가능성이 생겼다. 비록 정치적 불안정, 국제시장의 부침, 중국의 견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자본, 기술, 노동력의 풍부함, 높은 노동생산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시장 확보 가능성 등은 타이완의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있어온 외교상의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산업 고도화와 경제의 성장, 수출의 증대와 기술의 발전 등 실로 다방면에서 걸친 성과를 그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 온 것이 타이완 경제이기 때문이다. 비록 국토와 인구가 작기는 하지만, 내실 있는 성장으로 세계 무역에서 2.5%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위치까지 성장한 역사에는 주목할 바가 있다고 하겠다.

II. 사회주의 경로를 따른 중국, 북한, 베트남

1. 중국

1) 현재 개요와 전쟁이전의 축적

중국경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이 되어 있다. 인구 13억 3천만(2009, world bank)에 달한 거대한 경제권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경제 개혁노선을 지지한 3중전회(三中全會)이후 평균 9.7%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2010년에는 약 5조7,451억불의 GDP를 기록하여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에 올랐다⁹. 이 사이 중국은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수백만의 절대빈곤층 구제에 성공했으며, 다수의 경공업 분야와 조선, 철강과 같은 중요 중공업분야에서 강자가 되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둔 중국 경제가 특히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제국(諸國)들의 시장경제 도입이 많은 난관을 겪었던 것에 비해 순조로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아직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나, 정권 교체, 경제제도의 급격한 변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과정을 겪었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순조로운 경로를 걸어온 중국 경제의 성과를 부인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이러한 20세기 후반의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 보기 전에, 우선 통계가 허락하는 한도에서 19세기부터의 중국 경제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메디슨¹⁰의 세계 인구와 GDP에 관한 장기 추정치는 대략적인 중국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은 1820년경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OECD 통계 잠정치로 2010년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인 약 23.6%를 크게 능가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시기의 중국 인구는 세계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서구 인구가 증가면서 그 비율은 1/4로 떨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세계 GDP의 점유율은 1913년에는 9%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19세기에 걸쳐 서구의 지속

9 OECD 추정치. 같은 해 일본의 추정치는 5조3,909억불이다. 한편 2011년에 발표된 중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중국의 GDP는 5조8,786억불이고, 일본은 5조4,742억불(내각부 발표)이다.

10 A. Maddison(1998), Chines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Long Run, OECD Development Center.

적인 성장에 비해 중국의 발전이 뒤처지고 있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수치만으로 중국의 위상을 알기는 어렵다. 중국이 주목 받는 현재에도 GDP 점유율은 약 9.3%이다(2010, OECD 추정치). 1913년과 현재의 중국의 위상을 볼 때, 단순히 GDP가 국제적 위상은 나타내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20세기 전반 중국의 문제점은 절대 빈곤선의 인구가 대거 투입된 전근대적 방식의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공업기반이 미약했다는 점에 있었다. 투입된 노동력의 크기 때문에 전체로는 거대한 규모의 GDP를 얻을 수 있었으나, 상당 비율의 생산물-농작물-이 이를 생산한 노동력을 지탱하는데 소모되었거나, 극단적인 산출량 변동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잉여자본 축적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국제정세와 맞물려 많은 난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업의 육성이 필수적이었으나, 자본 부족으로 우선은 외세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1912~37년에 연간 8~9%의 속도로 성장한 공업은 주로 외국인에 의해 태동되었다.

우선 조계지에서는 1912년 이전부터 외국인들에 의해 세워진 공장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곧 이를 모방한 중국인들이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 지역에서 발흥한 공업은 주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지 않는 섬유,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소비재산업이었다. 1930년대까지는 공업 생산액의 약 78%가 중국인 소유기업에 의해 생산되었고,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칭다오[靑島] 등이 주요한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한편 만주에서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자본에 의해 중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현재까지도 중국 유수의 제철공장인 안산[鞍山]제철소 태평양 전쟁 중의 쇼와제강소[昭和製鋼所]도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이러한 거대 규모의 투자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국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고,

일본에게도 국가적 정책-제국의 설립과 확장-이라는 배경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다. 1942년에 이르면 만주는 전력, 철, 시멘트의 태반을 생산하며 전체 공업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공업시설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투자 규모가 거대했음에도 일본이 의도적으로 중국 기업과 기술제휴 및 거래관계를 제한했기 때문에 당시의 중국 경제에 준 영향은 적었지만, 만주지역에 형성된 중공업기반은 전후 중국의 공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조계지 인근과 만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업화로 1933년까지 비록 전체 노동력의 0.4%에 불과한 100만 노동자와 GDP의 2% 정도 수준이기는 하나 공업의 기초가 이룩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전쟁과 내전으로 1949년에 이르러 크게 쇠퇴하지만, 전후 중국의 중요한 유산을 남기었다. 확장된 공업에 의해 경영자, 기술자, 노동자 등이 성장하였으며, 전쟁을 통해 이들이 정부 통제하의 기관에 다수 속하게 된 것이다. 중일전쟁 기간에 국민당 정부는 경제 개입의 필요성을 찾게 되어 천연자원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하였고, 언급한 노동력을 포함하여 중국 공업의 상당 부분(일본군 비점령 지역 총자본의 70%, 노동력의 32%)을 관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전후에 만주의 생산설비와 상하이 점령지구의 공업지대가 국민당 정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1947년에는 국민당 정부는 근대 산업자본의 2/3, 철강생산의 90%, 전력 2/3, 시멘트의 45%,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은행과 운수회사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당의 경제통제 기구의 구성원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하였을 때 그대로 잔류했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는 경제운영에 필요한 제도 및 인적 기반을 이어 받았다. 공업 발전을 위한 설비와 함께, 인적 자원, 제도 및 기구, 그리고 경험이라는 주요한 유산은 이처럼 전전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과 동요

전전과 전시에 이루어진 중국경제의 유산, 즉 중화학공업의 시작과 국가 기구에 의한 경제 운영 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공산당 정부는 국민당의 경제통제 기구의 구성원을 활용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였다. 이로 인해 1949년 이후 사회주의식 통제경제가 점차 자리 잡게 되었고,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중공업 우선의 계획이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소련의 영향이 컸었다. 당시 국방과 경제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발전하고 있던 소련의 경험은, 막 냉전이 정착하는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하는 중국에게 필히 참고해야 할 모델이었다. 따라서 1949년의 중소우호조약이 설립되면서 소련의 영향이 중국에 침투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이처럼 전쟁과 내전으로 혼란했던 상황에 점차 질서가 부여되면서, 파괴된 국내기반의 복구를 통해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1952년의 공업과 농업은 모두 공산혁명 이전 최고 수준을 돌파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이 시기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농촌에서는 급진적인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경작가능 토지의 42%가 1950~52년 사이에 재분배되었다. 토지사유제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대체로 균등하게 각 가구에 분배되었다. 이로 인해 중·빈농의 확고한 지지를 중국 정부는 획득할 수 있었고, 질서회복과 함께 영농 의지가 상승한 농촌에 의해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력은 회복되었다.

한편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도 투자의 대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면서 만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산당 정부는 일본인 및 국민당에게서 몰수한 공장을 다수 장악하였고, 이것을 대륙에 잔존한 자본가들이나 국민당의 경제기구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질서의 회복과 구체제 유산의 활용, 사유화의 일정 부분 수용에 의해 중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윽고 본격적인 경제적 이룩을 계획한 1953년의 제1차 5개년계획은, 동시에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계획이 되었다.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정부의 통제 밑에 두는 ‘강제 공출제’가 시작되는 한편, 토지의 사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농업합작사가, 도시에서는 사영 공장 및 상점들을 통제 밑에 두는 협동조합 또는 공사동영 공장(公私同營工場)의 설립이 급속히 추진되었다. 또한 도시의 식량 공급 수단으로 배급제가 시작되었다.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이 정책으로 농촌에서는 1954년 말에는 2%에 불과하던 조합 및 합작사의 농가 점유율이 1956년 말에는 98%에 달하게 되었다. 촌락단위의 ‘공유지’ 설정을 통해 자작농에게서 농지를 몰수한 후 전 토지를 국유화한 뒤 이를 경작시키는 조직인 합작사는, 초기에는 단순히 노동력을 집단화한 합작사와 더욱 광대한 단위를 바탕으로 집단소유, 집단노동, 통일된 경영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급합작사로 나뉘었다. 이렇게 하여 1956년 초반까지는 공산당 정권 성립 후 잔존하고 있던 사적 소유가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리고 고급합작사는 1958년의 대약진운동에 의해 인민공사(人民公社)가 재조직되어 생산수단, 노동, 소유의 공동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같은 농촌의 집단화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농촌 노동력의 집단화를 통해 잉여 농업생산물을 도시부의 중공업 투자를 위한 자본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었다.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식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공업의 발전이 필요했는데, 아직 초기 단계였던 중국의 중공업 발전을 위해서는 잉여 농산물의 통제를 통한 중공업에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자본 축적이 빈약했던 중국에게 대규모 투자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농산물을 정부의 통제권 하에 두려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강제공출제로 인해 납입되는 농산물의 가격은 낮게 책정되었다. 국가 수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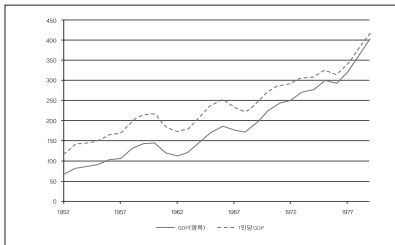


그림 13 중국의 GDP 성장(1952~79)

1. <http://www.chinability.com/GDP.htm> 자료로 작성
2. GDP: 십억 위안(元), 1인당 GDP: 위안(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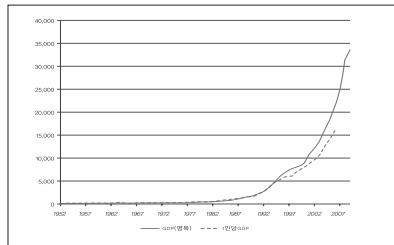


그림 14 중국의 GDP 성장(1952~2009)

1. 출전 및 단위: 그림 13과 동일.

국영 기업의 이윤 최대화(저물가를 통한 노동자 임금의 저수준 고정)를 노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영기업의 공산품 가격은 높게 책정되어 농촌에 판매되었고, 이 또한 결국 정부에게 이득이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확보된 이윤이 국가 자본으로 중공업에 투자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투자의 대부분이 산업투자, 특히 중공업에 집중되면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의 기본 건설투자의 약40%가 대형 중공업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을까? 우선 적어도 표면적으로 공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1952~78년의 공업 생산량은 연평균 11.5%의 성장을 거두었고,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44%로 증가하였다(경상가격). 1933년의 공업 비중이 GDP의 2%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급속한 확장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1953~79년 사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7%로 1950~73년 사이의 서유럽 12개국의 평균 성장률인 4.65%를 크게 능가하였다(그림 13, 14 참조). 이것이 단순한 기저효과가 아닌 것은 25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명백하다.

농업에 있어서도 인민공사의 설치로 농업생산성 향상의 정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1979년의 곡물생산량은 1952년의 두 배였다.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2,000만에서 3,500만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하였지만, 중국의 인

구는 1957년의 6억5천만에서 78년에는 9억6천만으로 증가했고, 중국의 농업과 공업은 이들의 생존을 지탱할 수 있었다(표 16 참조).¹¹

표 16 중국의 인구 성장(人)

1952	1957	1962	1965	1970	1975	1978	1980	1985	1986
57,482	64,653	67,295	72,538	82,992	92,420	96,259	98,705	105,851	107,507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09,300	111,026	112,704	114,333	115,823	117,171	118,517	119,850	121,121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자료.

또한 중국은 소련, 인도등과의 대립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적 고립에 빠졌던 1964년에 원자폭탄, 1967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여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별도로 하면 국방력 강화에도 성공했고, 1970년에는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도 성공하였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개혁 이전의 중국 경제가 일정한 성장을 거두었고, 국방과 과학기술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질’의 희생에 의한 성과였다. 언급한 대약진운동과 이어진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토에 광풍과 같은 혼란을 가져왔다. 급속한 사회주의 식 빅 푸시(big push)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대약진운동¹²은 노동력 및 농산물을 공업과 수출에 집중 투입하고, 인해전술적인 전략으로 공업생산량을 급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시 초기에는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 대약진운동은 곧 잘못된 보고와 지령으로 붕괴하게 되었다. 공업 생산 및 사회 인프라 건설에 노동력이 지나치게 농촌에서 유출되면서 기후 악화도 원인이 되어 농산

11 1960년대부터 중국은 식량의 순수입국이 되므로 이것이 모두 중국 농업의 성장 결과라는 아니다.

12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영국을 15년 이내에 추월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물은 격감했다. 농촌 곳곳에 만들어진 소형 용광로로 일급의 철강(鐵鋼)을 생산하려던 계획은 기술을 무시한 철저한 착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책임자들은 경쟁적으로 생산결과를 과장하여 보고, 결국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농산물조차 수탈되었고, 공업적 용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고철이 방대하게 생산되었다.

마오쩌둥의 복권과 함께 일어난 문화대혁명기에는 강력한 중앙통제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강제공출제에 기반한 저렴한 농산물과 도시 노동자층의 임금 억제를 배경으로 한 국가자본의 증대로 이루어진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인민공사와 국영기업이 주요한 경제 주체였다. 즉, 일차적으로 농민을, 다음으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자본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성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중국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에 비교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희생이 크고 더디며, 불안정한 성장이었다. 공산주의 혁명이 목표로 한 '산업화, 생활수준의 향상, 소득의 평등, 강력한 국방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3) 개혁·개방의 시작과 성과

마오쩌둥의 사망과 사인방의 숙청으로 1978년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과 화궈펑(華國鈞)에게는 앞서 서술한 커다란 문제의 해결이 숙제로 남아 있었다. 중국 경제는 문화대혁명의 10년 기간을 거치면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인민공사와 같은 대규모 집단농장 체제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켰고, 강제적으로 할당된 의무 공출은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중공업 우선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적합한 기술적 개발이 없었던 탓에 많

은 산업에서 낙후된 설비, 비효율적인 생산 방법, 방만한 경영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위해 중공업에 자원이 편중된 결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여 극도의 소비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사회 인프라 구축 상태가 지극히 열악하여, 물자의 축적이 있어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개혁파가 경제 개혁을 주장한 것은 이처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방법은 1979년 6월의 전인대(전국인민대회)에서 ‘조정(調停), 개혁(改革), 정돈(整頓), 제고(提高)’의 8자의 순서로 압축되어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선된 것은 조정이라기보다는 개혁이었다.¹³

우선 가장 개혁이 시급한 것은 농업 부문이었다. 1978년 시점에 전인구의 82.1%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모든 취업자의 70.5%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이 인민공사 제도에 의해 황폐화한 것은 전술하였으나, 이에 인민공사의 기능을 축소시켜(완전 폐지는 1982년), 농민에게는 의무 할당량을 초과하는 농작물의 자유 처분권이 주어졌다. 이것은 생산책임제¹⁴라 불리는 제도였는데, 그 전신(前身)은 1960년대 류사오치[劉少奇]가 주장한 ‘산쯔이바오[三自一包]’였다. 류사오치가 이 산쯔이바오로 마오쩌

13 중국 경제의 개혁과 개방은 대체로 4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어 왔다고 이야기되는데, 제1단계가 1978.12~’84.10에 이르는 시작단계, 2단계가 ’84.10~’88.9의 전면적 개화 단계, 3단계가 ’88.9~’91.12의 구조 조정단계, 4단계가 ’91.12~’02.11의 심화 및 가속화단계이다.

14 ‘산쯔이바오[三自一包]’의 산쯔[三自]란 자류지(自留地), 자유시장(自由市場), 자부영휴(自負盈虧:스스로 손익을 책임짐)을 의미하고, 이바오[一包]는 포산도호(包產到戶:가족단위로 청부함)를 의미한다. 가족단위 청부 형태에서 실제로 주류가 된 것은 포산도호가 아니라 ‘포간도호(包干到戶)’인데, 생산량에 비례하여 농작물을 분배받는 포산도호에 비해 공출 의무량을 달성 후의 잉여분 전부를 농가의 소득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문중의 생산책임제 설명은 포간도호에 기초하고 있다.

들에게 공격받고 실각했으므로, 생산책임제의 실행은 마오쩌둥의 농업정책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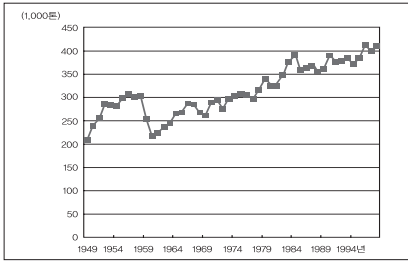


그림 15 중국의 1인당 식량생산량

1. 중국 국가통계국(2000), '신중국50년농업통계자료', 同(2002), '중국통계연감', 2002 등.

우선 1979년에 18년 만에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격이 22.1% 인상되었다. 이어서 6만5천에 달하던 인민공사가 5,000~6,000호(최대 20,000호)로 이루어진 관할 구역의 집단소유와 집단노동을 통해 생산된 농작물을 강제 수매하고 잔여물을 '균등분배'하던 것과 달리, 생산책임제

는 각 농민 가정이 국가와 계약한 할당량만 국가에 매도하고 잉여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농민들은 초과량에 해당되는 작물의 품종을 경제성이 높은 작물로 선택하면서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었다. 각 농호(農戶)의 생산 의욕은 향상되었고, 농업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조치는 비참한 집단아사 발생 가능성의 저하와 이중 가격제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의 완화를 의미하였다. 도시에서도 농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배급을 통해 지급되던 식량 배분의 증가를 요구하는 폭동이 감소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5년에는 농산물의 강제공출제가 폐지되면서 농산물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 농업 부분의 이러한 성과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의미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식량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1인당 식량생산량은 개혁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그림 15), 곡물 수입과 함께 중국의 식량 사정은 크게 안정되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1인당 식량생산량도 200kg에 근접하던 1959년에 비해 개혁이 시작된 1979년에는 300kg를 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기아선상에서 탈출하였다(1997년부터는 400kg). 또한 농촌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앞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할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이래 20년 동안 진통을 겪어온 중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 결과 농수산업이 개혁 초기 경제성장에 기여한 역할은 지대했다. 표 17에서 보이듯 제1산업이 경제성장

표 17 중국의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1979~84	1985~93
제1차 산업	31.8	11.6
공업 국유기업	20.3	11.7
비국유기업	13.8	45.5
집단소유기업	12.8	28.9
개인소유기업	0.2	7.7
기타	0.8	8.9
건설	5.2	5.9
제3차 산업	28.9	25.3
	100	100

1. J.D.Sachs and W. Woo(1996), Understanding China's Economic Performance, NBER Working Paper No. 5935.

에 기여한 비율은 31.8%에 달했던 것이다. 한편 시기적으로 좀 더 후일이 되지만, 농촌에 기반을 둔 향진기업(鄉鎮企業)의 성장도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표 17의 비국유기업 기여도의 대부분은 향진기업에 의한 것인데, 그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향진기업은 원래 인민공사의 사대기업(社隊企業)으로 불리던

부속기관의 후신으로, 농촌의 집단경제조직 및 농민이 투자하여 일으킨 농촌지원의무를 지닌 기업이다. 개혁 이후 도시 이전을 노리던 농촌 노동력을 흡수하여 도시의 지나친 팽창을 막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향진기업은 '이토불리향(離土不離鄉: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이동하나, 농촌을 떠나지 않는다)'의 슬로건 아래 성장하였다. 방대한 농촌인구를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용하여 성장한 향진기업은 2000년에는 GDP의 30.4%, 국가세입의 27.5%, 총수출에서는 42.0%(간접수출 포함)을 차지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산출에서 외자계 기업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 비록 비농업분야의 생산을 담당하였지만, 농촌 인력의 활용에 의해 성장한 향진기업은 중국 경제 성장에 농촌이 크게 기여하도록 한 것으로, 농촌 개혁이 개혁 이후 경제성장에 미친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경제특구 설치와 대외개방 역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원래 개혁의 계획단계에서는 경제특구 및 외자기업의 유치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플랜트 도입을 제외한 무역행위는 종속적 위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NIEs, 특히 한국과 타이완의 성장에서 얻은 교훈이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 이 결과 중국의 개방은 외국 기술과 자본의 유치에 역량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외 무역의 확대를 노리는 양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외국기술과 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고신기술개발구, 경제개발구, 보세구 등 다양한 종류의 개방지역이 1980~90년대에 걸쳐 설치되었다. 이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경제특구는 해외 교류가 유리한 지역을 선정, 여러 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하여 교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노리는 지역으로, 1980년 이래로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 하이난다오[海南島]의 5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방지구의 경제적 중요성은 외자 도입에 두드러지는데, 경제특구와 연안의 개방도시만으로도 1989년 중국 전체의 40.6%에 다하는 외자도입 계약액을, 53.5%의 직접투자 계약액을 기록하면서 중국경제의 발전을 유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과 기술도입이 도시의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농촌과 경제특구에 의한 개혁의 성과와 함께, 반드시 거론해야 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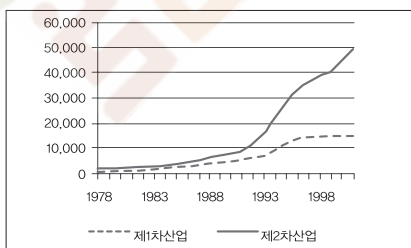


그림 16 개혁 이후 1, 2차 산업의 발전(1억 위안)

1.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작성.

공업의 성장이다. 1978~84년의 기간 동안 농업 부문은 연평균 8.8%의 성장을 이루며 개혁 초기의 성장을 주도했지만, 1985년 이후 연평균 4% 내외로 안정화되면서 성장률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공업의 거의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

하면서 1985년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해나기 시작했다(그림 16).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공업 성장이 농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투입만이 아니라 요소생산성의 향상에도 힘입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약진운동과 같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동력의 집중 투입에 의해 공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려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상이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배경에는 개방으로 인한 기술도입이 있었던 것이다.

4) 시장경제 발전과 고도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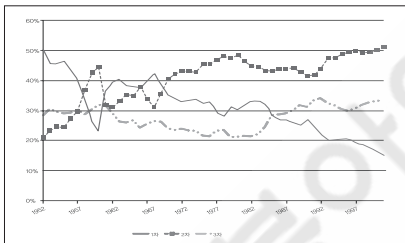


그림 17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대GDP 비율)

1.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작성.

1980년대 전반에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덩샤오핑이 계획한 중국 경제의 3단계 전략, 즉 ‘원바오[溫飽]’, ‘샤오강[小康]’, ‘따둥[大同]¹⁵’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

은 아직 갈 길이 멀었던 것이다. 1984년 광둥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을 방문한 덩샤오핑은 대외 개방 및 개혁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을 확실히 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1984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경제체제 개

¹⁵ 덩샤오핑은 1980년~1990년에 걸쳐 국민소득을 4배 이상 상승시켜 ‘원바오[溫飽: 기본 의식주 해결 단계]’, 2021년까지 다시 2배를 향상시킨 ‘샤오강[小康: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 이상의 복지 생활]’을, 마지막으로 2049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하는 ‘따둥[大同: 태평성대]’ 단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산바오조우[三歩走]’를 87년 밝혔다. 중국은 현재 원바오 단계를 80년대 말에 달성했으며, 2002년에는 장쩌민[江澤民] 총리가 샤오강 사회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혁에 관한 결정'을 통해 사회주의 근본 임무는 사회 생산력 발전에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성 있는 상품경제'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경제 제도의 선별적 도입과 한정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새로운 도약 단계에서 중국은 농촌에서 거두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부문의 개혁을 본격화하였다. 이것은 도시부의 기본 생산 단위인 기업의 개혁을 의미했으며, 그 주요한 방법은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기초로 한 '경영 청부 책임제', 주식회사 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의 임대 경영, 노동 계약제의 시행, 그리고 개체 및 사영 기업의 허용과 장려였다. 특히 개체 및 사영기업의 허용은 이후 급증하면서 1980년대말에는 50~80만의 기업이 1천만~1천5백만의 종업원을 고용, 국민경제의 약 3~4%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17의 1985~93년 동안 비국유기업의 폭발적 증가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국유기업의 증가가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님은 1978년 공업 총생산액의 77.6%를 차지하던 국유기업의 비중이 1985년에는 64.9%, 1991년에는 52.9%, 1999년에는 28.2%로 하락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체 및 사영기업과 같은 비국유기업은 중국 공업의 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업 성장의 결과로 중국의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림 17에서 보이듯 제1차 산업에 대한 제2차 산업의 1970년대 초반 이래의 우세가 80년대 중반 이래 확대되었다. 특히 2차 산업의 성장과는 대비되게 1차 산업의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이 눈이 띄는데, 이것이 중국이 더 이상 농업 중심의 국가가 아님을 의미한다.¹⁶

이와 같은 공업의 급성장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다. 앞서

¹⁶ 2001년의 1차산업 점유율은 15.2%, 2차는 51.1%로, 양자의 차이는 35.9%에 달했다.

언급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쌍궤제(雙軌制)라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새로운 시장 경제적 분야의 확장을 꾀하면서도 기존의 계획경제 부문을 개혁해가면 온존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사영기업과 국영기업이 같은 품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제품의 이중 가격제가 시행되었다. 당연히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궤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경제의 침투 속도를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대세는 비국유기업 제품의 증가였지만,¹⁷ 장기간에 걸쳐 중국 정부는 물가의 직간접적 조절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점진적인 시장경제 도입으로, 급속한 민영화로 경제적 난관을 맞보았던 동유럽권 구공산국들과 달리 중국 경제는 순조로이 시장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일괄적으로 내어 놓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톈안먼[天安門] 사태에서 보았듯이 중국 정부는 개혁 경제의 과정에서 나타난 분배의 문제, 관료 집단의 부패와 같은 경제적 모순에서 기인한 민중의 항의를 톈안먼 사태와 같이 강력히 진압한 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 경제가 무조건적인 민주화나 자본주의화와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중국이 아직도 국영기업을 유지하고 있고, 공산당 독재의 정치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가 단순히 다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는 성공적인 개혁 개방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도농(都農)간의 격차의 심화, 높은 실업율, 에너지 문제,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 등이 그것이다. 중국 공산

¹⁷ 예를 들어 소매상품의 경우 1978년 생산량의 97%가 정부공정가격으로 거래되었으나, 1995년에는 8.8%로 감소했다.

당은 2001년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로의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하면서도, 2005년 10월의 공산당 16기 5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폐기하고 분배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한 균부론(均富論)을 선택하였다. 시장경제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도 대처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개혁과 개방 경제를 통해 현재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온 중국이 이 새로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베트남

1) 1975년 이전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

1954년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이 결정적 패배를 당한 뒤 열린 제네바 회의에서 베트남은 통일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남북으로 분단되도록 결정되었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1975년이였다. 이 사이 남쪽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이공 정부가, 북쪽에서는 1975년 베트남을 통일하는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 따라서 1955년부터 통일이 완수된 1976년까지 20년 동안 베트남 북부에서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실시되었다.

우선 북베트남 정부는 소련 및 많은 사회주의 제국(諸國)의 경로를 따라 연속적인 5개년 경제계획과 통제를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론에 따라 집단화와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농업과 공업에 모두 실행되었는데, 발전 전략은 농촌의 집단화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식량 가격의 저수준 안정, 농업 이익과 노동력의 공업에의 이전 투입, 중화학공업 우선의 공업 발

전을 통한 사회주의식 경제의 우월성 과시라는 전형적인 신흥 사회주의 국가의 루트였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와 유사한 경로를 걸었던 중국이 건국 초기에 조우한 문제들을 만났으나, 그 피해는 더욱 컸다. 전쟁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이 원조에 의해 해결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1965~75년의 전쟁 기간 동안 매년 2억 7천만불에서 10억불 규모의 증여 원조가 사회주의 제국으로부터 왔다고 한다. 또한 코메콘(CMEA)에 의하면 매년 약 7억불의 원조가 소련으로부터 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조총액은 1960~64년에 북베트남 정부 세입의 1/4 정도였으나, 전시기에는 45%로 올랐고, 1970년대 초기는 실로 60%에 달하게 되었다. 이 중 3/4 이상이 자본재였다고 추정되는데, 이것은 베트남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수공업을 유지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 의존적인 생산 시스템과 중공업우선의 경제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은 이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2.5%에 달했던 인구증가에 적합한 소비재와 식량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농업에서의 합작사 운영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1959~75년의 17년간 1인당 식량생산량은 370kg에서 212kg로 감소하면서 총식량 생산량은 답보상태에 놓였고(표 18 참조), 공업부문에서도 인프라 건설, 금속공업, 화학공업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경공업은 물론 농기계 생산을 위한 기계공업에조차 투자가 거의 배분되지 않은 불균형 정책 끝에 심각한 물자 부족과 생산 불균형을 낳았다.

이러한 사태는 1986년 새로이 당서기장에 취임한 쩌엥찐(Trùng Chinh)에 의해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국민경제의 능력을 크게 벗어난 규모로 중공업에 편중된 것은, 당지도부의 중대한 과오였다'라고 비판되었다.

표 18 북베트남의 농업생산량(식량총생산 : 100만t, 1인당 생산량 : kg)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식량총생산	5.8	4.7	5.2	5.2	5.0	5.6	5.6	5.1
1인당식량생산	370	293	314	301	283	302	294	262
	1967	1968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5.4	4.6	4.7	6.3	4.9	5.7	5.2	6.3	5.5
269	224	222	242	220	250	221	261	212

이와 같이 집중적인 중공업 육성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쩌엥찐의 비판에 나온 ‘국민경제의 능력’ 한계에 의해 1975년에도 농업이 국민소득의 50%이상이고, 공업은 28%에 불과한 명백한 농업 중심국가였다.

2) 사회주의 공업화와 시장경제로 이행(1975~85년)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통일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1976년에 제4회 전당대회를 개최, 첫 장기 국가 재건 계획인 제2차 5개년 계획(1976~80)을 책정했다. 이 계획은 소련을 모범 삼아 베트남을 20년 이내에 근대적인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로 변화시킨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실제로 총생산 증가율은 목표치인 연평균 14~15%크게 못 미치는 1.4%에 그쳤다. 여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감퇴, 서방 원조의 중지, 1978년 12월의 캄보디아 침공과 79년 2월의 중월전쟁으로 인한 전신체제에의 회귀와 중국 원조의 중단, 농업의 집단화로 인한 남부의 쌀 생산 및 유통 기능 저하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베트남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이루어야 했다. 이에 당은 1979년에 ‘신(新)경제정책(NEP)’을 도입했다. NEP는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국영기업이나 합작회사에 계획 외의 생산이나 유통을 용인함으로써 생산의욕을 자극하고, 중공업중시의 산업정책을

농업·경공업 중시로 바꾸는 한편, 부분적이기는 하나 시장원리의 도입이 도모되었다.

NEP에 의한 생산의욕 자극으로 제3차 5개년계획(1981~85) 중의 국민소득 평균 신장률은 목표치인 4.5~5%를 상회하는 6.5%에 달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그것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다른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했듯이 농가로부터 저가로 쌀을 수매한 뒤 국영기업의 취업자나 공무원에게 배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 집단화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배급에 충당할 쌀이 부족해지고, 정부는 농가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계획 외의 생산과 유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 증가한 생산량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파악 및 통제할 방법이 없었고, 농가는 쌀을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였다. 결과적으로 배급 부족이 미해결인 상태에서 국영기업의 취업자나 공무원은 부족분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했지만, 이 경우의 쌀 값은 그들의 급여 수준에서 볼 때 너무나 고가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트남 정부가 급여 인상을 실시하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자 해결 방법은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의 조정과 생산 증가 외에는 없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해결책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주변 국들, 특히 개방 후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6월, 공산당 제8회 당 중앙위원회 총회는 가격, 임금, 통화에 대해 획기적인 결정(8중 총결의)을 내렸다. 배급제 폐지와 생활비로 적합한 수준의 급여 지급(임금의 인하), 이중 가격 제도의 재고, 화폐의 평가절하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되돌릴 수 없는 기정노선으로 선택한 사회주의식 공업화의 포기를 의미했다. 쇄신이라는 의미의 ‘도이모이’라 불린 베트남식 경제 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3) 시장 경제화의 전개 과정(1986~2000년)

언급한 대로 ‘8중 총결의’는 1986년 말의 제6회 당대회에서 채택된 ‘도이 모이’의 출발점이었다. ‘도이모이’는 ‘개발경제학의 제(諸) 이론에서 추출된 다양한 장점을 적절히 조합하고, 기존의 경제학 이론도 취사선택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을 포함한 생산요소가 효율적 활용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유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장개발 모델이다. 이 개혁의 근간은 크게 시장 경제의 도입과 대외 개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 계획으로 결정되던 자원 배분과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 적대 관계였던 자본주의 제국(諸國)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무역 개시와 해외 직접 투자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도이모이의 성과는 ‘제4차 5개년계획’(1986~90년)중의 국민소득 신장에 의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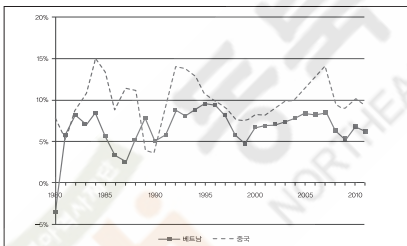


그림 18 베트남과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연평균 3.9%를 대폭 상회하는 신장이 나타난 것이다. 그림 18에서 보이듯 이 기간 베트남의 실질경제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작용도 컸다. 우선 ‘8중 총결의’의 실행으로 단기간에 물

가가 급상승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쳤다. 임금의 반을 차지하고 있던 실물 배급이 현금화되고, 화폐 평가 절하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데에 가뭄에 의한 농업 생산의 침체가 더해져 1987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0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계획경제로의 회귀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농업국인 베트남에서 시도한 급진적인 사회주의 공업

화와 이를 위한 통제 경제의 비현실성을 공산당 자신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78년 코메콘 가입 이래 받아온 거액의 소련 원조가 1987년을 정점으로 감소, 1990년에는 1987년의 1/3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소련 경제의 파탄에 따른 것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축소였다. 따라서 소련 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구체제로의 회귀는 확실한 곤란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여기에 주변 제국(諸國)의 경제발전이 주는 불안감이 작용하였다. 1980년대 후반 ASEAN(동남아시아 제국연합) 제국은 외자를 지렛대로 삼아 일제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을 표방하던 베트남은 반공연맹으로 탄생한 ASEAN 여러 국가와는 적대관계에 있었는데, 너무나도 선명한 경제발전의 대비에 공산당 지도부는 미래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윽고 1990년대에 들어 도이모이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9년에 식량자급 가능성에 도달한 뒤 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2010년 현재 베트남은 세계 3위의 쌀 생산국(2위의 수출국)이다. 아직 1990년대 초에는 현재와 같은 규모로 증가한 것은 아니나, 식량생산의 증가는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인플레이션이 종식되고 경제가 성장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1991년 코메콘의 붕괴는 베트남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나 그 영향은 동유럽 제국보다는 경미했다. 베트남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주변 제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 무역의 아시아 시프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1988년의 농가 청부제(농가에 장기 경작권을 주고 자유롭게 생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에 의해 1989년에는 쌀 수출을 실현한 것 등 농업 생산이 비약적인 증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전반의 경제 성장률은 공산당의 예상을 웃도는 기세였다. 제7회 당대회의 목표는 1991~95년에 GDP의 연평균 5.5~6.5% 증가였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웃도는 8.2%를 달성했다. 도이모이가 궤도에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나 IMF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자금 공여가 개시되고,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했으며, 원유의 수출 증가로 의해 외화 획득량이 증가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로 개혁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면서, 1996년의 제8회 당대회의 정치 보도 초안에 국영 섹터의 비율을 경제 전체의 60%로 인상하는 목표를 넣는 등 전회와는 크게 다른 방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시장 경제화의 후퇴를 걱정하는 국제 금융 기관의 반발을 받아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지만,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의 구축을 계획하였다.

이 문제는 1998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에 의해 표면화되었다. 1995년의 ASEAN 가맹과 동시에 무역 자유화를 받아들여, 경제를 주도해야 할 국영기업의 업적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여기에 해외 직접 투자의 주역이었던 NIES(신홍공업경제지역)의 투자 감소가 겹쳐 경제는 속도를 잃게 되었다. 제8회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계획(1996~2000년)은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9~10%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6.9%에 머물렀다. 베트남의 정책 변화에 관망세로 돌아선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하고, 국영기업의 경영능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베트남정부는 다시 시장 경제화의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1997년말의 제4회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민영 기업을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업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까지 '용인'에 지나지 않았던 민영기업을 '장려'의 대상으로 하여 투자의 견인 역할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2000년의 신기업법 제정으로 이어졌는데, 이후 민영기업의 설립 러쉬가 계속되어 민간 투자는 투자와 고용의 양면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민영 기업의 존재감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져서 2001~2005년의 5개년 계획의 GDP 연평균 목표 성장률 7.5%가 달성된 것은 민간 투자에 의한 부

분이 컸다. 2006년 제10회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계획(2006~2010)이 GDP 성장률을 연평균 7.5~8.0%라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민간과 해외 투자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였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오랜 기간 군림했던 중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을 경계로 베트남으로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5~2007년의 GDP 성장률은 8%를 넘었고, 2006년에는 WTO가맹도 실현되면서 이제 베트남은 BRICs의 뒤를 잇는 시장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주가 하락, 무역 적자의 확대 등으로 위기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 여파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모두가 침체 상태로 돌아섰다. 내부적으로는 행정 집단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효율성 저하, 경제 시스템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 장기적인 인력 공급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 이상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 설계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3. 북한

1) 사회주의 경제 기반 구축

1945년의 해방 후 북한은 동유럽이나 중국과 같이 인민 민주주의라는 과도기간을 거쳐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경제란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포함한 혼합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중심의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북한 내부의 부르주아층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당 정권 수립과 인민민주주의식 경제 수립은 큰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도인민위원회(道人民委員會)는 1945년에 일제, 친일파, 월남자의 토지를 수용하여 농민에게 경작권을 분재하여 사실상 토지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련 군정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사회주의식 사회체제의 수립은 더욱 촉진되었다. 1946~49년에 소련은 5억불 이상의 무상원조 및 차관을 제공하고, 상당수의 기술고문을 파견하여 북한 정권의 성립을 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 6월에 노동법, 8월에 중요산업 국유화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같은 해 2월에 수립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련의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1943년말에 총경지 면적의 58.2%가 소작지였고, 농가 구성은 지주 4%, 자작농 25%, 자소작농 31%, 소작농 43%였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 아래 약 100만 정보(전경작지의 약50%)가 몰수되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토지개혁이 불과 3주만에 수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북한 정권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을 엿보게 한다.

한편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해 일본인, 친일파, 매판자본가가 소유하던 1,034개의 중요 산업시설이 일시에 국유화되었다. 이 결과 1946년말에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수의 905, 공업총생산액의 72%에 달하였다. 존속된 개인 수공업자와 민족자본가 중 전자는 1947년부터 초기적 생산협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1947년 28개의 조합은 1949년 말까지 567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창설될 무렵에는 농민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소상품 경제요소, 중요산업 국유화에 따른 국가 경제요소, 사영 상공업 부문의 자본주의 경제요소, 소비조합 등의 협동조

합 경제요소 등이 혼합된 경제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이전까지 유지되었는데, 우선은 급격한 사회주의식 경제 체제-농업의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개조-수립보다 경제 재건에 목적을 두었고, 남북한 통일이 사회주의식 경제 수립보다 우선되는 목표로 설정되어 그 준비에 주안점이 두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49년의 알곡¹⁸ 생산량은 265만톤으로 1944년보다 9.8%, 46년보다는 39.8%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공업생산량은 1946년의 3.4배로 증가, 해방 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소련의 강력한 기술 및 자본원조, 양호한 상태로 잔존해있던 공업설비, 전력 및 비료 등의 풍부함에 의해 산업 회복이 비교적 빨랐던 것이다.

이윽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8,700여개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37만 정보(약 19%)의 전답이 손상되었다. 인적 피해는 329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의 결과, 우선은 북한을 장래의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지로 하기 위해 사회주의식 경제를 강화, 즉 아직 농업에 남아있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타파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전략의 선택을 놓고 주류파와 비주류파간의 정권 투쟁이 있었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류파는 중공업 우선 전략, 사회주의적 경제 개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연안파, 소련파와 같은 해외파 중심의 비주류파는 경공업 중시, 혼합경제, 통일전선 독재를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주류파가 승리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은 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절대권위와 주체사상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이 ‘자립

18 식량, 사료,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농작물량으로,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의 낱알이다.

경제'의 추구로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를 특징짓는 경제노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 모순

전술한 배경에 따라 1953~59년 사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북한에서 확립되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력이 격감한 위에 총농가의 0.6%에 불과한 부농이 40%의 빈농을 고용하거나 고리대로 지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무색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토지몰수, 소유자 사망 등으로 국유화된 토지가 1953년에는 전체의 1/4에 달할 정도로 넓어진 상태였다. 한편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공업의 회복은 비교적 빨랐는데, 이로 인해 농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자 사회주의적 개조, 즉 농업 협동화가 진행되었다.

궁극적으로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의 소유로 이전하고 노동일수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형태(제3형태라 불리었다)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은, 1954년 11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농업협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1953년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전체 면적의 3할 가량을 차지하던 협동조합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개인 양곡상의 활동 금지, 빈농의 협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노동력 공용의 곤란 등으로 부농과 중농의 경영기반을 와해시키면서 협동조합의 확대는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56년 12월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77.9%, 57년에는 93.7%, 58년 8월에는 100%가 협동조합 소유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형성은 조합수 3,843 평균 규모 300호에 500정보의 규모, 제3형태 100%로 1958년말까지 리(里)단위로 완성되었고, 농산물의 일부를 제외한 일체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협동조합의 완성은 북한의 경제계획인 중공업 우선 전략을 위한 농촌의 식량증산과 노동력 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9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65년부터 1975년경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미 1953년부터 증가, 특히 1958~62년경에 200만톤대 초반에서 300만톤대 후반으로 급증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앞서 중국에서 언급한 대약진운동의 경우나, 김일성이 1959년에 식량문제의 해결을 공언했음에도 1961년에 소련에게서 양곡 29만톤을 수입한 사실을 볼 때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일정한 생산증가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노동력면에서도 1953년말 564만명이던 농촌인구가 1960년말에는 479만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도시의 공업에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공업 분야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195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전쟁으로 개인 기업은 거의 몰락하여 소규모 정미소, 대장간, 제지공장 등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으나,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1958년까지는 생산협동조합이라는 명칭아래 재편되었다.

경제구조의 사회주의화 계획이 일단락되자,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수행하였다. 표 19는 북한의 경제계획을 정리한 것인데, 우선 1954~56년에는 중공업 우선전략을 기초로 공업수준의 복귀를 계획하였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수단 4배, 소비재 생산 2배, 국민소득의 2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미친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4~56년의 북한 총수입액의 80%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유무상 원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계획인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원조액이 격감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1953~56년에 세입총액의 약 20%내외를 차지하던 원조가 1958년에는 4.2%, 1960년에는 2%로 격감했던 것이다. 이 때문

에 '생산수단의 국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고,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부에서 해결'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세워졌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의 원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및 기업간의 연계를 무시하는 중첩적인 비효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리마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청산리방법 등 노동자와 농민의 정신적 강화를 통한 인력(人力)강화로 설비와 자본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노력경쟁운동이 강화되었고, 경제의 각 분야에 생산력을 무시한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성적인 기술적 견해는 비판되었기 때문에 기술 및 경영역량의 발전도 저해되었다.

표 19 북한의 경제계획 실적 및 목표(북한발표)

경제 계획	기본 과업	실적 (계획목표)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4~56)	1. 생산수준과 효율성의 전진 수준 도달 2. 중공업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의 급속 발전 도모	국민소득 : 연평균 17%성장 공업총생산 : 2.85배 생산수단 : 4.1배 소비재 : 2.1배 양곡수확고 : 1.39배
제1차 5개년 계획 (1957~61) *1960년에 완수	1.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 구축 2. 식민주 문제의 근본적 해결	국민소득 : 2.2배 공업총생산 : 3.5배(2.6배) 생산수단 : 3.7배 소비재 : 3.3배 양곡수확고 : 1.4배
제1차 7개년 계획 (1961~67) *1970년까지 연장	1. 전면적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으로 주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2. 중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병행발전	국민소득 : 미발표(2.7배) 공업총생산 : 3.3배(3.2배) 생산수단 : 3.7배 소비재 : 2.8배(3.1배) 양곡수확고 : 미발표(600~700만톤)
6개년 계획 (1971~76) *1977년 완충기	1.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굳히고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국민소득 : 1.7배(1.8배) 공업총생산 : 2.5배(2.2배) 생산수단 : 2.6배 소비재 : 2.4배 양곡수확고 : 800만톤(700~750만톤)
제2차 7개년 계획 (1978~84) *1986년까지 완충기	1.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대 강화 2. 주민생활 향상	국민소득 : 1.8배(1.9배) 공업총생산 : 2.2배(2.2배) 생산수단 : 2.2배(2.2배) 소비재 : 2.1배(2.1배) 양곡수확고 : 1,000만톤(1,000만톤)
제3차 7년계획 (1987~93) *이후 완충기	1.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2. 기술혁신의 촉진	국민소득 : 미발표 공업총생산 : 1.5배(1.9배) 생산수단 : (1.9배) 소비재 : (1.8)배 양곡수확고 : 미발표(1.4배)

1. '조선중앙년감' 각년도 자료(인용은 이현창(2006),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p.541)

또한 김책제철소에서는 19만 톤이 생산능력인 설비로 27만 톤의 생산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강선제강소에서는 6만 톤의 생산능력으로 12만 톤 생산의 보고가 올라오는 등 신뢰성에 의문을 주는 통계와 실적이 계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분히 중국의 대약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의 현지 방문과 지령으로 내려진 계획의 수정과 그 절대성으로 경제 계획 자체의 무계획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표 21의 경제계획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경공업 분야는 지방공장을 이용하여 대응한다는 전략이 세워졌으나, 시설의 낙후로 인해 커다란 성과를 보기 어려웠고, 농업도 다양한 조직적 노력에 불구하고 1960년대 초반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표 20 남북한 전체 산업 대비 농업인구의 비율(%)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남한	44.7	37.5	28.4	20.9	15.5	10.8	8.6	7.1
북한	40.5	40.2	38.2	37.5	37.8	36.5	36.8	36.9

표 21 북한의 경제활동별 GDP(단위 : 남한 십억원)와 점유율

	1990		1995		2000		2005	
국내총생산	16,354		17,132		18,928		24,735	
농림어업	4,485	27.4%	4,732	27.6%	5,750	30.4%	6,187	25.0%
광공업	6,675	40.8%	5,233	30.5%	4,814	25.4%	7,156	28.9%
광업	1,477	9.0%	1,377	8.0%	1,463	7.7%	2,456	9.9%
제조업	5,198	31.8%	3,856	22.5%	3,351	17.7%	4,700	19.0%
경공업	1,006	6.2%	1,167	6.8%	1,232	6.5%	1,645	6.7%
중화학공업	4,192	25.6%	2,689	15.7%	2,119	11.2%	3,055	12.4%
전기·가스·수도업	831	5.1%	820	4.8%	902	4.8%	1,057	4.3%
건설업	1,413	8.6%	1,150	6.7%	1,313	6.9%	2,369	9.6%
서비스업	2,950	18.0%	5,197	30.3%	6,150	32.5%	7,966	32.2%
서비스업 : 정부	1,803	11.0%	3,554	20.7%	4,287	22.6%	5,599	22.6%
서비스업 : 기타	1,147	7.0%	1,643	9.6%	1,863	9.8%	2,367	9.6%
순생산물세								

곳곳에서 애로가 발생했음에도,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는 1957~70년간 공업총생산이 연평균 19.1% 상승하여 56년의 11.6배가 되었으며, 국민소득에서 공업의 비중이 65%를 차지,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변신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표 21처럼 1990년대에도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광공업에 거의 대등하고, 표 20에서 보듯 농업인구가 당시(1970년) 40%를 넘는 상황에서 공업 비중이 국민소득의 65%를 차지했다는 발표 역시 신뢰성의 검토가 필요하며(양표는 통계청 자료임), 북한의 공업화는 현재까지 불완전한 상태라 보인다.

3) 경제적 위기와 현황

이처럼 공업화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자본 부족의 상태에서 원료가 끊기면서 생긴 자금조달의 애로, 군사력 강화에 따른 과중한 국방비가 이유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1970~76년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6개년 계획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3대 기술혁명—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방침으로 종합적 기계화·화학화를 공업에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6개년 계획도 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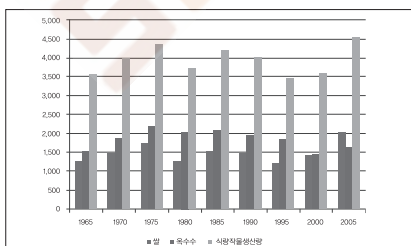


그림 19 북한의 식량작물 및 주요 곡물 생산량(천)

혁신운동에 에너지원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 부진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농업에서는 계획대로의 농기계 및 비료,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문제가 여전했고, 1980년대 초반의 농경지 확대운동

(4대 자연개조사업)은 경작지를 다소 확장시켰지만, 산림황폐와 토사유출로 곡물증산에 역효과를 가져왔다(그림 19참조). 이 때문에 1979년 470만톤에 도달했던 곡물생산이 하락, 1995년에는 345만 톤까지 감소하였고, 식량자급률은 90년대에 80% 미만, 1994~98년에는 70%미만으로 되었다. 1987년에는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이 추진되었고, 1990년대에는 인간 신진대사에 필요한 최소량 확보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다른 모든 점을 예외로 두어도, 이것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에 비견할 수 있는 정책적 실패라 하겠다.

199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선 1970년대 전반에 서방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차관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1973년 석유파동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불유예 선언(1974년)을 하였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 다시 무역이 부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북한의 기업들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이 우려되는 무역이나, 신용 추락으로 도입이 어려워진 차관보다는 직접 투자를 통한 외화조달을 노렸다. 이것은 '자력갱생' 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이 직접투자 유치로 결정이 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법령 미비, 각종 제한 등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미 구조적 경제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는,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자 더욱 위기에 빠졌다. 소련과 중국은 원유 등 주요 원료를 국제가격의 50%에 그치는 우호 가격으로 제공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가격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91년에 소련은 국제가격 및 달러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필수적인 원료, 연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총생산은 1990~

98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고자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여 외자 유치에 나섰지만, 역시 중국 경제특구보다 조건이 불리하여 투자계약 75억불 중 14억불이 유치되는 데에 그쳤다. 1999년부터의 개성공단 운영은 이러한 상황 아래 결정된 것이다. 이미 경제적 실패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1993년에 종료된 제3차 7개년계획에서 북한 당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처음으로 자인하였다. 이 기간에 공업생산은 연평균 5.6% 상승하였다고 발표되었지만, “변천된 환경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깊이 분석한 데 기초하여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로 나갈 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호뿐인 계획으로 1995~98년의 잇단 자연재해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 아래 파멸적인 식량 위기를 낳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도 격감, 1995년 이후 예산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정상적인 계획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식량 및 물자배급이 중단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아직 불명확하나, 원자폭탄과 미사일의 개발, 인민군의 유지를 위해 여전히 대량의 국부가 이용되고 있으며, 정권의 유지와 세습을 위한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 이래 중공업을 발전시켜 ‘강성대국’을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가 언제 달성되고, 식량 위기가 종식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 경제교육연구회(2009), 『동아시아의 경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이현창(2006), 『한국경제통사』, 제3판, 서울 : 법문사.
- 박태균(2007), 『원형과 변용-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안병직(2001), 『한국경제성장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미와 료이치 저, 권혁기 역(2004), 『일본경제사』, 서울 : 보고서.
- 배리 노턴 저, 이정구·전용복 역(2010), 『중국경제』, 서울 : 서울경제경영.
- 임반석(2005),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서울 : 해남.
- 기무라 미쓰히코 저, 김현숙 역(2001), 『북한의 경제-기원·형성·붕괴』, 서울 : 해안.
- 북한연구학회(2006), 『북한의 경제』, 서울 : 경인문화사.
- Angus Maddison(2006), The World Economy, Paris, OECD.
- 渡辺利夫(2009), 『アジア経済読本』第4版, 東京 : 東洋経済新報社.
- 園田哲男(2003), 『戦後台湾経済の立証的研究』, 東京 : 八千代出版.
- 渡辺利夫·朝元照雄編(2007), 『台湾経済入門』, 東京 : 勁草書房.
- グエン・スアン・オアイン著/白石昌也·那須川敏之·本多美樹訳(2003), 『ベトナム経済-21世紀
の新展開』, 東京 : 明石書店.
- 矢野恒太郎記念会(2000), 『日本の100年』, 東京 : 国勢社.
- www.oecd.org
- www.imf.org
- www.kosis.kr
- www.bok.or.kr
- www.index.go.kr
- www.stats.gov.cn/english
- www.chinability.com
- www.stat.go.jp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 발전

정미애 | 국민대학교

I. 서구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

II. 사회주의 체제 성립 지속 변화

동아시아는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구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대에 여전히 냉전적 구도가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북한이 휴전상태에서 대립하고 있는 양자 대결구조와 한국-일본-대만의 민주주의 체제, 중국-북한-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다자적 대결구조가 공존하는 지역이 동아시아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강한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나 대만해협의 무력분쟁 가능성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수준이 다양하고 문화적 편차가 매우 크다. 산업화가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일어났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발전수준이 달라서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 및 사회변동의 현상도 상이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2010년 마침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베트남 또한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체제수렴적 구도로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사회 변화를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정치체제적 차이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한 한국, 일본, 타이완,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된 북한, 중국, 베트남으로 나누어 각국의 특징을 설명한다. 6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기술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장에서는 ①194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정치사, ②오늘날의 정치체제, ③오늘날의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을 각국의 공통기준으로 하

여 각 국가가 지니는 내부적 역동성과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I. 서구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

1. 한국

1)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1) 서구민주주의의 도입과 혼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는 3년간 미군정의 점령통치 기간을 거쳤다. 1948년 해방정국의 사상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제헌국회가 소집되어, 7월 17일 대통령제 및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의 골자로 한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초대 국회의장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자유당을 창당하고, 1952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조항 철폐를 골자로 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에 3선되었고, 1960년에 4선되었으나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과 3·15부정선거에 대항하여 1960년 4·19혁명이 발생하면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4·19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과 동시에 출범한 허정 과도정부는 종래의 대통령중심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의원 내각제와 참의원 민의원의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개정했다. 8월 12일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됨으로써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집권 민주당의 분열과 4·19혁명 이후 분출된 변혁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단명했다.

(2) 군부독재의 탄생과 지속

4·19혁명 이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육사 8기 장교들을 중심으로 5·16군사정변이 발생했다. 쿠데타의 성공 이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민간정부를 세운 다음 자신은 군인의 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박정희는 전역하여 1963년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민선대통령이 되어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1963년에 취임하여 10년 동안이나 대통령직에 있었던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개헌을 단행했다. 그는 이른바 ‘유신(維新)’을 단행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어 11월 21일 ‘유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되고,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 27일 정식 취임하면서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결국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총기 시해되면서 종언을 고하였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부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 1975년 1월 22일 유신찬반 국민투표 실시, 1975년 4월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 제명, 1979년 10월 부산 마산 지역에 계엄령 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학생운동이 투쟁의 중심이 되는 한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기층 민중운동이 태동했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사회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을 통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제4공화국 시기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19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10 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 4월 사북(舍北)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대통령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 88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3)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항하여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개헌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6월 민주화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로 발전했다. 결국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통령후보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이어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특징은 이른바 ‘넉타이부대’로 불린 신중간층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1987년 이후 자율적인 정치적 사회적 공간의 확대 속에서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고, 신중간층은 시민운동의 주요한 사회적 기반이 된다.

6·25전쟁의 발발과 이로 인한 남북분단의 고착화로 한국사회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 군림하는 가운데 군부독재와 이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대립구도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독재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되어왔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7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이후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 복합적 다원적으로 분화하면서 발전해갔다. 시민운동은 특히 노동운동, 학생운동의 전투성과 급진성을 반대하면서 온건한 ‘중간층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1989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출범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분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 선거 결과 결국 군부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한계를 드러 내기는 했지만,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정부에 의한 하향식(top-down) 통치에서 시민에 의한 상향식(bottom-up) 민주주의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노태우에 이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김대중과 더불어 한국의 양대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이었다. 1987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한 김영삼은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탄생시키고

1992년 12월 민자당 대표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30여년간의 군부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더불어 문민정부로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문민정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2·12 사건에 관련된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켰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권력의 상징이던 안전가옥(안가)을 철거하여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고, 1996년 10월에는 OECD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일제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대일 종속의 상징이던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을 철거하고,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이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하여 자주적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지나친 산업 확대와 수출산업 강화, 임금인상, 물가상승, 외화낭비 등 경제적 팽창과 더불어 부실이 커져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바닥낸 정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외환위기 속에서 다음 정권을 이어 받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수십 년을 야당 지도자로 살아온 김대중이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을 단일후보로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였다. 이어 양당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했다.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DJ노믹스’를 표방하고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남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을 내세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그 해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동해선 연결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일명 ‘노사모’)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과 야합으로 얼룩졌던 한국 선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는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 이름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참여정부’는 정부의 인적 구성에서 과거의 정권이 주류 위주로 발탁하던 것과 달리 젊고 개혁적인 비주류, 즉 새천년민주당의 신주류와 이른바 386세대¹⁾,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 그룹, 운동권 출신 등을 청와대 비서실과 각 부의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보수 반공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1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30대에 해당하여 386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버리고 개방 합리 자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권변호사 출신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의 대통령으로서의 5년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이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4년 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 12일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저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기습상정하였고,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찬성 193, 반대 2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야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잇따르고, 유권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발로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투표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은 두 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타격을 입었고, 유력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대립하여 임기 내내 언론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등 보수 진영으로부터 친북좌파라는 비난을 받으며 계속 마찰을 빚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으로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 등은 ‘참여정부’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생을 일관하여 고

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분단 후 처음으로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10 4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힘을 기울였다.

2008년 2월 24일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였으나, 퇴임할 때 대통령 재임시의 기록물 복사본을 가지고 귀향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기록물 무단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의하여 측근과 친형, 부인, 아들, 딸 등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노무현의 최대 장점인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5월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의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서거하였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4일까지이다.

2) 정치체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바뀌어왔는데, 현행 헌법에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권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대통령의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제로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령에 의한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표 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역 대	이 름	재임기간	역 대	이 름	재임기간
제1~3대	이승만	1948.7~1960.4	제13대	노태우	1988.2~1993.2
제4대	윤보선	1960.8~1962.3	제14대	김영삼	1993.2~1998.2
제5~9대	박정희	1963.12~1979.10	제15대	김대중	1998.2~2003.2
제10대	최규하	1979.12~1980.8	제16대	노무현	2003.2~2008.2
제11~12대	전두환	1980.9~1988.2	제17대	이명박	2008.2~

한국의 국회는 제2공화국에서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단원제를 채택해왔다. 현재의 제18대 국회의 정족수는 299석인데, 245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54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한국 국회는 휴가기간을 빼고는 1년 동안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의 회기로 열린다.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 하에서는 국회 개원일수를 1년에 최대 150일까지로 제한하기도 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제도적으로는 1년 365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 단점도 상존한다.

표 2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제18대국회)

교섭단체명	정당명	2008년 개원 당시			2011년 1월 31일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한나라당	한나라당	131	22	153	149	22	171
민주당	민주당	66	15	81	70	15	85
비교섭 단체	자유선진당	14	4	18	12	4	16
	미래희망연대	6	8	14	0	8	8
	민주노동당	2	3	5	2	3	5
	창조한국당	1	2	3	0	2	2
	진보신당	0	0	0	1	0	1
	국민중심연합	-	-	-	1	0	1
	무소속	25	-	25	7		7
계		245	54	299	242	54	296

자료 :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2. 일본

1) '55년체제'의 성립 지속 붕괴

(1) 전후 점령개혁과 역코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고 8월 30일 연합국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일본에 도착하면서 연합국에 의한 대일점령이 개시되었다. 연합국의 대일점령은 형식적으로는 연합국의 공동점령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단독점령이었다. 대일점령정책은 연합국 총사령부(GHQ : General Headquarters)에 의해 전개되었다. GHQ의 점령정책은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와 민주화(democratization)라는 '2D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상징천황제와 전쟁포기, 전투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일본국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GHQ의 대일점령정책은 1947년 미소간 협력관계가 공식적 종언,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 승리,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거치면서 개혁기조가 변화한다. 개혁정책은 냉전구도 속에서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기능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 하에 보수주의로 회귀한다. 이를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한다. 이에 따라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같은 날 체결되었고, 일본은 타이완 국민당과의 수교, 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냉전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냉전구도 속에서 아시아의 반공기지로써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2) 60년 안보투쟁과 혁신자치체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더불어 체결된 이래 1957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이끄는 내각이 들어서면서 1958년부터 개정교섭이 이루어졌고, 1960년 1월 19일에 신안보조약이 조인되었다. 신안보조약은 미일 양국이 상호 원조하여 자위력의 유지 발전에 힘쓸 것과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 미일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행동할 것 등을 규정했다.

안보조약의 개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60년 안보투쟁’이라고 부른다. 안보투쟁에는 여전히 패전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대규모 시민들이 여기에 합류했다. 1960년 5월 19일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회기연장과 조약비준안을 단독으로 승인하자 안보투쟁은 안보조약 개정반대운동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운동으로 발전했다. ‘신안보조약’은 6월 2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기시 내각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7월에 총사퇴했다.

전후 정치적 이념대립이 가장 심했던 기시 정권을 이은 것은 60년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이다. 이케다 내각은

10년 안에 국민총생산(GNP)을 2배로 만들겠다고 하는 ‘소득배증계획’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6년 만에 GNP를 두 배로 끌어올리면서 196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고도성장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1960년대 말부터 도시부를 중심으로 공해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힘입어 1967년에 사회당과 공산당의 추천을 받은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가 도쿄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사회당 공산당 등 혁신정당의 후보자가 자치체 수장으로 당선되는 혁신자치체가 속속 등장했다. 혁신자치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퇴조했지만 ‘생활’을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지방정치에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정치의 방향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3) ‘55년체제’의 성립과 붕괴, 정권교체

전후 일본 정치는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로 요약될 수 있다. 55년체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점령체제가 끝나면서 공직추방에서 해제된 보수정치가들이 정계로 복귀하고, 1955년 2월 중의원 총선에서 사회당이 1/3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보혁(保革)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더욱이 1955년 10월 사회당 좌파와 우파가 단일화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재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합동에 의해 자유민주당이 창당되면서 55년체제가 성립되었다. 1993년 7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38년에 걸친 자민당 장기집권은 막을 내리게 되고 8당과 연합에 의한 비자민(非自民) 연립정권이 들어서면서 55년체제는 붕괴된다.

55년체제는 정당구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유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둘째,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의 보혁 대립구도로 전개된 양대 정당 체제, 셋째, 자민당이 국회의석의 단독과반수를 점하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의석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15정당제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정의 중 어느 것을 취하든 55년체제는 1955년에 형성된 구도가 1993년까지 이후 38년간 지속됨으로써 체제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민 연립정권은 10개월만에 불협화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자민당은 1994년 6월 국회내 제1당으로서 일본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와 이른바 자 사 사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여당의 지위를 되찾는다. 이후 자 사 사 연립이 붕괴된 후에도 자민당은 1999년부터 공명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버블붕괴 이후 계속된 장기불황과 이에 대한 자민당의 위기대응 능력의 부족, 거듭되는 총리의 사임 등 자민당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고, 2009년 8월에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중의원의석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1955년에 창당된 이후 55년체제가 붕괴된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까지의 10개월을 제외하고 줄곧 여당의 자리를 지켜왔던 자민당은 54년 만에 정 관 재에 의한 ‘철의 삼각형’ 지배, 파벌정치, 이익유도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물러나게 되었다.

표 4 전후 일본의 역대 수상

역대	이름	재직기간	재직 일수	역대	이름	재직기간	재직 일수
43	히가시쿠니나루히코 東久邇稔彦	1945.8.17~ 1945.10.9	54	71~73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曽根康弘	1982.11.27~ 1987.11.6	1,806
44	시데하라 기주로 幣原喜重郎	1945.10.9~ 1946.5.22	226	74	다케시타 노보루 竹下登	1987.11.6~ 1989.6.3	576
45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	1946.5.22~ 1947.5.24	368	75	우노 소스케 宇野宗佑	1989.6.3~ 1989.8.10	69
46	가타야마 데츠 片山哲	1947.5.24~ 1948.3.10	292	76~77	가이후 도시키 海部俊樹	1989.8.10~ 1991.2.28	818
47	아시타 히토시 芦田均	1948.3.10~ 1948.10.15	220	78	미야자와 기이치 宮澤喜一	1991.11.5~ 1993.8.9	644
48~51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	1948.10.15~ 1954.12.10	2,248	79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川護熙	1993.8.9~ 1994.4.28	263
52~54	하토야마 이치로 鳩山一郎	1954.12.10~ 1956.12.23	745	80	하타 쓰토무 羽田孜	1994.4.28~ 1994.6.30	64
55	이시바시 단잔 石橋湛山	1956.12.23~ 1957.2.25	65	81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1994.6.30~ 1996.1.11	561
56~57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1957.2.25~ 1960.7.19	1,241	82~83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1996.1.11~ 1998.7.30	932
58~60	이케다 하야토 池田勇人	1960.7.19~ 1964.11.9	1,575	84	오부치 게이조 小渕恵三	1998.7.30~ 2000.4.5	616
61~63	사토 에이사쿠 佐藤榮作	1964.11.9~ 1972.7.7	1,063	85~86	모리 요시로 森喜朗	2000.4.5~ 2001.4.26	387
64~65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榮	1972.7.7~ 1974.12.9	886	87~89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2001.4.26~ 2006.9.26	1,980
66	미키 다케오 三木武夫	1974.12.9~ 1976.12.24	747	90	아베 신조 安倍晋三	2006.9.26~ 2007.9.26	366
67	후쿠다 다케오 福田赳夫	1976.12.24~ 1978.12.7	714	91	후쿠다 야스오 福田康夫	2007.9.26~ 2008.9.24	365
68~69	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	1978.12.7~ 1980.6.12	554	92	아소 다로 麻生太郎	2008.9.24~ 2009.9.16	358
임시 대리	이토 마사요시 伊東正義	1980.6.12~ 1980.7.17	36	93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2009.9.16~ 2010.6.8	266
70	스즈키 젠코 鈴木善幸	1980.7.17~ 1982.11.27	864	94	간 나오토 菅直人	2010.6.8~ 현재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에 의해 조직된 합의체로서 행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무대신은 수상이 임명하고,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2001년 성칭개편에 의해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변경되었다. 2001년 당시 내각부의 외청이었던 방위청은 2007년에 방위성으로 승격되었다.

표 5 일본의 성칭재편

구 체제 (1부 22성청)	현행 체제 (1부 12성청)
총리부 오кина와 개발청 경제기획청 대장성(금융감독청)	내각부 (금융청)
대장성	재무성
총무청 자치성 우정성	총무성
법무성	법무성
외무성	외무성
문부성 과학기술청	문부과학성
후생성 노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통산산업성	경제산업성
운수성 건설성 홋카이도개발청 국토청	국토교통성
환경청	환경성
방위청	방위성(2007년)

현재 일본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이다. 이것은 1993년 55년체제가 붕괴되고 난 후 1995년부터 정치개혁법의 성립에 의해 바뀐 것으로 55년체제 하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

고, 사실상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후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제도로 당내 파벌 형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행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후보자의 중복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할 수 있는 후보는 당의 중진 이상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비례대표로 당선한 경우를 이른바 ‘부활당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국 헌법에서 중의원은 수상 선출뿐만 아니라 예산, 조약 비준 등에서도 참의원보다 우위에 있으며, 중의원만이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다.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중의원뿐이다.²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지속되었던 55년체제 하에서는 자민당이 줄곧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의원은 중의원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중의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어 참의원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참의원의 역할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에 예산, 조약, 수상 선출 등에서 중의원 우위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만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안건이 참의원에서도 부결되어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2 일본국 헌법 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결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표 6 중의원과 참의원 비교

	중의원	참의원
의 원 수	480명	242명
임 기	4년	6년(3년마다 반수 선거)
해 산	있음	없음
피선거권	25세 이상	30세 이상
선거제도	소선거구 300, 비례대표 180	선거구 146, 비례대표 96

3) 사회문화 : 21세기의 새로운 문제

(1) 저출산·고령화

저출산이 정책의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된 것은 '1.57 쇼크'이다. 1990년 6월 후생성에서 공표한 「인구동태총계」에서 1989년의 출산율이 1.57로 과거 최저였던 1966년(丙午년)의 1.58보다 낮게 나오자 일본에서는 이를 '1.57 쇼크'라고 불렀다. '1.57 쇼크' 전까지 일본은 전후 오랫동안 인구과잉과 실업이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에 저출산은 문제화되지 않았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는 고령화 문제가 대두하여 고령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57 쇼크'를 계기로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의 활력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5년에는 1.26으로 과거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2005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인구감소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2009년의 출산율은 1.37로 약간 상승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 현재 고령화 비율³이 23.1%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이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3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994년에는 '고령 사회'에, 그리고 200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2%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인데, 이에 비해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⁴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2010년 3월에 발표한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일본의 고령화 비율이 30.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2) 다문화공생

일본은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 국가관을 갖고 있으며,⁵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타의 선진국과는 달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외국인의 유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2004년을 정점으로 2005년부터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반면, 외국인등

4 일본의 경제기획청 장관을 역임하고 경제평론가로 활동한 사카이야 다이치[巽屋太一]는 이 시기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1976년에 발표한 소설에 '단카이[團塊]세대'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후 일본사회에서 '단카이 세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일본은 홋카이도의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 오키나와의 류큐 민족, 그리고 전후에는 구식민지 출신의 재일한국인 조선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일민족 국가관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2008년 6월 6일 아이누를 선주민족으로서 인정하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국회결의가 중참 양원에서 가결되었고, 글로벌화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증가 등 사회변화와 더불어 단일민족 국가관은 점차 흔들리고 있다.

록자 수는 점차 늘어나 2005년에는 200만 명을 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이 증가하자 일본정부는 재일외국인을 외국인노동자의 활용 혹은 재류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의 2009년판 『출입국관리(통칭 『入管白書』)』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은 2005년 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는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수는 2,217,426명으로 일본 총인구의 1.7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대비 64,453명(3.0%)이 증가한 것이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705,310명(46.6%)이 증가했다. 외국인등록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1990년으로 겨우 15년 만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배증한 것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일본의 외국인 비율은 0.2%의 폴란드와 0.8%의 슬로바키아에 이어 한국과 나란히 하위에서 세 번째로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정부는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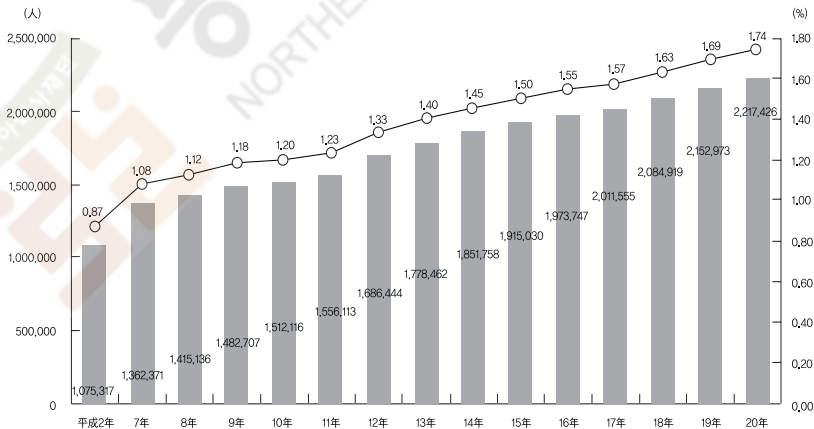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자료: 法務省 出入国管理局『出入国管理』, (平成21年版), p.17.

생활자이며 지역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정비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05년 6월 총무성에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6년 3월에는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을 책정했다. ‘다문화공생 추진플랜’ 책정 이후 2009년 4월 현재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94%,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는 21%의 지자체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및 계획(종합계획 등에서 다문화공생의 추진을 언급하는 것도 포함)을 책정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에는 정주외국인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정주외국인 시책 추진실’을 내각부 안에 설치했다.

3. 타이완

1) 국민당 일당독재에서 다당제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이 패하고 중국 본토에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함에 따라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패퇴했다. 타이완은 쑨원(孫文)이 주창한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반공과 대륙복귀를 국시로 삼아 공식적인 국가명을 ‘중화민국’으로 하고 이른바 ‘국민정부’라고 하는 타이완 정부를 세웠다. 대륙복귀를 지상과제로 한 국민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동원령을 내리고 민주적인 헌정제도를 정지시켰다. 계엄을 선포하여 대륙의 중국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거를 중지하고 정당결성을 불허하며, 사회적

반대세력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장제스 통치 시기의 국민당은 그 자체가 중화민국 정부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제스 개인의 카리스마와 역량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국민당은 군 경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원을 장악하고 있었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한 후 1978년 그의 아들 장징궈(蔣經國)가 뒤를 이었으나 반공과 사회적 안정을 구실로 한 엄격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계엄 하에서 1986년 9월 27일 당외 세력이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창당을 선포하였다. 창당 선포 후 당외 세력들은 당연히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장징궈 총통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10월 7일 “헌법을 준수하고 공산주의와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당설립금지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1987년 7월 계엄령이 해제되고, 1989년 1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정당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당등록제가 실시되어 복수정당제가 허용됨으로써 타이완은 장기간에 걸친 국민당 일당체제에서 벗어났다. 정당설립 등록이 허용되자마자 타이완에는 41개의 신생정당이 등록하는 등 참여욕구가 분출했지만, 이들 정당 중 대부분은 지속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법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2000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 민진당, 중국신당의 3개 정당뿐이었고, 2004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 민진당 그리고 신생정당으로서는 친민당, 타이완 단결연맹이 전부였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1988년 장징궈 총통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1990년에 리덩후이[李登輝] 부총통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리덩후이는 타이완에 국민당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타이완 출신 총통이다. 리덩후이는 민주화와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취임 후 총통직선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민주화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시회의(國是會議)’를 소집하였다. 국시회의는 1991년에 40여 년간 중국과 전쟁상태임을 규정해 온 전시비상조치법인 ‘동원 반란 진압 시기’ 임시조례를 폐기하고 다양한 정치개혁안을 승인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만년국회’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타이완의 입법원 선거는 중화민국 난징 정부시기인 1948년 제1대 선거가 실시된 이후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 하에서는 1992년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1948년에 중국 본토에서 선출된 입법위원은 타이완에서도 계속적으로 위원직을 유지하였고, 위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7차례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빗대어 타이완의 입법원을 이른바 ‘만년국회’라고 불렀다. 1992년에 마침내 제2대 입법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44년만에 선거가 부활한 것이다. 입법원 선거의 부활로 인해 국민당은 더 이상 입법기관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고, 야당도 입법원에 진출하여 국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한편 리덩후이는 ‘하나의 중국’에 대하여 장제스나 장징궈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타이완의 대 중국(對中國) 관계의 전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관계개선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중화민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타이완 섬과 부속 도서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국민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96년 재선된 리덩후이는 1999년 ‘양국론’을 발표하여 실질적으로 타이완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2000년의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하고 리덩후이가 2001년 국민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당은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회복했다.

2000년 3월 실시된 총통선거에서는 야당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어 제10대 총통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타이완에서 1949년

12월 이후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집권시대를 끝내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천수이벤은 2004년 3월 19일 제11대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8년간 재임했다. 천수이벤 총통은 내정에서는 신중간노선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타이완과 중국이 각기 독립국임을 주장하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채택했다. 일변일국론이란 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다른 편에 있는 하나의 국가라는 뜻으로, 타이완은 이미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수이벤의 발언 이후 ‘일국양제, 평화통일’을 양안(兩岸) 통일의 근간으로 삼아온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2008년 3월 28일의 총통 선거에서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당선되어 제12대 총통에 취임하면서 타이완은 8년 만에 국민당 정권으로 복귀했다. 마잉주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양안 공동시장 등 중국과 경제협력을 통한 타이완의 경제회생과 성장률 6%, 국민소득 3만 달러, 실업률 3% 이하 달성 등 이른바 ‘633플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중산층과 서민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2) 정치체제

중화민국 헌법은 1946년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는데 국가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정권은 인민의 권력인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創制權), 부결권을 말하고, 치권은 정부의 권력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고시권, 감찰권을 뜻한다. 그러나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고 민주화가 진전되기 전까지 헌법상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에 의하면 타이완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통과 국민대회이고, 최고의 결기관 하의 권력기관은 쑨원의 5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원, 행정원, 감찰

원, 고시원, 사법원의 5개로 나뉜다.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회, 입법원, 감찰원은 모두 입법기관이었으나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하여, 입법원은 일반적인 입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대회는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과 소환, 헌법 개정을 담당하고, 감찰원은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래 국민대회와 입법원은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감찰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수준의 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나 1997년 개헌과정에서 감찰원의 구성원을 총통이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얻도록 하면서 감찰원을 입법기관에서 제외시켰다.

국민당에 의한 1당체제 하에서도 헌법상으로는 타이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다만 국민당이 헌법을 정지시키고 정당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다. 국민당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었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온 국민당 정부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구실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당결성이 금지되었지만, 헌법상 타이완은 민주국가였다.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정치적 반대세력은 지속적으로 야당 설립을 위한 시도를 했고, 1986년 마침내 민진당이 창당된 것이다.

3) 사회문화

1971년 국제 사회가 중국을 승인함에 따라 중국이 UN에 가입하면서 타이완은 UN을 탈퇴했다. UN 탈퇴 후 현재 타이완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다. 타이완은 친서방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도 경제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1979년에 덩샤오핑[鄧小平]이 타이완 통일방안으로 홍콩문제 처리방식인 '1국 2체제'를 선언한 반면, 타이완은 불접촉 불담판 불간섭의 '3불정책'을 고수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여 왔다. 이후 중국은 계속 타이완의 개방을 촉구하였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다가 1987년 7월 38년 만에 민간인의 중국거주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등 교류를 확대했다. 1990년 야당 민진당 등에서 '타이완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991년 국가통일위원회가 3불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통우(通郵) 통상 통항의 '3통정책'을 실시했다. 1992년 이후로는 타이완정부도 중국과의 대치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본토를 인정하는 국가와도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1993년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44년 만에 첫 고위민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회담의 정례화 등 원칙적인 사항만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이 취임하면서 출범한 신정부는 8년간의 민진당 정부의 반중국 노선을 접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타이완 독립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지양하고,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두 개의 중국 정부가 병립하고 있는 사태는 냉전 시대에는 특히 체제와 이념의 대립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문제가 되어 왔으나,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 문제는 점차 그 심각성이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11월에는 중국과 타이완이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10년에는 중국-타이완 FTA를 체결하는 등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타이완을 '차이완'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시아의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중국, 북한, 베트남은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베트남공산당과 베트남 인민군,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해방군과 같이 공산당과 공산당의 군사조직이 함께 주도한 무력투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 북한, 베트남의 공산당은 권력 장악 후 혁명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길 효율적인 통치제도의 수립, 국민통합, 경제계획 수립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결국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베트남은 도이모이를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 중국 : 개혁 개방정책 이전과 이후

1) 사회주의에서 개혁 개방으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10월 1일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한다. 건국 당초 정치를 담당한 것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였다. 이 단계에서는 공산당 독재체제는 확립되지 않았고, 신민주주의론 하에서 공산당, 중국민주동맹, 중국농공민주당,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등의 여러 세력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루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직후는 구 국민당, 부유층 등에 의한 반공 반정

부운동이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반혁명활동 진압지시가 내려져 중국의 해방군출판사에서 출판된 『國情手冊』에 의하면 1953년까지 약 71만 명이 처형되고, 129만 명이 체포, 123만 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한편 ‘3반운동’과 ‘5반운동’이 전개되었는데 3반이란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3가지, 즉 독직 낭비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5반이란 이러한 부패의 원인을 자본가 계급에게 돌려 뇌물수수행위, 탈세, 국가자재 절도, 부실공사, 국가경제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것이다.

1950년에는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고 한국전쟁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자세를 선명히 했다. 다만 1954년 네루 저우언라이(周恩來) 회담에서 평화5원칙을 제시하고, 아시아 아프리카회의(반동회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소련 일변도는 아니었다. 또한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후루시초프가 제기한 ‘스탈린 비판’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은 스탈린을 옹호 하면서 이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소논쟁은 물론 중소국경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국내적으로는 스탈린 사망 후 사회주의 국가의 동요에 대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이라 하여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방침에 고무되어 일제히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지식인으로부터 비판이 일자 중국공산당은 ‘언자무죄’의 방침을 무시하고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반우파투쟁을 개시하여 전국에서 50만명 이상을 실각 투옥시켰다.

1958년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개시하고 대대적으로 인민공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었던 대약진운동은 대량의 아사자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 그 후 류샤오치(劉少奇)가 경제조정을 계획하지만 마오

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류샤오치와 그의 지지자들을 정치무대에서 추방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전개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에 의해 결성된 홍위병이 ‘조반유리(造反有理 : 반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탈권투쟁(奪權鬭爭)에서 각 학교 당 정부기관의 실권과 타도에 앞장섰다. 1969년 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회는 문화대혁명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정국은 내란상태와 다름없었다. 결국 문화대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 일단 화궈펑(華國鋒)이 뒤를 이었으나 실각하고 덩샤오핑이 정권을 장악했다.

중국은 1978년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사상을 해방하고 사실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일치단결하여 앞을 보자(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라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은 대폭적으로 시정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화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胡耀邦)⁶이 사망한 후 지식인을 중심으로 그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5월 13일 이후에는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의 시위를 일으켰다. 5월 17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톈안먼광장에 운집했다. 이에 당국은 학생들의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시에 계엄을 선포했다. 중국공산당은 6월 3일 밤 인민해방군 27군을 동원, 무차별 발포로 톈안먼광장의 시위군중을 무력진압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되어 유혈사태로 마감된 톈안먼사건은 군의 발포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6 후야오방(胡耀邦) : 1964년 공산주의청년단 제9기 중앙상임위원 겸 제1서기 등으로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공산주의청년단 업무를 맡았다.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서기처가 해산되고 홍위병의 비난을 받고 실각되었다.

종결되었다. 톈안먼사건의 무력진압은 중국공산당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는 개방해도 공산당 지배는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소련에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페레스트로이카) 개방(글라스노스트)을 내걸고 경제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정치의 자유화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반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경제에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당원들 중에서도 정치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 톈안먼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톈안먼사건 이후 개혁의 파고가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지만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⁷ 뒤 다시 개혁 개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남순강화는 개혁 개방을 다시 점화시켰다는 것 외에 사영기업을 본격 양산해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경제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남순강화 이후 국무원은 경제활동에 대한 400여 가지의 규제를 철폐했다. 중국인들은 개혁 개방이 가치를 올린 것은 1978년 11기 3중전회지만 정작 중국 사회를 바꾼 것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라고 말할 정도다.

7 남순강화(南巡講話)는 덩샤오핑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漢), 선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시찰하고 중요한 담화를 발표한 것을 가리킨다. 덩샤오핑이 제창한 개혁 개방정책이 10년을 맞이한 1989년 톈안먼 사건이 발생하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자 중국 내부에는 개혁 개방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됐다. 이에 덩샤오핑은 남쪽 지역을 순례한 뒤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의 주된 내용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것으로, 중국 내부에서 제기된 이념논쟁(姓資姓社 :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남순강화 후 톈안먼 사건으로 일시 중단됐던 개혁 개방정책은 사영기업 육성, 400여 가지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가속도가 붙었다.

2) 정치체제

중국의 현행헌법은 1982년에 제정된 것으로써 1954년 1975년 1978년의 헌법에 이어서 4번째 헌법이다(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에 일부 개정). 현행 헌법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유경제가 보장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전문에 새로 포함시켰다.

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을 지도계급으로 하는 노동동맹(勞農同盟)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전정(專政)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도 입법 사법 행정기관은 존재한다. 단 삼권분립의 원칙은 없다. 공산당이 군 행정 입법 사법기구 위에 군림하는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중국공산당은 현행 당규약에 맑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석으로 불리던 공산당 최고 직위는 1981년 6월 후야오방 때부터 총서기로 바뀌었다. 당의 일상 업무는 중앙정치국이 맡는다. 17기 중앙정치국원은 25명이다. 이들 중에서 9인의 상무위원회가 구성된다. 당 서열 9위까지의 상무위원들이 최고 권력을 분점한다. 중앙위 사무국 역할은 6명으로 구성된 중앙서기처가 담당한다. 당원의 태도와 기율을 감독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군부를 지휘하는 11인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중국공산당 조직은 성, 자치구, 현, 시 등 지방 단위에도 당위원회의 명칭으로 존재한다. 학교, 직장 등 거의 모든 조직에 372만 개의 당위원회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당원 2명의 추천과 당 기관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하다.

중국의 입법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중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 서방 언론이 전

인대를 ‘고무도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전인대는 성, 직할시, 자치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2008년 3월 시작된 11기 전인대 대표는 총 2,987명(20%는 여성)이다. 각 소수민족도 각각 적당수의 대표(전체의 13% 정도)를 갖고 있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3월 한 차례 대회를 연다. 전인대는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선발권도 갖는다. 2002년 11월 전인대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의 뒤를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를 국가주석으로 하는 이른바 4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2007년 3월 전인대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재선출 됨으로써 2011년 현재 후진타오 제2기 정부가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군을 ‘인민해방군’으로 부른다. 군사 최고 권력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다. 형식적으로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로 나뉘지만 구성원은 같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주석이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중국의 최고 국가 행정기관은 국무원이고, 현재 대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다. 국무원은 전인대의 집행기관이다. 전인대에 책임을 지며 활동을 보고한다. 산하에 부 위원회, 직속특설기구, 직속기구, 사무기구 등이 있다. 국무원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하며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3선이 금지돼 있다.

사법기관 역시 당의 지도를 받는다.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적으로 없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전인대에서, 지방인민법원(고급, 중급, 기층) 원장은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선발한다.

3) 사회문화

(1) 세계 1위 인구대국

중국의 민족은 총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과 국가가 인정한 55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다.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소수민족은 좡 후이 위구르 이 먀오 만주 티베트 몽골 투자[土家] 부이[布依] 조선 등 야오 바이[白] 하니[哈尼] 등 15개 민족이며, 이 가운데 좡족은 1000만 명이 넘는다.

중국은 다원일체론(多元一體論)을 내세워 영토적 일체성과 국민적 통합을 강조한다.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에도 소수민족의 전통에 대한 보호책으로 자치구나 자치주를 설정하여 각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소수민족을 일정한 지역에 한정시킴으로써 한족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민족(韓民族)인 조선족(朝鮮族)은 약 192만 명으로 소수민족 중 14번째로 많고 소수민족의 2.6%를 차지한다. 조선족은 동베이[東北] 3성인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등에 분포한다.

중국은 부동의 세계 1위 인구대국이다. 중국의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에 해당하는 2000년 제5차 조사에서는 12억 9,533만 명으로 집계됐고, IMF의 중장기 인구전망에 의하면 2010년 중국 인구는 13억 4,141만 명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많은 인구에 의하여 '1가구 1자녀'만을 허용하는 인구증가억제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2000년 16.12명으로 줄었고, 2005년에는 여성 1명이 평균 1.73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년간 추진해 온 산아제한운동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정부가 현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족법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

(2) 개혁 개방정책의 성과와 폐해

중국은 1978년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1982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급격히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사회주의의 자취가 점점 사라졌다.

1980년대 초 농업은 탈집단화(脫集團化) 또는 사영화되었으며, 과거 인민 공사에 의한 집체농업(集體農業)은 개별 농가에 의한 개체농업(個體農業)으로 전환되어 혁명 이전의 상태와 유사한 자작소농체제로 바뀌었다. 1984년 이후 이러한 개혁은 도시까지 확대되어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들이 임대되거나 주식회사가 되기도 하고 사적 소유기업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안정과 정치력에 힘입어 개방 개혁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더욱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홍콩 반환,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마카오 반환은 개혁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중국은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고,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2010년에는 상하이 엑스포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성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한편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우선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들 수 있다. 개혁 이후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 노동자들 간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농촌 역시 다양한 사영경제활동의 결과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몰리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도 다시 벌어지게 되어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동부지역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화를 가져왔지만, 중서부 내륙 농촌의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켰다. 일 거리를 찾아 도시로 나온 농민공들은 저임금 노동력으로, 도시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편 사영기업가들은 인민대표대회나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

익을 추구할 능력이 있는 새로운 엘리트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급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원칙이 손상되었다. 최근에는 개혁 개방 과정에서 사회범죄도 늘어나, 이른바 6해(六害)라고 하여 매춘 포르노 인신 매매 마약 도박 사기 및 살인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며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섰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도 심각하다. 중국은 전력의 80%를 화력발전소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중국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다. 또한 중국의 산업용수 사용량은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한편 1994년 12월 중국은 홍수와 전력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쑤샤[三峽]댐 공사를 시작했다. 쑤샤댐의 발전량은 남한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다. 그러나 중국 개발의 상징인 쑤샤댐은 2백만 명이 넘는 이주민을 발생시켰고, 양쯔강 오염과 벌목은 더욱 심각해졌다. 서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80%를 차지하는 양쯔강을 가로막는 쑤샤댐은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을 크게 줄여 동아시아의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2. 북한

1) 강고한 사회주의와 세습정치

북한 정권의 모체는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노동당은 해방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갈래의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체로 출발하였다.⁸ 나아가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다른 당까지 흡수하기로 하여 명칭도 ‘공산당’이 아닌 ‘노동당’을 사용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서울에서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했다. 분국은 1946년 7월 27일 북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있던 조선공산당으로부터 분당하였고, 동년 8월 28일 조선민주당, 신민당을 흡수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개편되었다.

1946년 11월 서울에 있던 조선공산당도 인민당, 신민당 좌파를 흡수하여 남조선노동당으로 개편되었으며, 1949년 6월 30일 평양에서 남북노동당의 합당대회를 갖고 두 당을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을 창당하여 오늘에 이른다. 조선노동당의 초대 위원장은 김일성, 부위원장은 박헌영이었다.

1947년 11월 미 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UN 총회에서 UN 감시하의 남 북한 총선거안이 결의되자, 북한노동당은 1948년 8월 25일 선거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공화국 수립 후 김일성은 곧바로 군사력 건설에 착수하여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을 받아 6·25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직후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박헌영 등 국내파 간부 12명 중 10명에게 사형을,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숙청했다.

한편 1953년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고 치열한 정권투쟁 끝에 후루시초프가 소련공산당을 장악했다. 흐루시초프 서기장은 1956년 3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개인숭배를 배격하고 1인 독재를 비판하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폈다. 그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도 연안파와 소련

8 해방 당시 한국에는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빨치산파)의 4개 공산주의 파벌이 있었다. 김일성은 갑산파.

파가 손잡고 8월 30일 김일성 격하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김일성이 동유럽순방 결과보고를 하기로 된 8월 30일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1인 독재를 비판하고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려고 계획했다. 이것이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다. 그러나 사전에 김일성에게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종파근절을 위한 투쟁’으로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전개되었다.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당 정풍운동을 전개하여 당내에 흩어져 있던 ‘반당 반혁명분자’를 색출하여 차례로 제거했다. 숙청은 갑산파로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은 공화국 수립 후 지속되었던 파벌투쟁을 종식시키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또한 소련 및 중국의 공산당과 이어진 인맥을 당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지도이념으로써 ‘주체사상’을 발전시켰다.

김일성은 생전에 본인이 환갑을 맞은 1972년에 당시 30세의 김정일을 승계자로 내정하고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정일을 당 선전선동부장, 당 조직부장을 거쳐 당 중앙위원으로 승진시킨 후 김일성 후견 하에 당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겨 군조직을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1994년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의 직위로 북한을 통치해 오고 있다. 영생불멸의 신격(神格)을 가졌던 김일성의 주석직을 신격을 갖지 않은 김정일이 승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격을 갖지 않은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른바 ‘유훈(遺訓)정치’

이다. 즉 김일성은 죽었어도 김일성의 권위로 다스리는 체제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위상 정립을 위해 1998년에 헌법을 개정했다.⁹ 개정 헌법에서는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선언함으로써 헌법상 김일성이 영원히 주석으로 있기 때문에 주석을 따로 둘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주석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그 권한을 대부분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내각에 배분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에게 는 국가를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졌으며(제111조), 과거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되었던 정무원을 대신하여 내각이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다(제117조). 이로써 북한 권력체계는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고루 분배되는 ‘헌법상’의 국정책임 분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이 공화국의 전 활동을 장악하는 총체적 통치행위라는 ‘선군(先軍)정치’의 규정을 두고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으로서 이를 통해 국방위원장이 국가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김정일 개인숭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그의 유 일권력을 공고히 했다.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은 3남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이라는 군사 칭호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공식화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9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포와 더불어 최고인민회의의 제1기 1차회의는 전 11장 104조로 이루어진 북한헌법을 정식 채택했다. 헌법의 성격은 대체로 1936년에 제정된 ‘스탈린 헌법’의 원리에 입각했고, 기본적으로는 소자본가의 지주적 사유제도 및 사적 기업제를 인정했다. 이 헌법은 1948년 이후 5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과 1992년 4월의 대폭 개정이 있었고, 현행 헌법은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이다.

2) 정치체제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지배체제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절대 권력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 지배체제이자 세습체제라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헌법 제11조)하며,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 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 조선노동당은 당규약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되며, ‘정치적 총참모본부’라고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요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정치기관인 정치국(정치부)을 두고 있다. 정치국은 해당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998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의 지도,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998년부터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써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광범위한 권한과 달리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며 회기도 단 하루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헌법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현재 내각은 총리 산하에 4명의 부총리와 총 37개 부서(2위원회, 30성, 1부, 1원, 1은행, 2국)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 6개 도, 9개 시, 89개 군, 810개 읍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1952년 12월에 읍 면을 폐지하여 4단계 행정단위를 3단계로 개편했다. 현재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읍 리(동 노동자구)의 3단계로 되어 있는데, 9개의 도¹⁰와 1개의 직할시(평양), 1개의 특별시(라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3개의 특별지구로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3) 주체사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10 9개의 도 :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옛 황해도의 재령강 서남부), 황해북도(옛 황해도의 재령강 동북부), 자강도(옛 평안북도 6군과 함남 장진군 일부), 양강도(옛 함남, 함북의 일부로 창설), 강원도(옛 함남의 원산 이하와 강원도 북부)

지도이념이다. 헌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라는 용어는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김일성은 처음에는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중 소의 개입을 막고 아울러 중 소간 이념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주체를 내세웠으나, 이후 이념화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주체’가 ‘주체사상’이 된 것은 김일성 1인독재 체제의 구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우상화의 이론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체사상이라는 뚜렷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치 권력의 필요에 따라 변용되고 추가되었는데, 1950년대에는 사상과 경제에서의 주체와 자립을 의미하다가 1960년대에는 군사에서의 자위(自衛), 정치 외교에서의 자주를 구현하는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지침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사상체계로 이론화하였으며, 1972년에는 12월 27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인민공화국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에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어 사상체계와 원리 및 방법이 더욱 발전되었다.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나란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병렬시켰던 당규를 고쳐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규정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 구체화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을 추가시켜 주체사상은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하고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운명

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여 북한 사회를 배타적인 이념적 혈연집단으로 결속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3. 베트남

1) 베트남전쟁을 딛고 도이모이로

본 단원의 '분단과 전쟁' '전후처리와 국교회복'에서 다루었듯이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일반적으로 베트남전쟁이라고 부르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연이어 치르며 30년간을 전쟁 속에서 보냈다. 베트남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북베트남이 남북을 통일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한 이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와 함께 1여 년간의 남북통일 준비작업을 끝내고 1976년 4월 25일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최고 권력기구인 남북 단일 국민의회(492석)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로 인구 10만 명당 1석을 기준으로 하는 배분원칙에 따라 북베트남에서 249석, 남베트남에서 243석을 선출했다.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가한 총선은 남북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이 전국의 노동자 농민 여성 산악부족 및 그 밖의 소수인종에서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국민의회 대표들을

선출했으며 야당후보는 없었다.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남북 베트남 단일 국민의회는 1976년 7월 통일 베트남 수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하였다. 초대 대통령으로 북베트남의 마지막 대통령인 톤 득 탕(Ton Duc Thang)을 선출했다. 수도는 하노이로 정하고,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은 호치민 시로 개칭했다.

1980년대 극심한 저발전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자 경제의존율이 높았던 구 소련에서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 개방노선을 채택하자, 베트남은 1986년 12월 제6차 베트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구엔 반 린(Nguyen Van Linh)이 서기장에 취임한 뒤, 전시형 대외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여 자조자립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정책인 도이 모이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1990년 3월 중앙위원회에서 동유럽식 다당제 채택을 거부하는 1당 지배체제 원칙을 고수하고 부정부패 척결, 당 체질 개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당 건설 등 구체적인 쇄신방안을 채택하였다.

1991년 6월 제7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해 온 도 무어이(Do Muoi)가 서기장으로 선출되면서 도이모이 노선의 지속적 추진을 재확인하였고, 1992년 9월 제9기 국회에서는 레 득 안(Le Duc Anh)을 주석에 선출하고 보 반 키에트(Vo Van Kiet) 총리 등 개혁파와 각료들을 유임시킴으로써 경제개혁 가속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경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권개입 밀수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자, 베트남 정부는 1992년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부정부패운동을 전개하였다. 베트남은 1996년 6월의 제8차 전당대회에서도 도이모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1997년 7월 총선에 이어 9월 새로 개원한 의회는 트란 득 루옹(Tran Duc Luong) 부총리를 국가주석으로, 판 반 카이(Phan Van Khai) 부총리를 총리로 선출했다. 2002년에는 트란 득 루옹 국가주석이 국회의원 97%의 찬성으로 재선되었다.

2001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농 득 마인(Nong Duc Manh)이 당서기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농 득 마인은 2006년 4월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유임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원로들을 전면에서 후퇴시켜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루어냈다. 자진 은퇴 형식을 빌린 세대교체는 지도자그룹의 나이를 65세 상한선으로 하고 대의원은 신임의 경우 55세 이하로 했다. 그 결과 당 서열 5위 이내의 최고지도자 중 농 득 마인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물러나는 파격적인 결과를 보였다. 정치국원 15명 중에서도 6명만이 남았다.

2011년 1월에는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치솟는 물가와 동화(베트남화폐) 평가절하 압력 상승 등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최된 전당 대회는 과감한 개혁보다는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기존 틀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2011년 전당대회에서는 응웬 땀 중(Nguyen Tan Dung) 총리가 유임됨으로써 360만 여명의 당원을 대표하는 1,377명의 대의원들은 지난 25년 동안 추진해 온 도이모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이의 지속과 축진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사회주의 노선 고수와 이를 위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유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다당제를 통한 정치 변화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일축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지난 2006년의 제10차 전당대회에서 강경보수파의 반대로 무산됐던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이 허용되었다.

2) 정치체제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는 베트남공산당이다. 헌법상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며 정부, 국회의 활동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 기관이다. 2011년 현재 당원은 약 360만 명에 이른다.

공산당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다. 국가주석은 임기 5년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되고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의원은 공산당이 선출하며, 국가의 주요정책은 전권을 가진 공산당 정치국이 결정한다. 베트남공산당은 1930년 공산당 창립 이래 집단주의 지도체제의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베트남공산당 최고의 기관은 전당대회이다. 전당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데 여기에서 당의 중요한 정책의 인준, 정책노선의 결정, 새로운 당 규약의 채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베트남 권력구조는 베트남 공산당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데, 당서기장이 최고 실권자이며 국가주석은 군사, 외교권을 행사하고 총리는 정치,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방식이다. 도이모이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의 기능 및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지만, 베트남의 정치는 여전히 공산당과 당의 지역조직인 인민의회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개최된 제10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보수 원로들이 퇴진하고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등장하면서 국가주석과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권력의 중심은 당서기장에 있다.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사권을 행사한다(헌법 83조)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국가정책을 입안하지는 못하며, 당의 정치노선과 주장,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550명이고 임기는 5년이며, 정기국회는 1년에 2번 개최한다. 국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1/3 이상이 찬성하면 임시 국회를 개원할 수 있다.

베트남 국회는 일부 극소수의 무소속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공산당 1당에 의한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정기국회는 1년에 단 두 번 열리기 때문에 평상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트남 국회에는 상무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베트남 국회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는 기구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다. 상무위원회는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선전포고를 포함하여 수상을 비롯한 정부인사의 임명과 해임 등 국회의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59개 성과 5개 직할시로 이루어져 있다. 직할시는 성과 같은 급으로 수도인 하노이를 포함하여 껀터, 다낭, 하이퐁, 호치민시이다.

3) 사회문화: 도이모이 정책

장기간의 전쟁 이후인 1975년과 1986년 동안에 베트남은 전후의 황폐함, 사회문제, 대규모 난민의 발생, 캄보디아와의 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고립정책과 무역금지 정책이 베트남의 상황을 한층 악화시켜, 1986년에는 774.7%에 달하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베트남 정부는 1986년에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도이모이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이와 함께 베트남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도이

모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는 개방되었으며 중앙계획적인 방식에서 시장지향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모든 재정의 중심이 예산 균형과 수출증대에 맞추어졌다. 식량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잉여수확물을 분배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벼농사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1989년 이후에 베트남은 쌀을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3위의 쌀 수출국이 되었다. 인플레이션도 1990년에는 67.4%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치와 치안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무역금지와 고립화를 벗어나 무역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에 달했으며, 1999년에 자연재해로 인해 GDP 성장률이 4.5%로 주춤했으나, 2000년에는 다시 GDP 6.7%의 성장을 보이며 급속한 발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도이모이 정책이후 외교는 러시아와의 동맹관계가 기초를 이뤘으나 경제실리 위주로 전환하였다. 1979년 전쟁까지 치렀던 중국과는 캄보디아문제, 국경분쟁 등으로 한때 멀어졌으나 1991년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며, 1994년에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제재의 해제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1995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가입하였고, 1964년 이래 단절되었던 미국과의 국교도 정상화했다. 1998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1월에는 WTO의 150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베트남은 모든 국가와 우방관계를 수립한다는 정책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6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UN과 UN산하 기구의 중요한 국제 기구에 거의 대부분 가입했다.

- 동북아역사재단(2009a), 『동북아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b),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c),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진.
- 민준기 신명순 이정복 윤성이(2008), 『한국의 정치 : 제도 과정 발전』, 나남.
- 백영서 외(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송우근 이재원(2008), 『북한학 특강』, 도서출판 들샘.
- 아사히신문 취재반 지음, 김항 백영서 옮김(2008), 『동아시아를 만든 열 가지 사건』, 창작
과비평사.
-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지음, 한철호 이규수 옮김(2007),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 워렌 코헨 지음, 이명화 정일준 옮김(2009), 『세계의 중심 동아시아의 역사』, 일조각.
- 유용태 박진우 박태균(2011),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 창비.
- 유인선(2002),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이상우(2008), 『북한정치 :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나남.
- 지은주(2009),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 나남.
- 최경식 김대환(2009), 『현대중국 정치제도』, 한울출판사.
- 최병욱(2008), 『베트남 근현대사』, 창작과비평사.
- 최장집 하마시타 타케시 공편(2008), 『동아시아와 한일교류』, 아연출판부.
- 통일연구원(2009), 『2009 북한개요』, 통일부.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 현대일본학회(2007), 『일본 정치론』, 논형.

동아시아 갈등과 화해

김지훈 | 성균관대학교

- I.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
- II.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 III. 화해를 위한 노력

I.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

1. 동아시아 영토분쟁

동아시아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경제성장, 일본의 경제발전과 잃어버린 10년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력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는 점차 고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간의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한중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여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일본식민통치로 인해 고통받았던 국가들에 대한 충분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부재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한 침략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쳤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가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다시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46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시작되어 1949년 국민당정부가 타이완으로 철수하였고, 1949년 10월 1일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각국이 독립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육지의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20세기 후반 이후의 영토 분쟁은 주로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확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청왕조의 영토는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국경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시작된 영토 분쟁은 최근까지 협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국가와 영토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바다를 둘러싼 해양영토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영토분쟁이 심해진 것은 1970년대 이후 바다를 둘러싼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팽창과 침략에 따른 역사와 영토문제가 함께 결합되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분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尖閣 : 닌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러일 간의 북방 4도서 분쟁 및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관련된 난사군도(南沙群島 : Spratly Islands)와 시사군도(西沙群島 : Paracel)분쟁 등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동아시아의 수 많은 작은 섬들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섬을 둘러싼 지역분쟁은 20세기 후반 자원확보와 민족주의 감정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해졌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상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된 이후 세계 어업의 90% 이상이 각 국가들의 관할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계적 자원

고갈에 따라 각국은 대륙붕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 개발에 노력하게 되었다. 각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부근의 작은 무인도에 대해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 영토문제 : 독도

한국에서 독도, 일본에서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리는 섬은 동해에 있는 2개의 작은 바위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식수의 부족으로 원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의 우산국과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고대문서와 지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7세기에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침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항해 한국어부인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독도영유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러일전쟁 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같은 해 9월과 11월 군함 니타카[新高]호와 쓰시마[對馬]호를 각각 파견하여 독도에 망루 건설 가능성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독도 망루 건설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러일전쟁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한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독도관련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島根]현 소속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총사령부 명령(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등에 의해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194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윌리엄 시볼드(W.J. Sebald)라는 친일인사를 통해서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려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다른 연합국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일본은 새롭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들고 나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1483년 조선 왕이 범죄자와 세금포탈자들이 독도로 피난가는 것에 대비해 백성들이 울릉도로 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지역이었다고 주장한다. 17세기에 일본 막부는 일본어부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도로 가던 길에 많은 어부들이 다케시마에 들러 쉬거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두 섬을 다스렸던 것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한다.

1905년 일본어부들의 요구에 따라 메이지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를 들어 일본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조약을 한국에서는 일본 식민지하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조약이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승전국들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국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

도 영유권 문제가 확실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1946년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점령하의 잠정조치였고, 다케시마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모든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52년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다케시마를 되돌려 주려고 할 때 이승만대통령은 독도를 포함한 해안 경계선을 독자적으로 공포해 버렸다. 일본 정부는 이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1952년 한국 측이 ‘군사점령’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한다. 결국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이나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열도 네 개 섬과 같이 일본에게 독도는 ‘잃어버린 영토’로 취급되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에 선착장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평화적인 협상으로 타결되지 않는 영토분쟁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엔해양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것을 반기고 있지만 한국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독도가 이미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가 회부되는 것이 좋을 것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에 좀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독도/다케시마의 가장 민감한 사항은 어업문제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서

양국 어부들이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어부들은 한국어부들이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일본에게 독도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비행기와 군함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게 독도는 센카쿠나 쿠릴 열도 분쟁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분쟁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 독도를 포기하면 다른 영토분쟁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섬이지만 독도는 일본의 교과서, 야스쿠니신사참배와 함께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 따라 악화되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일본정부는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한 것과 함께 외무성의 『외교청서』에서도 “한 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행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영토문제 : 센카쿠/다오위다오

센카쿠/다오위다오는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세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열도는 총 면적 6.32km²로서 대만 북동쪽 200km, 오키나와 서남쪽 약 300km, 그리고 중국 대륙 동쪽 300km에 위치하고 있다. 센카쿠/다오위다오는 석유, 가스 등 중요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독도/다케시마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만의 애매한 위치 때문에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다오위다오가 1885년 오키나와현이 조사하기 전까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은 센카쿠/다오위다오를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따라서 일본은 센카쿠가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1895년 5월 청일전쟁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중국이 일본에 양도한 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 하에 있다가 일본에 반환되었다. 일본은 주인없는 섬을 자신들이 차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6세기 명나라 사절단들이 조공을 바치려가던 항해 중에 가장 먼저 류큐제도(오키나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일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오키나와가 미국에 이양될 때 센카쿠/다오위다오는 오키나와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그 협상과정에 중국과 대만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1968년 유엔이 이 부근의 해저에 석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각 나라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1년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시 이 섬이 일본령으로 공식편입되자 중국과 대만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의 공식입장은 “조약개정이 이

섬에 관한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1990년과 1996년에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섬에 등대를 세우기도 했다.

중국은 시종 일관 센카쿠/다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 역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중국의 반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1970년대 대만학생들은 센카쿠/다오위다오의 일본반환에 항의해 대규모 학생시위를 벌였다. 대만의 입법원은 1999년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 영토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일본 해안경비대가 이 섬으로 접근하던 대만 어선들을 쫓아내자 대만어부들은 대만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만 영해와 근접하게 설정함으로써 대만어선이 일본 경비병에 의해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벌금을 물고 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대만정부는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만독립을 이루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대만 정치인은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두 나라 영토 중간지점을 대략 180해리로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륙의 한계를 확장해 일본에서 130해리까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역사 바위가 돌출된 부분까지 확장해서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섬으로 계속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오기노토리섬(일본어 : 沖ノ鳥島, 중국어 : 沖鳥礁, 스페인어 : Parece Vela)의 암초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도 했다.

이 섬을 둘러싸고 지난 몇 년동안 양국은 경쟁적으로 자원탐사를 벌여왔다. 앞으로 양국이 영토분쟁 대신 공동개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다오위다오에 중국인들이 상륙하려 하자 이를 제지한 일본 해상 자위대와 충돌이 벌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다오위다오 인근에서 영해를 침범한 후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선장을 구속했다. 일본 정부에서 중국인을 억류하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상대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정부는 체포한 중국선원을 석방했다.

4. 영토문제 : 난사군도[南沙群島]

난사군도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80만km²의 해역으로 약 100여 개의 소도·사주·환초·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 대륙에서는 1500km, 베트남에서는 400km, 필리핀에서는 120km,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으로부터는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난사군도의 해면 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 면적은 2.1km²에 불과하다. 19세기 영국의 고래잡이 어선의 선장 이름을 따서 명명된 난사군도는 국제해도에서는 'The Spratly Islands'로 표기되어 있다. 난사군도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데 중국인들은 '난샤[南沙]'라고 하고, 베트남인들은 '트루옹 사(Truong Sa)군도로, 필리핀인들은 '칼라얀(Kalayaan)'군도로 부르고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 접하고 있는 유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지리적 중요성이 있다. 난사군도는 바시(Bashi)해협과 말라카(Malacca)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로 통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해상교통과 군사전략상의 수송을 포함해 전세계 해상 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일본과 동아시아지역 석유 수입의 70%이상이 이 해로를 통과하고 있다.

또한 난사군도는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산자원의 경우 주변국의 어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어 관련 국가의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지역은 광물자원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구리·망간·주석·알루미늄이 해저에 매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난사군도 주변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관련하여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1966년 발족한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합동탐사조정위원회가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후원으로 난사군도에서 2년여의 탐사활동 결과 이곳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전세계로 확산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주변국가들이 난사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하에 있던 시사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시사군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 여파로 난사군도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 채택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게 되면서 난사군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1988년 3월 14일 난사군도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어선 조업과 석유 시추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1992년 2월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다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공포했다. 베트남은 이해 6월에 미국의 크레스톤사와 석유 시추계약을 하였다. 8월에 중국은 난사군도의 2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여 아세안 각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5년 베트남이 아시안 회원국으로 정식으로 가입하고 아세안이 이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난사군도 문제가 국제정치 문제가 되었다. 이후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국가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부 섬을 점령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분쟁 당사국들은 각기 역사적 근거나 지도의 표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국제법, 발견에 의한 선점이론, 대륙붕 연장이론 등 각종 근거를 제시하면서 난사군도가 자신의 주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등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난사군도를 둘러싼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를 하고 있다. 2011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당사국간의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I.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1. 역사문제 : 군대 위안부

20세기 초 일본은 영토확장을 위해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1931년 9월 18사변(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괴뢰 만주국을 세웠으며, 1937년에는 7월 7사변(노구교사변)으로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침략을 하였다. 1941년 12월에는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고 동남아를 침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한 후 일본제국주의는 만주에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 경영을 허용하였고, 1932년 상하이에서는 일본 해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1937년 중국의 일반 시민들과 군인들을 학살하고 강간했던 난징대학살의 경우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일 일자 일본은 일본군의 강간과 성병확산을 막고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위안소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군 위안소에는 중국과 조선 등의 많은 여성들이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 10만 여명의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여성들이 일본군대를 위한 '위안부'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군수산업 노동자로 징용되었다. 일본은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에서 전쟁 포로와 일반인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자행했다.

일본의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처리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1946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계속

된 ‘극동국제군사재판(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 도쿄전범재판)은 일본의 전쟁범죄자 28명을 기소하여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7명을 사형,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등 16명을 종신 금고형 등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도쿄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틀 안에서 패전국 일본의 정치군사 지도자 일부를 재판하는 형식을 통해 심판하고 처벌한 것이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과 관련한 정책담당자들을 밝혀내고 일본군이 자행한 고문, 강간, 대학살, 포로학대 등의 사실을 규명해 냈으며 일본 국민들에게 침략전쟁의 잔학성과 책임을 알린 것도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 자신이 아닌 전승국이 주도한 재판이었고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일부 정치 군사 지도자만을 재판하여 침략전쟁에 참여한 광범한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전승국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쳤고 미국에 협조한 전쟁범죄자들이 제대로 기소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쿄전범재판은 일본인들에게 승자의 패자에 대한 일방적인 재판이란 인식을 가지게 했고 일본인들이 전쟁에 관해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타국을 침략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던 서구 열강도 식민국가들의 독립을 억압하는데 가담한 국가들이었고, 그들 손으로 이루어진 전범재판은 일본인들에게 ‘승리자의 정의’만이 작용한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주권을 회복한 직후 일본은 모든 전범을 사면하였다. 일본이 1958년 감옥에 있던 전범을 마지막으로 모두 다 사면하던 그 해 서독은 나치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정부기관을 설립했다. 이후 서독은 10만 여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6,5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1950년대 단 한명도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또한 초기 전범으로 기소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후 일본 경제계와 정치계에 진출하여 요직을 차지했다.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한 군대 위안부 문제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역사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을 위한 성노예로 식민지 여성을 동원하였다.

일본은 1931년 9 18사변을 일으켜 만주침략을 시작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정부와 군의 통제 감독 협력 아래 징집 이송되어, 군(軍) 상층부가 개설 운영 통제 감독하고 있던 군위안소에 억류되어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모든 여성을 지칭한다.

일본군은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등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동티모르인, 필리핀인 등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과 네덜란드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에게 일본군인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강요했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규모는 적어도 5만명 전후이며 일정 기간 감금되고 강간당한 이들을 포함하면 8만에서 2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침략 식민지배 관련 한 일간 과거 청산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인 동시에 여성 인권의 보호와 전시 여성 폭력 반대라는 견지에서 세계사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위안부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였지만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여성들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일본, 북한, 필리핀,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전역으

로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이 민간업자가 한 일로 정부가 군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이 위안소를 통제했다는 자료가 발굴되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 연대 집회와 심포지엄이 계속되었다. 유엔 인권 위원회 등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쟁 범죄이며, 일본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고백한 사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되었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안팎의 여론에 밀려 일본정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해, 1992년 7월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외 지역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후 1993년 8월 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군과 관현의 관여와 징집 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였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자국의 전쟁범죄를 망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사회당 등의 좌파계열의 정치인들은 일본의 전쟁책임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1993년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시절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는 전시 ‘위안부’에 대한 정부 조사를 통해 일본 군부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부를 설립하고 위안부 여성들을 관리했다는 결론을 내려서 강제성을 인정했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결의를 무시하고 희생자 보상처리를 위해 “아시아여성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 많은 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사적 기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로금이 일본정부의 전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죄 표명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1995년 7월 발족시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기금은 한국 대만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28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2007년 3월 31일 해체되었는데, 대다수 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민간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상정한 이래 이 문제는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로 확대 발전되어 국제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해외의 여성 인권 단체와 연대한 관련 단체 및 정부의 노력으로 UN과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 해결을 권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1990년대 중반 이래 계속 나오고 있다.

1995년에는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ILO전문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ILO 협약 29조(강제노동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였다.

다음해 UN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개 항목으로 된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어린이와 무력분쟁에 관한 특별대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를 공인하였다. 이듬해 열린 UN 인권소위원회는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은 물론 책임 있는 개인의 형사책임(처벌)까지 요구하는 맥두갈(Gay J. McDougall)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서 아시아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필리핀, 미국 등에 냈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침략당했던 국가들의 시민단체들이 연

합하여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피해자와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들이 조직한 민간법정으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으로 구성되었다. 이 재판은 히로히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東条英機)를 비롯한 9명의 고위 관료와 장성에게 유죄 판결하고 전범자들이 여성의 성노예화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배상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 재판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2007년에는 일본측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혼다(Michael Makoto Honda)의원 등이 6번째로 미 하원에 제출한 ‘위안부’ 결의안이 7월 30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이 결의안은, 애초 혼다의원이 제출한 안에서 일본총리의 공개 성명을 통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 것을 ‘권고’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미일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는 조항을 첨가하여 수정 통과되었으나, 이후 다른 나라 의회에서의 관련 결의안 통과에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 네덜란드 하원이 유럽 최초로 생존‘위안부’들에 대한 도덕적 재정적 보상과 학교 교재를 통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을 촉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캐나다의회와 유럽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8년에는 UN인권이사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프랑스, 네덜란드, 남북한 및 중국, 필리핀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일본 우파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일본 우파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세워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를 훼손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2. 역사문제 : 야스쿠니 신사 문제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1869년 도쿄의 구단자카에 세워진 도쿄 쇼콘 사[招魂社]에서 시작되었다. 천황을 위해 전사한 군인을 ‘호국의 영령’으로 모시고 천황과 국가에 충성하는 모범으로 삼아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는 메이지 유신시기 일본 내의 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죽은 246만 명이 ‘영령’으로 합사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가와 신사를 분리하라는 명령에 근거하여 야스쿠니 신사는 이전의 지위를 상실하고 종교법인이 되었다. 그러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사회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일부 정치가와 유족회 등이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에서 관리하자는 정치적 요구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를 국영화하자는 법률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보수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정치가가 정식으로 참배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천황을 위해 헌신한 ‘영령’을 친양하고 침략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천황=국가를 위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가담한 전사자를 ‘영령’으로 신격화하며 유족들의 사회적 체면을 세워주면, 천황=국가는 은급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46년 미국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해 온 군인은급제도를 폐지하였다. 야스쿠니신사와 천황=국가가 군인은급제도를 연계로 은밀한 공범관계 속에서 침략전쟁을 확대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이 확산되면서 1952년에 전상병자 전몰자유족등 원호법이 공포되고 1953년 8월부터 군인은급이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제정 당시에는 제

외되어 있었던 'A급 전범' 14명은 물론 'B, C급 전범'으로 사형이 집행된 자와 구금 중에 사망한 자까지도 '공무사(公務死)'로 취급하여 1953년 이후부터 유족들이 유족연금 또는 은급 지급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구식민지 출신의 전사자와 강제징용자 등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 국적이 박탈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적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군인은급이 부활되면서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에 전사자가 합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정부의 전범에 대한 경제적 처우를 위한 은급 '복권'을 'A급 전범' 합사의 근거로 삼았다.

1946년부터 2년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이 '패자에 대한 승자의 일방적인 보복 재판'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부당한 재판'이라는 입장이 확산되면서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실행한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을 함께 제사지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미 1959년부터 'B, C급 전범'을 합사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1978년에 'A급 전범'을 합사한 것이다. 'A급 전범'을 합사한 것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자 'A급 전범'을 분사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A급 전범' 이외에도 1894년 청일전쟁 이후 1945년 일본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합사되어 있다. 따라서 'A급 전범'을 분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야스쿠니신사가 침략전쟁에 참여한 전쟁범죄자를 추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야스쿠니신사에는 조선인 21,181명과 대만인 28,863명이 합사되어 있다고 한다. 대부분 1959년부터 합사되었는데 사망자 본인과 유족들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족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무단합사'였다. 이러

한 무단 합사를 분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야스쿠니신사 측은 그들이 전사한 시점에서 보면 일본인이었으므로 사후에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군인으로 죽어 야스쿠니에 모셔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과 대만인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 국적이 박탈되었다고 군인은급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제를 후광으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용인하고 옹호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부속시설로 유슈칸[遊就館]이라는 군사박물관이 있다. 1882년에 만들어진 유슈칸은 천황=국가를 위해 전사한 자들의 죽음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일본 국민에게 군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가해사실에 대한 역사적 규명이 활발해지자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역사교과서 수정운동을 벌이지만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저항을 받게 되자 야스쿠니신사와 유슈칸의 전시에 주목하였다. 유슈칸의 전시 내용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의로운 전쟁’,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전쟁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85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야스쿠니 신사에 정식으로 참배하자,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이후 일본 총리의 공식 참배는 중지되었다. 그러나 2001년 8월 13일 일본의 신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다시 신사를 공식 참배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의 비판을 받았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국중심적인 편협한 역사인식과 정치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일본 시민들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참배에 대해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

기되었으나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다(播磨, 関西, 九州). 그러나 1992년 2월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총리가 공식참배를 반복한다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1992년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들과 재일 외국인과 한국인이 도쿄[東京],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2건],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나하[那覇] 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04년 7월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총리의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일본정부와 일본 사회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하려 하는지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비참한 전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3. 역사교과서 문제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천황중심의 통치체제를 수립한 일본은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여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국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라는 철저한 자국, 자민족 우월주의로 나아갔다. 일본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후예가 일본국을 건설하여 초대 진무(神武)천황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통치권을 계승했다는 만세일계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메이지시대에는 교육칙어와 군인칙유를 통해 교육의 현장과 군대에 천황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강령을 주입시켰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역

사교육은 이러한 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권력에 의한 공교육을 통해 충군 애국을 구현하는 국민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미국교육사절단은 일본정부에 대해 교과서의 자유발행, 자유선택을 권고하였다. 황국사관의 폐해를 없애고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문부성은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집필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을 통하여 교과서 집필과 학교의 교육내용을 통제하였다.

1952년 미군정이 끝나면서 민주교육을 비판하는 교육정책이 시작되었다. 전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과거 군국주의 침략사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외면한 채, 황국사관에 기초한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역사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검열을 시작하였다. 이른바 ‘교과서 공격’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1955년 일본의 우익진영은 일본 내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역사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문제 삼아 제1차 교과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시 문부성은 ‘교과서조사관 제도’를 만들어 검정제도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교과서들을 불합격시켜 일본의 가해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에 부당성을 제기한 교과서 집필자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교수는 2차에 걸친 소송을 내어 일부 승소하였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의 영향으로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등의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자, 우익진영은 제2차 교과서 공격을 시작하였고 여기에 동조한 문부성은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1982년 한국 등 주변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주변국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한 일본정부는 교과서검정 기준에 근현대사 서술에서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을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신설하였다. 이는 일본이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교과서 기술을 지양하겠다는 ‘공약’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린제국조항’은 일본의 외교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침략을 반성하거나 교과서 검정을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의 ‘근린제국조항’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교과서 서술은 일본 우익의 압력과 일본 사회의 보수화로 악화되어 갔다.

1990년대에 들어 일본사회의 우경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민당은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본 우익은 자위를 넘어서 타국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군사적 정상국가’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1946년 연합군 점령 아래서 시작된 평화헌법 체제를 벗어나야 했다. 특히 일본의 우익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 우익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반성하는 교과서나 근린제국조항을 철폐하고 국민의 역사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침략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제3차 교과서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어 1997년 1월 우익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역사교과서를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고, 자유주의사관을 표방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결성하였다. 새역모는 1995년까지 자민당 내의 ‘역사검토위원회’를 배경으로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동경대 교수,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전기통신대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이들은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은 아시아 해방전쟁이었고,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등은 ‘날

조이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 서술은 ‘자학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우익은 새역모를 주축으로 군대를 보유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헌법개정운동을 벌이는 ‘일본회의’, 극우세력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 등이 각종 강연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교과서 서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지역의 보수 정치인을 포섭해 교과서 채택권을 가진 각급 교육위원회를 장악하여 압력을 행사했다.

새역모는 자신들이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2001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후소사)』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였다. 철저한 황국사관에 기초하여 침략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문제는 서술하지 않는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극우세력의 공세에도 2001년 채택율은 0.039%에 불과했다.

2005년에 재검정된 이 우익 교과서는 일부 서술의 변화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역사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10%의 채택율을 달성하기 위해 우익의 공세가 계속되었지만 채택율은 0.39%였다. 새역모의 우익 교과서의 채택율은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의 불채택운동과 주변국의 항의 등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새역모를 비롯한 극우단체가 일본군 위안부문제나 난징대학살을 기술한 교과서를 공격하면서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를 점차 서술하지 않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증언 이후 1997년부터 일본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7종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되었으나 2001년에는 4종으로 2006년에는 2종으로 줄어들었다.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주변국의 비판과 시민단체 등이 연합하여 벌인 채택저지운동의 결과, 2005년도 새역모 발간 교과서 채택률이 0.39%에 그치자 새역모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새역모에서 탈퇴한 새역모 전 회장 야키 히데쓰구[八木秀次] 등은 2006년 10월에 애국심과 도덕, 전통을 강조하는 ‘일본교

육재생기구'를 발족시키고, 전위기구로서 '교과서개선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제2의 새역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는 2006년 12월에 개정된 '애국심' 함양을 강조하는 '학교교육기본법'에 기초한 교과서 출판을 목적으로 후쇼사의 자회사인 이쿠호샤[育鵬社]에서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다.

새역모의 잔류 세력인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후소샤[扶桑社]와 결별하고 새롭게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2009년 4월에 지유샤판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발표했다. 지유샤판 교과서는 후소샤판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2종으로 늘어났다.

2011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은 일본 신교육기본법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검정이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는 독도 서술을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 지리교과서 4종과 공민교과서 7종 모두에서 역사교과서는 7종 가운데 3종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되거나 표기되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교과서들이 독도 관련 서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더 악화되고 있다. 2011년 검정통과 교과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점령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동경서적'의 공민교과서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던 것을 이번에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역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문제도 2011년 교과서에서는 모두 사라졌다. 새역모가 발행한 ‘자유샤’ 역사교과서는 “미혼여성은 여자 정신대로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나 새역모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육재생기구’가 발행한 ‘이쿠호샤’의 교과서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병사로 전쟁터에 보내졌으며, 많은 조선인 여성들은 공장으로 보내졌다”고 하면서 강제로 동원한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시장에서 일본 우익교과서는 2001년 채택율이 0.039%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0.39%로 높아졌고, 2009년 1.7%에서 2011년에는 이쿠호샤와 자유샤의 채택율이 거의 4%에 달하여 2001년 대비 100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에서 자유샤는 0.07%에 불과했지만 이쿠호샤는 3.7%를 차지하였고, 공민교과서에서는 이쿠호샤가 4.1%, 자유샤가 0.05%의 점유율을 보였다.

일본 우익교과서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일본 극우세력의 활동과 더불어 일본문부성의 교육방침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6년 일본정부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2008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는 등 애국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방침을 변경하여 우익교과서가 채택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져왔다. 또한 2011년 3·11대지진은 교과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떨어 뜨렸고,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무관심도 일본의 우익교과서 채택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 역사왜곡에 대해 한국정부가 최초로 대응했던 것은 제2차 교과서 공격 이후인 1982년이었다.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극일’이라는 국민적 합의하에 범국민모금운동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독립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응은 2001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된 후였다. 정부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정밀분석을 통해 왜곡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국회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에서도 불채택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 있는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채택률 0.039%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2001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문제의 한일공동연구가 합의되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5년 5월 3년간의 활동 끝에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역사인식의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5년의 재검정에서 통과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4년 전과 다름 없이 사실왜곡과 역사인식의 부재를 보여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학계에서는 48개의 역사연구단체가 참여하는 역사연구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켜 학술적으로 비판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일본의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불채택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도 2005년 6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 문제도 논의 내용으로 하여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의의 출범에 합의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 동북아 역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연구와 대응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시켰다.

교과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 문부과 학성이 2008년 7월에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관련 기술을 명기하여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일 간의 갈등은 일본교과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독도를 비롯한 과거 역사청산문제와 연결된 영토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진전되지는 않겠지만 두 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두 나라의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등에 발목을 잡혀서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한국의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가 없는 사태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주변국에 군국주의의 재등장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독일과 일본이 다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동북공정

한중간의 역사문제는 2002년 중국이 동북지방에 대규모 역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였다.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언론에 의해 보도된 후 한국은 중국의 의도가 고구려역사 등 한국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한국사에서 중국의 지방사로 전락시켜려 한다고 보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중국이 이미 한국사로 인정하였던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에 소속된 변강사지연구중심

(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말까지 5년간 실시한 연구 사업이다. 원래 명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3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실시한 사업이라고 할 수있다.

동북공정의 예산은 중국정부의 재정부에서 1,000만 위안, 중국사회과학원 125만 위안, 동북3성에서 375만 위안 등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으며, 5년 동안 총 1,500만 위안(약 19억 원)이다. 동북공정 5년 동안 사용한 1,500만 위안의 예산은 2002년 당시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이 1년에 5,000만 위안 정도였던 실정을 감안하면 적은 것이 아니었다.

동북공정의 과제는 ‘연구’ ‘번역’ ‘공문서자료(당안자료)’의 3대 시리즈로 나누어진다.

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세분된다. 기초 연구는 학문적 이론 연구를 의미하고, 응용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발해 등 특정 역사와 강역의 귀속 문제,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국경 영토 분쟁, 외교 관계, 문화 관광 전략 등 현실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말한다. 번역은 남북한, 러시아, 일본, 서양의 관련 연구성과의 번역, 러시아 학자의 극동지역 역사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한 학자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 고고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학자의 한중관계사 논점의 번역과 평론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공문서 정리 작업으로 동북변강 관련 공문서 사료 정리, 동북변강, 한 중, 중 러, 중 몽관계 공문서 목록정리, 동북변강 역사지도 수집정리 및 연구, 동북변강 관련 사진의 수집 정리 및 연구가 있다.

동북공정 과제는 고대 중국의 강역에 대한 이론 연구,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한중 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 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에 대한 전략적 연구, 한반도 형세 변화가 중국 동북변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5개 항목의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 2002년 선정된 과제 가운데 2개가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2005년에 연구과제 15개, 당안과제 1개, 번역과제 1개 등 17개 과제가 추가로 선정되어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과제는 모두 110개 과제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선정된 95개의 동북공정의 연구과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북지역에 관한 연구로 2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95개 과제 가운데 한국사와 직접 관련된 과제는 고조선 2개, 고구려 9개, 발해 8개, 간도와 한중 국경문제 4개, 한중관계 7개, 한반도 문제 1개 과제와 번역과제 10과제 등이지만 동북지역 관련 연구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연구과제 가운데 반 이상이 한국사와 관련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출판된 동북공정 결과물 동북공정의 110개 입항 과제 가운데 지금까지 22개 과제의 결과물이 출판되어 나왔다. 연구과제가 16개, 자료정리 6개가 과제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총서로 발간되었고, 일부는 홍콩 아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직영 출판사인 중국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동북변강연구총서’ 시리즈로 『고대 중국고구려사 속론』을 비롯한 9권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길림인민출판사에서 『간명고구려사』를 비롯한 6종 8책이 발간되었다. 이외에 홍콩아주출판사에서 『당대발해국오경연구』, 흑룡강인민출판사에서 『이십세기중국동북변강문화연구』 등이 출간되었다. 이로 보아 향후에도 각 지역 출판사에서 개인 학자들의 연구결과물들

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공정에서 연구과제 이외에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동북지역의 역사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동북공정은 동북 3성 당안관, 연변당안관, 제1역사당안관 등의 당안자료를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이 당안자료정리 사업 가운데 특히 훈춘아문(琿春衙門)당안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청대 건륭 2년(1737년)부터 선통 3년(1909년)까지 약 12만 건의 훈춘아문당안자료 가운데 11만 건을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대부분 한문자료이며 일부 만주어로 된 자료도 있다.

훈춘아문당안은 훈춘협령(琿春協領)과 부도통아문(副都統衙門)의 173년 동안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직관, 군대사무, 기인사무, 민정, 사법, 재정, 농업, 광업, 화폐금융, 문화교육, 대외업무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 동북변강사, 팔기 제도사, 중외관계사, 동북민족사를 연구하는데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국제1역사당안관과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国邊疆史地研究中心), 지린성당안관(吉林省檔案館)이 238책의 『훈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으로 정리하였고, 2006년 광시사범대학출판사(廣西師範大學出版社)에서 50질이 영인되어 출판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国邊疆史地研究中心), 랴오닝성당안관(遼寧省檔案館) 지린성당안관(吉林省檔案館) 헤이룽장성당안관(黑龍江省檔案館)이 공동으로 동북 3성의 당안을 정리한 『청대동북변강당안선집(清代東北邊疆檔案選輯)』이 151권으로 영인되어 2007년 7월 광시사범대학출판사(廣西師範大學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랴오닝성당안관의 자료는 기인생계(旗人生計), 외교와 변경사무, 안동관무역(安東關貿易), 조선이민(朝鮮移民) 등 5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 84책으로 되어 있고, 지린성당안자료는 변경사무, 개발, 외교 등 37책으로 되어 있으며, 헤이룽장성당안자료는 주로 농업개발 관련 자료로 30책이 영인되었

다. 이 자료집은 청대 전기부터 1930년대까지의 시기를 정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문자료이고 일부 일본어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대동북변강사와 중외관계사, 동북민족사 연구를 위한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동북지역 관련 자료집을 정리하는데 노력한 것은, 동북공정이 종결된 이후에도 중국의 학문 후속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동북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동북지역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동북공정 문제가 한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중국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2004년 8월에 두 나라의 외교부 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학문적인 차원에 한정하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한중 양국 구두양해 각서를 주고받기에 이르렀다.¹

이로 인해 동북공정은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수합된 결과물을 출판하는 일도 주춤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동북공정식 인식을 담은 연구논문들은 계속 나왔고, 동북공정식 논리는 퍼져 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하면 중국측에서는 지방의 학자들이 개인적

1 한중 양국 구두양해 5개항

- 1)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 중국측이 유념하고 있다.
- 2) 양측은 향후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1992년 8월의 한중수교 공동성명 및 1993년 7월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에 따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3) 양측은 한중 협력관계라는 커다란 틀 아래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는데 공동인식을 같이한다.
- 4) 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 5) 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면 학술교류와 양국국민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

으로 하는 일이라 막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노무현대통령이 중국측에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노무현대통령이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가 회담석상에서 노대통령이 “(동북공정문제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촉구했고, 원자바오총리도 “양국간 (2004년 8월)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3일(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동북공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즉 노무현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요구했고, 후진타오는 “2004년 8월의 구두양해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북공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동북공정 관련 책이 출간되었다거나, 고구려유적지인 용담산성의 표지판, 집안 박물관의 머릿돌, 오녀산성사적박물관의 패널, 호산산성 박물관의 지도, 성산산성의 표지석, 일부 대학교재 등에 동북공정식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와 우리들을 긴장시키곤 했다. 그리고 2007년 들어와 동북공정은 종료되었다.

‘동북공정’이 종료된 이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대신 동북 지방에 여러 개의 관련 연구기관이 새로 생겨나거나 기존 연구기관을 확대 개편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 유적이 가장 많은 지린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통화사범학원이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화사범학원에는 지린성사회과학원에서 2003년 7월에 설립한 ‘고구려연구기지(高句麗研究基地)’가 있고, 2006년 1월 기존의 고구려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고구려연구원(高句麗研究院)’이 있

다. 또 2006년 10월에 고구려, 발해사와 동북민족강역사를 집중연구하기 위한 ‘고구려·동북민족연구중심(高句麗·東北民族研究中心)’도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은 지린성의 대학 인문학연구기지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 연구기관들에는 이 대학 교수진 12명이 속해 있다. 고구려 유적 현장 가까이 있는 만큼 오랫동안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므로 동북사범학원은 고구려사 연구, 동북사연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북공정식 주장을 확산하는데 현재 가장 핵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학술잡지인 ‘동북사지(東北史地)’이다. 이 잡지사는 2004년 8월에 지린성이 신설한 ‘지린성 고구려연구중심[吉林省高句麗研究中心]’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린성 고구려연구중심’에서는 고구려 등 변강사지 연구의 중요문제 기획 및 중점과제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랴오닝성사회과학원에서 2002년 11월 다롄대학에 설립한 ‘중국동북사연구중심’에서도 동북지역의 고고 발굴 및 문화재, 고구려사, 발해사, 동북민족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북 3성 지역에는 동북역사 및 민족관련 연구기관들이 다수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도 동북공정이 시작된 이후 고구려사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는 동북공정 사업을 종료했지만 동북공정식 인식을 담은 연구는 지방정부 기관이나 대학으로 옮겨져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지린성위원회가 건의하여 통과된 ‘지린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에는 ‘중화명산 장백산, 세계문화유산 집안 고구려 유적’ 등 지린성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관련 유적지의 관광지 개발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표지판 등을 통해 동북공정식 인식이 일반 중국인들에게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인들은 고구려나 발해 관련 유적지의 안내문이나 박물관의

설명문, 유적지 안내원들의 설명, 인터넷에 올라오는 관련 기사 등을 통해 동북공정식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한중간의 역사 갈등의 단편적인 내용만 알게 된다. 이에 따라 동북공정식 주장의 역사적 근거의 취약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을 드러내며, 이를 혐한류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중간 역사갈등을 더욱 비화시킬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에는 이처럼 영토 분쟁, 과거 역사를 둘러싼 논쟁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문제들까지 많은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였다. 이에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시작되어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영토와 역사갈등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역시 이러한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동북공정 등의 문제를 바라보며 중국의 팽창적 중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와 과거의 감정들은 정치가들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국익에는 큰 손실이 될 것이다.

III. 화해를 위한 노력

1. 국제 연대의 확산 : 역사 왜곡 반대, 야스쿠니 반대, 시민 단체 활동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후소사 교과서가 등장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후소사 교과서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역사인식의 문제를 연구의 영역이 아닌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확산시켰다. 또한 시민운동이 한일, 한중일 시민연대로 확장되면서 민간차원에서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 후소사 교과서 채택률을 0.039% 거의 제로 퍼센트로 무력화시켰다는 것 역시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준 중요한 쾌거였다. 이러한 한중일 시민연합운동의 '힘'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2001년 4월 90개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가 모여 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를 결성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은 일본 교과서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범 아시아행동의날과 한일공동시위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교과서 개악에 항의하기 위한 사이버시위로 일본 문부과학성, 산케이신문, 후소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관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6월에는 교과서 관련 아시아연대집회에 참여했고, 동시에 73개국 125개 도시에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일본 동경에서 약 500여명이 문부과학성에서 '인간띠잇기' 행

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약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10월 15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방한을 반대하는 전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전 국민적 동참을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초기 서명운동은 일본 교과서 왜곡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통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잘못된 교과서의 채택을 거부하는 불채택요구였다. 이러한 서명운동은 운동본부가 주관하여 1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교총 등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여 총 35만 명의 서명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무관심한 일본 언론들로 인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일본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의견광고 신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약 2600만원의 성금을 모아 9월과 10월에 걸쳐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에 의견광고를 실었다.

시민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은 출판 및 학술, 홍보활동이었다. 심포지엄은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와 한국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뿐 아니라 출판 활동에도 힘을 쏟아 타와라 요시후미의 저술 『위험한 교과서』를 번역, 출판했으며, 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저로 『문답으로 읽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을 출판해서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을 일반인이 읽기 쉽게 펴냈다.

2005년 교과서운동의 기본 축은 한일자매결연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내 지역시민단체와 지방자치제(구의회/시의회/시교육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을 엮는 민-관-정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됐다. 민-관-정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필요했는데, 교과서운동을 각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각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했다. 또한 각 지역단체들은 역사왜곡저지라는 대의만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과 자매결연돼 있는 지자체들과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엮어내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일본의 각 지역

활동가들이 한국의 자매결연 도시의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방문하도록 했다.

민-관-정 네트워크는 이후 사업에도 중요한 근간이 되었는데, 일본 각 지역교육위원회에 불채택요청서 보내기 운동, 일본캠페인에도 자매결연 도시의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스기나미구)와 동대문구(도시마구), 안양시(사이타마현)의 경우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시의원이 일본을 직접 방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일본의 지역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후소야 교과서 채택이 한일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고, 한일의 시민단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일간의 평화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이 공동으로 집필한 『미래를 여는 역사』 일본어판을 각 교육위원회마다 기증하였는데,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방일캠페인단 활동을 벌여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일본 언론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인구가 작은 지역일수록 한국의 방일단 활동이 지역 언론의 보도거리가 됐고, 이것을 계기로 교과서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방일캠페인단의 지역교육위원회의 방문 자체가 해당 교육위원회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또 다른 성과는 일본 캠페인을 통해 한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긴밀해졌다.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인 2005년 한국은 일본 역사왜곡 관련 전시회를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총 11개 광역도시, 24개 지역에서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했다. 통일연대나 청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일본 역사왜곡을 널리 알리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제캠페인은 원래 유엔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전 세계 NGO들에게 갈등예방을 위한 국제 활동을 제안하면서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Against Armed Conflict) 동북아위원회에서 기획됐다. 동북아에서

갈등은 무력갈등 뿐만이 아니라 역사 갈등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한 의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일본 역사 왜곡을 설정한 것이었다.

2005년 7월 뉴욕 유엔에서 GPPAC 세계대회가 열리게 됐고, 이 기간을 전후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우선 일본의 피스보트와 한국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GPPAC 기간 내에 일본 역사갈등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워크숍 “역사 갈등과 평화 교육”을 공동주최했다.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이 협력한 『미래를 위한 역사』 모델이 GPPAC이 주창하고 있는 GO와 NGO의 협력모델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뿐 아니라 뉴욕 콜롬비아대학 한국한연구소의 도움을 얻어 세계 각국의 학자들을 초청해 일본 역사왜곡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 사회 속에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면에서도 일본 역사왜곡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과거사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넓게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던 7월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초로 오타와라시에서 후소샤 교과서가 채택이 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독도문제와 교과서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초기 상황과는 달리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교과서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일본 신문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반일시위를 예를 들면서 한국과 중국 국민들이 반일감정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왜곡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반일’이 아니라 ‘평화’와 ‘공생’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했다.

의견광고의 목적은 일본 신문에 한국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일본국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있었다. 의견광고가 게재되면서부터 일본의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의견광고는 일본 역사왜곡 저지와 후소샤 교과서 채택반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한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각 지역에 영향력 있는 신문을 통해 지역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비판과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역사왜곡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본 교과서 회사와 집필자들에게 교과서 수정요구안을 발송하였으며, 한일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익교과서 채택 저지운동을 벌이고, 항의집회와,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무효 소송과 한국과 일본 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등 왜곡 교과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공동교과서 저술 : 『미래를 위한 역사』 등 공동교과서 부교재 편찬 활동

일본 역사왜곡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연구자와 시민단체는 2002년 1월 한국에서 준비모임을 열었다. 준비모임이 있은지 만 2개월 후 중국 난징[南京]에서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난징대회는 한중일 3국은 일년에 한번 열리는 연례포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긴밀한 연대활동을 위해, 한중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근현대사 역사교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일단 한중일 3국이 합의하기 쉬운 근현대사

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그 대상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후 만 3년 2개월 동안 총 14번의 국제회의와 총 40여회의 국내회의를 거쳐서 『미래를 여는 역사』를 편찬하였다.

한중일 3국의 공동교과서 작업은 언어도, 습관도, 국적도 다르지만,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동북아시아 3국의 연대활동에서 직접 역사를 공동으로 서술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세가지 점에서 그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 최초의 동북아시아 공동 역사교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 중 일 3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필하여 동시에 출판하는 최초의 동북아시아 공동 역사교재로서 지난 4년간 3국의 학자, 교사,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평화와 인권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집필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19세기 중엽 이후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열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편협한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견지하였다. 승자와 강자의 역사가 아니라 억눌렸던 여성, 소수자,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장, 개항 이전의 삼국
- 제1장, 개항과 근대화
- 제2장,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 한 중 양국의 저항
- 제3장, 침략 전쟁과 민중의 피해

- 제4장,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동아시아
- 종장,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서장은 개항 이전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관계와 국내 상황을 소개한 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1장은 개항이후 1910년까지, 2장은 1910~20년대, 3장은 1930~45년까지로 나뉘어져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쟁 도발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1945년 이후 삼국은 불행했던 관계를 정리해서 국교를 맺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에 대한 청산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종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4장과는 별도로 종장을 만든 이유는 이 책이 일본의 역사왜곡의 한복판에 서있는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중 일 삼국 사이에 과거사와 역사인식, 역사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종장을 넣게 된 것이다. 그래서 종장의 주제가 주제별로 이루어져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남아 있는 개인 보상과 배상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 인권운동,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문제 등을 다루고 향후 한중일 3국 시민사회의 비전을 담은 동북아시아 삼국 청소년의 교류, 반전 평화 운동과 시민운동,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래를 여는 역사』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은 2005년이였다.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 불채택운동이 한창인 6월, 아시아역사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대거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일본의 전 지역을 돌았는데, 특히 각 지역별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육위원회를 방문

할 때, 『미래를 여는 역사』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단지 후소샤 교과서를 반대하는 비판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위원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

『미래를 위한 역사』가 출간된 이후에도 한중일 3국의 연구자들은 후속 작업을 계속하여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동아시아근현대사를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으며 곧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3. 동아시아 국가간 교류의 증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의 민주화, 일본 경제력의 쇠퇴는 각국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강화시켰다. 동아시아는 안보와 비핵화, 에너지, 환경 등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국이 함께 협력하여 정치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가 없는 세계적으로도 통합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취업과 유학, 국제결혼 등으로 역사상 유례없이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확대와 동시에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논리에 따른 강요가 아닌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존과 평화,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냉전시기를 벗어나 탈냉전시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과거의 편협한 이념을 뛰어넘어 각국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6자회

담이 개최되고 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 3(한 중 일)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 현안을 다루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 중 일 사이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가간의 분업과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교류는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동아시아 각국의 민간 교류도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매년 수백만 명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관광을 하고 있으며 유학 등의 인적 교류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1-2위를 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유학생은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유학생이 되었다. 이제 대학의 캠퍼스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 학생을 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인적 교류와 더불어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이 교류되면서 한류(韓流), 일류(日流), 한류(漢流)와 같은 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동아시아 각국의 대중문화 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고, 한국 연예인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 교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통해 상대국을 여행하면서 문화를 익히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캠프도 진행

되고 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는 2002년 8월에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새로운 하나됨 : 한일 청소년의 힘으로!’를 시작으로 2011년 8월 인천캠프까지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중일교사평화포럼과 한중일청년평화포럼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반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등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중일 사이의 국제적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학자와 시민들로 구성된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은 각국의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역사인식 공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 중국 난징에서 시작된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은 2011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0회 포럼을 개최하여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역사』 등 한중일의 학자와 교사들이 참여한 교과서 부교재 편찬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교류와 함께 스포츠, 청소년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동아시아 각국 정부도 과도한 자국 중심의 시각과 정책에서 벗어나 이웃 국가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동아시아문명권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문화적 유사성은 21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이해와 교류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민간 교류는 전쟁이 없는 평화와 협력의 21세기 동아시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만길(2006), 『근대 동아시아 역사인식 비교』, 선인.
- 강상중 지음, 이경덕 옮김(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이파리.
- 개번 맥코맥(2008), 『중속국가 일본』, 창비.
- 권소연 김유리 등저(2006),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 김부자(2009),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김선민(2009),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김승렬(2008),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수(2008),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동북아역사재단.
- 김지훈(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 나이토우 세이조우, 권오엽 권경 역(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 나카무라 사토루(200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에디터.
- 노길호(1996), 『야스쿠니 신사』, 문창.
- 다카하시 데쓰야, 임성모 역(2009), 『역사인식논쟁』,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2008),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a), 『독도와 한일관계 : 법 역사적 접근』,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b), 『역사 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c), 『동북아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d),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e), 『역사 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f),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g),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0h), 『독도 울릉도 연구 : 역사 고고 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진.
- 박용희(2009), 『다민족 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 : 갈등의 역사와 공존의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박유하(2005),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화해를 위해서』, 뿌리와이파리.
- 백영서외 지음(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2004), 『국사의 신호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 송기호(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

신주백(2007), 「동북아 정세의 특징과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의 접근법 탐색」 『日本文化研究』 21.

_____(2008a), 「동아시아 역사 만들기 - 역사대화를 통한 기억 공유의 가능성 탐색」 『제2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8.

_____(2008b),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 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2008),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도서출판 선인.

안병우 외(2007), 『동아시아 교육과정 시안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연민수(2008),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엘리자베스 콜, 김원중 옮김(2010),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 : 아픈 과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오사카 유지(2005),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 자음과 모음.

와다 하루키, 이원택 역(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지음, 한철호 이규수 옮김(2007),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우카이 사토시 천황성 등 지음(2005), 『반일과 동아시아』, 소명출판.

월간중앙 엮음(2004), 『광개토대왕이 중국인이라고?』, 중앙일보시시미디어.

유철중(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이근우(2008),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이문기 등 지음(2007), 『한 중 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이석우(2003),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이석현 외 지음(2010),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이신철(2007), 『한 일 근현대 역사논쟁』, 도서출판 선인.

이원순 정재정 편저(2002),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동방미디어.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외 편(2003), 『한국사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임기환(2006), 「중국의 동북공정이 남긴 것」 『역사와현실』 62.

임상선(2008),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정문길 최원식 백영서 전형준 엮음(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화과지성사.

정병준(200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 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연(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호.

정혜중(2009),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최장집 하마시타 타케시 공편(2008), 『동아시아와 한일교류』, 아연출판부.

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 일본역사교육연구회(2000),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원.

_____(2007), 『한일교류의 역사』, 혜안.

한일관계사학회 편(2006),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근현대』, 경인
문화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함동주(2009), 『근현대 일본의 한국인식』, 동북아역사재단.

International Crisis Group(2005.12), 『동북아시아의 갈등의 기류』.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홈페이지 <http://www.ilovehistory.or.kr>

여성가족부 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main.asp>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나눔의집 <http://www.nanum.org>

찾아보기

가 나

가나가와조약 24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199, 200
간도 528
갑신정변 39, 46, 50, 51
갑오개혁 118
갑오경장 52
강유위 47
강화도조약 30, 45, 74
강화도조약 체결 28
강희제 18
개혁 개방정책 482
개화사상 51
개화정책 49
개화(파) 117
건국강령 128
경복궁 점령 39
경제대국 389
고구려 527
고구려 동북민족연구중심 532
고구려연구원 531
고노 요헤이 513
고다이 도모아쓰 60
고엽제 364
고이즈미 535
고이즈미 준이치로 518
고조선 527
공간의 문명화 37
공거상서 47
공로증 28
공리주의 230
국민교과서 523
공산당 147
공친왕 47

관동대지진 97
관세자주권 21
광둥무역 18
광둥정부 88
광서제 47
교과서개선의 모임 523
교과서 공격 520
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535
교과서운동 535
교린관계 16
교육위원회 536
교육재생기구 524
교육칙어 519
구국계몽운동 119, 120, 121
구리모토 조운 60
구미 구니타케 63
구미송상 248
구미열강 235
구미제국 223
국공 정전협정 311
국공합작 92, 128, 143, 145, 152
국권회복운동 83
국민국가 35
국민당 128, 142, 144, 147
국민정부 92
국민혁명 92
국민협의회 171
국제사법재판소 502
국제적 내전 332
군국기무처 52
군대 위안부 512
군사적 정상국가 521
군위안소 510, 512
군인은급 516
군인은급제도 516
군인칙유 519
극동국제군사재판 510, 517

극동위원회 266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 520, 521
 근왕운동 149
 금본위제 40
 김규식 127, 137
 김옥균 51
 김학순 513
 까르띠니 168

I L I

나카소네 야스히로 518
 나흐다폴 올라마 169
 난사군도 500, 507
 난징대학살 510, 522
 난징조약 70
 남경대학살사건 108
 남경조약 21, 22
 남한대토벌작전 83
 내정개혁 76
 네덜란드령 인도 167, 168
 노무현 531
 노태우 512
 니시 로젠 협정 42
 니시오 간지 521

I D I

다케시마 501, 502, 523
 단발령 118
 대동아공영권 106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521
 대량생산 374
 대마도주 26
 대만독립 506
 대만정부 506
 대약진운동 419

대인도네시아당 170, 171
 대정봉환 25
 대한국국제 56
 대한민국 건국강령 129
 대한민국임시정부 126
 대한제국 43, 55, 56, 118, 121
 델레스 272
 도미노 이론 350
 도이모이 434, 495, 496
 도조 히데키 511, 515
 도쿄 군사재판 266
 도쿄전범재판 511
 독도 500, 501, 504, 523
 독도 영유권 503
 독립기념관 525
 독립전쟁론 121, 127
 독립협회 55, 118
 동경서적 523
 동남아조약기구(SEATO) 346
 동도서기론 117
 동북공정 526, 530, 532
 동북변강 527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 527
 동북변강연구총서 528
 동북사지(東北史地) 532
 동북아역사재단 525
 동아시아 공동체 543
 동아시아문명권 543
 동유운동 150
 동학농민봉기 39, 52
 동학농민항쟁 118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 349
 프득제 31

| ㄹ |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514
 라우렐 164, 165
 랜싱-이시이 협정 87
 라오닝성 527
 량치차오 139, 149
 러시아혁명 132, 142, 151, 173
 러일 강화조약 57
 러일전쟁 43, 80, 149, 501
 레닌 136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41
 로하스 165
 루고우차오 103
 루어시우토우 157
 루어쥔 158
 루어푸싱 157
 룽훙 65
 류명전 156
 류스페이[劉師培] 195
 류큐 44
 류타오호 100
 리스쥔[李石曾] 195
 리아치 157
 리튼 102
 린셴탕 159, 160
 린쩌쉰[林則徐] 70

| ㄴ |

마루노우치 250
 마오쩌둥 145, 146, 147
 마이클 혼다 515
 만민공동회 118
 만세일계 47
 만주국 101, 510
 망하조약 21, 23

맥두갈 보고서 514
 맥아더 164, 165, 267
 마오리 사건 157, 174
 메이저 신정부 73
 메이저 유신 26, 36
 명성황후 시해 사건 41, 54
 명치유신 59
 모나 루파오 158
 무단 함사 518
 무라야마 토미이치 513
 무술변법 47, 140
 무슬림상인연합 169
 무쓰 무네히쓰 61
 무정부주의 130, 131
 무함마디야 169
 문명개화 35
 문부과학성 534
 문화대혁명 478
 문화운동론 124
 문화통치 94
 미구회람실기 63
 미국교육사절단 520
 미군정 520
 미래를 위한 역사 537, 538, 543
 미 소 공동위원회 327
 미일 수호통상조약 25
 미일화친조약 71
 민영익 50
 민족당 162
 민족유일당 128
 민족주의 34, 499, 533, 541
 민족혁명당 128

| 비 |

바그다드조약기구(CENTO) 346
 바스코 다 가마 17
 바오다이 155
 바진[巴金] 208
 바쿠닌 130
 박영효 53
 박헌영 137
 반일감정 524
 반일시위 537
 반혁명군 88
 발해 527
 방일캠페인단 536
 배성룡 135, 136
 배타적 경제수역 500
 베르사이유 체제 89
 베이징정부 87
 베트남공산당 152
 베트남 광복회 150
 베트남국민당 151
 베트남독립동맹 154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 350
 베트남민주공화국 155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152
 베트남(월남) 파병 363
 베트남해방군 155
 변강사지연구중심 526
 변법자강운동 140
 병인양요 29, 117
 보니파시오 161
 보빙사(報聘使) 62
 보통국가 522
 보트 피플(Boat People) 365
 북고외교 28
 부디 우또모 168
 부청멸양 42, 48

북경조약 22, 45
 북벌 93
 북양함대 77
 북한의 핵문제 541
 불채택요구 535
 불채택요청서 536
 불평등조약 36

| 스 |

사대교린 15
 사민평등 38
 사회민주주의 130
 사회주의 132, 133, 134, 135, 136
 사회진화론 47
 산발탈도령 229
 산케이신문 522, 534
 삼권분립 37
 삼균주의 128, 129, 136
 삼민주의 140, 141, 151
 삼일법 159
 새로운 역사 교과서 522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521, 534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255
 샌프란시스코조약 500, 50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505, 511, 518
 서광범 53
 서양사정 59
 서유견문(西遊見聞) 64
 서태후 47
 서학동점기(西學東漸記) 65
 선군정치 487
 세계대세론 64
 세계행동의 날 534
 센카쿠/다오위다오 500, 505, 507
 소중화 19
 쇄국령 23

쇠국양이 29
 수입대체 공업화 406
 수카르노 169, 171, 172
 시데하라 협조외교 93
 시마네현 502, 523
 시모노세키조약 40
 시민운동 534
 시사군도 500
 식민지근대화론 392
 식산흥업 37
 신문지조례 232
 신미양요 29, 117
 신민족주의 125, 136
 신민주주의 125, 136
 신사 참배 518
 신채호 131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523
 신해혁명 85, 140, 150, 156, 157
 쌍십협정(雙十協定) 311
 쑨원 140, 141, 142, 151, 157, 183

| ○ |

아관파천 41, 54, 79
 아기날도 161, 162
 아나키즘 179, 194, 195, 196, 197, 198
 아동부미유학생(兒童赴美留學生) 61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511
 아르망 조약 33, 44, 72
 아마테라스오미카미 519
 아시아여성을 위한 기금 513
 아시아태평양전쟁 146, 147, 174, 175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534, 537, 538, 543
 아주화친회 184, 185, 186, 204
 아편전쟁 20
 안남공산당 152
 안용복 501

안재홍 136
 안창호 127
 애로우호 사건 21
 애치슨라인 329
 앤저스조약(ANZUS) 346
 앤슨 버링에임 61
 야스쿠니 540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516, 517, 518
 야스쿠니 신사 참배 519
 야키 히데쓰구 522
 양계초 47
 양무운동 22, 59
 양무자강 139
 어업협정 503
 어윤중 63
 에도시대 228
 에스페란토 207, 208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514
 여순 지향형 정책 42
 여운형 135, 136, 137
 역사검토위원회 521
 역사 교과서 540
 역사연구단체협의회 525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무효 소송 538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538
 연방당 162
 연합정부론 146
 영사재판권 21
 영일동맹 80
 영일동맹폐기론 84
 영토 분쟁 533
 오기노토리섬 506
 오스메나 163, 164, 165
 오키나와 503, 505
 왕정복고 25, 36, 73, 226
 외교청서 504
 요시다 275

우익교과서 538
 워싱턴체제 91
 원세개 46
 원자바오 531
 월남땅국사 150
 웨베르-고무라 각서 41
 위안부 510, 524, 540
 위안부 문제 514
 위안스카이 85, 140
 위정척사(파, 론) 49, 117, 119
 위칭팡 158
 윌리엄 시볼드 502
 윌슨 142
 유길준 54, 63
 유미유동(留美幼童) 61
 유슈칸 518
 유엔인권위원회 514
 유헌정치 486
 윤치호 63
 을미사변 118
 을사조약 57, 81, 536
 응우옌 아이 꾸옥 152
 응우옌[阮] 왕조 30
 응웬왕조 148
 의견광고 535, 538
 의병전쟁 119, 120, 122, 148
 의화단 141
 의화단사건 42, 48
 이노우에 가오루 53
 이동휘 126, 127
 이리 44
 이슬람연합 169
 이승만 126, 296, 503
 이에나가 사부로 520
 이와쿠라 사절단 60, 63
 이와쿠라 토모미 60
 이익선 75

이케다 죠하츠 59
 이쿠호샤 523, 524
 이토 히로부미 60
 이하응 29
 이홍장 27
 이회영(李會榮) 196
 인간따위끼 534
 인도공산당 169
 인도네시아공화국 172, 175
 인도네시아국민당 170, 175
 인도네시아민족주의자연합 170
 인도네시아인민운동 171
 인도네시아정치연합 171
 인도네시아회교연합당 170
 인도차이나공산당 152, 153, 155
 인도차이나전쟁 348
 인민지원군 336
 일류 542
 일본교육재생기구 523
 일본군 위안부 521
 일본 별격(別格)론 16
 일본 역사교과서 522
 일본제국주의 510
 일본회의 522
 임오군란 45, 50

| ㅈ |

자력갱생 442
 자민족중심주의 533
 자유민권운동 37
 자유주의사관 521
 자치론 125
 자학사관 522
 장쉐량 144
 장제스 143, 146, 261
 재만한인조국광복회 135

자오바니엔사건 157, 158, 174
 장웨이궈이 160
 저널리즘 243
 저우언라이 144, 298, 311, 336, 340
 전쟁범죄 511
 전쟁 포기 521
 정신대 524
 정한론 28, 43
 제1차 사이공 조약 31
 제1차 세계대전 142, 151, 159, 162
 제2차 사이공 조약 체결 32
 제2차 세계대전 148, 160, 173, 174, 499
 제2차 영일동맹 43, 57
 제5호 21개조 86
 제19로군 101
 제국주의(Imperialism) 69
 제너럴 셔만호 사건 29
 제물포조약 46
 제암리사건 97
 조공체제 12, 20
 조봉암 136
 조사시찰단 62, 63
 조선공산당 134
 조선인민군 322
 조선혁명당 128
 조선혁명선언 131
 조소앙 127, 136
 조약체제 12, 19, 20, 25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46
 존왕양 223
 존왕양이운동 24
 종속(宗屬)체제 14
 종주권 44
 좌우합작운동 137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 46
 주체사상 486, 488, 489, 490
 중간배상 258

중간수역 504
 중국공산당 142, 144, 145
 중국국민당 142
 중국동북사연구중심 532
 중국 베트남(중월) 전쟁 367
 중국사회과학원 526
 중국 어선 507
 중국유학생 542
 중국의 명운 146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 261
 증소불가침조약 104
 중일전쟁 145, 160, 174
 중체서용 61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525
 중화민국 147, 160
 중화인민공화국 147, 499
 지린성 527
 지린성사회과학원 531
 지양평 158
 지유사 523, 524
 진무(神武)천황 519
 질료처분 37
 징병제 37

| * |

천진조약 31, 52
 천황 519
 천황제 36, 73
 청대동북변강당안선집 529
 청불전쟁 22, 46, 51, 174
 청일 수호조규 27, 39
 청일전쟁 22, 39, 76, 118, 139, 156, 174,
 236, 505
 총리각국사무아문 22
 최혜국 대우 27
 침략전쟁 517

| ㄱ |

카스라 태프트밀약 43, 57
카티푸난 161
강유웨이 139, 149
케존 163, 164
코민테른 133, 135, 136, 152
코피아난 536
쿠릴열도 503
퀴리노 165
크로포트킨 130
크메르루즈(Khmer Rouge) 366

| ㄴ |

타이완공산당 160
타이완민주국 156, 174
타이완민중당 160
타이완자치연맹 160
탈아론 38
탈아외교 28
탈아입구 28
태양력 38
태평십년 52
태평양전쟁 163, 171
태평천국 139
테트(Tet) 대공세 354
텐안먼사건 478, 479
텐진조약 70
토지조사사업 96
통리기무아문 58
통킹 만(Gulf of Tonkin) 사건 352
통화사범학원 531
트루먼 272

| ㅍ |

파리외방전교회의 활약 30
파리평화협정 358
판 보이 찌우 149, 150, 183
판 주 쩌 149, 150
팽창적 중화주의 533
페리제독 23
평양선언 302
평화와 인권 539
평화헌법 500
평화헌법 9조 521
폐번치현 28
포츠담 선언 257
포함외교 24
폴 메르랭 151
푸르니에조약 44
푸안천 사절단 61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171
피스보트 537
필리핀공화국 161, 164, 174, 175
필리핀민족동맹 161

| ㅎ |

하마 171, 172
학교교육기본법 523
학습지도요령 520
한국국민당 128
한국독립당 12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514
한류 542
한미상호방위조약 341
한인사회당 133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525
한일의정서 501
한일정상회담 525

한일협약 81
 한일협정 536
 한중관계 528
 한중 양국 구두양해 각서 530
 한중일교사평화포럼 543
 한중일청년평화포럼 543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 543
 해금정책 17
 해외옹비론 28
 헌병경찰제 96
 헤이그평화회의 82
 헤이룽장성 527
 험한류 533
 호세 리살 161
 호치민 152, 154, 155, 284
 홍범14조 53
 홍수전 139
 홍영식 63
 화북분리공작 103
 화북조선독립동맹 135
 화이(華夷)사상 14
 황국신민화정책 109
 황국협회 55
 황포조약 21
 효창추록 60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99, 200
 후소샤 534
 후소샤 교과서 540
 후지오카 노부카쓰 521, 523
 후진타오 531
 후쿠오카 고등법원 519
 후쿠자와 유키치 38, 59
 훈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 529
 흑선 23
 흥선대원군 117
 회토류 507
 히로히토 515

| 기타 |

3국간섭 41, 42, 53, 78
 3·1운동 122
 3불정책 475
 3중전회 415
 3통정책 475
 5·4운동 142
 5 10 선거 327, 328
 55년체제 462, 463
 6자회담 533, 542
 7 7사변(노구교사변) 510
 8로군 314, 322
 9 18사변 510, 512
 10대사업 412
 ANZUS 군사동맹 272
 A급 전범 267, 517
 BC급 267, 517
 GPPAC 537
 ILO(국제노동기구) 514
 ILO 협약 29조 514
 IMF사태 401
 UN인권이사회 515



동아시아의 역사III

(개항 - 화해)

초판 1쇄 인쇄 2011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12월 15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군동 26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1

ISBN 978-89-6187-257-7 94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